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제④권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 I

● 집필자(게재순)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남은영(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전혜정(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 제④권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 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초판 1쇄 인쇄 | 2011년 12월 05일

초판 1쇄 발행 | 2011년 12월 10일

발행인 | 김용하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전 화 | 대표전화 02-380-8000

F A X | 02-385-8106

등록번호 | 1994년 7월 1일(제8-142호)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ISBN 978-89-8187-861-0 (전7권)

978-89-8187-866-5 93330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뀔드립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표지 삽입

국가 인구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

저출산 고령화라는 고속열차가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지만 기차에 타고 있는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구에 대한 불확실한 주장으로, 경제사회적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 조만간에 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여 큰일 날 듯한 주장은 청년실업, 낮은 여성고용률, 중·고령층 일자리 부족 등 시장 현실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의 감소를 불가항력적 사안으로 수용하고 저출산 대책 혹은 미래를 위한 투자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제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사회 전망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단순한 아이 더 낳거나 노인복지 대책이 아닌,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인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50년을 내다보면서 기간별·부문별 인

구 분석을 통하여 인구 미스매치를 찾아내고, 단기·중기·장기 전략의 인구 대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구 변동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NEW 국가 인구정책을 개발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미래 비전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공한 미래는 아팠던 과거도 긍정적으로 만든다. NEW 국가 인구 전략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미래가 불안한 국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저출산 Trap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하면 인구 모범 국가로 전환 가능하게 된다. 1970년대의 산아제한정책을 비판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의 정책이 실패하였다면 현재의 인구는 7000만 명을 넘는 국가로 변하여 한반도 남쪽의 10만km² 국토에는 너무 많은 인구로 힘들어졌을지도 모른다. 인구 규모가 단순히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국토 면적, 에너지, 부족 자원, 수자원, 식량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호주와 캐나다는 거대 국토 면적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2000만~3000만 명 선의 인구 유지 전략을 가지고 총량인구를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인구 규모 확대 유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백인 인구에서 히스패닉 및 흑인 인구로 인구 구성이 교체되고 있다.

중국·인도는 거대 인구 국가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지구적 차원의 자원 부족 시대에 성장의 지속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브라질·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전제에는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이 전제되고 있다.

프랑스·영국·스웨덴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인구 유지정책이 성과를 보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세계 최고령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상실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 트렌드를 유지할 경우 일본과 같은 유형의 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한국은 일본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였으나, 이제는 일본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다. NEW 국가 인구 전략의 수립과 실천 전략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발전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국가를 선도할 수 있으나 끊임없는 혁신은 인류 역사적으로 불가능하고, 후진국에 의한 ‘Catch up’ 가능성은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인구수(人口數)’가 아니라 인구구성(人口構成)이다. 인구 고령화에도 경제활동참가율만 높이면 극복 가능하다는 논리가 있지만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의 잠식은 불가피하다.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프랑스·스웨덴 등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50년에 이르면 25% 내외의 노인인구비율이 유지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38% 수준으로 월등히 올라간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불가피하지만 저출산에 의

한 노인인구비율이 40%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국가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 인구가 유지 가능한 합계출산율인 2.1 수준이 언젠가는 되어야 인구 고령화는 일정 수준으로 하향될 수 있다.

출산율이 2.1이 된다 하여도 한국 인구는 장기적으로 4300만 명 선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4300만 명은 고도 성장기인 1989년의 인구 규모로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인구 정책에 성공한 국가 사례를 보면 합계출산율을 단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연차적으로는 상향시킬 수 있다.

출생아 수를 지금 현재의 수준인 45만 명 내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가임여성 수의 감소분만큼 출산율을 높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노인인구비율도 지금의 40%선에서 25% 수준으로 점차 하향 수렴하게 될 수 있다. 인구구성도 역피라미드형에서 장방형 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현재의 스웨덴·프랑스 등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원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노동력 인구는 2016년경부터 감소하지만, 2030년대까지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노동력 절감형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의 유휴 노동력 buffer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 해결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성 취업 활성화로 선진국형 여성고용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고령자 근로 참여 의욕이 높아 선진국형 근로 동기 부진 문제가

아직은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30년대 이후 청년·여성·고령자의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국내 인구를 통한 수급 조절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외국인 인력 유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30~204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 개방적인 이민정책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력의 경우, 좁게는 외국인 인력 활용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고, 넓게는 남북한 경제 통합 차원에 더 큰 경제 공동체도 구상할 수 있다.

2050년대 이후는 궁극적으로 출산력이 회복된 건전한 한국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된 인구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State로 Soft landing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40년 동안 실현 가능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1년 현재부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꾸준한 투자를 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맞이하게 될 고령화 비용에 비하면 훨씬 더 저비용이 소요되는 미래 투자 정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저출산율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이 GDP의 3% 내외를 투입하는 양적인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최소한 이웃 나라인 일본 수준 GDP의 1.3% 수준까지는 연차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현재 0.6%).

국가 인구 전략을 위한 종합 연구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었다. 크게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인구 전략, 적정 인구 가능성 탐색, 저출산 고령사회와 삶의 질, 선진국의 인구 문제의 도전과 대응 등 4편으로 구성하고, 총괄 보고서를 포함하여 7권의 책으로 편집되었다.

본 책의 저술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실장 등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가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c o n t e n t s

004 발간사_ 국가 인구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 | 김용하

제10편 한국 Social Risk의 특징과 과제 | 이재열·남은영

014 제1장 서론

018 제2장 이론적 배경

037 제3장 자료 및 분석방법

045 제4장 OECD 주요국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험 관련
지표 변화 추이

072 제5장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위험 배경요인에 관한 분석

113 제6장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위험 관련 주요 동인 및 시나리오
도출

12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1편 가족의 해체와 New Family Model | 전해정

- 164 제1장 서론
- 167 제2장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 194 제3장 한국 가족구조 변화의 요인
- 204 제4장 외국의 가족구조 변화의 요인
- 234 제5장 미래 사회의 가족구조 변화 전망
- 288 제6장 미래 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제12편 소득 불평등 Shadow | 석재은

- 308 제1장 서론
- 313 제2장 이론적 배경
- 321 제3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 326 제4장 한국의 고령화와 소득분배 영향
- 372 제5장 국가비교를 통해 본 고령화와 소득분배 영향
- 383 제6장 결론



제 10 편

한국 Social Risk의 특징과 과제

연구책임자: 이재열(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남은영(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이석민(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김민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미선(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비율이 7.2%가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고령화속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사회적 위험전망에 대한 고찰이 이 연구의 주제이다. 사회적 위험이란 지금까지 삶의 조건들을 위협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삶의 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키는 사건 또는 상황, 사회변동의 결과 사람들이 생애기간 중 직면하는 위험들을 말한다.

현재와 같은 출산율감소 및 평균수명 증대의 속도로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및 재정위기와 같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신빈곤층의 확산과 사회해체 및 각종 사회문제, 사회심리적 병리현상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의 움직임으로 사회적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Esping-Andersen은 사회적 위험을 ‘계급위험(class risks)’, ‘생애주기

위험(life-course risks)', 그리고 '세대간 위험(intergenerational risk)'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은 생애기간에 걸쳐서도 불균등하게 배분되는데, 라운트리(Rowntree)는 일찍이 빈곤이 아동기(특히, 대가족에서)와 노령기(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에 집중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생애주기 위험으로 인한 사회해체 및 자살, 우울증, 범죄, 해외도피 등과 같은 병리적 사회심리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겪게 될 미래 한국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질적 비교방법과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위험 간의 관계는 단일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별, 시스템별로 강한 경로의 존성(path dependency)으로 인해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한국보다 이미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들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한국사회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경향이 사회적 위험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만일 관련이 있다면 국가별 관련성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의 양상에 따라 그려볼 수 있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 사회적 위험의 양상과 메카니즘에 대해 서술하며,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다.

제1절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관한 이론과 기존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OECD 국가들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시계열적으로 고찰하며 셋째, 자살 및 각종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검토하며 넷째,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위험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위험 배경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위험 관련 주요 동인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요 개념을 확정한 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OECD 국가의 거시지표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는 1)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2) 사회적 위험 지표 3) 복지국가 유형 및 거시경제 관련 지표로 구분된다. 사회해체 및 사회심리 변동의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자살률, 범죄율 등의 통계자료 및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 분석을 위하여 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QCA는 거시적 사회현상을 질적으로 비교연구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각 사례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 사회의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부합

되고 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많은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을 처음 고안한 찰스 래긴(Charles Ragin)은 부울 대수학(Boolean algebra)의 논리적 추론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사의 사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일련의 원인조건들의 공통분모를 추출해 내는 분석적 추론(analytical induction)과 질적 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위험은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에서 하나의 새롭고 지배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환경위험, 교통사고, 스트레스, 범죄, 자살 등의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 욕구, 가치 규범 등이 산업적 위험의 영향 하에서 변화하게 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Beck, 1992)은 현대사회를 산업사회가 아닌 위험사회로 지칭한다.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대의 문제들이 위험을 잉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도구적 합리성의 결과로 나타난 위험 속에서 현대사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위험은 현대사회가 약속했던 통제가능성의 범위를 뛰어넘어 실재화하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어떤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더글라스와 월더프스키(Douglas & Wildavsky, 1982)에 따르면, 위험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총체적 구성체 내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고 특정한 기준에 의

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배경(예를 들면 교육, 직업, 특정 하위문화의 귀속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은 그것을 야기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자연적 위험은 인간이나 인위적인 기술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의 급변, 천재지변 등으로 말미암은 재앙(disasters)으로 이해된다. 기술적 위험은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 폭발, 오염 등 인공적 산물이나 기술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들(accidents)로 간주된다. 사회적 위험은 사기, 절도, 폭력 등 순수하게 인간 행동만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들(incidents)과 관련된다.

2000년대 초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는 빈곤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정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미치는 위험을 사회위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기존의 모델에 따르면 전통적인 남성 부양자 기반 가족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믿어왔으나, 이러한 모델이 무너지면서 위험의 양상도 변모하게 된다. 맞벌이 부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독립은 개인주의적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즉, 전통가족 모델의 붕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제1절 새로운 사회적 위험

전후의 유럽 복지국가 체제는 경제적 세계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제약을 받았으며 새롭고 급박한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정책에 관한 사고의 지배적 틀은 더욱 시장 지향적인 해법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상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1. 세계화, 후기산업주의, 인구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선진국들의 복지체계는 세계화, 급속한 신기술 도입, 가족생활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제적 세계화는 각국 경제부문의 통제력을 약화시켰으며, 상거래의 가속화와 비용감소는 생산체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술혁신이 더해지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선진국의 저부가가치 일자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성근로자의 수가 늘어나 보육 및 노인수발 등의 새로운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는 연금 및 기타 형태의 노후대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은 기존의 문제와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논의를 환기시켰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유급노동에의 접근의 어려움(노동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과 관련된 위험) 2) 여성의 피고용능력을 제한하는 보육 및 노인수발 책임(어린자녀와 고령자를 돌볼 책임으로 인하여 유급 근로 참여능력을 감소시킬 위험) 등이다.

위와 같은 사안들은 확실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은퇴 연금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사회보장과는 구별을 지어, ‘필요(needs)’보다는 ‘위험(risks)’이라고 일컫는다.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오늘날 사람들이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 가지 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단일(남성)부양자 가족모델로부터의 전환과 더불어, 저숙련노동 일자리의 유지 가능성 및 보수에 작용하는 압력은 이러한 위험들을 가중시키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청년기와 노년기라는 전형적인 삶의 특정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두 번째 위험은 가정 내의 육아나 노인수발이 여성의 책무라는 지배적 관념 때문에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

2. 선진국의 빈곤경향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빈곤의 양상도 달라졌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절대적 빈곤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 빈곤은 증가하고 있다. 빈곤은 젊은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자녀를 둔 가정의 수입원 부재에 의한 것이다.

전후 선진국들의 사회정책은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우선시해왔으

나, 최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토론은 주로 젊은 층의 유급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동시장 접근과 보육 및 노인수발의 필요성 인식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사고의 전환은, 이러한 조치가 현재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한다는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근로 인력확대와 사회적 수요 감소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조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시장 활성화는 유급근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집단의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 인력을 증가시키고, 이들 집단을 위한 사회보장 비용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노동시장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아동 자녀보육과 고령자 수발을 집단적 사회보장으로 대체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개입의 증가를 수반한다(홍석표, 2009).

유럽 8개국 복지유형별 근로빈곤(노대명 외, 2007)에 관한 연구에서 유럽 8개국(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근로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요인, 고용정책요인, 노동시장요인, 가구요인, 복지제도요인(1인당 GNP, 서비스업취업자 비중, 노조가입률, 고용보호지수, 실업률, 임시직취업자 비중, GDP중 실업급여 지출비중, 1인 가구, 편부모가구)을 고찰하였다. 근로빈곤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은 탈산업화와 고용불안, 저임금의 증가, 편부모가구의 증가 등으로 이는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위험을 증가시켰다.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인

당 GDP는 근로빈곤 감소에 가장 큰 영향력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 서비스부문 취업자 비중은 근로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각국 정책적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급여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지출은 근로빈곤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사회적 위험의 사회심리적 측면: 자살 및 범죄

1. 국내외 자살현황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31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증가율 또한 최고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일본 등 5개국만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8~2008년 운수사고와 자살로 인한 사망률 추이를 비교한 결과 운수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비하여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 자살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998년 남자 자살률은 6.9명(26%) 증가한 데 비해, 여자자살률은 8.4명(81.9%) 증가하여 여자 자살률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자살률 성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남녀 간 자살률 차이는 55~64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적게 나타난다. 남자 자살률은 여자보다 평균 1.8배 높고, 우리나라 여성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준다. 성별로 OECD 다른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을 앞지르게 되는 시점이 다른데, 여자는 1993년 이후이며 남자는 1997년 이후부터

이다. 남자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가 자살률 증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의 경우 이와는 다른 요인들이 이미 자살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자살사망률에 주목할 수 있다.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45~54세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8.3배로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계층의 자살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이소정 외, 2009).

자살의 원인에 관한 문헌연구에 의하면, 자살의 일반적 원인으로 는 정신과적 요인, 생물학 및 의학적 요인, 생애경험, 사회 및 환경 요인 등 다양하다. 자살은 개별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각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자살 원인을 살펴 본 거시적 고찰에 의하면, 1985~2007년 29개 OECD 국가들의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관련성을 회귀분석한 결과, 1인당 GDP 즉, 양적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자살률의 설명요인이 되는데, GDP 성장률이 남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며, 평균적 OECD 국가들에서 1인당 GDP가 자살률을 높인다. 높은 GDP 성장률은 여성 자살 사망률 감소와 관련이 있다. 높은 출생률은 낮은 자살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평균적 OECD국가들의 대부분 성별, 연령별 집단에서 높은 출산율은 낮은 자살 사망률과 관련되는데, 특히 한국 남자 전체와 남자 노인계층에서 OECD 평균국가보다 더 높은 관련성이 보인다(강은정 외, 2010).

2. 강력범죄 발생추세 국제비교

한국과 외국의 전체 범죄 발생률에 대해 1964~2003년까지 약 40년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전체 범죄율은 2,000건 미만 정도 머물러 있는 반면, 미국은 6,000건에서 4,000건으로 감소하였고 독일은 8,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변화 폭이 무척 크다. 전체범죄 발생률의 크기는 대체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나서 선진 각국의 범죄 발생률이 한국보다 크다.

한국의 강력범죄 유형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살인은 전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도는 대체적인 증가추세가 완연하며 1990년대 이후 더 두드러진다. 특히, IMF시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강간은 전 기간에 걸쳐 증가 추세 보이며, 특히 90년대 이후 그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며 방화도 증가세에 있다. 폭행은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나, 1998년 이후 증가세로 선회하고 있다. 상해 역시 1998년 이후 증가세가 확연한데, 폭행+상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협박은 전 기간을 통해 감소하는 듯 한 추세를 보이나 1998년 이후 크게 증가한다. 체포와 감금은 전 기간을 통해 변화의 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1998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낸다. 대체로 볼 때, 발생률이 높은 순서를 보면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공갈, 협박, 방화, 살인, 그리고 체포와 감금의 순이다.

대부분의 강력범죄 유형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찾아보기 힘들고, IMF 시대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강도, 강간, 방화 등의 주요 강력범죄의 증가세는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강력범죄가 전체 범죄 발생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최근 강력범죄의 비율이 높

은 국가는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순이다. 한국은 15~25%에서 기복이 심하고 가장 높은 편이다. 그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는 미국으로, 대체로 9~13% 사이이다. 영국은 그 비율이 계속 늘어나서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전체 범죄에서 강력범죄 발생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대단히 높으며, 최근에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폭력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경제성장 및 사회가 발전함에도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최인섭 외, 2004).

제3절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원인 정책변화 추이

1. 저출산·고령화 현황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영양, 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심각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데, 현행추세가 지속될 시 총인구는 2019년부터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고, 유소년인구가 노인인구보다 더 적어질 전망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총부양률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노년부양비도 2010년 37.2%에서 2050년에 72%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20~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은 약화되는 추세로서 결혼연령이 매 10년마다 2년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경우, 1990년에서 2009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은 27.8세에서 31.6세로, 여성은 24.7세에서 28.7세로 상승하였다.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20대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폭이 커 전체적으로는 출산력이 저하되었다. 저출산 현상은 초혼연령 상승과 가임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동반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① 고용과 소득불안정, ②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③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을 꼽을 수 있다.

2.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의 질 저하, 저축, 투자, 소비위축 등 경제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성장잠재력 약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노동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성 하락이 예상되며,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은 2010년 38.0세에서 2020년 43.8세, 2050년 56.7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 지속가능성이 저해되며,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2007년 7.0명에서 2020년 4.6명, 2050년에는 1.4명으로 전망된다. 연금가입

자수는 2014년 1,87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는 2010년 11.1%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65년 93.8%로 최고점에 이를 전망이다. 2044년부터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60년부터 적립기금 없이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으며, 2030년에 24%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는 교육, 주택, 금융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인력 및 학교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 전공별, 직종별 인력수급의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영태, 2011).

전체적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나 노인가구가 선호하는 형태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주택수요연령층인 35~54세 인구는 2011년부터 감소하나, 가구수는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수요가 감소하는 대신 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며 유가증권과 보험, 연금위주로 변화가 예상된다(『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보건복지부).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2011~2015)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이며 목표는 2011~2015년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과 2016~2030년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이다.

추진과제로는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일·가정 양립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확대,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추진)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추진) 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 등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략적 홍보, 교육,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범국민운동을 확산시키며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표 2-1〉 정책추진 방향

구분		제 1차 계획	제 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주도	범사회적 정책공조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과제범위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경제 전반의 관련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고용, 소득안정, 공교육 정상화, 주택시장 안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 소득안정은 만혼과 출산연기, 포기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사교육 부담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결혼, 출산의 장애요인 해소에 기여한다.

3)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각 분야 국가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 양육여건 조성, 노후소득, 건강대책 및 생활기반 조성,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인력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확충, 주택시장 안정, 공교육 정상화 등은 별도로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제4절 가치관의 변화추이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추이를 1979년, 1997년, 2010년 조사결과를 통해 비교한 연구(나은영 외, 2010)에 의하면, 1998년 이후 12년 동안 자신과 가족 중심 개인주의와 남녀평등의식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효사상을 점점 덜 중시하는데 2010년에는 부모봉양보다 출세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수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에서 크게 증가하여 세대차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탈권위주의 또한 증가 경향을 보여 고용 시 고분고분한 사람을 선호하기 보다는 일의 수행(책임감)을 더 중시하며, 상하구별보다 직능구분을 중시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함께 행복하려면 불만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자기주장성의 안정적 증가 경향과 함께 여성의 자기주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문항에서윗사람에 대한 배려와 겸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이 특징적인데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초반 19년간은 50대보다 20대가 더 빨리 변화하고 있으며, 세대차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1997년부터 2010년 후반 12년간은 대세에 적응하기 위한 50대의 빠른 변화로 인해 세대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새로이 등장한 변화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친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남녀평등의식이 증가하며 2010년 ‘혼전순결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증가하여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20대의 증가율이 훨씬 크고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다. 한편, 결혼한 여성의 사회활동 찬성률이 증가하고 시댁과 친정의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비율이 1998년 이후 과반수를 넘은 후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가족 가치관의 변화 요인(은기수, 2001)으로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안 해도 좋다’는 생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이나 경제여건의 변화,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여성이 취업해 경제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이다.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성차별이 있다고 느낄 경우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이며, 남성은 사회내의 성차별, 여성은 가족 내의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감소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비율이 2008년 14.7%에서 2009년 31.5%로 증가하고 있다. 심각하다고 응답한 경우,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로 ‘저출산’ 문제는 2008년 12.1%에서 2009년 21.2%로 증가하였다.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2008년도 19.0%에서 2009년도 31.3%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의 실제 결혼·출산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남성 2005년 82.5%에서 2009년 73.8%로 감소한다. 여성의 경우 2005년 75.7%에서 2009년에 73.1%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태도로서 ‘반드시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의견은 남성의 경우 2005년 54.4%에서 2009년 24.3%로 감소하며, 여성의 경우 2005년 42.1%에서

2009년 24.0%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핵가족화에 따라 노부모에 대한 가족 부양의식은 약화되거나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난다. ‘준비를 거의 못함’이 34%, ‘준비 중이나 부족함’이 45.7%로 나타나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비 해결’이 17.8% ‘충분히 준비’는 2.5%로 전체의 약 20%정도만이 생계비 해결이나 그 이상의 노후준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80%는 노후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5절 한국 미래인구 예측 및 정책과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조영태, 2011) 한국의 미래인구는 출산보다는 ‘이동’과 ‘사망’에 의해 그 변화가 결정될 것이며, 출산율의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산은 경제, 노동시장, 주택시장,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사회와 가정에서 젠더 간 평등, 보육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요소들이 출산 친화적으로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인구의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데,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인구변동의 긍정적 사회결과

인구변동의 긍정적 사회결과로서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최소한 혼인 및 출산과 관련한 생애주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저출산 원인인 만혼과 비혼, 출산연기와

포기는 혼인연령, 출산연령의 폭을 크게 넓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반적인 생애주기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주택, 자녀교육 문제, 노동시장, 성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 가장 효율적인 생애과정이 될 가능성 크다.

사교육문제가 축소되어 현재 대학수험생이 68만명에서 2020년 50만명, 2030년 40만명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사교육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긍정적인 변화로 들 수 있다. 2020년 전체 가구에서 4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이다. 중형대 아파트(방3개 이상)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소형부동산의 수요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가격의 상승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인구변동의 부정적 사회결과

부정적인 사회결과로서 생산력 감퇴 및 소비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생산활동을 위한 최적 조건으로서 35~54세 인구 비중이 약 34%에 이르나, 2050년에는 약 22%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비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젊은 세대의 소비는 서비스보다 공산품을 구입하고 이는 재투자로 직접 연결되지만, 고령인구는 사회적 비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의 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세대 간 갈등의 확산을 전망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적 자원의 세대 간 배분이 고령인구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개인, 가족에서 사회와 국가

로 빠르게 이전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부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고령인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도 커지게 되고 강력한 정치적 이익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386세대가 고령화되는 시점부터 이러한 변화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고령자의 노동참여 연장, 신체적·정신적 노쇠의 방지, 건강증진이 필수적이며 출산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환경의 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며, 여성의 노동참여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분담, 조직 시스템 및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조영태, 2011).

3. 미래 여건과 정책과제

미래에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구, 경제, 가치, 계층 등을 들 수 있는데 미래의 재정에 가장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 가능한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고령화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그로 인해 제기되는 정책과제,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계층과 가치가 초래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소득분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것이 재정지출 소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체계화된 연구가 부족하며 계량적 추정치가 거의 없다.

가치관의 변화는 재정지출 소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더 이상 가족 또는 친족 등의 1차적인 공

동체가 충분한 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 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보육 및 가족정책에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지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제3장

자료 및 분석방법

제1절 자료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거시지표인데, 한국을 포함한 13개 OECD국가들을 비교국가로 선정하였다. 주요 지표는 1)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2) 사회적 위험 지표, 3) 복지국가 유형 및 거시변수 관련 지표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로는 합계출산율, 고령화율이 사용되었다. 거시변수지표는 1인당 GDP,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GDP성장률, 외국인 노동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위험 관련 지표들은 노인빈곤율, 근로빈곤율, 자살률, 범죄율(강력범죄; 살인, 강도, 절도 등), 자영업자 비율, 고용보호지수(EPL), 실업률, 여성노동참가율 등이다.

〈표 3-1〉 지표분류, 지표내용 및 비교국가

지표 분류/국가	지표 내용 및 비교국가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 합계출산율 · 고령화율
복지국가 유형 및 거시변수 지표	· 1인당 GDP ·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 GDP성장률, 인구 1000명당 출생율, 지니계수 · 외국인 노동비율
사회적 위험 관련 지표	· 상대빈곤율, 근로빈곤율, · 자살률, 범죄율(강력범죄: 살인, 강도, 절도 등), · 자영업자 비율 · 고용보호지수(EPL) · 실업률, 여성노동시장참가율
13개 OECD 비교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일본, 한국

제2절 분석방법: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와 미래예측방법(시나리오)

분석방법은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로서 거시적 사회현상을 질적으로 비교연구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서 각 사례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 사회의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가를 설명함으로서 의도적이면서도 많은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을 고안한 찰스 래긴(Charles Ragin)은 부울 대수학(Boolean algebra)의 논리적 추론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사의 사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련의 원인조건들의 공통분모를 추출해 내는 분석적 추론(analytical induction)과 질적 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연결하는 방법인 것이다.

1. 래긴(Ragin) 방법론의 논리

부울 대수에는 두 개의 조건 혹은 상태, 즉, 진리(존재)와 오류(부재)가 있는데 1은 존재를 0은 부재를 표시한다. 사회적 자료의 분석에서 모든 독립, 종속변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명목척도(nominal scale measure)로 치환된다. 등간척도는 다범주적(multicategory) 명목척도로 변형되며, 다범주적 명목척도는 몇 개의 이분법적 변인들로 표현될 수 있다. 역사사회학에서 주요한 변인들은 쉽게 명목변수나 이분법적 변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래긴(Ragin)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표 3-2〉 4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진리표의 예시

조건				결과	사례수
X1	X2	X3	X4	Y	N
0	0	0	0	0	8
0	0	0	1	0	6
0	0	1	0	1	10
0	0	1	1	0	5
0	1	0	0	1	13
0	1	0	1	0	7
0	1	1	0	1	11
0	1	1	1	1	5

부울대수를 질적 비교를 위한 기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행렬의 진리표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진리표는 각 독립변수 값의 조합을 정리한 표이다.

이는 일반적인 통계분석과는 다르며 통계분석으로 모델을 만들려면 더 많은 사례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수의 사례들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종속변수를 통계적 확률로 개념화하지 않으며 구별은 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게 질적인 현상들을 사고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더욱 적합한 방법론이 된다.

〈표 3-3〉 변수 조작화 및 설명

변수	기준	조작화	해당 국가
1인당 GDP (GDP_1)	1990년 1인당 GDP 1990년 대비 2007년의 GDP	1 : 선진국 0 : 역동적 추격형	일본, 핀란드,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복지지출 (TWS_1)	1990년 GDP대비 복지지출 1990년 대비 2007년의 복지 지출 증가율	1 : 고복지형 0 : 주변부형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미국/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일본, 한국
고용보호지수 (EPL_1)	1990년의 고용보호수준 1990년 대비 2007년의 보호 수준	1 : 영미형 유연시스템 0 : 경직시스템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자영업비율 (SELF)	1990~2007년 평균 (20%이상/20%미만)	1 : 높은 자영업 국가 0 : 낮은 자영업 국가	그리스, 한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핀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미국
실업률 (UR)	1990~2007년 평균 (13개국 평균(77%이상)/미만)	1 : 높은 실업률 국가 0 : 낮은 실업률 국가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미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
여성노동 참가율 (WLPR_1)	1990년의 여성노동참가율 1990년대비 2007년의 여성노 동참가율	1 : 여성노동기활성국가 0 : 초기여성노동활성국가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노르웨이, 영국, 미국, 핀 란드, 스웨덴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합계출산율 (TFR)	1990년의 출산율 1990년 대비 2007년의 출산율	1 : 고출산/저출산반전형 0 : 저출산악화형	프랑스, 핀란드, 미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일본, 그리스, 독일, 포르투갈
고령화율 (ACR_1)	1990년의 고령화율 1990년 대비 2007년 고령화율	1 : 안정형/점진형 고령사회 0 : 급속형 고령사회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미국/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일본, 한국
외국인 노동비율 (FRN)	1990년의 외국인노동력 비율 1990년 대비 2007년 외국인 노동력 비율	1 : 외국인급속유입사회 0 : 안정된 다문화사회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자살률 (SUR_1)	1990년의 자살률 1990년 대비 2007년의 자살률	1 : 고자살 안정형/아노미 0 : 저자살 안정형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일본, 한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포르투갈
살인율 (HOM)	2007년 기준 살인율 (13개국 평균(1.59%이상)/미만)	1 : 높은 살인율 국가 0 : 낮은 살인율 국가	핀란드, 한국, 포르투갈,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근로빈곤율 (WPR)	2007년 기준 근로빈곤율 (13개국 평균(8.56%이상)/미만)	1 : 높은 근로빈곤율 국가 0 : 낮은 근로빈곤율 국가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고령빈곤율 (PRO)	2007년 기준 고령빈곤율 (13개국 평균(13.05%이상)/미만)	1 : 높은 고령빈곤율 국가 0 : 낮은 고령빈곤율 국가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2. 미래예측 방법론

미래예측 방법론으로는 델파이, 시나리오, 패널, 트렌드분석, 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다.

〈표 3-4〉 저출산 및 사회적 위험의 원인 주요 미래예측방법론

기법	주요 내용
델파이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문(4~5회)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합의 도출 · 미래예측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이슈, 변화요인, 추세 파악에 전문가들의 직관 이용
시나리오	· 워크숍 등을 통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 · 미래 가상적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 각각의 전개 과정 추정, 장기적 예측에 많이 활용
패널	· 독립된 전문가 패널이 일정기간 특정 문제 및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 합의과정을 거쳐 미래 전망 · 나노기술, 건강과 같은 적용분야, 제약 부문 등이나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 전망에 주로 활용
트렌드분석	· 현재·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나 추세에 근거, 특징, 원인, 발전 속도, 잠재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추세분석 · 경제성장, 인구증감, 에너지 소비량 등을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 시계열 자료 분석에 의존
브레인스토밍	·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자유로운 토론을 하면서 미래에 관한 전망 종합 · 연구 초기에 전반적 상황 조망, 연구주제 구체화, 과제 도출 단계에서 주로 활용

특징 및 장단점으로 먼저 델파이 기법의 장점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부터의 다양한 시각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토론이나 논쟁의 생략으로 단순한 의견수집에 불과할 수 있다. 전문가 선정, 질문구조화, 정보해석 등 일련의 과정이 관리팀의 시각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내재한다. 시나리오는 10년 이후의 장기 예측에 적합하며 최근 미국, 유럽 등의 미래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추세기반 등의 전략적 기획 방법은 과거의 트렌드로부터 추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산업시대

에는 적당하나 지식시대에서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전략적 예측의 대표적인 방법인 시나리오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현재로 돌아와 새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에 대응하도록 도와준다. 상상된 일련의 사건, 특히 여러 개의 상세한 계획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략적 예측에서 시나리오란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묘사하는 스토리이며, 동인(drivers or forces)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미래를 상상하고 대비하도록 도와주며 세상의 복잡한 모습을 단순화시켜서 보여주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의 추진방법의 경우, 사전작업으로 질문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미래의 시간적 지평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참고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한다. 다음으로 변화 동인을 도출하는데 미래에 영향을 미칠 미시적·거시적 동인을 파악하며, 동인들의 변화 추세를 예측한다. 변화동인을 교차분석 하는데 영향 정도(혹은 중요도)와 불확실성(혹은 가능성) 정도에 따라 동인을 분류(서열화)한다. 이와 같이 분류된 동인들을 교차좌표에 따라 조합하여 시나리오 유형을 구성한다. 장점은 이미지화하기 쉬워 설득력이 강하고, 미래에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시 유사한 시나리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발생가능성과 중요성에 따른 시나리오 선정으로 임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미래에 중요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우려도 존재한다.

시나리오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 환경, 사회 등에서 가능한 미래의 변화들을 묘사해야 한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며 사건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하여 현재나 과거의 시제를 사용한다. 주요 사건 전개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고정적 이미지에 도전해야 하고 정책, 전략, 행동을 수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략적 결정과 정책형성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단순예측은 단기간의 전망에, 시나리오는 중장기의 전망에 주로 사용되며 단순예측에 사용되는 방법론(트렌드 분석, 델파이 등)은 시나리오와 결합되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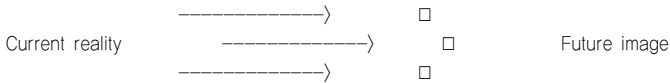
시나리오에서는 동인 파악 및 분석, 동인 잠재효과 분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동인은 쉽게 눈에 보이나 어떤 동인은 그렇지 않으며 단기적 동인은 찾기 쉬우나 중장기 동인을 찾기 어렵다. 또한 어떤 동인은 미리 결정되어 있는 반면(예; 인구구조), 어떤 동인은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어떤 것이 피할 수 없고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예측하기 어렵고 선택의 문제인지 아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동인은 총체적 관점에서의 거시적 환경인자와 개별적 관점에서의 미시적 환경인자로 구분하며 영향력 불확실성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동인을 분석하고 가장 영향력이 크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동인을 추출한다.

[그림 3-1] 주요 동인의 파악

	High Impact		
low uncertainty	2	1	High uncertainty
	3	4	
	Low Impact		

핵심 불확실성으로 구분된 동인은 동인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

[그림 3-2] Multiple path



서로 연관되어 있는 동인을 집단화하여 불확실성의 축을 2~4개로 제한한다. 시나리오 논리 선정 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시나리오를 제거하여 시나리오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시나리오 선정 시, 발생확률보다는 불확실성의 경계(boundary)에 다가서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보통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현재의 경향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현재 경향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변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게 된다.

시나리오 스토리 작성 시에는 불확실성의 축을 중심으로 각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확정적 동인은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또한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시제로 작성하여 독자에게 현실감 있게 전달하게 되며 전략적 함의를 띄게 되어,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전략을 워크샵 등을 통해 도출한다. 미래 예측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로는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가치(value and norms) 등이 있다.

제4장

OECD 주요국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험 관련 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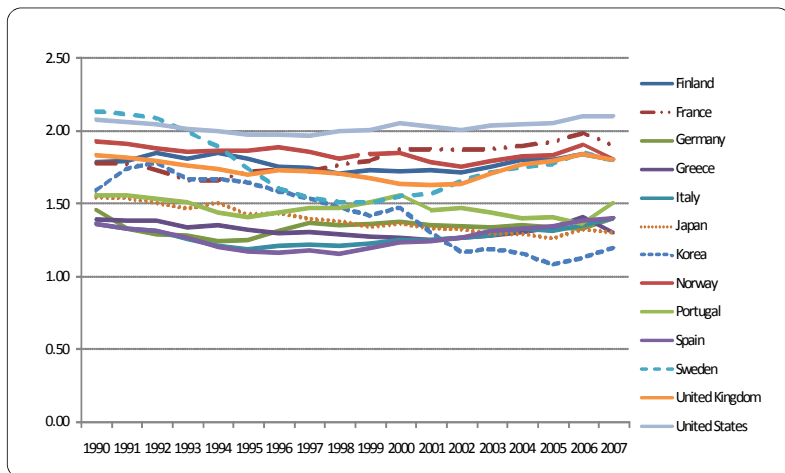
제1절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표

저출산·고령화 관련지표로는 합계출산율, 고령화지수를 살펴보았다.

합계출산율의 추이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국가는 미국이며 영국은 미국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안정된 출산율을 유지하는 상태이다. 1990년 출산율이 높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낮아졌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한 국가로서는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역시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200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동 기간 동안 출산율이 가장 급격히 하락한 국가이며, 2005년 이후 약간의 반등을 보인다. 일본 역시 출산율이 하락하는 국가이며 남유럽 국가군도 출산율이 낮긴 하지만 2000대 이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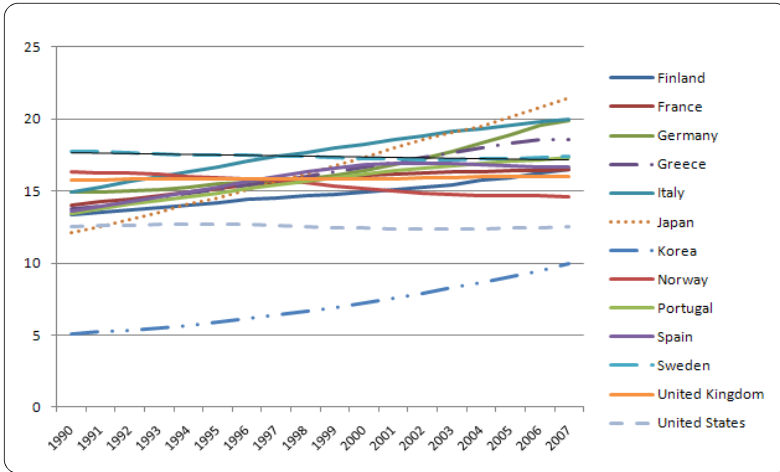
[그림 4-1] 합계출산율 1990~2007



* 자료: OECD Factbook 2009

고령화지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13개국 전체 국가에서 모두 상승하고 있다. 스웨덴만 예외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의 경우, 1990년에는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화지수가 매우 낮았으나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가 매우 급격히 진행되며 고령화 수준도 13개 국가 중 가장 높다. 다음으로 독일, 이탈리아의 순이다. 남유럽 국가군도 고령화지수가 상승하나 2000년대 이르러 상승폭이 둔화된다. 이 중 그리스는 고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가에 속한다. 미국은 고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4-2] 고령화지수, 1990~2007



*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7-2007에서 재구성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제2절 사회위험 관련 지표; 경제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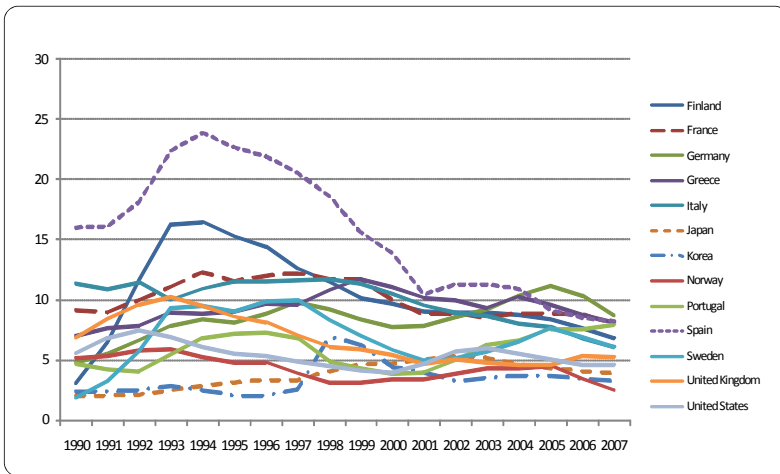
사회위험 지표로서는 실업률, 근로빈곤율, 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고용보호), 복지지출 비중, 자영업자 비중, 여성노동참가율, 노인빈곤율, 근로빈곤율 등을 살펴보았다.

실업률은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상승하였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약간 상승 및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군은 스페인, 핀란드이며 다음으로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서유럽 국가의 순이다. 실업률이 낮았다가 1990년대 초반이후 급격히 상승한 국가군에 스웨덴도 포함된

다.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이후 하락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다시 실업률이 소폭 상승,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하락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1990년대 초반 실업률이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과 함께 실업률이 5% 이하로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그림 4-3] 실업률(%),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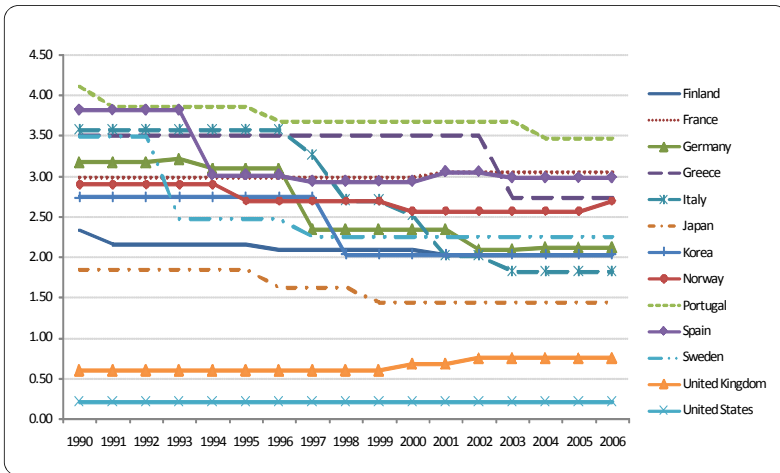


*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고용보호지수를 나타내는 EPL은 전체 국가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EPL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이며,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고용보호수준이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재는 13개국 중 중간 정도에 속한다. 미국과 영국은 EPL 지

수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며, 영국은 2000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거의 변화 없이 가장 낮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높으나 유럽 국가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림 4-4] EPL(고용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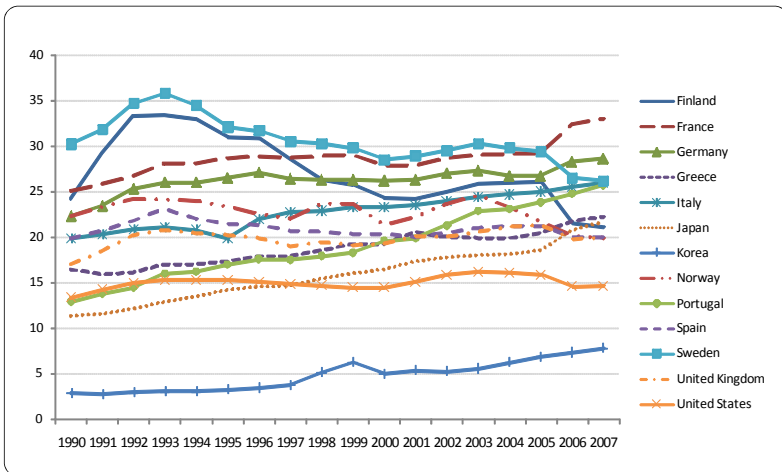


*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r=81208>

복지비중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반 정점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0년대 이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05년 이후에 다시 하락하여 현재 25%정도에 이른다. 핀란드는 스웨덴보다 비중이 적긴 하지만 역시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여 정점에 이르고 급격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3개국 중 중간수준에 이른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에는 스웨덴보다 낮았으나 복지지출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독일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미국은 약 15%선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며, 영국도 약간의 증감이 있으나 약 20%선에서 비교적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10%를 상회하는 비중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13개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전반적으로 5%미만의 수준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약 7%에 이르렀으나 아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4-5] 복지지출 비중/ GD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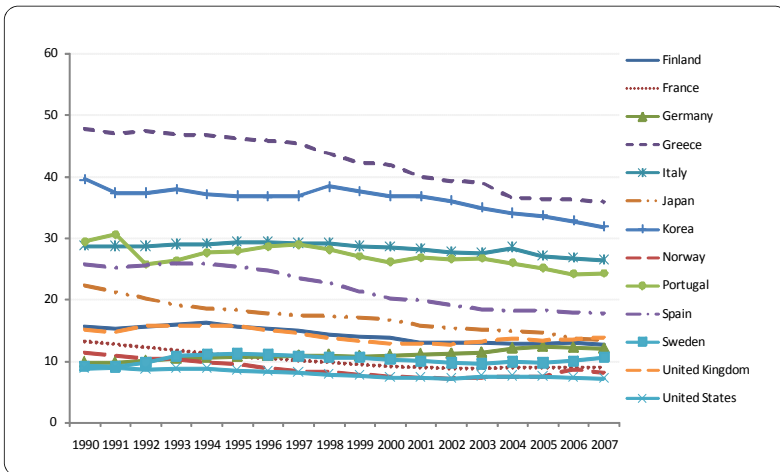


* 자료: OECD Factbook 2009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국가군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며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로서 자영업자 비중이 약 50%에 가까우며 1990년대 초반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0년

대 후반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한국은 그리스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며 1990년대 초반 40%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유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태리,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국가들로서 약 30%선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다. 스페인은 남유럽 국가군 중에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이다. 일본도 1990년대 초반 약 20%를 상회하다가 서서히 감소하여 현재 약 15%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6]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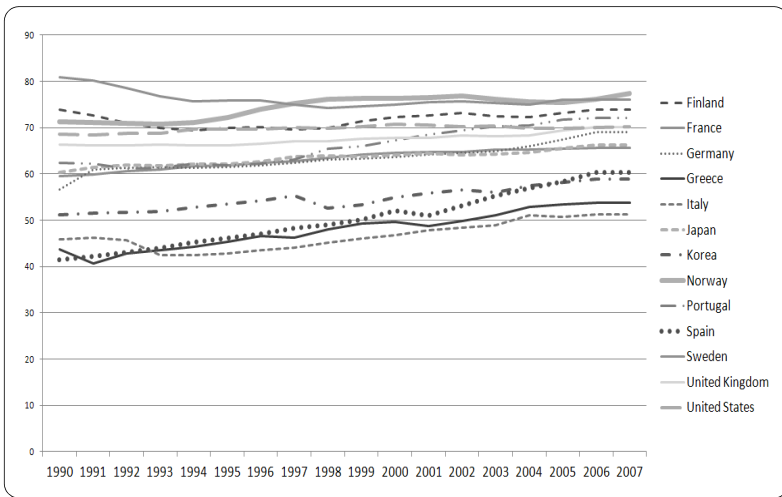


* 자료: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중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ALFS)

여성노동참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이며 1990년대 초반 약 80%를 나타냈으나,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로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현재는 스웨덴과 유사한 약 75%이다. 미국은 약 7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남유럽 국가들이 가장 낮은 편이나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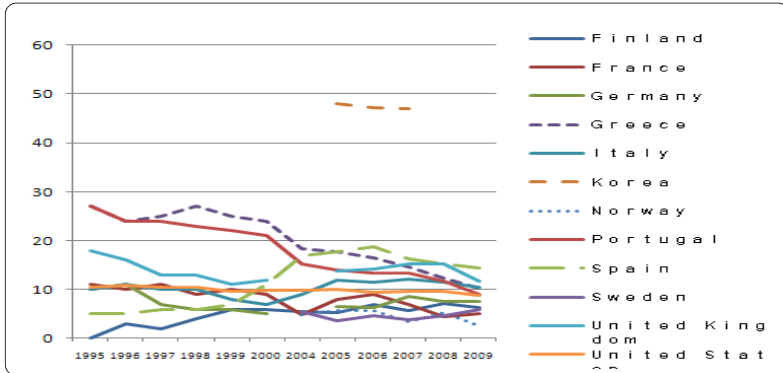
[그림 4-7] 여성노동시장참가율(%)



*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중 LFS by sex and age indicators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한국이 약 50%로 가장 높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30% 이하를 나타낸다. 그리스, 포르투갈과 같은 남유럽국가는 1990년대 중반 노인빈곤율이 약 2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가 점차 감소하여 10%정도에 이른다. 스페인은 이 두 국가들과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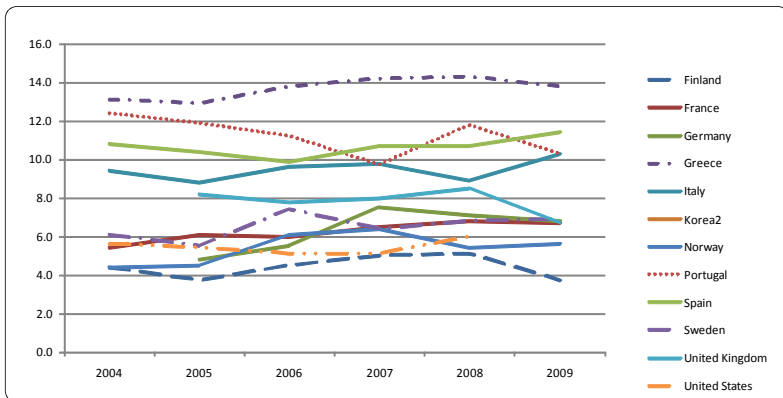
[그림 4-8] 노인빈곤율(%)



* 자료: OECD Factbook 2009

근로빈곤율은 대체로 시기별 증감이 있으나 전체 국가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스가 가장 높으며 2005년 이후 더욱 증가하여 12%이상을 나타낸다. 포르투갈 역시 비중이 높으며 해마다 증감의 폭이 큰 편이다. 스페인도 10%이상으로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로서, 전반적으로 남유럽 국가에서 근로빈곤율이 높다.

[그림 4-9] 근로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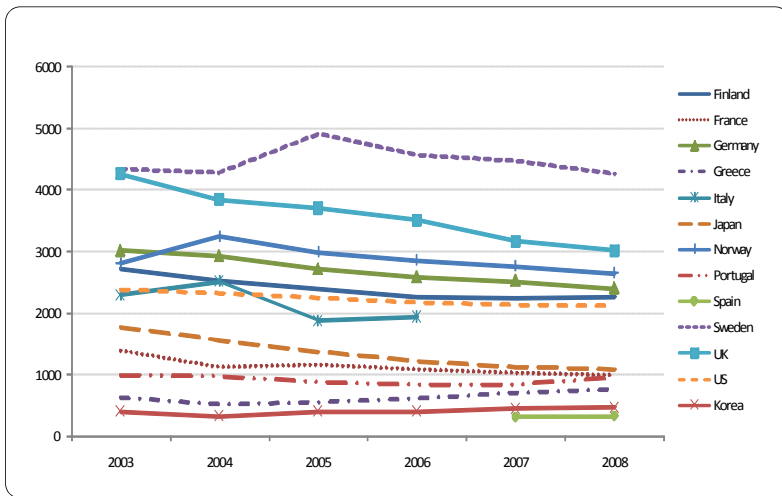
* 자료: OECD Factbook 2009

제3절 사회위험 관련 지표; 사회심리적 측면

사회위험 관련 지표로는 강력범죄인 절도, 살인, 강도 그리고 자살이 포함된다.

스웨덴 절도 발생비는 가장 높으며 약간 감소하는 경향 보인다.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국가의 발생비가 높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발생비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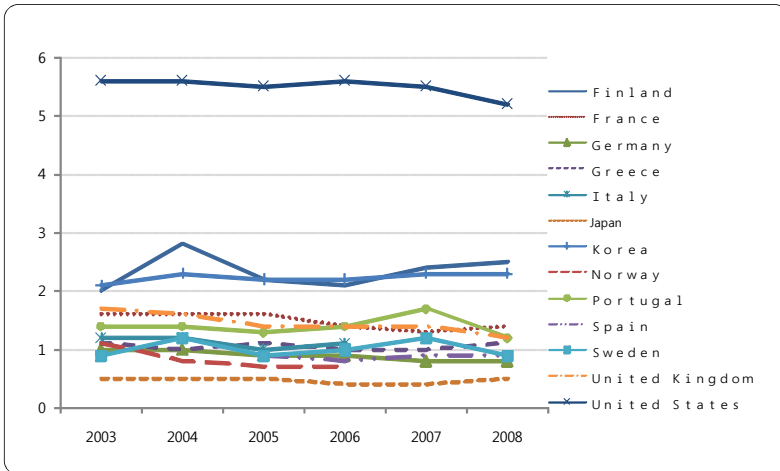
[그림 4-10] 절도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 출처: <http://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UnitedNationsSurveysonCrimeTrendsandtheOperationsofCriminalJusticeSystems.html/>

살인 발생비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핀란드와 한국이 그 다음으로 높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등의 국가들의 살인 발생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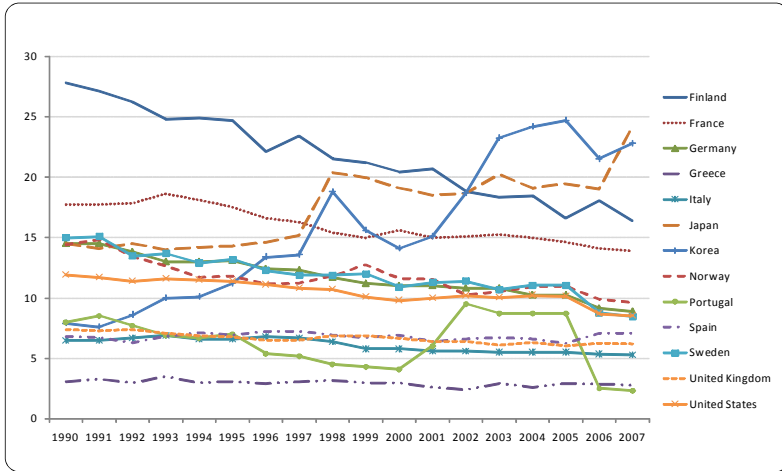
[그림 4-11] 살인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 출처: <http://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UnitedNationsSurveysonCrimeTrendsandtheOperationsofCriminalJusticeSystems.html/>

자살은 각 국가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자살률은 1990년대 말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현재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가장 높았으나 급격히 감소하였다. 남유럽 국가군들의 자살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림 4-12] 자살 발생비(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 출처: <http://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UnitedNationsSurveysonCrimeTrendsandtheOperationsofCriminalJusticeSystems.html/>

제4절 국가군의 분류 및 배경요인 분석에 사용할 변수에 대한 검토

1. 경제성장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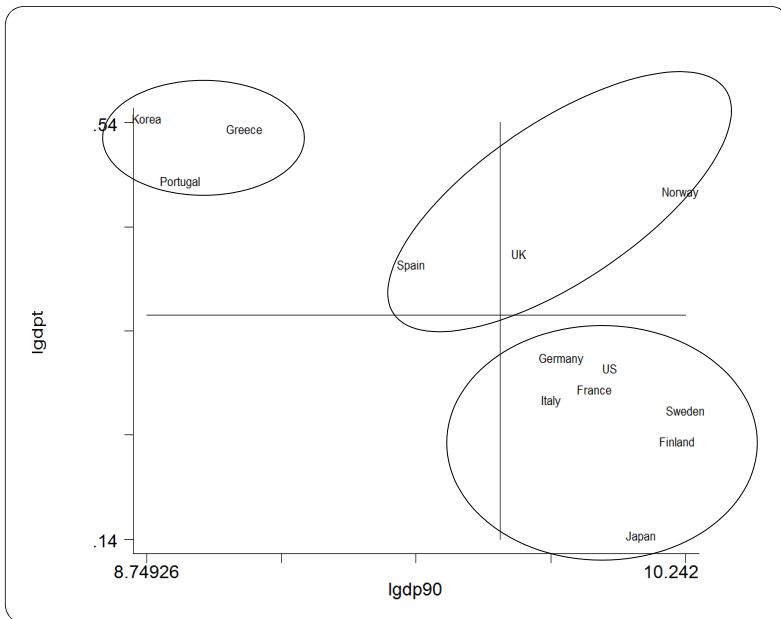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lgdpt	13	.355	.125	.14	.54
lgdp90	13	9.729	.534	8.74	10.24

1인당 GDP의 변화양상을 토대로 하여 비교군의 국가들을 유형화하는 전략을 탐색하였을 때, 비교적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1990년 기준의 1인당 GDP의 로그값, 그리고 1990년 이후 증가한 소득의 로그값으로 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할 경우, 1990년에 1인당

GDP가 1만불 이하이었다가 급속하게 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진 소수의 역동적 경제국들(그리스, 한국, 포르투갈)과, 이미 1990년에 1만불을 넘어서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던 선진국(일본, 핀란드,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으로 구분이 되며, 또한 1990년에 이미 1만불을 넘어섰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소득증가를 이루어 온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등의 역동적인 선진국형 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 1) 역동적 성장국 : 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 2) 원숙형 선진국 : 일본, 핀란드,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 3) 역동적 선진국 :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그림 4-13] 경제성장의 유형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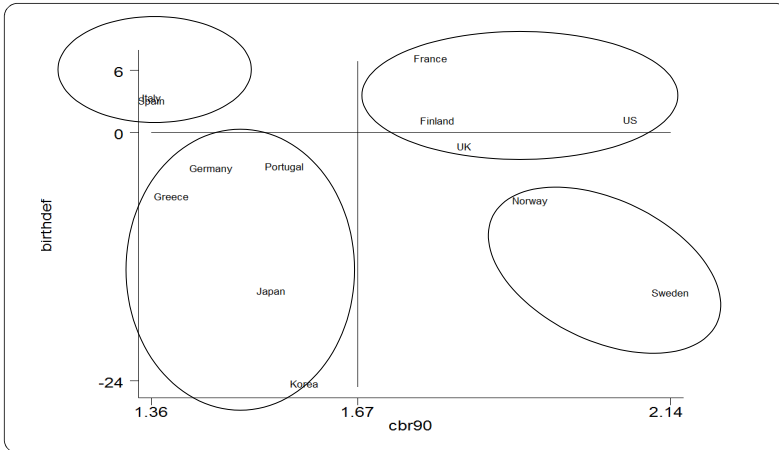
2. 출산율의 패턴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birthdef	13	4.894	8.969	24.53	6.86
cbr90	13	1.676	.268	1.36	2.14

1990년 당시의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되, 그 후 200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출산력의 변화를 또 다른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분류하면, 출산력 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국가군들이 판별된다.

- 1) 1990년대에 이미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18년간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 핀란드, 미국, 영국
- 2) 고출산이면서 점진적 저하가 있다가 다시 증가한 나라 : 스웨덴, 프랑스
- 3) 저출산이었으나 반전이 된 나라 : 이탈리아, 스페인
- 4) 저출산이 악화되는 나라 : 한국, 일본, 그리스, 독일, 포르투갈 등

[그림 4-14] 출산율의 유형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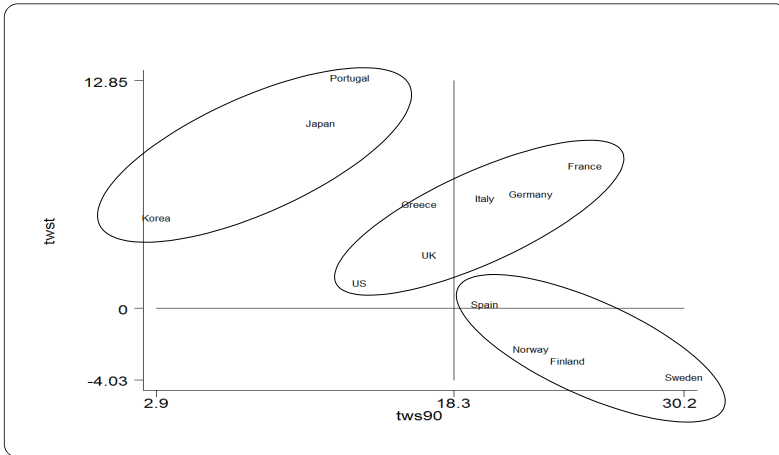
3. 복지지출의 양상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twst	13	3.741538	5.216691	4.03	12.85
tw90	13	18.30769	7.086662	2.9	30.2

복지지출의 측면에서는 1990년 당시에 총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 축으로, 그리고 그 후 18년간의 변화과정에서의 복지지출의 증감을 비교하였을 때, 초기의 높은 복지비율이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한 원숙 포화형 복지국가군과 비교적 높은 복지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복지비 증가를 경험한 후발 발전형, 그리고 낮은 복지지출에서 출발하여 급격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경험한 주변형 등으로 구분된다.

- 1) 원숙 포화형 :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 2) 후발 발전형 :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 3) 주변형 : 포르투갈, 일본, 한국

[그림 4-15] 복지지출의 양상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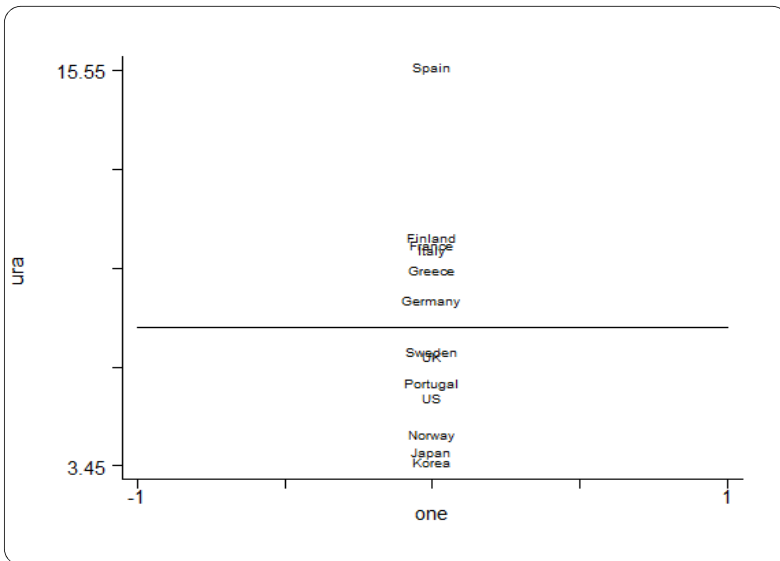
4. 평균 실업률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ura	13	7.697692	3.386129	3.45	15.55

각국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 20여년간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유형론이 가능한 변수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평균 실업률을 토대로 하여 평균 실업률인 7.7%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인 고실업 국가군과 이보다 낮은 저실업국가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 고실업국가군 :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독일
- 2) 저실업국가군 :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미국, 노르웨이, 일본, 한국

[그림 4-16] 평균 실업률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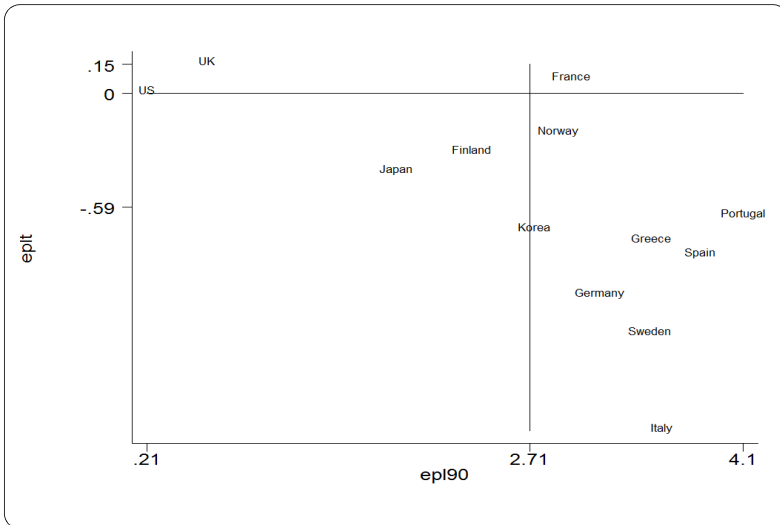
5. 고용보호 시스템의 변화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eplt	13	.593	.554	1.75	15.0
epl90	13	2.711	1.192	.21	4.1

1990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고용보호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18년간의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국가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 유연화 되는 극단적 경직성 고용 :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 2) 중범위의 경직성 유지 :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 3) 유연형 : 영국, 미국

[그림 4-17] 고용보호시스템의 변화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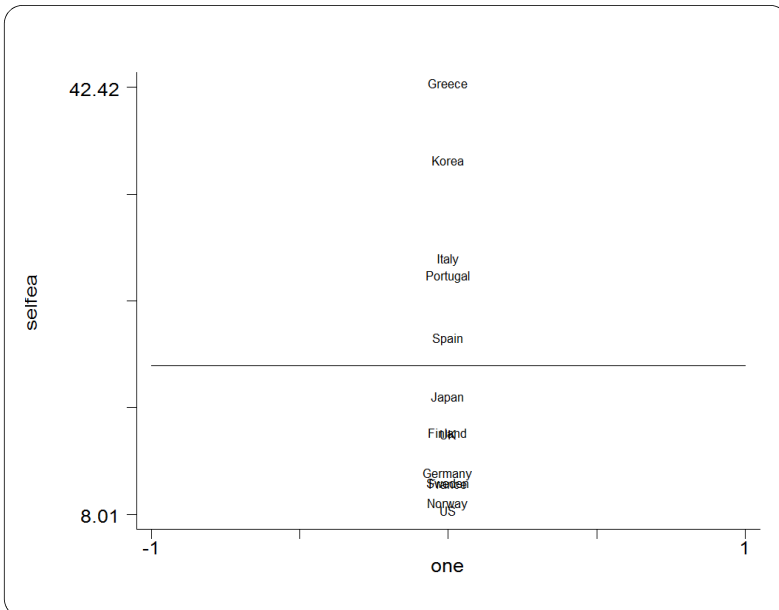
6. 자영업 규모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selfea	13	19.19	11.18111	8.01	42.42

자영업 비율은 시기별로 변화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안정되어 있는 변수로서, 전체 기간에 걸쳐 자영업비율이 전체 평균 20% 이상을 유지해 온 나라와, 그 이하로 유지된 나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 높은 자영업: 그리스, 한국,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 2) 낮은 자영업: 일본, 핀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

[그림 4-18] 자영업의 규모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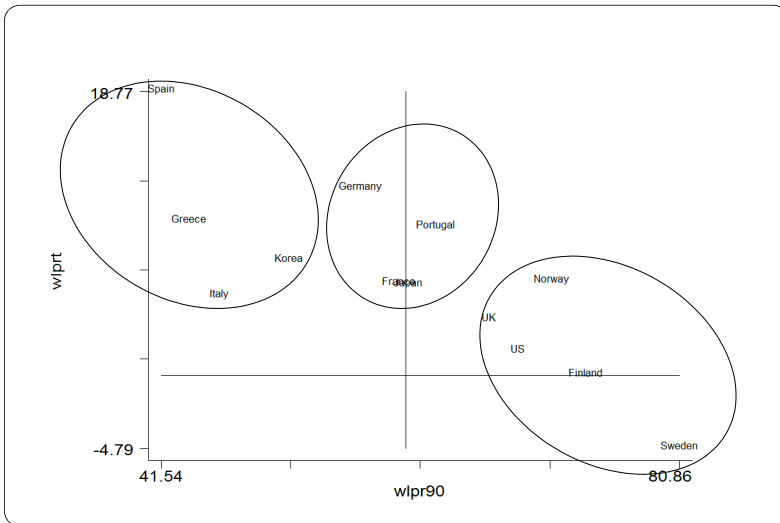
7. 여성 노동시장 참여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wlprt	13	6.354	5.874	4.79	18.77
wlpr90	13	60.166	12.134	41.54	80.86

1990년을 기준으로 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도와 그 이후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여성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나라들과 중범위 국가 그리고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1990년 기준으로 매우 낮았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후발 활성화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1) 여성참여 활성화국가 : 스웨덴, 핀란드, 영국, 미국, 노르웨이
- 2) 여성활동 중간국 :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 3) 후발 여성활성화 국가 :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한국

[그림 4-19] 여성노동시장 참여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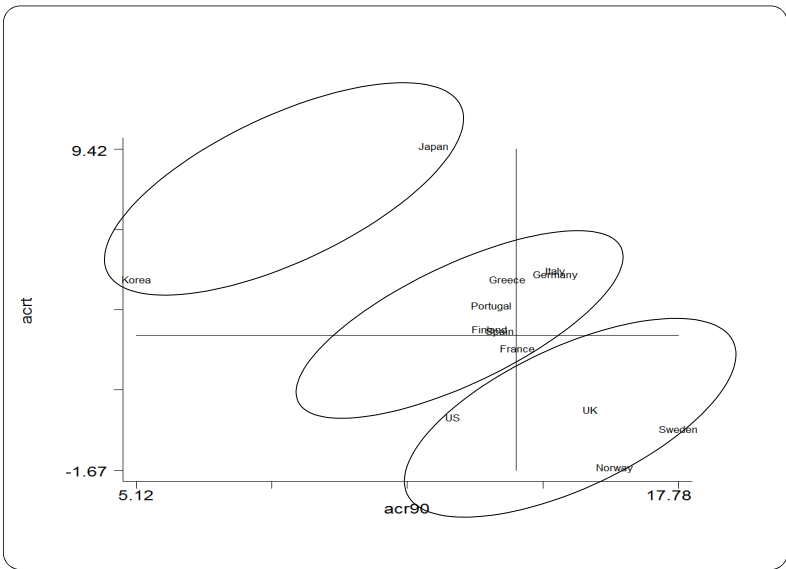
8. 고령화의 양상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act	13	3.075	2.977	1.67	9.42
acr90	13	13.660	3.005	5.12	17.78

1990년 기준의 고령화율과 그 후 18년 동안의 고령화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국가군 판별이 가능하다.

- 1) 안정형 고령사회 :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미국
- 2) 점진형 고령사회 : 이태리,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 3) 급속형 고령사회 : 일본, 한국

[그림 4-20] 고령화 양상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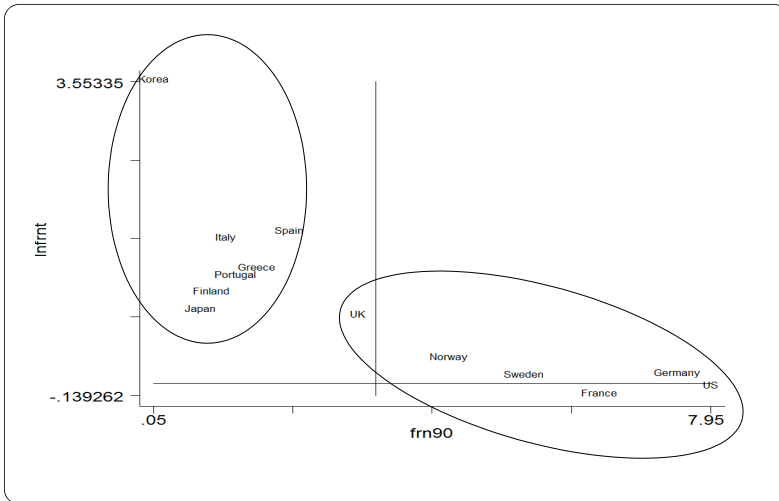
9. 외국인 노동력 유입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frnt	13	5.103	9.115	.87	34.93
lnfrnt	13	.967	1.017	.139	3.55
frn90	13	3.206	2.751	.050	7.95

199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3.2%를 넘은 국가들은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은 반면, 1990년에 외국인 비중이 극히 낮았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 간의 변화과정을 추적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국가들로 구분된다.

- 1) 안정된 다문화형 :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 2) 급속한 유입사회 : 한국,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그림 4-21] 외국인 노동력유입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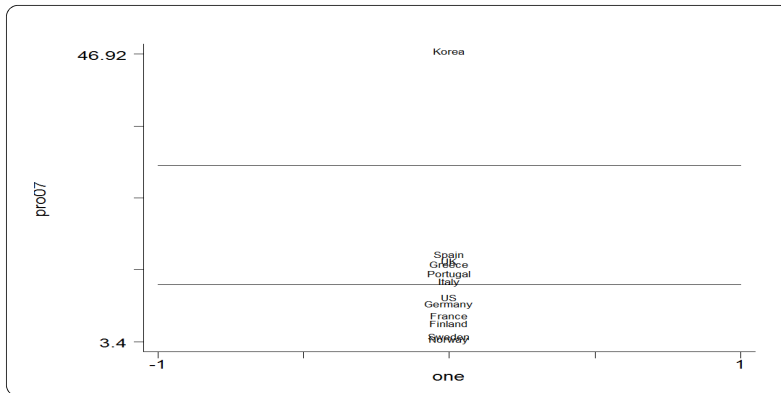
10. 고령빈곤율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pro07	12	13.05167	11.54471	3.4	46.92

고령 빈곤율 자료는 일본의 경우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추후 확인한 결과 한국과 비견할 만큼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¹⁾ 아울러 고령빈곤율 자료는 시계열적인 변화를 추적하기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설명되어야 할 사회적 위험을 측정하는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령빈곤율은 측정된 국가들 중 한국만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다만,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평균은 13%로서 이보다 높은 나라와 그 이하의 나라들로 나눌 수 있다.

- 1) 심각한 고령빈곤국 : 한국, 스페인,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 2) 양호한 국가 :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림 4-22] 고령빈곤율 국가군 분류



1) 일본 고령빈곤율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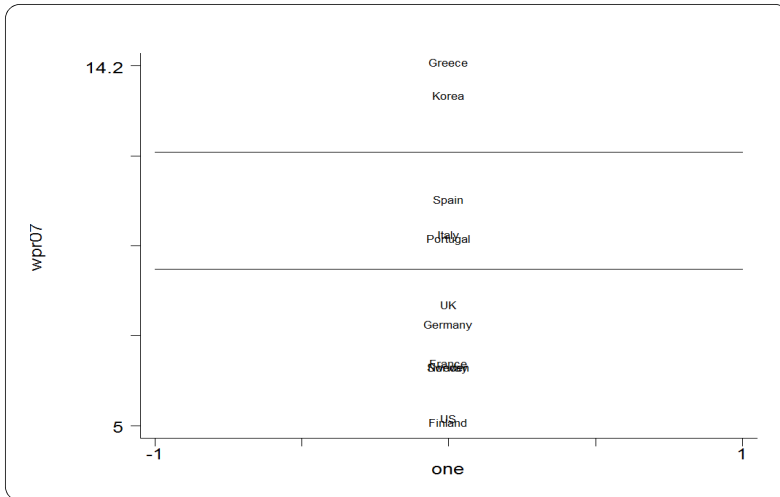
11. 근로빈곤의 비중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wpr07	12	8.555	3.04397	5	14.2

근로빈곤의 비중 역시 중요한 사회적 위험의 요소로서, 종속변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용한 최근자료로 2007년 통계를 활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양상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질적인 구분에서는 심각한 근로빈곤국으로 구분하여 분석가능하다. 2007년 기준으로 평균 8.5%를 넘어서는 국가들을 심각한 근로빈곤국으로, 나머지를 양호한 국가로 구분하였다.

- 1) 심각한 근로빈곤국 : 그리스,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 2) 양호한 국가 :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 핀란드

[그림 4-23] 근로빈곤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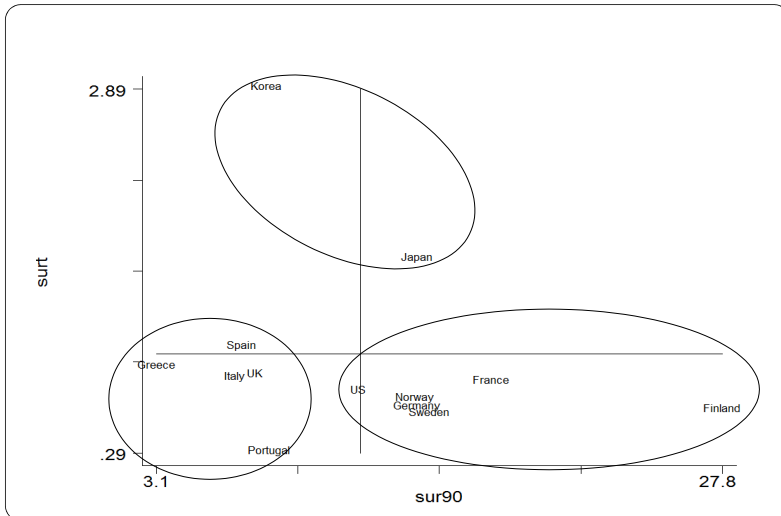
12. 자살률의 변화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sur	13	.953	.665	29.0	289
sur90	13	11.961	6.454	3.1	27.8

자살률은 1990년 이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그래서 지난 20여년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 본 결과, 매우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여온 나라들과 낮은 자살률을 유지한 나라들 그리고 급격하게 자살률이 높아진 나라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 1) 고자살 안정형 :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 2) 저자살 안정형 :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영국, 포르투갈
- 3) 고자살 급속한 증가형 : 한국, 일본

[그림 4-24] 자살률의 변화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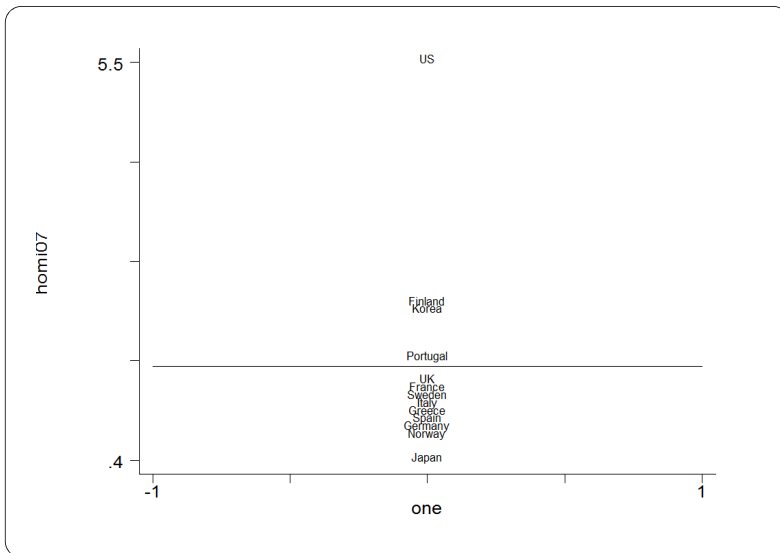
13. 살인율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homi07	13	1.592308	1.311146	.4	5.5

살인율의 경우 미국이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살인율을 보여주는 나라이며, 전체 국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핀란드, 한국, 포르투갈 등이 전체 평균인 10만명 당 1.6명 이상의 살인율을 보인다. 따라서 살인이 빈번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1) 살인 위험국가 : 미국, 핀란드, 한국, 포르투갈
- 2) 저살인 국가 :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일본

[그림 4-25] 살인율의 변화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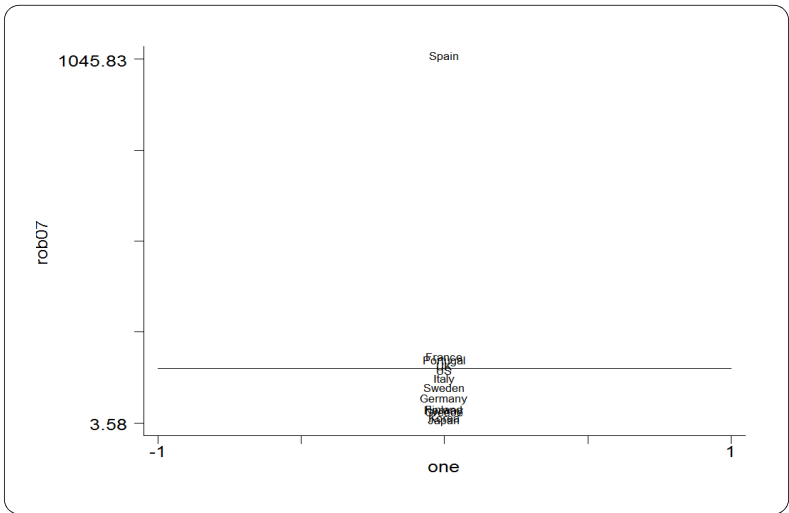


14. 강도사건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rob07	13	160.5592	273.615	3.58	1045.83

강도사건의 경우, 전체 국가들 중에 스페인만이 매우 높은 강도사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심각하게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변수로 보았다.

[그림 4-26] 강도사건 국가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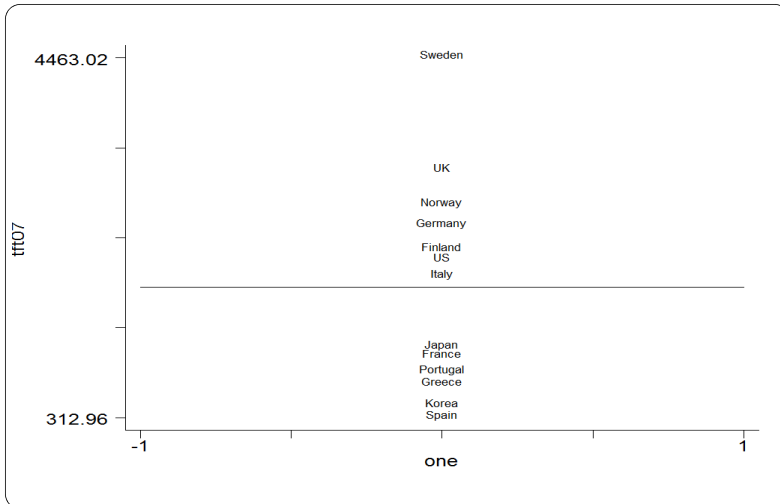
15. 절도사건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tft07	13	1817.512	1224.306	312.96	4463.02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범죄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다를 뿐 아니라, 범죄로 포착되는 과정이 법집행의 단계 중 어디까지를 포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평균적인 절도사건의 숫자(1,817 회)보다 많은 경우를 다절도 국가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절도 국가로 구분하였다.

- 1) 다절도 국가 :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이태리
- 2) 저절도 국가 :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그리스, 한국, 스페인

[그림 4-27] 절도사건 국가군 분류



제5장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위험 배경요인에 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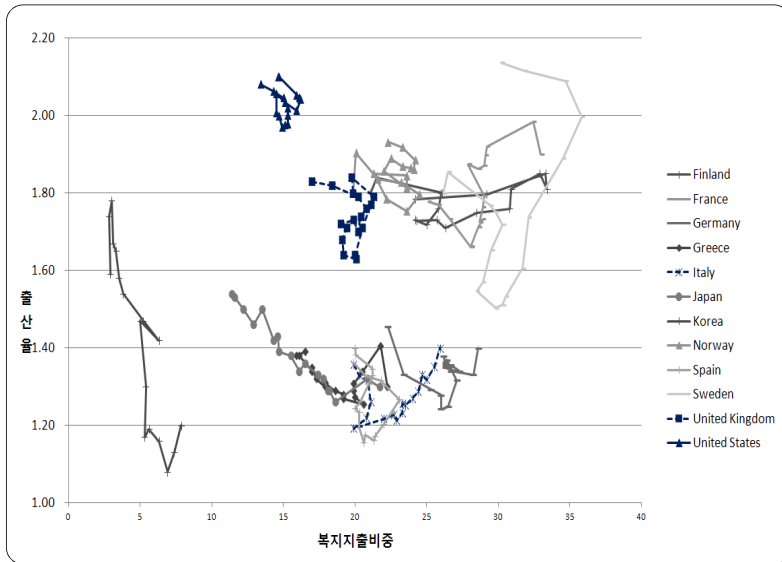
제1절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위험 요인간의 관계; PLOT

이 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위험 배경요인에 관한 분석을 한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위험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국가군의 분류 및 배경요인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에 대하여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출산율과 복지지출비중과의 관계, 여성노동력인구와 출산율과의 관계, 출산율과 고령화율, 출산율과 자영업자 비중, 복지비중과 고령화지수, 여성노동참가율과 복지비중 등의 관계를 OECD 13개 각 국가별 시계열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출산율과 복지지출비중과의 관계를 나타낸 플롯(Plot)이다. 출산율은 크게 고출산율의 영미 및 북구대륙형과 저출산

율의 남유럽형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남유럽과 유사한 수준의 저출산과 남유럽보다 훨씬 낮은 복지지출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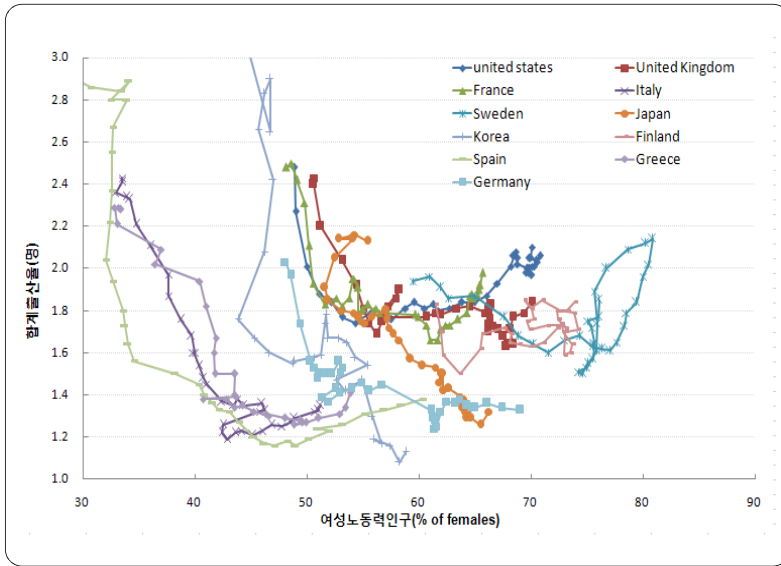
[그림 5-1] 출산율과 복지비중, 1999-2007



* 자료: OECD Factbook 2009

출산율과 복지비중의 관계는 한국이 예외적인 국가로 별도로 분류되며 나머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북구형과 서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군으로 묶이며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남유럽국가와 동아시아 국가가 또 다른 국가군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복지지출 비중이 매우 낮으며 출산율이 예외적으로 급격히 하락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 여성노동력인구와 출산율, 197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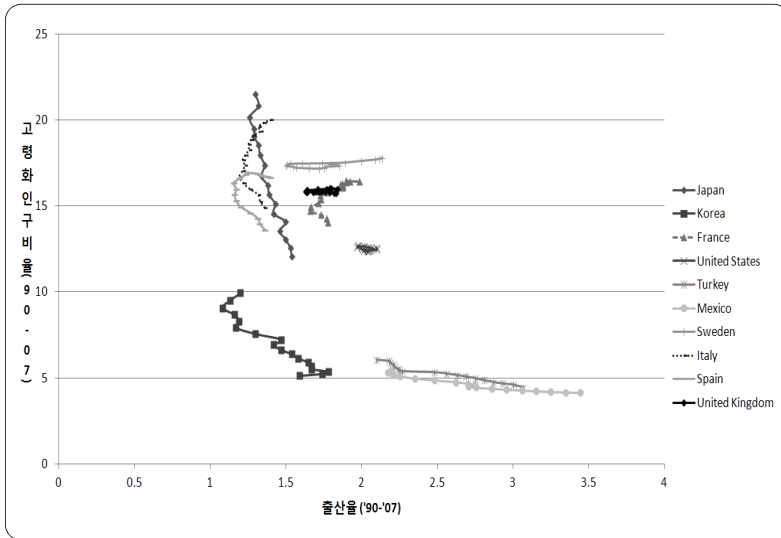


*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중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OECD Factbook 2009

남유럽이 낮은 출산율과 낮은 여성노동력인구의 일관된 특징을 보이며, 북구 및 영미 등은 일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높은 여성노동력 활용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 두 유형 사이에 위치한 독자적인 유형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은 과거 남유럽에 비해 낮은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산율을 보인 아시아적 특수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정 시기가 지나면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출산율과 고령화율,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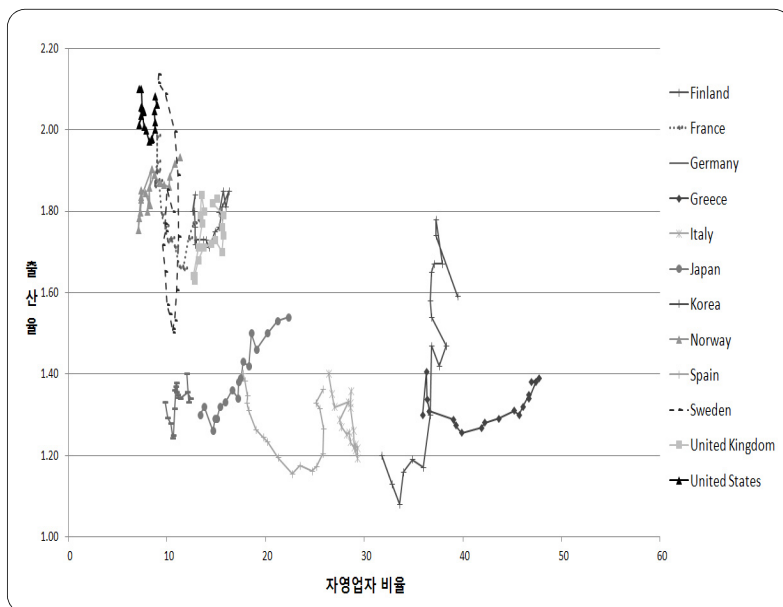
* 자료: OECD Factbook 2009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7-2007에서 재구성

선진국일수록 고령화와 저출산율의 조합을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남유럽이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과 멕시코, 터키 등 저개발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남유럽 및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은 고령화 수준에서 유사한 출산율 저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남유럽 및 일본보다 사회변동의 시계열적 추이를 비교해 볼 때, 더 일찍 시작되었고 급격히 심화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5-4] 출산율과 자영업자 비중,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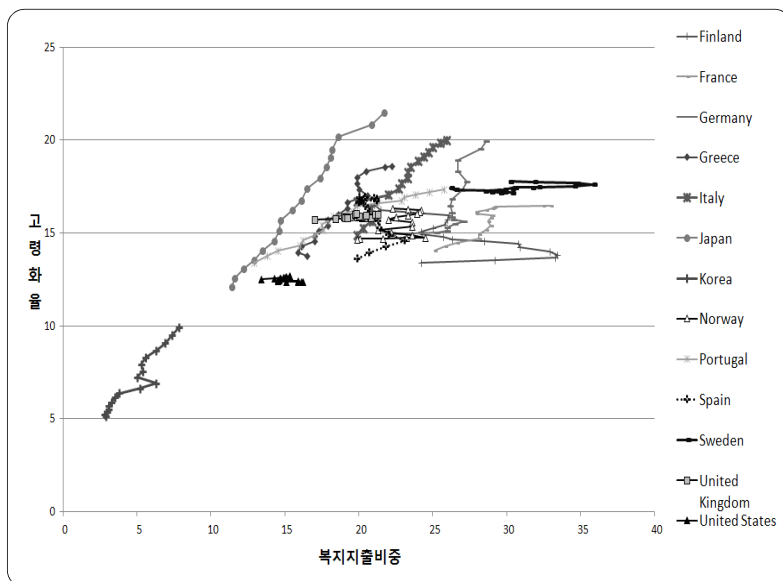


* 자료: OECD Factbook 2009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중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ALFS)

한국을 제외한다면 자영업자비중과 출산율 사이에는 일관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 남유럽 및 아시아의 가족중심적 특성과 자영업자 비중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자영업과 가족주의적 특성이 출산율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림 5-5] 복지비중과 고령화지수,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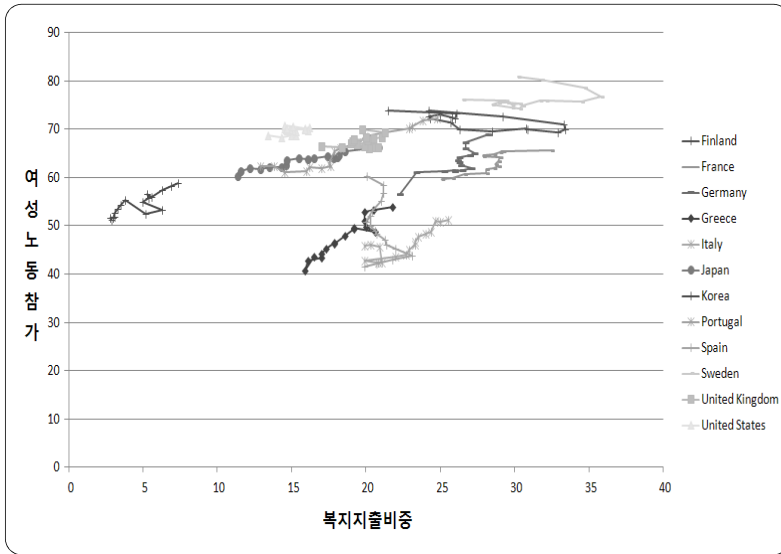


* 자료: OECD Factbook 2009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7-2007에서 재구성

남유럽 및 한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지출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영미형은 복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고령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6] 여성노동 참가와 복지비중, 1990-2007



* 자료: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index.aspx> 중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OECD Factbook 2009

그래프 아래에 위치한 남유럽 3국(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을 제외하면 복지지출비중과 여성노동참가율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남유럽은 여성노동참가율이 낮으며, 한국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여성노동참가율에 있어서 남유럽이 아닌 선진국 공통의 경로를 따라 여성노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남유럽보다는 영미 및 북구의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경향에 가깝다. 즉 남유럽의 경우 여성노동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사례를 보인다.

제2절 TOSOMANA 분석에 활용된 변수

변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연구에서는 질적 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변수를 코딩하였다. 질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변수는 범주형으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0과 1로 구분이 되도록 하여 TOSOMANA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5-1〉 변수

변수명	
GDP 및 경제성장 관련 변수	
gdp90	1990년 1인당 GDP (real \$)
lgdp90	log(gdp90)
gdp07	2007년 1인당 GDP (real \$)
lgdpt	GDP 성장률 = $\log(\text{gdp09}/\text{gdp90})$
GDP	0=역동적 추격형(한국, 그리스, 포르투갈) 1=원숙형 선진국(일본, 핀란드,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역동적 선진국(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GDP_1	0=역동적 추격형 1= 선진국
socxh	socx health 건강과 관련한 사회지출
socxo	socx old age cash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회지출
socxu	socx unemployment 실업과 관련한 사회지출
socxi	socx incapacity related 장애와 관련한 사회지출
cbr조출산율 관련 변수	
cbr90	1990년 조출산율
birthdef	$[(2007년\ 출산율\ 1990년\ 출산율)/1990년\ 출산율]*100$
CBR	0: 출산율이 1.67 이하인 나라들 1: 출산율이 1.67 이상인 나라들
alcon	alcol consumption per a person 일인당 알콜 소비량
tbr	total birth rate 합계출산율 0= 독일, 그리스, 일본, 한국, 포르투갈 1=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변수명	
tws	total welfare spending (% of GDP) 전체 복지지출(GDP대비%)
tws90	1990년 GDP대비 복지지출%
twst	1990년 대비 2007년의 복지지출비 증가율
TWS	0=주변부형(포르투갈, 일본, 한국) 저복지지출에서 급증 1=반주변형(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고지출에서 증가 2=원숙형(스페인,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고복지지출에서 감소
TWS_1	0=주변부형 (0) 1=고복지형 (1+2)
acr	agedchild ratio (노령화지수)
acr90	90년 기준 노령화지수
acrt	1990년 대비 2007년의 고령화율의 변화
ACR	0= 급속한 고령사회(일본, 한국) 1= 점진적 고령사회(이태리, 독일,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2= 급속형 고령사회(일본, 한국)
ACR_1	0=0 (일본, 한국) 1= 1+2 (기타 국가 전부)
ur	unemployment rate > 실업률 0=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 1= 전통적으로 실업률 높은 나라
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
epl90	1990년의 고용보호수준
eplt	1990년 대비 2007년의 보호수준
EPL	0= 경직적 보호에서 유연화로 이행(이태리, 스웨덴, 독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1= 중범위 경직성을 유지한 나라(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 2= 극단적으로 유연한 나라(영국, 일본)
EPL_1	0=0+1 (경직시스템) 1=2 (영미형 유연시스템)
selfe	selfemployment rate 자영업관련 변수
SELF	0= 낮은 자영업국가(1990~2007년 평균 20%미만) 1= 높은 자영업국가(1990~2007년 평균 20%이상)
wlpr	women's labourforce participation rate 여성노동시장참여
WLPR	0=초기여성노동활성화(한국,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1=중범위(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 2=원숙단계(노르웨이, 영국, 미국, 핀란드, 스웨덴)
WLPR_10	초기여성노동활성화(한국,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1= 여성노동기활성국가(50%이상 참여국)

변수명	
frn	Foreign population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인구의 비중
frn90	1990년 외국인 노동력비중
frnt	1990년 대비 2007년의 외국인 노동력 증가비율
lnfrnt	위 변수의 로그값
FRN	0: 동질적 노동시장에서 급속한 외국인 노동의 유입을 경험하는 사회(한국,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1: 안정된 다문화형사회(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pro	고령인구 빈곤과 관련한 변수
PRO	0: 2007년의 고령빈곤율이 평균이하인 나라 1: 2007년의 고령빈곤율이 평균이상인 나라
wpr07	0= 2007년 근로빈곤비율이 평균이하인 나라 1= 2007년 근로빈곤비율이 평균이상인 나라
WPR	근로빈곤비율과 관련한 변수
sur	자살률과 관련한 변수
sur90	1990년 자살률
surt	1990년대비 2007년의 자살률 증감
SUR	0=저자살 안정형(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영국, 포르투갈) 1=고자살 안정형(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2=아노미형 급증(일본, 한국)
SUR_1	0=저자살 안정형 1= (1+2) 고자살+아노미
hom	살인과 관련한 변수
homi07	2007년 기준 살인율
HOM	0= 저살인(평균이하) 1= 고살인(미국, 핀란드, 한국, 포르투갈)
TFT	철도와 관련한 변수
ftt07	2007년 기준 철도사건
TFT	0=낮은 철도사건 1=높은 철도사건(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미국, 이태리)

제3절 국가간, 사회경제적 변수간 관계에 대한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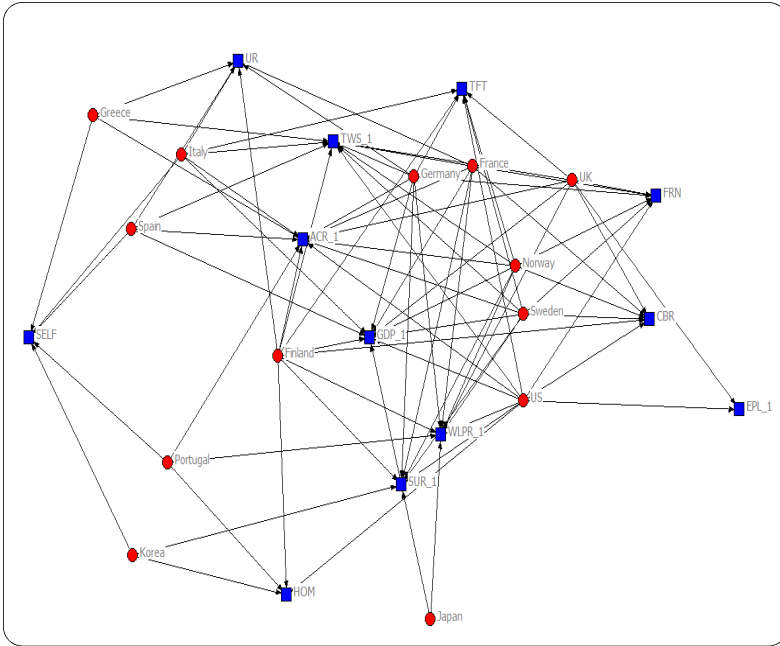
13개국과 12개 변수는 0과 1값으로 dichotomize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은 two-mode network의 행렬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행렬에서 행에 해당하는 13개의 나라들은 열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특성의 표출여부를 일부 공유하기도 하고, 공유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한국과 일본은 자영업 비율(self)이나 살인율(hom), 경제성장률의 패턴(gdp_1), 복지지출(wlpr_1) 등에서는 질적으로 다른 변동의 양상을 보여 왔지만,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나 출산율, 노령화지수, 자살률, 실업률 등에서는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다.

〈표 5-2〉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 요약표

	자영업 (SELF)	외국인 노동 (FRN)	살인 (HOM)	출산률 (CBR)	경제성장 (GDP_1)	복지지출 (TWS_1)	고용보호 (EPL_1)	여성노동 참여 (WLPR_1)	노령화 (ACR_1)	자살률 (SUR_1)	절도 (TFT)	실업률 (UR)
핀란드	0	0	1	1	1	1	0	1	1	1	1	1
프랑스	0	1	0	1	1	1	0	1	1	1	0	1
독일	0	1	0	0	1	1	0	1	1	1	1	1
그리스	1	0	0	0	0	1	0	0	1	0	0	1
이태리	1	0	0	0	1	1	0	0	1	0	1	1
일본	0	0	0	0	1	0	0	1	0	1	0	0
한국	1	0	1	0	0	0	0	0	0	1	0	0
노르웨이	0	1	0	1	1	1	0	1	1	1	1	0
포르투갈	1	0	1	0	0	0	0	1	1	0	0	0
스페인	1	0	0	0	1	1	0	0	1	0	0	1
스웨덴	0	1	0	1	1	1	0	1	1	1	1	0
영국	0	1	0	1	1	1	1	1	1	0	1	0
미국	0	1	1	1	1	1	1	1	1	1	1	0

[그림 5-7] 사용된 변수와 분석대상 국가 간의 관계



이 행렬에서 표현된 국가와 변수 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같다. 이 행렬로부터 국가 간 관계와 변수 간 관계의 중첩 정도(co-occurrence)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낼 수 있다.

국가 간 관계의 중첩정도를 보면 대각선에 위치하는 값들을 제외하면 0에서 8까지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0에 해당하는 것은 영국과 한국인데, 이 두 나라는 공유하는 사회경제적 특징이 하나도 없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는 특징이 매우 적어서 그 최대값이 2와 3에 불과한데, 한국은 핀란드와 2가지 특징을 그리고 일본은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과 3가지 특징을 공유한다. 반면에 유럽국가들 간에는 많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표 5-3〉 국가간 관계의 중첩정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	핀란드	9,000	7,000	7,000	3,000	5,000	3,000	2,000	7,000	3,000	4,000	7,000	6,000	8,000
2	프랑스	7,000	8,000	7,000	3,000	4,000	3,000	1,000	7,000	2,000	4,000	7,000	6,000	7,000
3	독일	7,000	7,000	8,000	3,000	5,000	3,000	1,000	7,000	2,000	4,000	7,000	6,000	7,000
4	그리스	3,000	3,000	3,000	4,000	4,000	0,000	1,000	2,000	2,000	4,000	2,000	2,000	2,000
5	이태리	5,000	4,000	5,000	4,000	6,000	1,000	1,000	4,000	2,000	5,000	4,000	4,000	4,000
6	일본	3,000	3,000	3,000	0,000	1,000	3,000	1,000	3,000	1,000	1,000	3,000	2,000	3,000
7	한국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1,000	2,000	1,000	1,000	0,000	2,000
8	노르웨이	7,000	7,000	7,000	2,000	4,000	3,000	1,000	8,000	2,000	3,000	8,000	7,000	8,000
9	포르투갈	3,000	2,000	2,000	2,000	2,000	1,000	2,000	2,000	4,000	2,000	2,000	2,000	3,000
10	스페인	4,000	4,000	4,000	4,000	5,000	1,000	1,000	3,000	2,000	5,000	3,000	3,000	3,000
11	스웨덴	7,000	7,000	7,000	2,000	4,000	3,000	1,000	8,000	2,000	3,000	8,000	7,000	8,000
12	영국	6,000	6,000	6,000	2,000	4,000	2,000	0,000	7,000	2,000	3,000	7,000	8,000	8,000
13	미국	8,000	7,000	7,000	2,000	4,000	3,000	2,000	8,000	3,000	3,000	8,000	8,000	10,000

마찬가지로 변수들 간 중첩은 공유하는 국가군이 얼마나 존재하는
 냐를 보여준다. 예를 들자면, 높은 자영업과 높은 실업률을 공유하는
 국가는 3개임을 보여주며, 높은 자살률과 높은 외국인 비율을 동시에
 보여주는 나라는 5개에 달함을 보여준다.

〈표 5-4〉 변수간 관계의 중첩정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SELF	FRN	HOM	CBR	GDP_1	TWS_1	EPL_1	WLPR_1	ACR_1	SUR_1	TFT	UR
1	SELF	5.000	0.000	2.000	0.000	2.000	3.000	0.000	1.000	4.000	1.000	1.000	3.000
2	FRN	0.000	6.000	1.000	5.000	6.000	6.000	2.000	6.000	6.000	5.000	5.000	2.000
3	HOM	2.000	1.000	4.000	2.000	2.000	2.000	1.000	3.000	3.000	3.000	2.000	1.000
4	CBR	0.000	5.000	2.000	6.000	6.000	6.000	2.000	6.000	6.000	5.000	5.000	2.000
5	GDP_1	2.000	6.000	2.000	6.000	10.000	9.000	2.000	8.000	9.000	7.000	7.000	5.000
6	TWS_1	3.000	6.000	2.000	6.000	9.000	10.000	2.000	7.000	10.000	6.000	7.000	6.000
7	EPL_1	0.000	2.000	1.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	2.000	0.000
8	WLPR_1	1.000	6.000	3.000	6.000	8.000	7.000	2.000	9.000	8.000	7.000	6.000	3.000
9	ACR_1	4.000	6.000	3.000	6.000	9.000	10.000	2.000	8.000	11.000	6.000	7.000	6.000
10	SUR_1	1.000	5.000	3.000	5.000	7.000	6.000	1.000	7.000	6.000	8.000	5.000	3.000
11	TFT	1.000	5.000	2.000	5.000	7.000	7.000	2.000	6.000	7.000	5.000	7.000	3.000
12	UR	3.000	2.000	1.000	2.000	5.000	6.000	0.000	3.000	6.000	3.000	3.000	6.000

그렇다면 국가군과 사회경제적 특성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다음의 블록인접행렬(blocked adjacency matrix)은 변수군과 국가군간의 연관성을 2*2 표로 요약하여 보여준다. 즉, 핀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등은 총 12개 변수 중 9개 변수에서 유사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1) 외국인 노동력의 활발한 유입, 2) 높은 고령화율, 3) 상대적으로 안정된 출산율, 4) 높은 GDP, 5) 안정된 복지지출, 6) 높은 여성노동력 활용, 7) 높은 절도사건 등에서 공통점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다.

〈표 5-5〉 변수간 관계의 중첩정도를 보여주는 블록인접행렬

		7	2	9	4	5	6	10	8	11	3	1	12
		EPL_1	FRN	ACR_1	CBR	GDP_1	TWS_1	SUR_1	WLPR_1	TFT	HOM	SELF	UR
1	핀란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프랑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독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	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	스웨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	영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노르웨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그리스			1.000			1.000					1.000	1.000
9	포르투갈			1.000					1.000		1.000	1.000	
10	스페인			1.000		1.000	1.000					1.000	1.000
5	이태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	일본					1.000		1.000	1.000				
7	한국							1.000			1.000	1.000	
Starting fitness		0.103											
Final fitness		0.525											
Correlation to ideal		0.525											

반면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일본, 한국 등은 공통의 특성들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응집성이 떨어지는 국가군에 속한다. 이들 국가군은 살인율, 자영업비율, 실업률 등에서 특성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들간 관계의 밀도행렬(density matrix)은 국가군과 변수군간의 연관성이 서로 교차하여 나타남을 잘 보여준다. 즉, 1군에 속한 국가들과 관련된 변수들간의 밀도가 0.857로 매우 높고, 2군에 속한 국가들과 변수들간의 밀도가 0.556으로 그 다음으로 높다면, 1군 국가들이 2군 국가들에서 두드러지는 특성과는 매우 낮은 밀도로 연결되고, 역으로 2군 국가들은 1군 국가들에서 두드러진 특징들과 낮은 밀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표 5-6〉 변수간 관계의 중첩정도를 보여주는 블록인접행렬의 밀도표

	1	2
1	0.857	0.238
2	0.278	0.556

한편, 국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교차한 범주적인 중심/주변 판별 분석(2 mode categorical core/periphery model)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국가군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개로 나뉘는데, 경제성장 패턴과 노령화패턴, 그리고 복지지출에서 완벽하게 중첩되는 특성을 갖는 9개의 유럽국가들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영국,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이면서도 대척점에 있는 4개 국가들(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한국 등)과 잘 대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7〉 국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교차한 범주적인 중심/주변 판별분석

	5	9	6	1	4	2	7	8	3	10	11	12
	GDP_1	ACR_1	TWS_1	SELF	CBR	FRN	EPL_1	WLPR_	HOM	SUR_1	TFT	UR
1 핀란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프랑스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독일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 스페인		1.000	1.000	1.000		1.000	1.000					
5 이태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 영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3 미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노르웨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 스웨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 포르투갈		1.000		1.000	1.000	1.000						
4 그리스		1.000	1.000		1.000	1.000						
6 일본		1.000		1.000	1.000							
7 한국			1.000	1.000	1.000							
Starting fitness	0.647											
Final fitness	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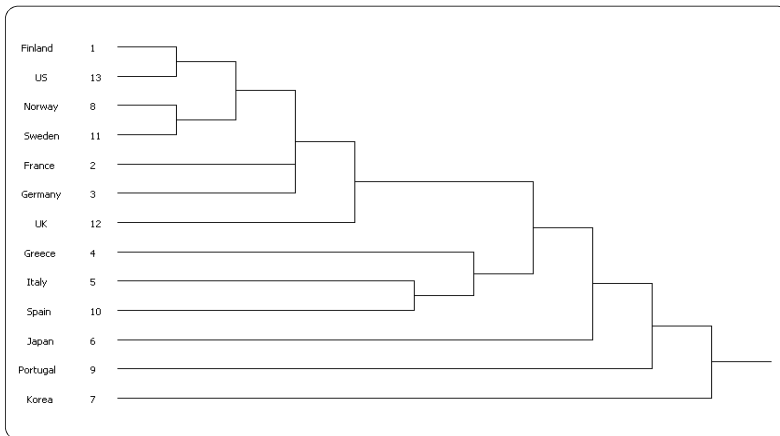
〈표 5-8〉 변수간 관계의 중첩정도를 보여주는 블록인접행렬의 밀도표

	1	2
1	1.000	0.541
2	0.300	0.294

따라서 비교대상 국가들 간에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유사성과 이질성이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국가의 프로파일의 차이가 주는 의미를 집락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핀란드와 미국, 그리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가장 가까운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이 더해지는 동심원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핀란드와 미국이 가장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의 해결국가이며, 다른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델로부터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화/이질화를 경험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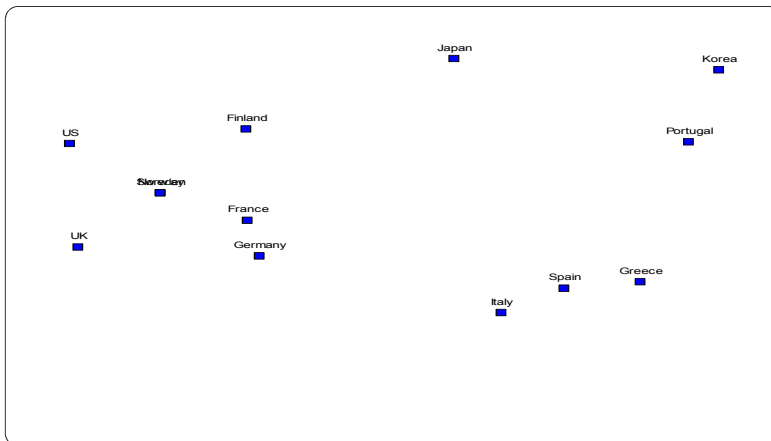
[그림 5-8] 국가간 관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군집분석



유사성에 기반을 둔 다차원 축적의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은 많은 특성을 공유하며 한데 묶이므로 제도적 특성이 유사하다고 보여 진다. 반면에 한국은 영미형이나 북유럽, 혹은 대륙유럽의 국가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서유럽국가들에 근접해 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일본과 가깝고, 유럽과 구별되는 위치에 독특하게 자리 잡은 남유럽형 국가들과 일정한 근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할 때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형성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일방적으로 유럽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유럽보다는 남유럽과 공유하는 특징들이 향후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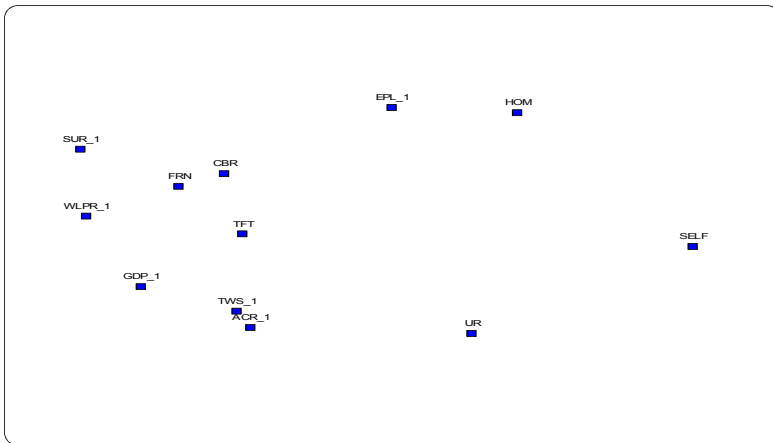
[그림 5-9] 다차원 분석을 통한 국가별 분포 (stress = 0.114)



* 주: 다차원분석과 관련한 좌표값은 부표 5를 참조할 것

한편, 국가 간 차이를 드러냄에 있어서 높은 자살률, 높은 여성노동 활용, 활발한 외국노동자의 유입, 안정된 출산율, 높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지출, 안정적 고령화 등은 매우 유사한 속성으로 묶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비율과 높은 실업률, 고용보장 등은 다른 변수로 대체되지 않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최종 분석에서는 자영업, 고용보장, 실업률, 여성노동시장참여, 복지지출 등의 변수만으로도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유럽 국가들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5-10] 다차원분석을 통한 변수들간의 관계 (stress = 0.135)



한편, 국가 간 차이를 드러냄에 있어서 높은 자살률, 높은 여성노동 활용, 활발한 외국노동자의 유입, 안정된 출산율, 높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지출, 안정적 고령화 등은 매우 유사한 속성으로 묶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비율과 높은 실업률, 고용보장 등은 다른 변수로 대체되지 않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최종적 분석에서는 자영업, 고용보호, 실업률, 여성노동시장참여, 복지지출 등의 변수만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유럽국가들과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충분한 설명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4절 저출산과 사회적 위험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결과

1.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의 특징 비교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나라(CBR=0)는 다음의 진리표 (Truth table)에서 보듯이,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 모두 6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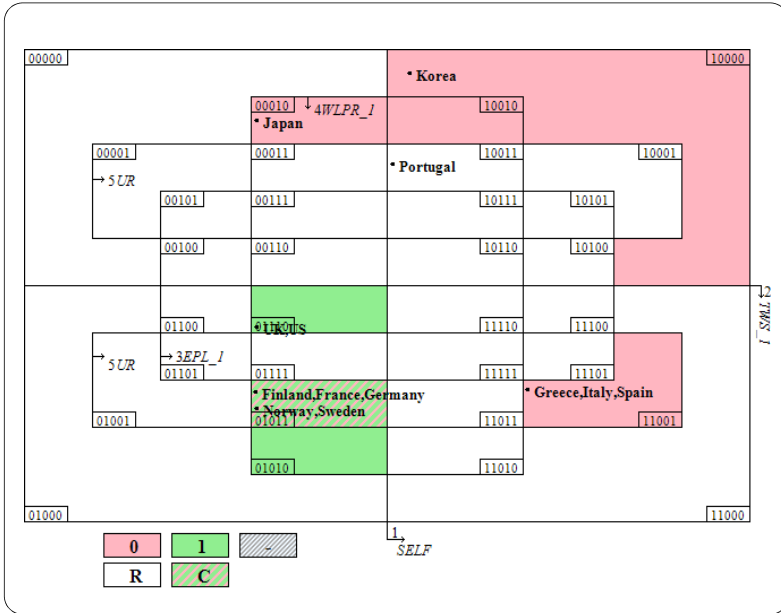
〈표 5-9〉 국가별 합계출산율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진리표

SELF	TWS_1	EPL_1	WLPR_1	UR	CBR	country
0	1	0	1	1	0	핀란드, 프랑스, 독일
1	1	0	0	1	0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0	0	0	1	0	0	일본
1	0	0	0	0	0	한국
0	1	0	1	0	1	노르웨이, 스웨덴
1	0	0	1	0	0	포르투갈
0	1	1	1	0	1	미국, 영국

출산율의 양상은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결합하여 비교할 때 모두 7가지의 독특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리표상의 구분은 분류에 활용된 변수가 몇 개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자의적이다. 예를 들면, 국가별 사례수가 13개인 반면, 분류에 활용된 변수의 수가 가용한 12개 모두라면, 1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통계적으로 보면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모든 사례들이 가진 독특성을 잡아내는데 그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요약한다는 본래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국가 간 변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본래의 질적 분석방법의 취지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분석에서는 최대 5개의 변수만을 활용하였으며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은 각각 독특한 저출산 국가군으로 구분되고,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들이 또 다른 저출산 국가형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영국과 미국은 고출산형으로 함께 묶이고, 나머지 북유럽의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중에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 일본,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을 묶어주는 공통의 요인은 무엇인가?

[그림 5-11] 국가별 출산율유형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덴도그램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빈 칸의 사례들을 감안할 때, 저출산이 심각한 나라들, 특히 그리스와 한국과 포르투갈이라는 세 나라를 묶어주는 공통된 특징은 지난 20여년간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진 성장의 결과가 출산력의 급속한 저하와 연결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 그리고 포르투갈에 공통된 요인 중 하나는 복지 지출의 비중이 낮았고, 비록 급속히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변적인 복지국가에 머물고 있다는 특징이다. 이는 다음에 표현된 공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10〉 급속한 출산력 감소를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GDP_1{0} +	TWS_1{0}
(Greece+Korea+Portugal)	(Japan+Korea+Portugal)

그렇다면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들을 공통으로 설명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다른 만큼 저출산국가에서 공통된 요인의 부재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문제를 잘 풀어나간 국가들을 묶어주는 공통된 요인은 오래 전 선진국의 위치를 선점하였으며, 동시에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표 5-11〉 출산율의 안정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GDP_1{1}TWS_1{1}
(Finland+Italy,Spain+Norway,Sweden+UK,US)

2.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특징 비교

한편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설명하는 가장 함축적인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

〈표 5-12〉 국가별 합계출산율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진리표

SELF	GDP_1	TWS_1	WLPR_1	ACR_1	country
0	1	1	1	1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1	0	1	0	1	그리스
1	1	1	0	1	이태리, 스페인
0	1	0	1	0	일본
1	0	0	0	0	한국
1	0	0	1	1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7개국은 모두 자영업의 비중이 낮으면서 오래전 선진국에 진입했고, 복지지출이 높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도 활발하다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앞에 언급한 국가들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특징을 가지면서도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고령화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표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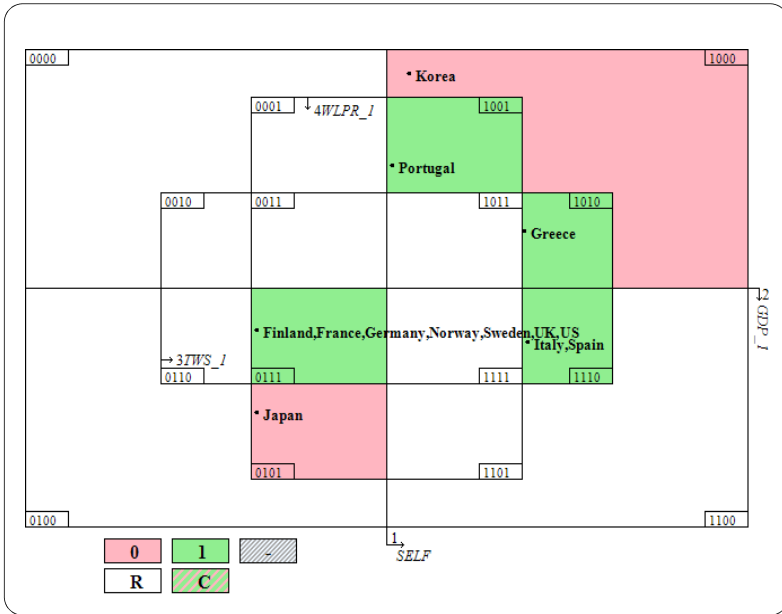
〈표 5-13〉 안정적 고령화를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TWS_1{1} + (Finland,France,Germany,Norway,Sweden,UK,US+Greece+Italy,Spain)	SELF{1}WLPR_1{1} (Portugal)
TWS_1{1} + (Finland,France,Germany,Norway,Sweden,UK,US+Greece+Italy,Spain)	GDP_1{0}WLPR_1{1} (Portugal)

단순화한다면, 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여기서 예외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은 비록 자영업 비중이 높거나 후발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점을 갖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지닌다. 그 결과로 이들 국가들은 모두 점진적이고 완만한 고령화에 성공하였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매우 다른 환경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구별된다.

[그림 5-12] 국가별 고령화유형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덴도그램



이상의 내용은 덴도그램에서 보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난다. 고령화 양상은 단순한 요인들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며, 한국과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배경요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다양한 요인들을 제거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함축요인들을 추출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낮은 자영업비중과 결합한 빈약한 복지지출, 혹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일찌감치 선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이 빈약한 점이 급속한 고령화를 설명하는 변수라면, 한국에서의 급속한 고령화는 빈약한 복지지출과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참여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표 5-14〉 급속한 고령화를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0}TWS_1{0} + (Japan)	TWS_1{0}WLPR_1{0} (Korea)
GDP_1{1}TWS_1{0} + (Japan)	TWS_1{0}WLPR_1{0} (Korea)

3. 자살률의 차이와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보여주는 변수로 자살과 노인빈곤, 그리고 근로빈곤과 살인율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률의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유형화는 지난 20여년 간 높은 자살률을 지속하고 있거나, 혹은 급속하게 자살률이 높아진 나라를 한 집단으로, 그리고 비교적 낮은 자살률을 지속해온 국가군으로 구별 가능하다.

〈표 5-15〉 국가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진리표

SELF	TWS_1	EPL_1	WLPR_1	UR	SUR_1	country
0	1	0	1	1	1	핀란드, 독일
1	1	0	0	1	0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0	0	0	1	0	1	일본
1	0	0	0	0	1	한국
0	1	0	1	0	1	노르웨이, 스웨덴,
1	0	0	1	0	0	포르투갈
0	1	1	1	0	C	미국, 영국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진 국가들(한국과 일본), 그리고 경제의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진전되어서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들(대부분의 유럽국가)이라는 두 가지 특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일본은 이 두 가지 유형에 공히 속하는 반면, 한국

은 급속한 고령화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 5-16〉 높은 자살률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0} +	ACR_1{0}
(Finland+France+Germany+Japan+Norway,Sweden)	(Japan+Korea)

한편, 안정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유지해 온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으면서 동시에 점진적인 고령화를 유지해 온 남유럽 국가들이다.

〈표 5-17〉 낮은 자살률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1}ACR_1{1}
(Greece+Italy,Spain+Portugal)

뒤르케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률을 결정하는 것은 기후적 요인이나 자연적 조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변화등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유독 자살률이 급증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대변되는 짧은 시간 내의 과격한 사회구조의 변동이 야기한 아노미적 자살의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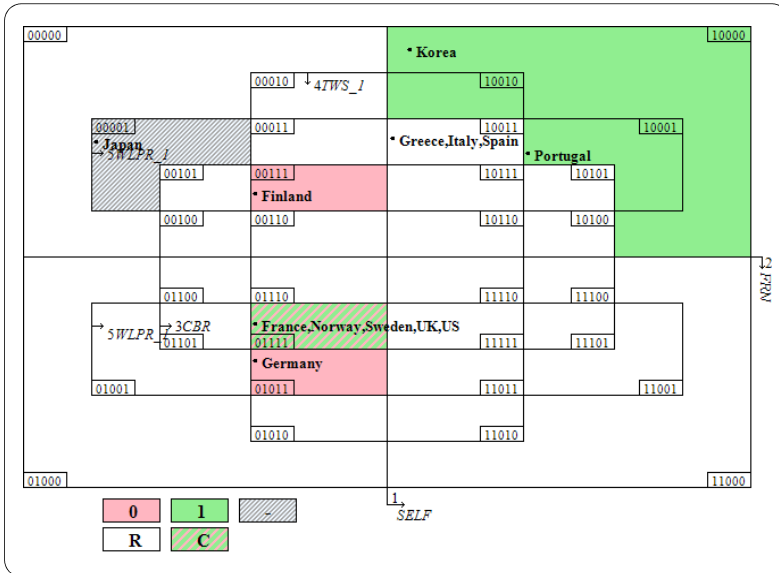
4. 고령빈곤과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고령빈곤은 특히 남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심각한 반면, 영미나 대륙유럽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음의 진리표에서 보듯이 고령빈곤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징들은 비교적 명쾌하게 구분된다.

〈표 5-18〉 고령빈곤률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진리표

SELF	FRN	CBR	TWS_1	WLPR_1	PRO	country
0	0	1	1	1	0	핀란드
0	1	1	1	1	C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0	1	0	1	1	0	독일
1	0	0	1	0	1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0	0	0	0	1	1	일본
1	0	0	0	0	1	한국
1	0	0	0	1	1	포르투갈

[그림 5-13] 국가별 노인빈곤 유형



고령빈곤을 경험하는 국가들에게 공통된 현상은 높은 자영업, 낮은 복지지출,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와 여성노동시장 참여의 빈약함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과 모두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표 5-19〉 높은 수준의 고령빈곤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1} + (Greece, Italy, Spain+Korea+Portugal)	TWS_1{0} (Japan+Korea+Portugal)
SELF{1} + (Greece+Italy, Spain+Korea+Portugal)	ACR_1{0} (Japan+Korea)
TWS_1{0} + (Japan+Korea+Portugal)	WLPR_1{0} (Greece+Italy, Spain+Korea)

반면에 고령빈곤이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을 공통으로 설명해주는 특징으로는 낮은 자영업과 결합한 높은 복지지출, 혹은 낮은 자영업과 결합한 점진적인 고령화, 혹은 높은 복지지출과 결합한 여성들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등이다.

〈표 5-20〉 낮은 수준의 고령빈곤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0}TWS_1{1} (Finland+France+Germany+Norway, Sweden)
SELF{0}ACR_1{1} (Finland+France+Germany+Norway, Sweden)
TWS_1{1}WLPR_1{1} (Finland+France+Germany+Norway, Sweden)

5. 근로빈곤과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최근 들어 근로빈곤율이 비교대상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경우는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이다. 반면에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매우 유사한 속성들을 공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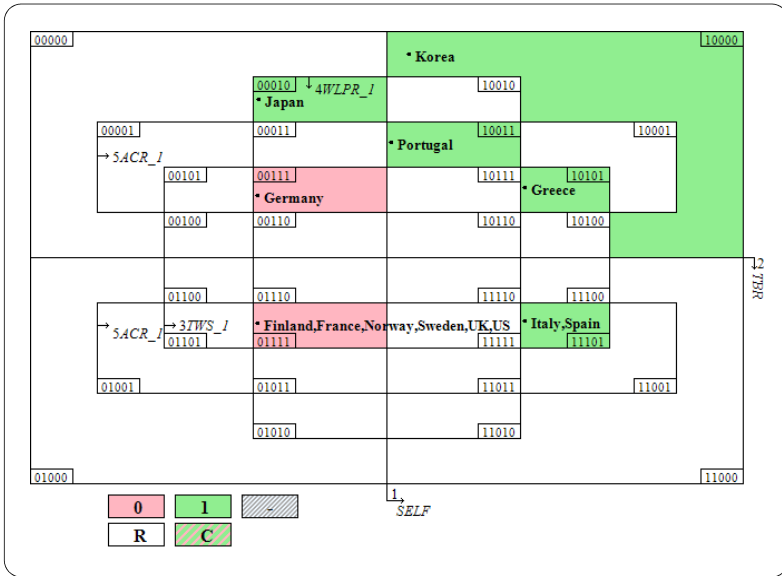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은 모두 같은 사회경제적 속성들을 공유하고 있고, 독일도 거의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은 그만큼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표 5-21〉 근로빈곤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진리표

SELF	TBR	TWS_1	WLPR_1	ACR_1	WPR	country
0	1	1	1	1	0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0	0	1	1	1	0	독일
1	0	1	0	1	1	그리스
1	1	1	0	1	1	이태리, 스페인
0	0	0	1	0	1	일본
1	0	0	0	0	1	한국
1	0	0	1	1	1	포르투갈

아울러 근로빈곤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구분하는데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변수들도 없어서 비교적 깔끔하게 구분이 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텐도그램에 따르면 근로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자영업 비율로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한국, 포르투갈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복지지출의 부족으로 인한 근로빈곤에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급속한 고령화도 근로빈곤의 증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5-14] 국가별 근로빈곤 유형



〈표 5-22〉 높은 수준의 근로빈곤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1} +	TWS_1{0}
(Greece+Italy,Spain+Korea+Portugal)	(Japan+Korea+Portugal)
SELF{1} +	ACR_1{0}
(Greece+Italy,Spain+Korea+Portugal)	(Japan+Korea)
TWS_1{0} +	WLPR_1{0}
(Japan+Korea+Portugal)	(Greece+Italy,Spain+Korea)

특히 여성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등에서도 근로빈곤율이 높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모든 유형들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고루 갖춘 나라에 속한다.

한편 낮은 수준의 근로빈곤율을 보여주는 국가들의 공통된 특징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들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복지지출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들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5-23〉 낮은 수준의 근로빈곤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0}TWS_1{1}
(Finland+France+Germany+Norway,Sweden+UK,US)
SELF{0}ACR_1{1}
(Finland+France+Germany+Norway,Sweden+UK,US)
TWS_1{1}WLPR_1{1}
(Finland+France+Germany+Norway,Sweden+UK,US)

6. 살인과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살인율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살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나 여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임이 드러난다. 이는 살인율을 구성해내는 사회적 과정에서의 다양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살인이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위험을 드러내는 적절한 도구가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한국과 포르투갈은 핀란드와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 핀란드는 안정된 출산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급격한 외국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살인이 많은 특징을 갖지만, 한국과 포르투갈은 주로 높은 자영업비율과 낮은 복지수준, 혹은 낮은 소득과 낮은 실업률 등 역동적인 성장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살인이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의 진리표에 보면 높은 살인

율은 다양한 변수들로 잘 설명되지 않을뿐더러, 6개의 변수를 활용하였음에도,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남아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은 다시 모순적인 사례들로 남아 있어서 여전히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사례에 속한다.

〈표 5-24〉 살인과 사회경제적 특징에 관한 진리표

SELF	FRN	CBR	GDP_1	TWS_1	UR	HOM	country
0	0	1	1	1	1	1	핀란드
0	1	1	1	1	1	0	프랑스
0	1	0	1	1	1	0	독일
1	0	0	0	1	1	0	그리스
1	0	0	1	1	1	0	이태리
0	0	0	1	0	0	0	일본
1	0	0	0	0	0	1	한국, 포르투갈
0	1	1	1	1	0	C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살인이 이루어진 국가들이 가지는 공통점에 대해 핵심포괄요인을 찾아 본 결과는 다음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깔끔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통계분석에서 최적치를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높은 수준의 살인율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들이 서로 뒤엉켜서 단순한 핵심포괄요인으로 묶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설명하는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무수히 많은 필요충분조건들이 포괄요인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표 5-25〉 높은 수준의 살인율을 설명하는 핵심포괄요인들과 해당국가들

SELF{1}TWS_1{0} + (Korea+Portugal)	SELF{0}FRN{0}TBR{1} (Finland)
SELF{1}TWS_1{0} + (Korea+Portugal)	SELF{0}FRN{0}TWS_1{1} (Finland)
SELF{1}TWS_1{0} + (Korea+Portugal)	SELF{0}FRN{0}ACR_1{1} (Finland)
SELF{1}TWS_1{0} + (Korea+Portugal)	SELF{0}FRN{0}UR{1} (Finland)
SELF{1}TWS_1{0} + (Korea+Portugal)	FRN{0}TBR{1}WLPR_1{1} (Finland)
SELF{1}TWS_1{0} + (Korea+Portugal)	FRN{0}TWS_1{1}WLPR_1{1} (Finland)
SELF{1}TWS_1{0} + (Korea+Portugal)	FRN{0}WLPR_1{1}ACR_1{1} (Finland+Portugal)
SELF{1}TWS_1{0} + (Korea+Portugal)	FRN{0}WLPR_1{1}UR{1} (Finland)
SELF{1}ACR_1{0} + (Korea)	FRN{0}WLPR_1{1}ACR_1{1} (Finland+Portugal)
SELF{1}UR{0} + (Korea+Portugal)	SELF{0}FRN{0}TBR{1} (Finland)
SELF{1}UR{0} + (Korea+Portugal)	SELF{0}FRN{0}TWS_1{1} (Finland)
SELF{1}UR{0} + (Korea+Portugal)	SELF{0}FRN{0}ACR_1{1} (Finland)
SELF{1}UR{0} + (Korea+Portugal)	SELF{0}FRN{0}UR{1} (Finland)
SELF{1}UR{0} + (Korea+Portugal)	FRN{0}TBR{1}WLPR_1{1} (Finland)
SELF{1}UR{0} + (Korea+Portugal)	FRN{0}TWS_1{1}WLPR_1{1} (Finland)
SELF{1}UR{0} + (Korea+Portugal)	FRN{0}WLPR_1{1}ACR_1{1} (Finland+Portugal)

SELF{1}UR{0} +	FRN{0}WLPR_1{1}UR{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SELF{0}FRN{0}TBR{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SELF{0}FRN{0}TWS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SELF{0}FRN{0}ACR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SELF{0}FRN{0}UR{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FRN{0}TBR{1}WLPR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FRN{0}TWS_1{1}WLPR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TWS_1{0} +	FRN{0}WLPR_1{1}ACR_1{1}
(Korea+Portugal)	(Finland+Portugal)
GDP_1{0}TWS_1{0} +	FRN{0}WLPR_1{1}UR{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ACR_1{0} +	FRN{0}WLPR_1{1}ACR_1{1}
(Korea)	(Finland+Portugal)
GDP_1{0}UR{0} +	SELF{0}FRN{0}TBR{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UR{0} +	SELF{0}FRN{0}TWS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UR{0} +	SELF{0}FRN{0}ACR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UR{0} +	SELF{0}FRN{0}UR{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UR{0} +	FRN{0}TBR{1}WLPR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UR{0} +	FRN{0}TWS_1{1}WLPR_1{1}
(Korea+Portugal)	(Finland)
GDP_1{0}UR{0} +	FRN{0}WLPR_1{1}ACR_1{1}
(Korea+Portugal)	(Finland+Portugal)

GDP_1{0}UR{0} + (Korea+Portugal)	FRN{0}WLPR_1{1}UR{1} (Finland)
TWS_1{0}WLPR_1{0} + (Korea)	FRN{0}WLPR_1{1}ACR_1{1} (Finland+Portugal)
WLPR_1{0}ACR_1{0} + (Korea)	FRN{0}WLPR_1{1}ACR_1{1} (Finland+Portugal)
WLPR_1{0}UR{0} + (Korea)	FRN{0}WLPR_1{1}ACR_1{1} (Finland+Portugal)

7. 요약: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위험을 결정한 주요 동인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다른 어느 나라들에 비해서도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진 데 따른 아노미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즉, 짧은 시간 동안에 성장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은 소홀히 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낮은 복지지출로 인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양상은 이미 오래 전에 저출산·고령사회로 이행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고령화의 속도는 노인빈곤율과 근로빈곤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층을 중심으로 자살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으로 질적인 비교분석을 행한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노인빈곤이나 근로빈곤, 자살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매

우 크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지만, 높은 수준의 자영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지출을 늘리기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국에 고유한 체질적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터운 자영업자층의 존재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감추어진 복지기능이다. 국가나 시장에 의한 복지기능이 취약할 경우에 자영업은 광범한 가족노동과 결합하여 자구적인 취업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기 노동력을 끝없이 소진시켜 정년을 뛰어넘어 종신토록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냄으로써 연금이 존재하지 않는(혹은 매우 제한된 기여만을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층은 또한 공식적인 과표나 세금체계에 잘 잡히지 않는 회색경제, 혹은 지하경제와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기업회계와 가정회계가 명백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공식경제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 전반을 고려한다면 광범한 자영업자층의 존재는 국가의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에 이질적인 불투명부문으로 잔존하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조직부문과의 통합에 많은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표 5-26〉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위험을 결정한 주요 동인들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사회적 위험요인	주요한 영향 요인
저출산	급속한 경제성장 + 낮은 복지지출
고령화	낮은 복지지출 * 낮은 여성노동참여
노인빈곤	높은 자영업 + 낮은 복지지출 높은 자영업 + 급속한 고령화 낮은 복지지출 + 낮은 여성 노동참여
근로빈곤	높은 자영업 + 낮은 복지지출 높은 자영업 + 급속한 고령화 낮은 복지지출 + 낮은 여성노동참여
자살	급속한 고령화
살인	기존의 가용한 변수 혹은 저출산·고령화 관련 변수로 일반적인 설명이 어려움 (높은 자영업 비중 * 낮은 복지수준) (낮은 소득 * 낮은 실업률)

이와 같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서유럽과 구분되는 한국적 특성으로서 자영업자층의 존재,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인 분절 등은 단순히 복지비용의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제도화된 경로의존성의 문제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자영업 종사자들은 그 성격과 내용이 매우 이질적이고 사업의 운영에 따른 위험을 거의 전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경제 및 소득의 양극화는 자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자영업 종사자들 사이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자영업 종사자 특성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와 세계화 영향 등으로 비중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2003년 신용대란은 자영업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그 비중과 절대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데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셋째, 성별로 자영업주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비농 자영업주의 비중이 1990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남성은 2003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인다. 1998년 이후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인식의 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의 자영업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넷째,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영업주의 고령화는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 악화시킬 가능성 있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고졸 이상 고학력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주의 고학력화 경향이 현저하다.

여섯째, 산업별로 자영업주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서비스업 안에서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전체의 33.4%, 2007년 기준). 그러나 성장률 면에서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 수도, 가스 및 금융업이 고용성장을 주도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농림수산업, 광공업 등 자영업주 진중되었던 산업에서 자영업의 몰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가장 높다(전체 자영업주의 44.7%, 2007년 기준). 그러나 서비스 및 판매근로

자에서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의 ‘임금근로자화’가 진행 중이다.

여덟째,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주 중 (준)전문가 비중은 1982년 4.1%에서 2007년 17.6%로 4배 이상 증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에 뒤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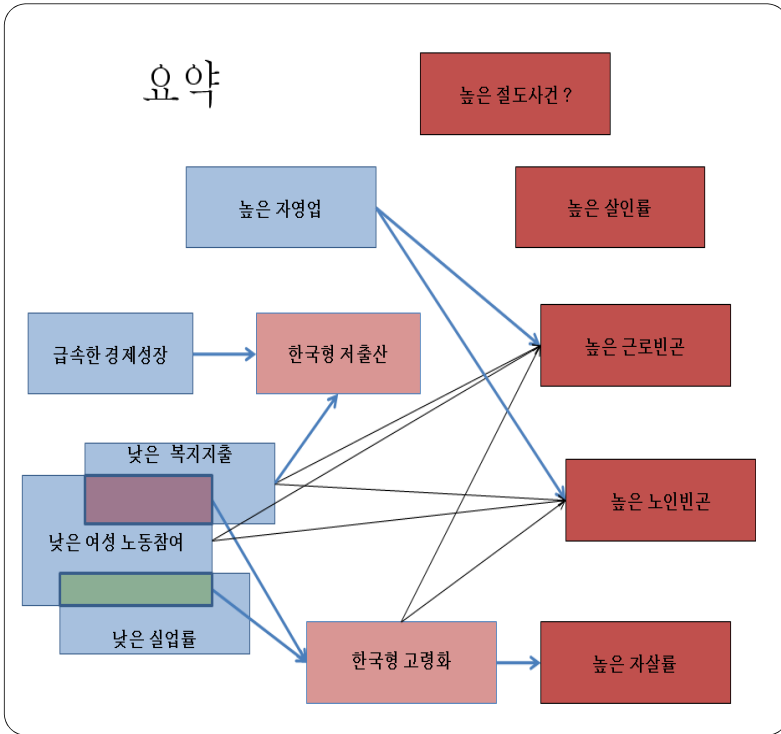
아홉째, 자영업주의 상당수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속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매출과 소득, 근로여건, 일자리이력 등의 자료 파악이 어렵다. 통계청(2008)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7.8%와 자영자 48.5%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 산재보험 등의 적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에 자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주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식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금재호 외, 2009; 이승렬 외, 2009).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에도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근로자만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에서 수혜대상이 아니다. 사회보험 중 자영업자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자영업주의 39.2%, 특히 자영자는 44.7%이며,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60.4%가 미가입 상태에 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2008, 10).

따라서 자영업 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이승렬 외, 2009).

[그림 V-16]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들



제6장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위험 관련 주요 동인 및 시나리오 도출

이 글은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인구학적 예측방식인 거시지표에 토대를 둔 계량적 추정이나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과는 다른 시스템 이론적이고 제도주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된다고 할 때, 근로빈곤, 노인빈곤,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다.

한국적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성은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사회적 분화나 다양한 위험의 확산은 가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스템과 역량은 따라오지 못한 복지지체(welfare lag)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특성은 기본적으로 아노미적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복지부분의 기술진보에 따라 평균수명은 80세 이상으로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과거 평균수명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된 다양

한 복지시스템들이 더 이상 적합성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복지에서 가사노동과 모성보호를 담당했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젊은)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되고, 이는 다시 가족 중심의 복지레짐 전반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기 최대 수혜자였던 새롭게 등장한 노인세대는 이중적인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가족의 기능약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지출을 통한 보호는 아직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급속한 노인빈곤의 증가, 그리고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자살률의 급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주로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나타나는 ‘아노미형’ 사회적 위험으로서 낮은 복지와 낮은 여성참여, 낮은 실업률이 결합하여 형성해 낸 레짐이며, 이것이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과 근로빈곤, 그리고 높은 자살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발견된 주요 배경요인은 두 가지로서 1)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사회적 위험 요인(자살, 노인빈곤, 근로빈곤) 2) 저출산·고령화와 무관한 사회적 위험 요인(살인, 절도) 등으로 구별된다. 한편 사회적 위험의 주요 동인 중 저출산·고령화와 무관한 중요한 요인은 자영업 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형 저출산은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였다. 한편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낮은 복지지출, 낮은 여성노동참여, 낮은 실업률로 밝혀졌다. 한국적 저출산·고령화는 이런 의미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

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위험기피 현상’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높은 자영업 비중은 노인빈곤,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친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높은 노인층의 자살률을 낮추려면 고령화속도를 늦춰야 하며 복지지출과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은 동시에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높은 자영업의 비중이 노인빈곤, 근로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에도 상당히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은 입직할 때에는 다양한 층이 진입을 하지만, 성공하는 층은 소수이며 대부분 한 번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으로 작용하게 된다. 개인의 직업이동의 궤적에 따라 진입에서 퇴직까지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즉, 인적자본이 충분하며 남성, 전문직일 경우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 육체노동자, 탈숙련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에 한 번 입직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정규직 고용부문의로 이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은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이며 위장된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는 착시효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한국적 현실에서 자영업은 이처럼 이중적 취약성에 노출된 노인세대에게 남겨진 매력적인, 그러나 여전히 위험한 대안이다. 퇴직금으로 상징되는 목돈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최후의 사업 기회이기 때문이다.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부분이 없더라도 지속이 가능하면 자기노동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복지체제가 결여된 부문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이어나가는 독특한 존재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높은 자영업은 높은 수준의 근로빈곤층의 존재와 맥을 같이하며, 동시에 높은 노인 빈곤률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자영업은 시장이나 복지시스템과 다른 중간지대(grey area)를 형성하며 소득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 유럽의 복지 국가들의 경우는 산업 구조나 자원배분 등에서 자영업 비중이 낮은 반면에 남유럽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높으며, 이는 강한 가족주의 전통을 드러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행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위험의 미래전망을 위해 작성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 1) 저출산·고령화가 서서히 완화되도록 하면서 연착륙하는 경우 2) 저출산·고령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 경착륙하는 경우이다.

제1절 긍정적 시나리오: 출산력의 증대와 점진적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의 감소

향후 한국경제에서 자영업 비중이 축소되고 고용부문이 급속하게 신장되며 경제구조가 더욱 투명해질 경우, 사회적 위험이 감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완화되며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한국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비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자영업자층이 주변적인 위치에 머

무르지 않고, 중소기업 수준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높이고, 동시에 부가가치의 비중도 훨씬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산업생태계의 재구조화가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은 재벌기업 중심의 선단형 경영, 그리고 매우 착취적인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를 유지해서는 폭넓은 중소기업층의 확장을 통한 자영업의 축소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가치와 합의가 정치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빈곤, 실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 복지지출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될 것이다. 즉 사회집단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감소하고 양보와 사회적 연대가 높아지는 시민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될 때,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고 여성 노동참여율이 증가되며, 육아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그 결과 사후적인 복지투자보다 복지수요 발생자체가 감소된다. 이에 따라 출산력이 높아지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피부양인구의 비율을 줄여서 지속적으로 재생산가능한 미래가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긍정적 시나리오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신고령자층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짜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복지지출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복지지출을 현실화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이 다양한 최소한의 연금혜택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지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큰 재정부담을 누적시킬 것이기 때문에 1) 복지지출의 대상이 되는 노인층의 비중을 줄이거나, 2) 혹은 피부양 노인층을 부양할 활발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서 궁극적으로 초래될 복지재정능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출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3) 혹은 이주노동력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 노인층의 자살률을 낮추고 노인빈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은 노인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노인 정년을 연장하고, 혹은 노인들이 자영업이나 파트타임 노동 등과 같이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노인들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가 서로 경쟁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충족할 때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되 정년은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방적인 복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탄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영세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한국적인 퇴직금제도의 활용 및 노인고용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생각하기 힘든 한국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부양인구가 늘어서 노인복지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과감한 복지지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한국형 저

출산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결혼과 출산을 담당할 젊은 가임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육아 및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어려움들이다. 특히 서구의 복지국가들에 비교하여 볼 때, 여성들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와 낮은 복지지출은 노동시장 참여를 결심한 여성들에게는 일과 직장을 양립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주노동력 수입의 확대를 통한 노동활력의 유지는 어떤 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충원하느냐 하는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의 노동력 이주의 역사를 보면 대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일수록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두뇌유출(brain drain)의 경향이 뚜렷하여, 저발전국가와 발전국가 간 인력이동의 비대칭성이 강하게 드러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력수입은 전반적인 고학력화로 인한 일자리와의 불일치로 인해 3D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력의 수입이 주를 이루었다. 결혼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고학력 싱글 여성의 골드미스화에 따른 저학력, 고연령 농촌총각을 위한 외국인 신부의 수입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두뇌유출의 경향과는 역행하는 패턴이었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지금까지의 이주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검토 위에서, 보다 생산적인 인력을 수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2절 부정적 시나리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경우

유럽 여러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 연구에서 얻은 함의 중 하나는 복지지출을 늘린다거나, 혹은 여성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늘린다거나 하는 대중적이고 단선적인 인과관계에 기반을 둔 처방은 불완전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때로는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이론에 의하면 이는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에 해당한다. 설사 복지지출,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하여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복지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의 역할이다. 노동계급이 계급적 연대감(class solidarity)에 기반을 두고서 집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집합적 협상(Collective Bargaining)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혹은 핵심적 대기업부문과 주변적 중소기업부문간 등으로 파편화되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경우, 복지에 대한 지출의 증대는 보호받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잉보호를,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증대가 역설적으로 시스템의 근간을 깨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높은 자영업 비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저학력, 미숙련자들에게 있어서 고용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자영업이 손쉬운 대안적인 해결이 된다. 이러한 높은 자영업

비중으로 인하여 자영업부문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채, 복지 정책은 기존의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즉,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가지 않고 보호를 받는 사람은 과잉보호로 인한 양극화 효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빈곤, 노인빈곤이 심각해지게 된다. 이것은 남유럽국가들(그리스, 스페인 형)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결과이다.

제3절 두 가지 시나리오와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 중 근로빈곤과 노인빈곤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영향 뿐 아니라 자영업 비중에 의해서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자영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복지비용을 높이기 쉬웠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 비중을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복지지출이 낮고 여성 노동참여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처방만으로 근로빈곤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은 고용부문에서 이탈한 과잉인구가 자구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부문인데, 현재의 경제상황으로서는 제조업이나 대규모 사업장과 같은 조직부문이 커지기 어렵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구조, 기업구조별 역할의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는 공생적인 공존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이루기보다는 착취

적인 상태로 갈 가능성도 많다. 그렇다면, 자영업의 역할도 잔여적이고
피착취적인 부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층은 정부당국에 의해서도 예외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대접받는 회색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일 종사상
의 부문은 자영업의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세원이 포착이 되어서 세
금부담을 하며, 복지수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용부문과
통합이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쟁점이
새로운 부가적인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복지지출
을 증가시키거나 특정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한국사회의 구조적, 제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제1절 저출산·고령화는 왜 만들어지는가?

지난 20여년간의 저출산·고령화의 변화양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OECD 국가별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위험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원화 작업을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위험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저출산·고령화와는 무관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출산·고령화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위험(자살, 노인빈곤, 근로빈곤)과 저출산·고령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위험(살인, 절도)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반면에 특이하게도 저출산·고령화와 무관하게 높은 자영업 비율이 근로빈곤과 노인빈곤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형 사회적 위험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독특한 한국적 제질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즉, 제도화되어 있는 가

죽주의, 높은 자영업, 그것이 갖는 회색지대의 성격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적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난제가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해소노력을 하면서 이러한 지하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각각의 요인이 어떻게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와 정책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자영업 비중을 낮추거나 혹은 그것이 유지되더라도 자영업부문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영업은 고용부문과의 괴리가 매우 크며, 소득과악이 안 되는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자영업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바람직한데, 기존의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은 어려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고용부문과 자영부문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즉 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욱 많이 부과하게 되지만 자영업주의 상당수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속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매출과 소득, 근로여건, 일자리이력 등의 자료 파악이 어렵다. 통계청(2008)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7.8%와 자영자 48.5%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 소득과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 산재보험 등의 적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처럼 비공식 부문에 자리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주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식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저출산과 사회변동, 사회적 위험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저출산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생겨난 문제이기에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를 박탈하며 적응력의 한계를 넘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미래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만혼선호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참여와 관련하여 아직 한국의 여성노동참가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분히 교육받은 여성인력들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앞으로 여성노동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한편으로 만혼추세를 가속화하며 저출산 경향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늘어남에도 출산율이 증가한 국가(스웨덴, 프랑스)가 존재하며 이들 국가의 특징은 복지지출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경우에도 가사노동 및 보살핌노동의 대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제3절 좋은 시나리오의 함의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저출산 및 사회적 위험의 감소되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자리 충분성, 높은 복지지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가사노동대체)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 즉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경제여건이 좋아서 GDP가 높고 복지지출이 많았던 국가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둘째 다른 하나는 사회적 적응성의 증가로 내적 균형유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한국사회는 저출산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정체단계에 들어섰으며 저점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져 향상성을 유지하는 단계이며 급속한 저출산 유형이 완화되면서 내적인 균형유지 메카니즘의 단계로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았기에 복지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영업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고용 및 자영업 부문간 통합을 이룩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이중성이 해소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사회적 위험의 주요 영향요인 중 단기간 내에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비중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국가’와 ‘시장’이 아닌 ‘가족’ 부문을 대표하며 소득과 약이 어렵다는 의미에서는 지하경제의 성격과 띠고 있으며, 전통적이고 잔여적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국가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과 결합되기 어려운 제도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히 복지지출 비중을 늘리거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과 결합될 수 있는 현실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 비중과 그것

의 변화방향 및 투명성 제고 여부가 정책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제도적인 특성과 배경요인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넘어선 사회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의 향상과 품격 있는 사회와 삶의 질의 고양을 추구하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은정·이수형(2010). 『자살의 원인과 대책 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금재호(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I) 자영업의 변화추이와 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김복순(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월간 노동리뷰』, 3:12-24
- 김승권·장경섭·김호기(2009).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41-69
-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189-226
- 김영순·최현수·이윤경·방효정(2007). “복지국가유형별 사회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 나은영·차유리(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4(4):63-93
- 노대명·황덕순·유진영·이은혜·원일(2007). 『근로빈곤층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 박명호 외(2010).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Ⅱ): 경제사회 발전 트렌드 분석·지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혜훈(200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한국노동연구』, 2(2):23-50.
- 장용석 외(2010).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Ⅱ): 통합사회지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안혁근 외(2008). 『사회위험 요인분석 및 체계적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소정 외(2009).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에스핑앤더슨(2006). (박시종 옮김),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에스핑앤더슨 편(199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역),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 윤옥경(2007). “범죄통계의 사회적 맥락: 경제위기, 정치적 상황과 징역신고율의 변화”, 『형사정책연구』, 18(1): 311350
- 윤홍식(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한국사회복지의 과제:사적[가족]영역으로부터의 접근,”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이병희(2009). “일자리 위기와 근로빈곤”, 『보건복지포럼』
- 이승렬(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I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열(2007).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현진(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현진·이세용·장경섭(1997). 『한국인의 삶의 질: 신체적·심리적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241-258
- 은기수 외(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전홍택(2010).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 미래전망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순돌(2011). “미래 50년 인구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과제”, 『한국 미래인구 5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50주년 기념포럼, 인구보건복지협회
- 정운찬·조홍식(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영태(2011). “한국인구변화와 발전, 미래 50년 예측과 대처방안”, 『한국 미래 인구 50년』, 인구보건복지협회 50주년 기념포럼, 인구보건복지협회
- 주정(2008). “새로운 사회적 위험 속에서의 국가의 역할”, 『복지행정논총』, 18(1), 65-88
- 최인섭(2004). 『주요 국가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비교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2008). 『경제활동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 (2008년 8월 실시)
- 파울 놀테(2008). 윤종석 옮김, 『위험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한울 아카데미
- 한상진(2008). “위험사회 분석과 비판이론”, 『사회와 이론』, 12: 37-72
- 홍석표(2009). 『유럽의 능동적인 복지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tkinson A.B.(1983).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
- Beck, W., Laurent J. G. van der Maesen & Alan W. (2001). "Theorizing Social Quality: The Concept's Validity" in Beck, W et al,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 W., Laurent J. G. van der Maesen, Fleur Thomese & Alan W.(2001). "Reflections on the Social Quality Initiative" in Beck, W et al,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Beck, W., Laurent J. G. van der Maesen, Fleur Thomese & Alan Walker(2001). "Introduction: Who and What is the European Union For?" in Beck, W.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Boston, MA : Kluwer Law International.
- Bislev, S. (2004). "Globalization, State Transformation, and Public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5(3):281-296.
- Douglas, M. & Wildavsky, A. B.(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rikson, R. & Goldthorpe, J. H.(1992), *The Constant Flux: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larendon Press.
- Esping, A. G.(1990). *The Three World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 Esping, A. G.(1999). *Social Form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 A. G.(2001), "A Welfare State for the 21st Century" in Giddens eds., *The Global Third Way Debate*, Polity Press.
- Esping, A. G(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F. & Mary, E. H. (1995),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 Development among At Risk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580-592.
- Giddens, A. (2007). *Europe in the Global Age*. Polity Press.
- Giddens, A., Patrick, D. & Roger, L. (2006). *Global Europe, Social Europe*. Polity Press.
- McKinnon R.(2002). "Social Risk Management: A Conceptual Fallacy of Composition." *Risk Management*, 4(2):21-31.
- Neubourg, C. D. & Weigand, C. W. (2000). "Social Policy as Social Risk Management," ISA paper Helsinki.
- Philips, D. & Yitzhak, B. (2001), "Definitional, Conceptual and Operational Issues," in Beck, W et al,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Standing, G. (2001). "Social quality from basic security: A Redistributive Strategy," in Beck, W et al,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Room, G. (1990). *'New Poverty' in the European Community, Policy and Politics*. St. Martin's Press.
- Taylor, G. P.(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Gooby ed., *New Risks, New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 Therborn, G.(2001). "On the Politics and Policy of Social Quality," in Beck, W et al,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 World Development Report(2003),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dynamic world transforming institutions, growth and quality of life*. World Bank.

[부록 1] 13개 변수 정의

〈부표 1〉 13개 변수 정의

변수	정의
1인당 GDP	
복지지출	Public Social Spending as a Percentage of GDP
고용보호지수	OEC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보호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
자영업자비율	Total Self-Employment / Total Civilian Employment
실업률	실업자 수 / 전체 경제활동인구(total labor force)
여성노동참가율	여성 취업자/여성 실업자/생산활동가능인구
합계출산율	여성이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고령화율 (노령화지수)	15세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 수
외국인 비율	전체 인구수에 대한 외국인 인구비율(Foreign population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population)
자살률: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비율로 OECD에서 발간한 Society at a glance 자료(ISBN 9789264049383) 활용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society-at-a-glance-2009_soc_glance-2008-en)
범죄율 (살인, 강도, 절도):	범죄율 : 모두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정의를 따르고 동 기관의 데이터 활용 (http://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United-Nations-Surveys-on-Crime-Trends-and-the-Operations-of-Criminal-Justice-Systems.html). -살인(homicide) : 타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가해진 불법적인 죽음(unlawful death purposefully inflicted on a person by another person) -강도(robbery) : 상대방의 저항을 강압 혹은 강압에 대한 위협으로 억제하여 소유물을 절도하는 것(the theft of property from a person; overcoming resistance by force or threat of force) -절도(theft) : 강압 없이 그것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이나 기관의 재산을 빼앗는 것(depriving a person or organisation of property without force with the intent to keep it) 살인, 강도, 절도 모두 인구 십만명당 발생 건수를 사용하였으며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가 제시한 데이터가 두가지 이상일 경우 국제연합범죄추이범무행정조사(CTS,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의 데이터 사용 영국 데이터는 England and Wales 지역만 포함

변수	정의
근로빈곤율	EU: 주당 15시간 이상 피고용자이면서 연간 6월 이상 취업자이고 중위소득 60%미만 미국: 27주 이상 구직/취업자 이면서 연방빈곤선(FPL)이하 소득 한국: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미만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의 인구 중 연간 7개월 이상 취업한 집단
고령빈곤율	EU, 한국: 65세 이상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 미국: 65세 이상 빈곤율 (빈곤율, Poverty rate의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할 것. Income, Poverty,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the United States: 2008, U.S. Census Bureau, September 2009.)

[부록 2] 13개국, 13개 변수, 1990~2009년 데이터

1. 핀란드

〈부표 2〉 핀란드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27467	24.2	2.3	15.6	3.1	73.9	1.8
1991	24669	29.2	2.2	15.3	6.5	72.5	1.8
1992	21621	33.3	2.2	15.7	11.6	71.0	1.9
1993	17088	33.4	2.2	16.0	16.2	70.1	1.8
1994	19668	32.9	2.2	16.3	16.4	69.4	1.9
1995	25585	30.9	2.2	15.6	15.3	69.8	1.8
1996	25017	30.8	2.1	15.3	14.4	70.1	1.8
1997	23918	28.5	2.1	14.9	12.6	69.7	1.8
1998	25174	26.3	2.1	14.3	11.4	70.0	1.7
1999	25215	25.7	2.1	14.0	10.1	71.5	1.7
2000	23538	24.3	2.1	13.7	9.7	72.3	1.7
2001	24008	24.2	2.0	13.0	9.1	72.7	1.7
2002	25973	25.0	2.0	12.9	9.0	73.1	1.7
2003	31490	25.8	2.0	12.9	9.0	72.4	1.8
2004	36152	26.0	2.0	12.8	8.8	72.3	1.8
2005	37310	26.1	2.0	12.7	8.4	73.3	1.8
2006	39489	21.5	2.0	12.9	7.6	73.9	1.8
2007	46489	21.1	2.0	12.6	6.8	74.5	1.8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3〉 핀란드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3.4	0.9	27.8	-	-	-
1991	13.5	0.9	27.1	-	-	-
1992	13.7	1.0	26.2	-	-	-
1993	13.8	1.1	24.8	-	-	-
1994	14.0	1.2	24.9	-	-	-
1995	14.2	1.3	24.7	-	-	-
1996	14.4	1.4	22.1	-	-	3.0
1997	14.5	1.6	23.4	-	-	2.0
1998	14.7	1.6	21.5	-	-	4.0
1999	14.8	1.7	21.2	-	-	6.0
2000	14.9	1.8	20.4	-	-	6.0
2001	15.1	1.8	20.7	-	-	-
2002	15.2	1.9	18.8	-	-	-
2003	15.5	2.0	18.3	2.0	-	-
2004	15.7	2.1	18.4	2.8	4.4	5.5
2005	15.9	2.2	16.5	2.2	3.7	5.3
2006	16.2	2.3	18.0	2.1	4.5	6.9
2007	16.5	2.5	16.4	2.4	5.0	5.7
2008	-	-	-	2.5	5.1	7.1
2009	-	-	-	-	3.7	6.3

2. 프랑스

〈부표 4〉 프랑스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21802	25.1	3.0	13.2	9.2	57.6	1.8
1991	21688	25.8	3.0	12.7	9.0	57.9	1.8
1992	23921	26.6	3.0	12.2	10.0	58.6	1.7
1993	22443	28.1	3.0	11.7	11.1	59.4	1.7
1994	23625	28.1	3.0	11.3	12.3	59.7	1.7
1995	27070	28.6	3.0	10.8	11.6	60.2	1.7
1996	27036	28.9	3.0	10.4	12.1	60.8	1.7
1997	24388	28.7	3.0	10.1	12.3	60.4	1.7
1998	25109	28.9	3.0	9.8	11.8	61.1	1.8
1999	24742	29.0	3.0	9.5	11.7	61.6	1.8
2000	22493	27.9	3.0	9.2	10.0	61.9	1.9
2001	22528	27.9	3.0	8.9	8.8	62.1	1.9
2002	24363	28.6	3.0	8.8	8.9	62.4	1.9
2003	29900	29.0	3.0	8.8	8.5	63.9	1.9
2004	33962	29.1	3.0	8.9	8.9	64.2	1.9
2005	35146	29.2	3.0	9.0	8.9	64.6	1.9
2006	36965	32.4	3.0	9.0	8.8	64.7	2.0
2007	42011	33.0	3.0	9.0	8.0	65.2	1.9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5〉 프랑스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4.0	6.4	17.7	-	-	-
1991	14.3	6.3	17.7	-	-	-
1992	14.5	6.2	17.8	-	-	-
1993	14.7	6.1	18.6	-	-	-
1994	14.9	6.0	18.1	-	-	-
1995	15.2	5.9	17.5	-	-	11.0
1996	15.4	5.8	16.6	-	-	10.0
1997	15.6	5.7	16.3	-	-	11.0
1998	15.8	5.6	15.4	-	-	9.0
1999	15.9	5.6	15.0	-	-	10.0
2000	16.1	5.6	15.6	-	-	9.0
2001	16.2	5.6	15.0	-	-	-
2002	16.2	5.6	15.1	-	-	-
2003	16.3	5.6	15.2	1.6	-	-
2004	16.4	5.6	15.0	1.6	5.4	4.9
2005	16.4	5.6	14.6	1.6	6.1	7.9
2006	16.4	5.6	14.1	1.4	6.0	9.1
2007	16.5	5.6	13.9	1.3	6.5	6.9
2008	-	-	-	1.4	6.8	4.5
2009	-	-	-	-	6.7	5.0

3. 독일

〈부표 6〉 독일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19909	22.3	3.17	-	4.838	56.14	1.454
1991	22626	23.4	3.17	9.8	5.569	61.03	1.332
1992	25642	25.3	3.17	10.1	6.622	61.28	1.292
1993	24786	26	3.21	10.4	7.87	61.43	1.278
1994	26397	26	3.09	10.6	8.402	61.35	1.242
1995	30909	26.5	3.09	10.7	8.127	61.54	1.249
1996	29793	27.1	3.09	10.8	8.862	61.9	1.316
1997	26364	26.4	2.34	10.9	9.815	62.46	1.369
1998	26634	26.3	2.34	11	9.212	63.04	1.355
1999	26058	26.3	2.34	10.8	8.407	63.48	1.361
2000	23164	26.2	2.34	11	7.748	63.73	1.378
2001	23042	26.3	2.34	11.1	7.834	64.37	1.349
2002	24556	27	2.09	11.2	8.567	64.8	1.341
2003	29707	27.3	2.09	11.4	9.267	65.06	1.34
2004	33227	26.7	2.12	12.1	10.29	66.34	1.355
2005	33784	26.7	2.12	12.4	11.15	67.63	1.34
2006	35415	28.25	2.12	12.2	10.29	69.28	1.331
2007	40399	28.61	2.12	12	8.637	70.21	1.4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7〉 독일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4.92	7.4817	14.5	-	-	-
1991	14.96	7.7285	14.5	-	-	-
1992	15.01	7.9835	13.8	-	-	-
1993	15.12	8.2469	13	-	-	-
1994	15.29	8.5189	13	-	-	-
1995	15.47	8.8	13.1	-	-	10
1996	15.62	8.9	12.4	-	-	11
1997	15.74	9	12.3	-	-	7
1998	15.87	8.9	11.7	-	-	6
1999	16.09	8.9345	11.2	-	-	6
2000	16.45	8.883	11	-	-	5
2001	16.85	8.8772	11	-	-	-
2002	17.28	8.9	10.8	-	-	-
2003	17.75	8.8872	10.8	1	-	-
2004	18.32	8.169	10.2503	1	-	-
2005	18.94	8.1923	10.2503	0.9	4.8	6.6
2006	19.53	8.202	9.14975	0.9	5.5	6.3
2007	19.93	8.1998	8.87316	0.8	7.5	8.7
2008	-	-	-	0.8	7.1	7.5
2009	-	-	-	-	6.8	7.5

4. 그리스

〈부표 8〉 그리스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8274	16.5	3.5	47.7	7.025	43.61	1.39
1991	8812	15.9	3.5	46.9	7.656	41.13	1.38
1992	9640	16.1	3.5	47.4	7.843	42.74	1.38
1993	8927	17	3.5	46.7	8.972	43.61	1.34
1994	9468	17	3.5	46.7	8.863	44.22	1.35
1995	12343	17.3	3.5	46.1	9.062	45.28	1.32
1996	12957	17.9	3.5	45.7	9.655	46.97	1.3
1997	12566	17.9	3.5	45.2	9.577	47.05	1.31
1998	12567	18.6	3.5	43.6	10.76	49.44	1.29
1999	12897	19.2	3.5	42.2	11.73	50.54	1.28
2000	11615	19.2	3.5	41.9	11.07	50.52	1.269
2001	11935	20.6	3.5	39.9	10.19	49.67	1.255
2002	13394	20	3.5	39.3	9.932	51.66	1.273
2003	17659	19.9	2.73	39	9.342	52.9	1.289
2004	20904	19.9	2.73	36.6	10.21	54.68	1.309
2005	21962	20.5	2.73	36.4	9.624	55.12	1.338
2006	23817	21.77	2.73	36.3	8.758	55.65	1.406
2007	27876	22.23	2.73	35.9	8.093	55.62	1.3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9〉 그리스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3.79	1.5087	3.1	-	-	-
1991	13.97	1.6304	3.3	-	-	-
1992	14.27	1.7618	3	-	-	-
1993	14.56	1.9039	3.5	-	-	-
1994	14.84	2.0574	3	-	-	-
1995	15.12	2.2232	3.1	-	-	27
1996	15.41	2.4025	2.9	-	-	24
1997	15.71	2.5962	3.1	-	-	25
1998	16.01	2.8055	3.2	-	-	27
1999	16.31	2.6201	3	-	-	25
2000	16.63	2.9059	3	-	-	24
2001	17	3.3823	2.6	-	-	-
2002	17.36	4.138	2.4	-	-	-
2003	17.69	4.4642	2.9	1.1	13.5	19.4
2004	17.98	5.0167	2.63445	1	13.1	18.4
2005	18.32	5.1821	2.93269	1.1	12.9	17.7
2006	18.54	5.3163	2.86115	1	13.8	16.5
2007	18.6	5.7453	2.78565	1	14.2	14.7
2008	-	-	-	1.1	14.3	12.3
2009	-	-	-	-	13.8	10.2

5. 이태리

〈부표 10〉 이태리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19342	19.9	3.57	28.7	11.37	44.56	1.358
1991	20358	20.3	3.57	28.6	10.92	44.44	1.328
1992	22169	20.9	3.57	28.6	11.52	44.9	1.317
1993	17861	21.1	3.57	28.9	9.982	42.45	1.26
1994	18426	20.8	3.57	29	10.96	42.38	1.219
1995	19684	19.9	3.57	29.3	11.54	42.83	1.193
1996	22034	22	3.57	29.3	11.55	43.54	1.217
1997	20882	22.7	3.26	29.1	11.63	44.08	1.227
1998	21339	22.9	2.7	29.1	11.75	45.11	1.214
1999	21024	23.3	2.7	28.6	11.34	45.99	1.233
2000	19232	23.3	2.51	28.5	10.52	46.78	1.256
2001	19488	23.5	2.01	28.2	9.485	47.77	1.252
2002	21158	24	2.01	27.7	8.985	48.41	1.27
2003	26035	24.4	1.82	27.5	8.651	48.83	1.287
2004	29622	24.7	1.82	28.4	8.041	51.02	1.331
2005	30327	25	1.82	27	7.729	50.73	1.319
2006	31629	25.54	1.82	26.7	6.786	51.22	1.352
2007	35662	25.94	1.82	26.4	6.09	51.07	1.4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11〉 이태리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4.9	1.0706	6.5	-	-	-
1991	15.27	1.1808	6.5	-	-	-
1992	15.64	1.2935	6.7	-	-	-
1993	15.99	1.4424	6.9	-	-	-
1994	16.32	1.5844	6.6	-	-	-
1995	16.69	1.7	6.6	-	-	10
1996	17.06	2	6.8	-	-	11
1997	17.38	2.1	6.7	-	-	10
1998	17.67	2.1	6.4	-	-	10
1999	17.97	2.17	5.8	-	-	8
2000	18.27	2.4126	5.8	-	-	7
2001	18.56	2.5256	5.6	-	-	-
2002	18.86	2.6156	5.6	-	-	-
2003	19.12	3.85	5.53752	1.2	-	-
2004	19.35	4.1738	5.53752	1.2	9.4	9.1
2005	19.6	4.5937	5.53752	1	8.8	11.9
2006	19.84	5.0294	5.37573	1.1	9.6	11.5
2007	20	5.8299	5.3081	-	9.8	12.1
2008	-	-	-	-	8.9	11.5
2009	-	-	-	-	10.3	10.4

6. 일본

〈부표 12〉 일본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24824	11.4	1.84	22.3	2.095	60.45	1.54
1991	28183	11.6	1.84	21.2	2.059	61.5	1.53
1992	30584	12.2	1.84	20.2	2.158	61.99	1.5
1993	34911	12.9	1.84	19.1	2.539	61.87	1.46
1994	38217	13.5	1.84	18.6	2.89	62.12	1.5
1995	41966	14.3	1.84	18.3	3.15	62.3	1.42
1996	36912	14.6	1.62	17.7	3.383	62.84	1.43
1997	33811	14.7	1.62	17.5	3.374	63.76	1.39
1998	30542	15.5	1.62	17.3	4.078	63.95	1.38
1999	34535	16.1	1.43	17.2	4.677	63.72	1.34
2000	36837	16.5	1.43	16.6	4.774	63.82	1.36
2001	32272	17.4	1.43	15.9	5.035	64.27	1.33
2002	30829	17.8	1.43	15.4	5.38	63.96	1.32
2003	33231	18.1	1.43	15.1	5.224	64.17	1.29
2004	36158	18.2	1.43	14.9	4.683	64.55	1.29
2005	35718	18.6	1.43	14.7	4.407	65.22	1.26
2006	34230	20.87	1.43	13.8	4.101	65.98	1.32
2007	34365	21.7	1.43	13.4	3.882	66.86	1.3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13〉 일본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2.08	0.7171	14.5	-	-	-
1991	12.56	0.7812	14.1	-	-	-
1992	13.05	0.8509	14.5	-	-	-
1993	13.54	0.927	14	-	-	-
1994	14.06	1.0098	14.2	-	-	-
1995	14.56	1.1	14.3	-	-	-
1996	15.11	1.12	14.6	-	-	-
1997	15.66	1.1752	15.2	-	-	-
1998	16.21	1.2	20.4	-	-	-
1999	16.72	1.22	20	-	-	-
2000	17.37	1.3	19.1	-	-	-
2001	17.96	1.4	18.5	-	-	-
2002	18.54	1.45	18.7	-	-	-
2003	19.05	1.5006	20.2486	0.5	-	-
2004	19.48	1.5	19.0996	0.5	-	-
2005	20.16	1.5745	19.449	0.5	-	-
2006	20.82	1.6304	19.0585	0.4	-	-
2007	21.49	1.6838	24.1855	0.4	-	-
2008	-	-	-	0.5	-	-
2009	-	-	-	-	-	-

7. 한국

〈부표 14〉 한국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6306	2.9	2.74	39.5	2.454	51.8	1.59
1991	7286	2.8	2.74	37.3	2.407	51.62	1.74
1992	7728	3	2.74	37.3	2.513	51.72	1.78
1993	8421	3.1	2.74	37.9	2.878	51.8	1.67
1994	9755	3.1	2.74	37.1	2.476	52.76	1.67
1995	11782	3.3	2.74	36.8	2.063	53.53	1.65
1996	12581	3.5	2.74	36.7	2.048	54.25	1.58
1997	11584	3.8	2.74	36.8	2.608	55.4	1.54
1998	7738	5.2	2.03	38.3	6.963	52.58	1.47
1999	9901	6.3	2.03	37.6	6.342	53.41	1.42
2000	11350	5	2.03	36.8	4.422	54.93	1.47
2001	10656	5.4	2.03	36.7	4.001	55.82	1.3
2002	12092	5.3	2.03	36	3.28	56.67	1.17
2003	13448	5.6	2.03	34.9	3.562	56.03	1.19
2004	15037	6.3	2.03	34	3.673	57.4	1.16
2005	17548	6.9	2.03	33.6	3.735	58.06	1.08
2006	19692	7.359	2.03	32.8	3.437	58.51	1.13
2007	21655	7.849	2.03	31.8	3.233	58.69	1.2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15〉 한국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5.12	0.0473	7.9	-	-	-
1991	5.235	0.0656	7.6	-	-	-
1992	5.362	0.0912	8.6	-	-	-
1993	5.514	0.1266	10	-	-	-
1994	5.695	0.1757	10.1	-	-	-
1995	5.891	0.244	11.2	-	-	-
1996	6.139	0.3266	13.4	-	-	-
1997	6.375	0.3	13.6	-	-	-
1998	6.631	0.3	18.8	-	-	-
1999	6.915	0.3606	15.6	-	-	-
2000	7.222	0.4447	14.1	-	-	-
2001	7.556	0.5	15.1	-	-	-
2002	7.921	0.5705	18.7	-	-	-
2003	8.291	0.9619	23.258	2.1	-	-
2004	8.672	1.022	24.1892	2.3	-	-
2005	9.071	1.0605	24.7146	2.2	-	48.12
2006	9.495	1.3678	21.5187	2.2	-	47.24
2007	9.927	1.6515	22.8023	2.3	13.36	46.92
2008	-	-	-	2.3	-	-
2009	-	-	-	-	-	-

8. 노르웨이

〈부표 16〉 노르웨이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27734	22.3	2.9	11.3	5.261	72.62	1.932
1991	28068	23.3	2.9	10.8	5.407	72.41	1.918
1992	29932	24.2	2.9	10.3	5.91	71.89	1.885
1993	27418	24.1	2.9	10.2	5.965	71.92	1.86
1994	28723	23.9	2.9	9.7	5.349	72.34	1.865
1995	34165	23.3	2.69	9.3	4.895	73.46	1.869
1996	36540	22.5	2.69	8.7	4.833	75.09	1.889
1997	35897	22	2.69	8.2	3.893	76.42	1.857
1998	34095	23.6	2.69	8.3	3.187	77.18	1.814
1999	35677	23.6	2.69	7.8	3.172	77.34	1.845
2000	37530	21.3	2.56	7.4	3.444	77.52	1.851
2001	37889	22.2	2.56	7.2	3.431	77.55	1.784
2002	42292	23.6	2.56	7.1	3.911	78	1.754
2003	49292	24.5	2.56	7.3	4.425	77.16	1.797
2004	56224	23.2	2.56	7.4	4.366	77.03	1.828
2005	65164	21.6	2.56	7.4	4.608	76.71	1.836
2006	72016	20.06	2.69	8.5	3.426	76.03	1.904
2007	82101	19.86	2.69	8	2.525	77.31	1.8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17〉 노르웨이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6.31	4.2396	14.4	-	-	-
1991	16.29	4.1438	14.8	-	-	-
1992	16.24	4.055	13.4	-	-	-
1993	16.14	3.9632	12.6	-	-	-
1994	16.03	3.8691	11.7	-	-	-
1995	15.94	3.8	11.8	-	-	-
1996	15.84	3.7	11.1	-	-	-
1997	15.72	3.6	11.2	-	-	-
1998	15.57	3.6	11.8	-	-	-
1999	15.36	3.7	12.7	-	-	-
2000	15.16	3.99	11.6	-	-	-
2001	15.01	4.0936	11.5	-	-	-
2002	14.87	4.1083	10.2	-	-	-
2003	14.76	4.3422	10.5	1.1	4.4	5.4
2004	14.72	4.6	10.8985	0.8	4.4	4.9
2005	14.71	4.8	10.9395	0.7	4.5	5.8
2006	14.68	5.1029	9.86103	0.7	6.1	5.7
2007	14.64	5.6543	9.59768	-	6.4	3.4
2008	-	-	-	-	5.4	5.3
2009	-	-	-	-	5.6	2.6

9. 포르투갈

〈부표 18〉 포르투갈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6916	12.9	4.1	29.4	4.726	61.3	1.556
1991	7844	13.8	3.85	30.6	4.255	63.58	1.558
1992	9456	14.5	3.85	25.7	4.133	61.44	1.533
1993	8365	16	3.85	26.3	5.529	61.81	1.513
1994	8792	16.2	3.85	27.6	6.881	62.61	1.444
1995	11009	17	3.85	27.9	7.233	62.74	1.409
1996	11413	17.6	3.67	28.6	7.328	63.95	1.444
1997	10989	17.5	3.67	28.9	6.852	65.57	1.473
1998	11771	17.9	3.67	28.1	4.956	65.54	1.475
1999	11952	18.3	3.67	27	4.401	66.1	1.508
2000	11020	19.6	3.67	26.1	3.93	67.37	1.558
2001	11244	19.9	3.67	26.8	4.059	68.55	1.46
2002	12308	21.3	3.67	26.6	5.062	69.53	1.473
2003	15009	22.9	3.67	26.7	6.371	70.34	1.444
2004	17073	23.1	3.46	25.9	6.653	70.58	1.403
2005	17586	23.82	3.46	25.1	7.618	71.72	1.408
2006	18403	24.77	3.46	24.1	7.657	72.34	1.362
2007	20962	25.75	3.46	24.2	7.986	72.96	1.5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19〉 포르투갈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3.41	1.2052	8	-	-	-
1991	13.77	1.291	8.5	-	-	-
1992	14.06	1.383	7.7	-	-	-
1993	14.33	1.4815	6.9	-	-	-
1994	14.59	1.587	6.7	-	-	-
1995	14.87	1.7	7	-	-	27
1996	15.15	1.7	5.4	-	-	24
1997	15.42	1.7602	5.2	-	-	24
1998	15.68	1.7815	4.5	-	-	23
1999	15.92	1.9	4.3	-	-	22
2000	16.2	2.0743	4.1	-	-	21
2001	16.45	3.5014	6	-	-	-
2002	16.61	4.0829	9.5	-	-	-
2003	16.75	4.2552	8.7	1.4	-	-
2004	16.91	4.4644	8.7	1.4	12.4	15.2
2005	17.07	4.0899	8.7	1.3	11.9	14.1
2006	17.19	4.1082	2.5217	1.4	11.2	13.4
2007	17.34	4.2089	2.32548	1.7	9.7	13.3
2008	-	-	-	1.2	11.8	11.7
2009	-	-	-	-	10.3	9.1

10. 스페인

〈부표 20〉 스페인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13130	19.9	3.82	25.8	16	42.61	1.362
1991	14091	20.7	3.82	25.1	16.09	43.24	1.329
1992	15361	21.8	3.82	25.5	18.14	44.25	1.316
1993	12746	23.1	3.82	25.9	22.43	45.25	1.266
1994	12840	22	3.01	25.8	23.88	46.63	1.204
1995	15150	21.4	3.01	25.2	22.68	47.51	1.173
1996	15761	21.3	3.01	24.7	21.97	48.44	1.162
1997	14463	20.7	2.93	23.5	20.57	49.49	1.175
1998	14800	20.6	2.93	22.7	18.58	50.13	1.155
1999	15462	20.3	2.93	21.3	15.64	51.2	1.194
2000	14427	20.3	2.93	20.2	13.86	53.16	1.234
2001	14956	20	3.05	19.8	10.47	51.9	1.244
2002	16627	20.4	3.05	19	11.36	53.98	1.263
2003	21106	21	2.98	18.3	11.3	56	1.31
2004	24592	21.2	2.98	18.1	10.97	57.95	1.329
2005	26250	21.2	2.98	18.2	9.157	59.46	1.346
2006	28339	20.04	2.98	17.9	8.511	61.37	1.382
2007	32692	19.99	2.98	17.7	8.265	62.6	1.4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21〉 스페인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3.61	1.9713	6.8	-	-	-
1991	13.95	2.0774	6.7	-	-	-
1992	14.27	2.1891	6.3	-	-	-
1993	14.6	2.3069	6.8	-	-	-
1994	14.94	2.431	7.1	-	-	-
1995	15.29	2.5618	6.9	-	-	5
1996	15.65	2.0306	7.2	-	-	5
1997	15.99	1.6095	7.2	-	-	6
1998	16.32	1.8855	6.9	-	-	6
1999	16.61	2.3139	6.7	-	-	7
2000	16.82	3.4042	6.9	-	-	11
2001	16.93	4.8573	6.4	-	-	-
2002	16.94	6.4486	6.6	-	-	-
2003	16.89	7.2237	6.7	-	-	-
2004	16.83	8.7384	6.60791	-	10.8	17
2005	16.75	9.5492	6.2631	0.9	10.4	17.8
2006	16.69	10.256	7.03664	0.8	9.9	18.7
2007	16.64	11.634	7.05967	0.9	10.7	16.2
2008	-	-	-	0.9	10.7	15.2
2009	-	-	-	-	11.4	14.4

1 1. 스웨덴

〈부표 22〉 스웨덴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28058	30.2	3.49	9.2	1.832	83.33	2.137
1991	29410	31.8	3.49	9.1	3.242	82.6	2.117
1992	30257	34.7	3.49	9.8	5.722	80.84	2.09
1993	23120	35.8	2.47	10.8	9.326	78.87	1.997
1994	24749	34.5	2.47	11.1	9.582	77.7	1.89
1995	28740	32.1	2.47	11.2	9.046	78.11	1.738
1996	31252	31.7	2.47	11	9.893	77.95	1.606
1997	28607	30.5	2.24	10.8	10.01	76.77	1.532
1998	28792	30.3	2.24	10.6	8.326	75.82	1.511
1999	29252	29.8	2.24	10.6	7.08	76.37	1.503
2000	27908	28.5	2.24	10.3	5.805	77.29	1.547
2001	25587	28.9	2.24	10	5.025	77.95	1.57
2002	28122	29.5	2.24	9.8	5.223	77.88	1.653
2003	35086	30.3	2.24	9.6	5.773	77.69	1.718
2004	40151	29.8	2.24	9.9	6.543	77.44	1.752
2005	40876	29.4	2.24	9.8	7.679	78.51	1.769
2006	43793	26.49	2.24	10	6.986	78.66	1.854
2007	50496	26.17	2.24	10.6	6.077	79.32	1.8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23〉 스웨덴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7.78	5.2954	15	-	-	-
1991	17.74	5.4326	15.1	-	-	-
1992	17.69	5.5732	13.5	-	-	-
1993	17.61	5.7176	13.7	-	-	-
1994	17.52	5.8656	12.9	-	-	-
1995	17.47	6.0175	13.2	-	-	-
1996	17.46	5.9539	12.3	-	-	-
1997	17.44	5.9004	11.9	-	-	-
1998	17.4	5.6462	11.9	-	-	-
1999	17.33	5.4977	12	-	-	-
2000	17.26	5.3734	10.9	-	-	-
2001	17.22	5.3427	11.3	-	-	-
2002	17.18	5.3	11.4	-	-	-
2003	17.16	5.3041	10.6835	0.9	-	-
2004	17.21	5.3393	11.0551	1.2	6.1	5.4
2005	17.27	5.3	11.0551	0.9	5.5	3.6
2006	17.33	5.4	8.77121	1	7.4	4.6
2007	17.43	5.7334	8.45925	1.2	6.4	3.8
2008	-	-	-	0.9	6.8	4.7
2009	-	-	-	-	6.9	5.9

1 2. 영국

〈부표 24〉 영국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17697	17	0.6	15.1	6.805	68.2	1.83
1991	18396	18.4	0.6	14.6	8.379	68.04	1.82
1992	18962	20.2	0.6	15.7	9.656	67.84	1.79
1993	16993	20.8	0.6	15.6	10.27	67.92	1.76
1994	18335	20.4	0.6	15.7	9.575	67.99	1.74
1995	19926	20.2	0.6	15.6	8.588	67.94	1.7
1996	20954	19.9	0.6	14.9	8.091	68.39	1.73
1997	23280	19	0.6	14.5	7.026	68.89	1.72
1998	24870	19.4	0.6	13.7	6.102	68.79	1.71
1999	25600	19.1	0.6	13.2	5.946	69.41	1.68
2000	25079	19.2	0.68	12.8	5.477	69.8	1.64
2001	24861	20.1	0.68	12.8	4.741	69.73	1.63
2002	27151	20	0.75	12.7	5.068	70.31	1.64
2003	31212	20.5	0.75	13.2	4.837	70.23	1.71
2004	36746	21.1	0.75	13.6	4.634	70.63	1.77
2005	37837	21.3	0.75	13.4	4.605	70.82	1.79
2006	40307	19.75	0.75	13.5	5.35	71.52	1.84
2007	45941	19.85	0.75	13.8	5.236	70.95	1.8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25〉 영국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5.73	2.9506	7.4	-	-	-
1991	15.77	3.027	7.3	-	-	-
1992	15.81	3.1147	7.4	-	-	-
1993	15.83	3.1734	7.1	-	-	-
1994	15.82	3.2682	6.9	-	-	-
1995	15.85	3.3934	6.8	-	-	18
1996	15.86	3.3562	6.5	-	-	16
1997	15.85	3.5701	6.5	-	-	13
1998	15.85	3.7982	6.9	-	-	13
1999	15.81	3.7874	6.9	-	-	11
2000	15.81	4.0086	6.64886	-	-	12
2001	15.86	4.3947	6.39773	-	-	-
2002	15.91	4.4548	6.40107	-	-	-
2003	15.96	4.7173	6.08718	1.7	-	-
2004	15.99	4.9062	6.31218	1.6	-	-
2005	16	5.1975	6.04412	1.4	8.2	13.7
2006	15.99	5.7882	6.24737	1.4	7.8	14.2
2007	16.04	6.5014	6.18285	1.4	8	15.2
2008	-	-	-	1.2	8.5	15.3
2009	-	-	-	-	6.7	11.7

1 3. 미국

〈부표 26〉 미국 변수

년도	일인당 GDP	복지 지출	고용보호 지수	자영업 비율	실업률	여성노동 참가율	합계 출산율
1990	22759	13.4	0.21	8.8	5.598	69.65	2.081
1991	23233	14.3	0.21	9	6.827	69.56	2.063
1992	24301	15	0.21	8.7	7.504	70.17	2.046
1993	25243	15.3	0.21	8.8	6.919	70.34	2.02
1994	26503	15.3	0.21	8.8	6.1	71.4	2.001
1995	27396	15.3	0.21	8.5	5.596	71.62	1.978
1996	28601	15.1	0.21	8.4	5.402	71.96	1.976
1997	30019	14.9	0.21	8.2	4.943	72.54	1.971
1998	31284	14.7	0.21	7.9	4.509	72.54	1.999
1999	32874	14.5	0.21	7.7	4.218	72.61	2.007
2000	34573	14.5	0.21	7.4	3.992	72.71	2.056
2001	35348	15.1	0.21	7.4	4.732	72.43	2.034
2002	36197	15.9	0.21	7.2	5.783	72.12	2.013
2003	37525	16.2	0.21	7.6	5.989	71.88	2.043
2004	39583	16.1	0.21	7.6	5.529	71.48	2.046
2005	41747	15.9	0.21	7.5	5.083	71.57	2.053
2006	43831	14.63	0.21	7.4	4.624	71.74	2.101
2007	45607	14.66	0.21	7.2	4.622	71.71	2.1
2008	-	-	-	-	-	-	-
2009	-	-	-	-	-	-	-

〈부표 27〉 미국 변수

년도	고령화율	외국인 노동비율	자살률	살인율	근로 빈곤율	고령 빈곤율
1990	12.52	7.9479	11.9	-	5.5	-
1991	12.57	7.5134	11.7	-	6.1	-
1992	12.61	7.1025	11.4	-	6.3	-
1993	12.66	6.7142	11.6	-	6.7	-
1994	12.67	6.3471	11.5	-	6.2	-
1995	12.68	6	11.4	-	5.9	10.5
1996	12.67	6.0487	11.1	-	5.8	10.8
1997	12.62	6.0978	10.8	-	5.7	10.5
1998	12.55	6.1474	10.7	-	5.4	10.5
1999	12.47	6.1011	10.1	-	5.1	9.7
2000	12.43	6.6	9.8	-	4.7	9.9
2001	12.39	6.7271	10	-	4.9	10.1
2002	12.36	6.8566	10.2	-	5.3	10.4
2003	12.38	6.9886	10.0246	5.6	5.3	10.2
2004	12.38	7.1231	10.2167	5.4	5.6	9.8
2005	12.42	7.2602	10.1283	5.5	5.4	10.1
2006	12.47	7.4	8.70802	5.6	5.1	9.4
2007	12.56	7.5425	8.53824	5.5	5.1	9.7
2008	-	-	-	5.2	6	9.7
2009	-	-	-	-	-	8.9

[부록 3]

〈부표 28〉 국가를 매개로 계산된 변수간 유사성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SELF	FRN	HOM	CBR	GDP_1	TWS_1	EPL_1	WLPR_1	ACR_1	SUR_1	TFT	UR
1	SELF	1.000	0.154	0.615	0.154	0.154	0.308	0.462	0.077	0.385	0.154	0.231	0.615
2	FRN	0.154	1.000	0.385	0.846	0.692	0.692	0.692	0.767	0.615	0.692	0.769	0.385
3	HOM	0.615	0.385	1.000	0.538	0.231	0.231	0.692	0.462	0.308	0.538	0.462	0.385
4	CBR	0.154	0.846	0.538	1.000	0.692	0.692	0.692	0.769	0.615	0.692	0.769	0.385
5	GDP_1	0.154	0.692	0.231	0.692	1.000	0.846	0.385	0.769	0.769	0.692	0.769	0.538
6	TWS_1	0.308	0.692	0.231	0.692	0.846	1.000	0.385	0.615	0.923	0.538	0.769	0.692
7	EPL_1	0.462	0.692	0.692	0.692	0.385	0.385	1.000	0.462	0.308	0.385	0.615	0.385
8	WLPR_1	0.077	0.769	0.462	0.769	0.769	0.615	0.462	1.000	0.692	0.769	0.692	0.308
9	ACR_1	0.385	0.615	0.308	0.615	0.769	0.923	0.308	0.692	1.000	0.462	0.692	0.615
10	SUR_1	0.154	0.692	0.538	0.692	0.692	0.538	0.385	0.769	0.462	1.000	0.615	0.385
11	TFT	0.231	0.769	0.462	0.769	0.769	0.769	0.615	0.692	0.692	0.615	1.000	0.462
12	UR	0.615	0.385	0.385	0.385	0.538	0.692	0.385	0.308	0.615	0.385	0.462	1.000

〈부표 29〉 변수를 매개로 계산된 국가간 유사성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	핀란드	1.000	0.750	0.750	0.417	0.583	0.500	0.333	0.750	0.417	0.500	0.750	0.583	0.750
2	프랑스	0.750	1.000	0.833	0.500	0.500	0.583	0.250	0.833	0.333	0.583	0.833	0.667	0.667
3	독일	0.750	0.833	1.000	0.500	0.667	0.583	0.250	0.833	0.333	0.583	0.833	0.667	0.667
4	그리스	0.417	0.500	0.500	1.000	0.833	0.417	0.583	0.333	0.667	0.917	0.333	0.333	0.167
5	이태리	0.583	0.500	0.667	0.833	1.000	0.417	0.417	0.500	0.500	0.917	0.500	0.500	0.333
6	일본	0.500	0.583	0.583	0.417	0.417	1.000	0.667	0.583	0.583	0.500	0.583	0.417	0.417
7	한국	0.333	0.250	0.250	0.583	0.417	0.667	1.000	0.250	0.750	0.500	0.250	0.083	0.250
8	노르웨이	0.750	0.833	0.833	0.333	0.500	0.583	0.250	1.000	0.333	0.417	1.000	0.833	0.833
9	포르투갈	0.417	0.333	0.333	0.667	0.500	0.583	0.750	0.333	1.000	0.583	0.333	0.333	0.333
10	스페인	0.500	0.583	0.583	0.917	0.917	0.500	0.500	0.417	0.583	1.000	0.417	0.417	0.250
11	스웨덴	0.750	0.833	0.833	0.333	0.500	0.583	0.250	1.000	0.333	0.417	1.000	0.833	0.833
12	영국	0.583	0.667	0.667	0.333	0.500	0.417	0.083	0.833	0.333	0.417	0.833	1.000	0.833
13	미국	0.750	0.667	0.667	0.167	0.333	0.417	0.250	0.833	0.333	0.250	0.833	0.833	1.000

〈부표 30〉 변수를 매개로 계산된 국가간 이질성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일본	한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1	핀란드	0.000	0.250	0.250	0.583	0.417	0.500	0.667	0.250	0.583	0.500	0.250	0.417	0.250
2	프랑스	0.250	0.000	0.167	0.500	0.500	0.417	0.750	0.167	0.667	0.417	0.167	0.333	0.333
3	독일	0.250	0.167	0.000	0.500	0.333	0.417	0.750	0.167	0.667	0.417	0.167	0.333	0.333
4	그리스	0.583	0.500	0.500	0.000	0.167	0.583	0.417	0.667	0.333	0.083	0.667	0.667	0.833
5	이태리	0.417	0.500	0.333	0.167	0.000	0.583	0.583	0.500	0.500	0.083	0.500	0.500	0.667
6	일본	0.500	0.417	0.417	0.583	0.583	0.000	0.333	0.417	0.417	0.500	0.417	0.583	0.583
7	한국	0.667	0.750	0.750	0.417	0.583	0.333	0.000	0.750	0.250	0.500	0.750	0.917	0.750
8	노르웨이	0.250	0.167	0.167	0.667	0.500	0.417	0.750	0.000	0.667	0.583	0.000	0.167	0.167
9	포르투갈	0.583	0.667	0.667	0.333	0.500	0.417	0.250	0.667	0.000	0.417	0.667	0.667	0.667
10	스페인	0.500	0.417	0.417	0.083	0.083	0.500	0.500	0.583	0.417	0.000	0.583	0.583	0.750
11	스웨덴	0.250	0.167	0.167	0.667	0.500	0.417	0.750	0.000	0.667	0.583	0.000	0.167	0.167
12	영국	0.417	0.333	0.333	0.667	0.500	0.583	0.917	0.167	0.667	0.583	0.167	0.000	0.167
13	미국	0.250	0.333	0.333	0.833	0.667	0.583	0.750	0.167	0.667	0.750	0.167	0.167	0.000

〈부표 31〉 국가를 매개로 계산된 변수간 이질성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SELF	FRN	HOM	CBR	GDP_1	TWS_1	EPL_1	WLPR_1	ACR_1	SUR_1	TFT	UR
1	SELF	0.000	0.846	0.385	0.846	0.846	0.692	0.538	0.923	0.615	0.846	0.769	0.385
2	FRN	0.846	0.000	0.615	0.154	0.308	0.308	0.308	0.231	0.385	0.308	0.231	0.615
3	HOM	0.385	0.615	0.000	0.462	0.769	0.769	0.308	0.538	0.692	0.462	0.538	0.615
4	CBR	0.846	0.154	0.462	0.000	0.308	0.308	0.308	0.231	0.385	0.308	0.231	0.615
5	GDP_1	0.846	0.308	0.769	0.308	0.000	0.154	0.615	0.231	0.231	0.308	0.231	0.462
6	TWS_1	0.692	0.308	0.769	0.308	0.154	0.000	0.615	0.385	0.077	0.462	0.231	0.308
7	EPL_1	0.538	0.308	0.308	0.308	0.615	0.615	0.000	0.538	0.692	0.615	0.385	0.615
8	WLPR_1	0.923	0.231	0.538	0.231	0.231	0.385	0.538	0.000	0.308	0.231	0.308	0.692
9	ACR_1	0.615	0.385	0.692	0.385	0.231	0.077	0.692	0.308	0.000	0.538	0.308	0.385
10	SUR_1	0.846	0.308	0.462	0.308	0.308	0.462	0.615	0.231	0.538	0.000	0.385	0.615
11	TFT	0.769	0.231	0.538	0.231	0.231	0.231	0.385	0.308	0.308	0.385	0.000	0.538
12	UR	0.385	0.615	0.615	0.615	0.462	0.308	0.615	0.692	0.385	0.615	0.538	0.000

〈부표 32〉 국가간 거리에 기반을 둔 다차원분석의 결과

Starting config: GOWER'S PRINCIPAL COORDINATES
 Type of Data: Similarities
 13 items
 Initial Stress = 0.145997003
 Final Stress = 0.114 after 19 iterations.
 Metric MDS coordinates (stress = 0.114)

		1	2
1	Finland	0.221	0.222
2	France	0.219	0.003
3	Germany	0.202	0.09
4	Greece	0.33	0.154
5	Italy	0.136	0.229
6	Japan	0.069	0.396
7	Korea	0.44	0.366
8	Norway	0.341	0.065
9	Portugal	0.398	0.191
10	Spain	0.225	0.169
11	Sweden	0.342	0.065
12	UK	0.456	0.068
13	US	0.467	0.186



제 11 편

가족의 해체와 New Family Model

연구책임자: 전해정(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조규영(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박민경(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채혜원(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김신경(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적 결속과 발전의 초석이다. 따라서 가족의 구조는 어떠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시대가 바뀔에 따라 이러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되는가, 또한 이러한 변화 추세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사회변동과 이러한 사회변동의 원인이자 결과인 개인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핵가족화로 대표되는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유형의 다양화 등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야기하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및 그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난 이후, 1960년대부터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 현상을 경험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가족구조 변화를 1980년 이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정

현숙, 2011).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와 가족의 변화를 논할 때, 우리는 전자가 후자의 원인 내지는 결과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사실상이 두 가지 현상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호인과적인 관계로서 동일한 현상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이거나, 혹은 제3의 변수에 의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보편적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맞벌이가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의 결과로서 맞벌이가족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김은지 외, 2010). 또한 저출산과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라는 변수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족의 변화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이끈 것이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족이 변화한 것이든 간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을 둘러싼 거시체계로서의 사회의 변동과,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가 되는 가족의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이를 이해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변화된 사회에서의 변화된 가족의 모습에 기반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김두섭, 김정석, 송유진, 최양숙, 2005).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가족에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려는 의도에서 구성되었다. 미래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의학·생명과학 기술의 발달, 노동환경의 변화,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세계화의 진전 등으로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가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의 의미와 향방은 매우 다층적이고 다중적이며 미

래사회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귀결을 맞게 될 것인데, 그 수용 및 운용 방식은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 개인 및 가족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강홍렬, 장혜경, 김혜영, 김영란 외, 2006). 분명한 것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가족 모습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와 가족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이러한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미래 사회의 변화의 향방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고,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

한국 가족은 형태상으로 부계 직계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해왔으며, 최근 가족의 형성과 해체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흔히 전통사회²⁾는 확대가족(대가족)이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어느 계층이든 약 60% 이상이 핵가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통사회에서도 핵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였다. 그러나 이때의 핵가족은 형태상으로 핵가족의 모습일 뿐 현대적 의미의 부부중심의 핵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내면적으로는 직계가족의 원리가 팽배했다고 볼 수 있다(미래가족연구회, 2011).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 가족은 가족의 규모,

2) 보통 전통사회라 함은 유교 이데올로기와 농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시대를 일컬으나, 전통사회 가족의 특징을 논할 때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정착, 심화되는 조선 중기 이후인 17세기 이후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대사회로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딸 부부와 함께 사는 방계가족의 형태였으나, 17세기 이후 장남과 동거하는 부계 직계가족의 형태를 유지해 왔다(최재석, 1994).

세대구성, 가족 유형, 결합 형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구센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을 활용하여 기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1절 가족규모의 축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체 가구³⁾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10년 현재 2인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수는 1970년 557만 6천 가구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0년 796만 9천 가구, 2000년 1431만 2천 가구, 2010년에 1757만 4천 가구로 지난 3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가족규모면에서 볼 때,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완성되지 않은 가족」처럼 여겨졌던 1~2인 가구 수는 847만 가구로서 이는 전체 가구의 48.2%에 달하는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 9.4%였던 2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05년 20%를 돌파했고 2010년 24.3%로써, 1990년 이래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4인 가구를 앞질러 1위로 올라섰다. 2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서의 자

3)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리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010년에 20.3%, 2030년 23.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10년 추정치보다 무려 3.6%나 더 높고 2030년의 추정치 23.7% 보다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한국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보다 더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핵 주위를 도는 전자(電子)의 이름을 따 「전자 가족시대의 도래」 혹은 「가족의 파편화」라는 표현까지 만들어졌다.

반면에 4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7.0%에서 2010년 22.5%로 4.5%포인트나 급감하였다. 통계청에서는 2020년에나 비로서 2인 가구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보다 10년 빨리 가구 형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5인 이상 가구는 1970년에 59.1%로 대다수였지만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8.1%에 불과했고, 5인 이상 가구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가구원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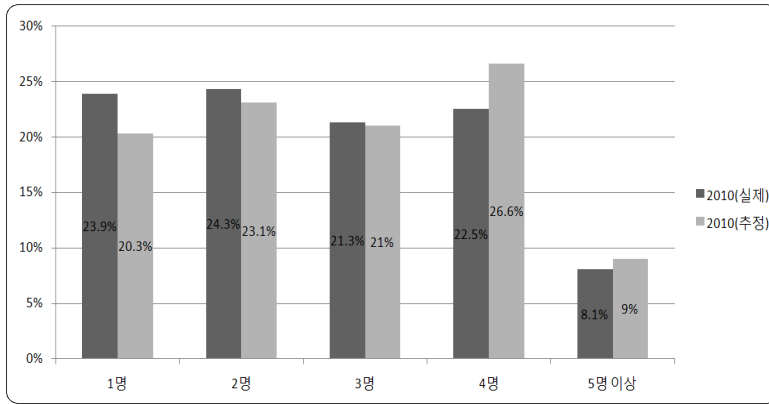
(단위: %)

가구원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가구수(천가구)	5,576	6,647	7,969	9,571	11,355	12,961	14,312	15,988	17,574
가구원수 분포									
1명	3.7	4.2	4.8	6.9	9.0	12.7	15.5	20.0	23.9
2명	9.4	8.3	10.5	12.3	13.8	17.3	19.1	22.2	24.3
3명	13.3	12.3	14.5	16.5	19.1	20.3	20.9	20.9	21.3
4명	14.5	16.1	20.3	25.3	29.5	31.7	31.1	27.0	22.5
5명 이상	59.1	59.1	49.9	39.0	28.6	17.9	13.4	9.9	8.1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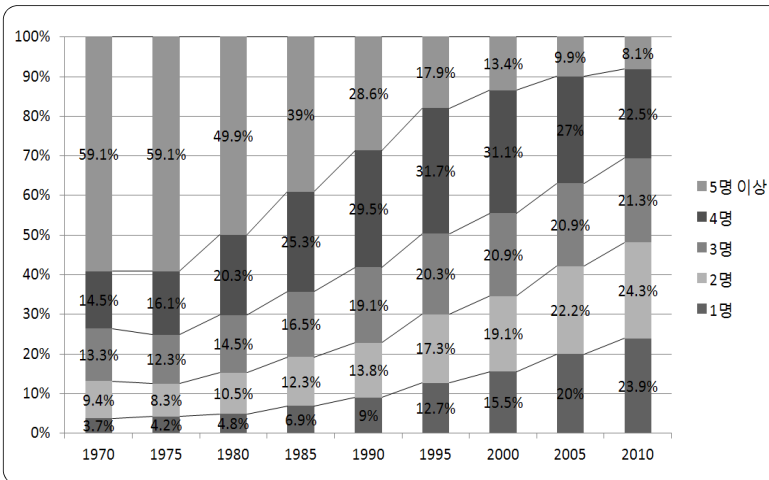
[그림 2-1] 가구원수 변화 추이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2] 2010년 가구원 수의 실조사치와 추정치 비교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장래가구추계」 2007

가구원수 분포의 변화는 평균 가구원 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1980년 4.5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으로 꾸준히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구 수의 증가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의 파편화와 핵가족화 현상,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의 증가, 만혼현상, 첫자녀출산연령 지연, 여성취업증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평균 가구원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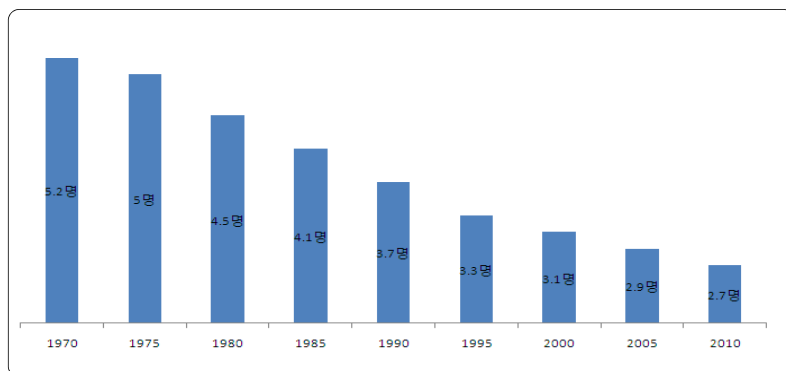
(단위: %)

가구원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평균 가구원수(명)	5.2	5.0	4.5	4.1	3.7	3.3	3.1	2.9	2.7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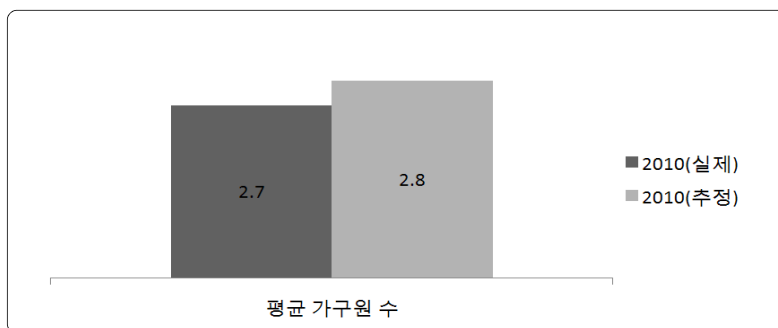
[그림 2-3] 평균 가구원수 변화 추이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4] 2010년 평균 가구원수의 실조사치와 추정치 비교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장래가구추계」, 2007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혈연가구의 감소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혈연가구의 경우 1980년 93.7%, 2010년 74.7%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비혈연 가구의 경우는 미비하지만 조금씩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3〉 가구의 형태별 분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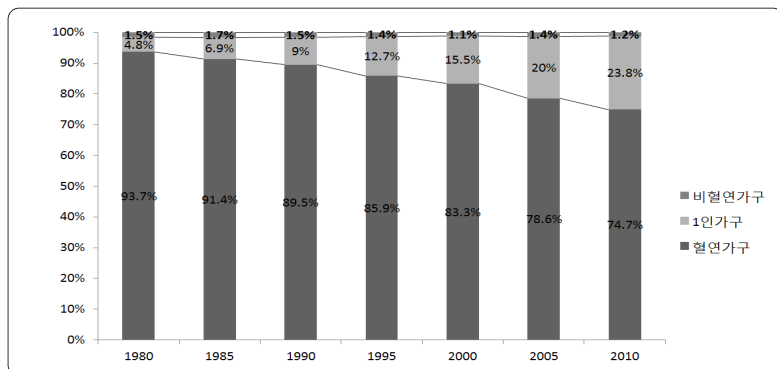
(단위: %)

가구형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혈연가구	93.7%	91.4%	89.5%	85.9%	83.3%	78.6%	74.7%
1인가구	4.8%	6.9%	9%	12.7%	15.5%	20%	23.8%
비혈연가구	1.5%	1.7%	1.5%	1.4%	1.1%	1.4%	1.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비율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장래가구추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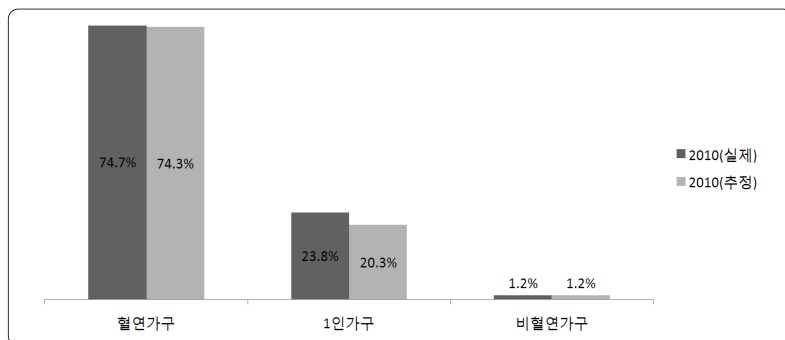
[그림 2-5] 가구의 형태별 분포 변화 추이



* 주: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함. 비율은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장래가구추계」, 2007

[그림 2-6] 2010년 가구 형태별 비율의 실조사치와 추정치 비교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장래가구추계」, 2007

제2절 가족세대의 단순화

혈연가구만을 대상으로 가족의 세대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

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전히 2세대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1세대 가족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1세대 가족의 비율은 1970년 6.8%에서 2000년 17.1%, 2010년 2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세대 가족의 증가 추세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2세대 가족의 비율은 1970년 70.0%에서 계속 증가하여 1990년 74.1%로 정점에 올랐다가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0년 68.4%를 기록하였다. 3세대 이상의 가족의 비율 또한 1970년 23.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8.3%에 머물렀다. 2세대 가족과 3세대 가족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2-4〉 가족의 세대구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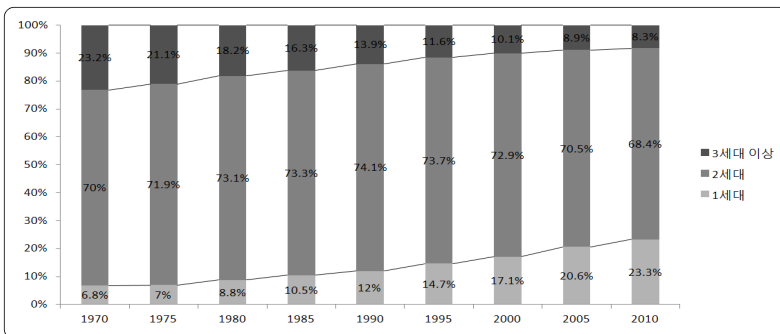
(단위: %)

가족의 세대별 비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1세대	6.8	7.0	8.8	10.5	12.0	14.7	17.1	20.6	23.3
2세대	70.0	71.9	73.1	73.3	74.1	73.7	72.9	70.5	68.4
3세대 이상	23.2	21.1	18.2	16.3	13.9	11.6	10.1	8.9	8.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혈연가구를 기준(1인가구와 비혈연가구 제외)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장래가구추계」,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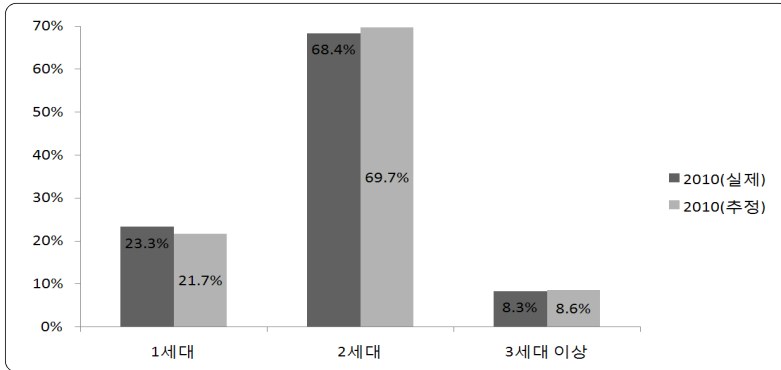
[그림 2-7] 가족의 세대구성 변화 추이



주: 혈연가구를 기준(1인가구와 비혈연가구 제외)으로 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그림 2-8] 2010년 가족의 세대구성 변화의 실조사치와 추정치 비교



* 주: 혈연가구를 기준(1인가구와 비혈연가구 제외)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10, 「장래가구추계」, 2007

가족의 형태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 가족은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부부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족은 1970년 5.4%에서 2010년 20.6%로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2세대 핵가족 형태인 부부 및 미혼자녀 가구는 1970년 55.5%, 1995년 58.6%로 비중이 증가하다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49.4%를 차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은 1970년 10.6%에서 1995년 8.6%로 감소하다가 이후로 다시 증가하여 2010년 12.3%를 나타냈다. 부부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할 때 지난 30년간 핵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세대 가족형태인 부부, 양(편)친 및 자녀 가족은 1970년 17.4%였으

나 2010년에 5.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기타가족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와 2007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 밝힌 2010년 추계치를 비교해보면 부부가족과 한부모가족은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부부 및 미혼자녀 가족 등 전통적인 가족 유형은 예상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혈연가구 가족형태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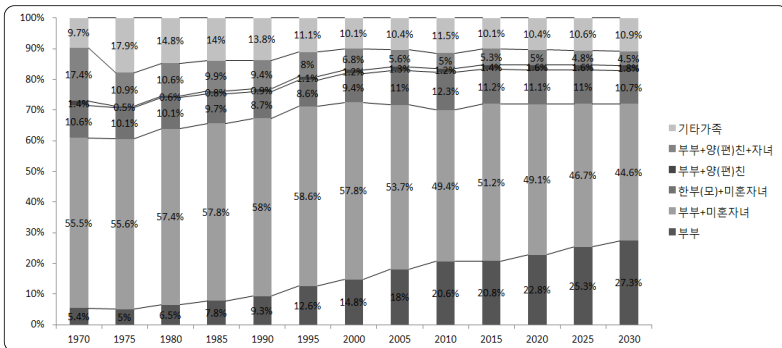
(단위: %)

가구유형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핵가족	부부	5.4	5.0	6.5	7.8	9.3	12.6	14.8	20.6
	부부+미혼자녀	55.5	55.6	57.4	57.8	58.0	58.6	57.8	49.4
	한부(모)+미혼자녀	10.6	10.1	10.1	9.7	8.7	8.6	9.4	12.3
직계가족	부부+양(편)친	1.4	0.5	0.6	0.8	0.9	1.1	1.3	1.2
	부부+양(편)친+자녀	17.4	10.9	10.6	9.9	9.4	8.0	6.8	5.0
기타가족		9.7	17.9	14.8	14.0	13.8	11.1	10.4	1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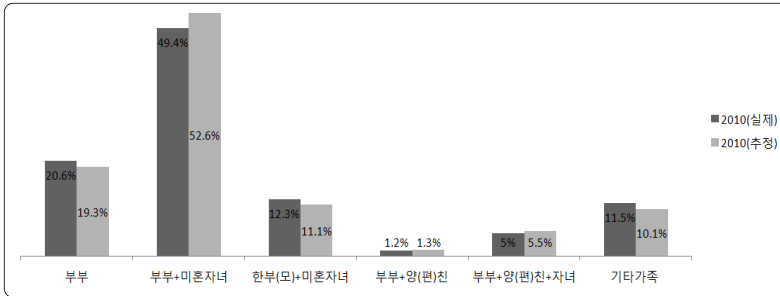
* 주: 혈연가구를 기준(1인가구와 비혈연가구 제외)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9] 혈연가구의 가족형태의 변화 추이



[그림 2-10] 2010년 혈연가구의 가족형태 변화의 실조사치와 추정치 비교



제3절 가족유형의 다양화

1.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초저출산 현상과 함께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의 또 다른 두드러진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노인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8.9%에서 2010년 25.7%로 증가하였다. 이는 그러나 2007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 예측한 29.4%에 3.7% 못 미치는 것으로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는 늦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2-6〉 1인 가구 중 노인 1인가구의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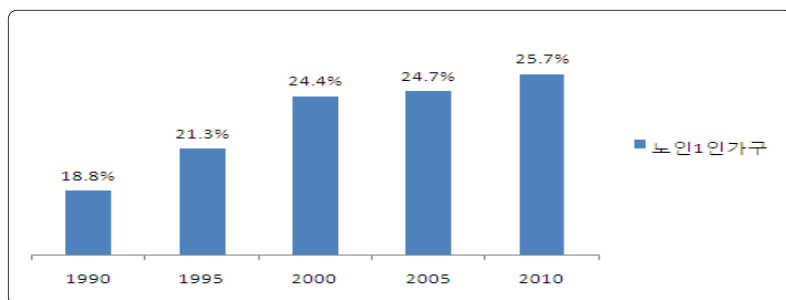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10
1인 가구	1,021,481	1,642,406	2,224,423	3,170,675	4,142,165
65세이상 1인가구	192,584	349,020	542,690	782,708	1,066,365
비율(%)	18.9	21.3	24.4	24.7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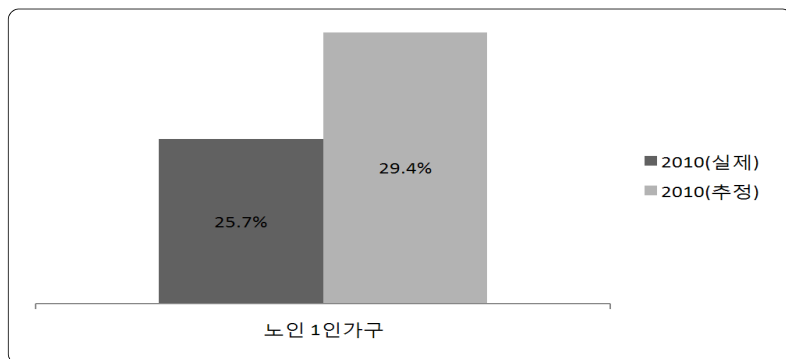
* 주: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장래가구추계」, 2007

[그림 2-11] 1인가구 중 노인 1인가구의 비율 변화 추이



[그림 2-12] 노인 1인가구의 2010년 실제와 추정치 비교



노인 1인가구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여성노인 1인가구가 남성노인 1인가구보다 더 많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고 보통 여성의 결혼연령이 남성보다 낮아서, 여성이 노년이 되어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사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1인가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1990년 85.8%에서 2010년 79.7%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평균수명에서 성차가 줄어들고 있고, 결혼연령의 성차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표 2-7〉 노인 1인 가구의 성별구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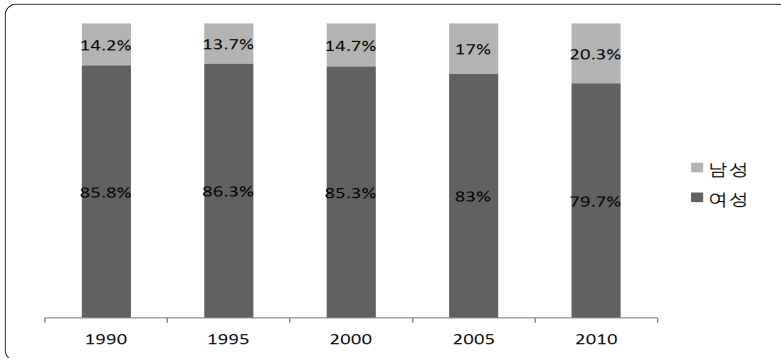
(단위: 가구, %)

	1990		1995		2000		2005		2010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1인가구	여성 1인가구
65세 이상	192,549	165,258	349,020	301,183	542,690	463,052	782,708	649,553	1,066,365	850,184
(%)		(85.8)		(86.3)		(85.3)		(83.0)		(79.7)

* 주: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13] 노인 1인 가구의 성별구성 변화 추이



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노인가구도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 중 1인가구와 1세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각각 20.0%, 24.8%에서 2010년 각각 34.3%, 34.5%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2세대 가구는 1990년 31.4%에서 2010년 23.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는 1990년 22.7%에서 크게 감소하여 2010년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료와 2007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 밝힌 2010년 추계치를 비

교해보면 노인 2세대 가구는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반면에 노인 3세대 가구는 예상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논의된 한국 가족의 규모 축소 현상은 일반 가구에서 뿐 아니라 노인 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1인가구, 노인 부부가구가 노인 가구의 주를 이룰 것이라 예상된다. 즉 노년기에 부부끼리 생활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독거의 형태로 전환되는 유형이 노년기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8〉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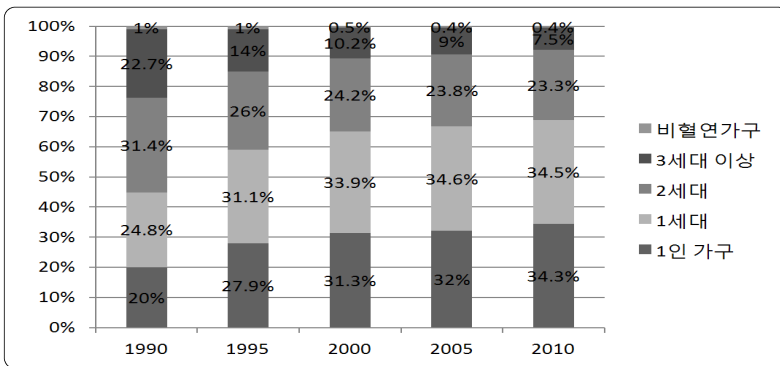
(단위: %)

세대구성	1990	1995	2000	2005	2010
1인 가구	20.0	27.9	31.3	32.0	34.3
1세대	24.8	31.1	33.9	34.6	34.5
2세대	31.4	26.0	24.2	23.8	23.3
3세대 이상	22.7	14.0	10.2	9.0	7.5
비혈연가구	1.0	1.0	0.5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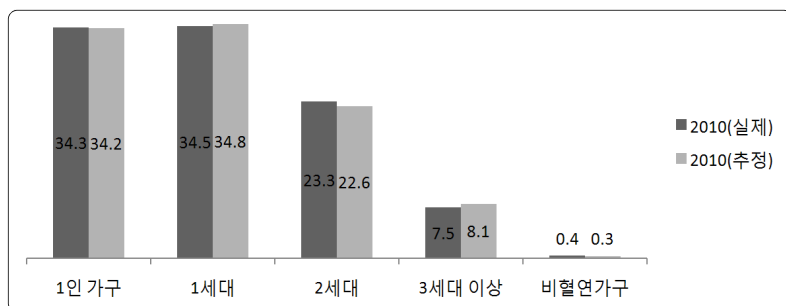
* 주: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14]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세대구성 변화 추이



[그림 2-15] 노인가구 구성의 2010년 실조사치와 추정치 비교



노인 1인가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연령의 1인가구 중에서 활동제약자⁴⁾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인데 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 1인가구 중에서 활동제약자 가구는 43.7%이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노인 1인가구의 활동제약자가 34.1%인데 비해 여성노인 1인가구의 활동제약자는 45.6%로 그 성차가 크다. 이는 여성이 평균수명은 남성보다 더 긴데 반해 건강수명은 남성보다 더 짧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또한 여성노인 1인가구의 복지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9〉 1인 가구 중 고령자가구와 활동제약자가구

(단위: 가구, %)

	1인 가구(A)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B)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비율 (B x 100/A)
전체	3,168,623	497,445	15.7
65세이상 고령자	812,495	355,221	43.7
남성 고령자	132,114	45,081	34.1
여성 고령자	680,381	310,140	45.6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5년

- 4) 여기서 활동제약자란 육체적·정신적 또는 일상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한 가구를 일컫는다.

2. 한부모 가족 및 여성 가구주 가족의 증가

부모의 이혼·사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한부모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와 미혼자녀가 세대를 이루어 사는 한부모가족은 1970년 10.6%에서 1990년 7.8%로 감소했다가 IMF 이후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0년 9.2%가 되었다.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편부가구보다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편모가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반 가구 중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 14.7%에서 2010년 25.9%로 늘어났다. 여성가구주는 사별 혹은 이혼 등으로 인해 남성 배우자가 없는 가구, 배우자가 부양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유배우자 가구, 그리고 미혼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여성가구주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혼과 미혼가구주의 증가가 그 주요 원인이다. 앞으로도 이혼가구주와 미혼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여성가구주 가구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한부모가족의 비율과 여성가구주 가족의 비율은 모두 2007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 예상했던 2010년 추정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0〉 한부모 가족 및 여성가구주가족의 비율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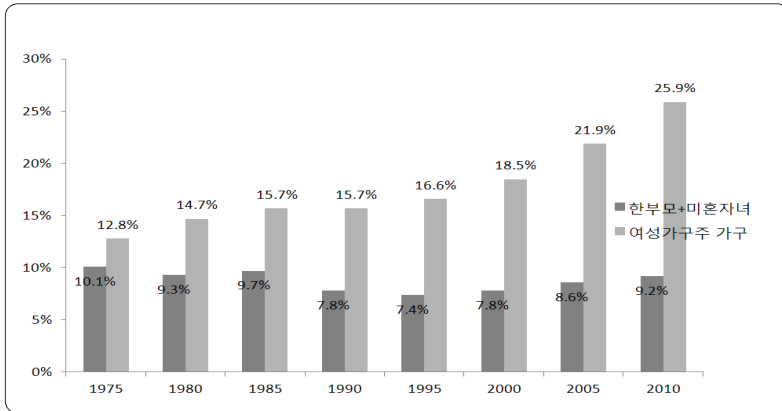
가족유형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한(부모)+미혼자녀 가구 비율 ¹⁾	10.6	10.1	9.3	9.7	7.8	7.4	7.8	8.6	9.2
편부+자녀						1.3	1.5	1.8	2.0
편모+자녀						6.1	6.3	6.8	7.2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²⁾	-	12.8	14.7	15.7	15.7	16.6	18.5	21.9	25.9

* 주: 1)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함. 2015~2030년은 추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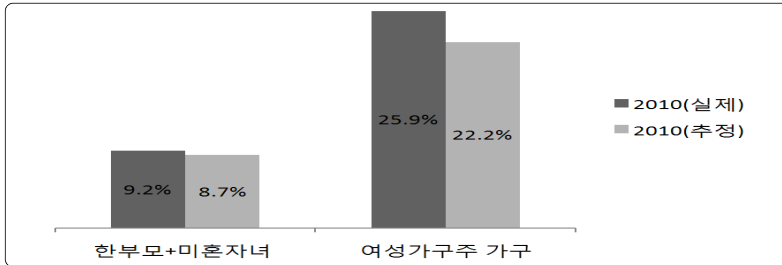
2) 일반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주 중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 2015~2030년은 추계 자료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장래가구추계」. 2007

[그림 2-16] 한부모가족 및 여성가구주가족의 비율 변화 추이



[그림 2-17] 한부모가족과 여성가구주가족의 2010년 실제와 추정치 비교



3. 맞벌이 가족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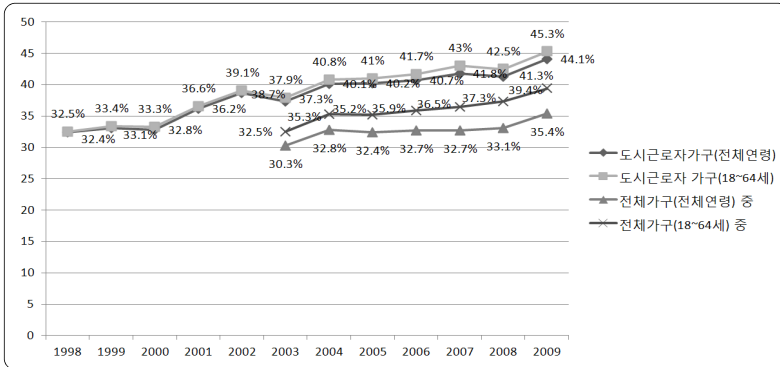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맞벌이가족은 이제 보편적인 가족의 한 형태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49.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가족의 비율을 추계한 김은지 외(2010)의 연구 결과, 개인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맞벌이 가족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가구 대비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도시가구근로자의 경우 1998년 32.4%에서 2009년 44.1%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맞벌이가족의 증가는 여성의 자아 실현 욕구 증가와 같은 가족이나 자녀와는 무관한 완전히 여성의 개인적인 동기와 더불어, 가족적인 혹은 자녀와 관련된 동기에 의해서도 촉발되었을 수 있다(김은지 외, 2010).

〈표 2-11〉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족 비율 변화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시근로자가구 (전체연령) 중 맞벌이가족 비율	32.4	33.1	32.8	36.2	38.7	37.3	40.1	40.2	40.7	41.8	41.3	44.1
도시근로자 가구 (18~64세) 중 맞벌이가족 비율	32.5	33.4	33.3	36.6	39.1	37.9	40.8	41.0	41.7	43.0	42.5	45.3
전체가구(전체연령)중 맞벌이가족 비율						30.3	32.8	32.4	32.7	32.7	33.1	35.4
전체가구(18~64세) 중 맞벌이가족 비율						32.5	35.3	35.2	35.9	36.5	37.3	39.4

* 자료: 김은지 외(2010).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용

[그림 2-18]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족 비율 변화 추이



4. 조손 가족의 증가

사고나 질병, 실직, 이혼, 범죄, 사망, 별거, 등으로 기존의 가족 관계가 해체되면서 성인자녀가 더 이상 부모 역할을 할 수 없거나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가출이나 행방불명되어 아동이 혼자 남는 현상이 최근에 증가하면서 조손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1995년 35,194가구에서 2010년 119,294가구로 지난 15년 동안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이혼율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증가, 전통적인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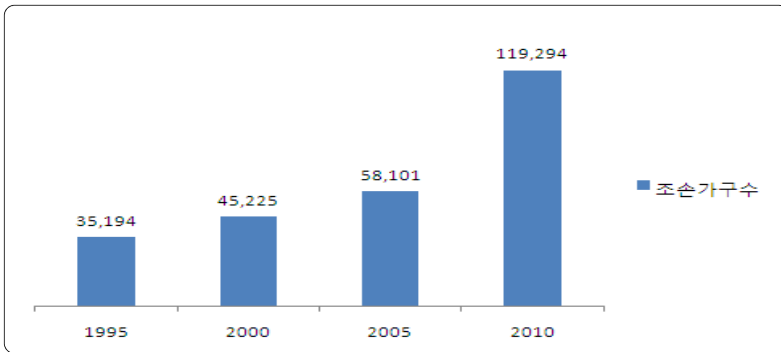
<표 2-12> 조손가구 비율 변화 추이

(단위: 가구)

구분	1995	2000	2005	2010
총가구	12,958,181(100%)	14,311,807(100%)	15,887,128(100%)	17,339,422(100%)
조부모+손자녀	35,194(0.3%)	45,225(0.3%)	58,101(0.4%)	119,294(0.7%)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19] 조손가구 비율 변화 추이



5. 처가거주 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의 현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배우자의 부모와 사는 총 사례 수는 1990년 46만 2천 가구에서 2010년 25만 2천 가구로 20년 간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 유형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아내가 남편의 부모와 사는 경우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반면에 남편이 아내의 부모와 사는 경우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즉, 처가살이 및 데릴사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육아와 주택 문제 등 경제적인 이유로 부부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에 합의하고, 남성들 역시 과거에 비해 처가살이에 대해 관대해졌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신(新) 모계사회라는 신조어의 등장처럼, 여성의 지위 상승과 관련된 사회 현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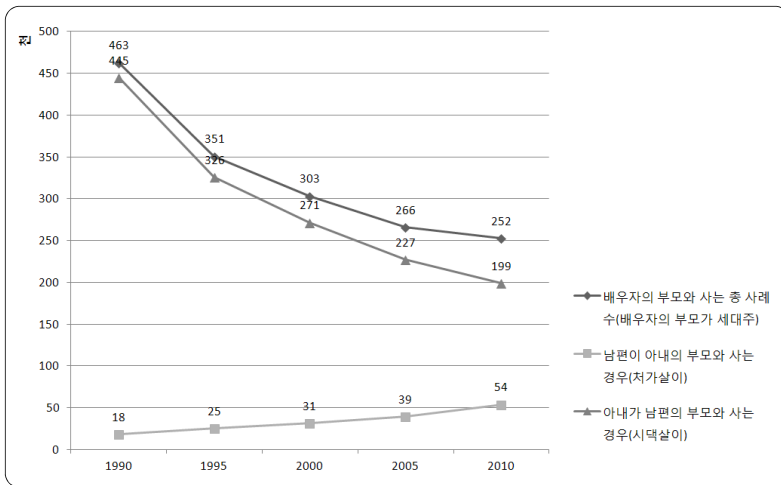
〈표 2-13〉 가구주와의 관계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계	배우자의 부모와 사는 중 사례 수 (배우자의 부모가 세대주)	남편이 아내의 부모와 사는 경우 (처가살이)	아내가 남편의 부모와 사는 경우 (시댁살이)
1990	100.0	462,722	18,088	444,634
1995	100.0	350,618	25,058	325,560
2000	100.0	302,901	31,430	271,471
2005	100.0	265,785	39,091	226,694
2010	100.0	252,331	53,675	198,656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연도별 자료.

[그림 2-20] 가구주와의 관계 변화 추이



6.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

2000년 이후로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가족의 변화를 들자면 결혼이민자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란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10년 141,654명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3년 28.0%, 2005년 31.4%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6년 이후로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증가폭이 작아지고 있다. 국제결혼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로 외국인남편과 결혼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2009년 국제결혼 중에서는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75.5%로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는 24.5%보다 약 3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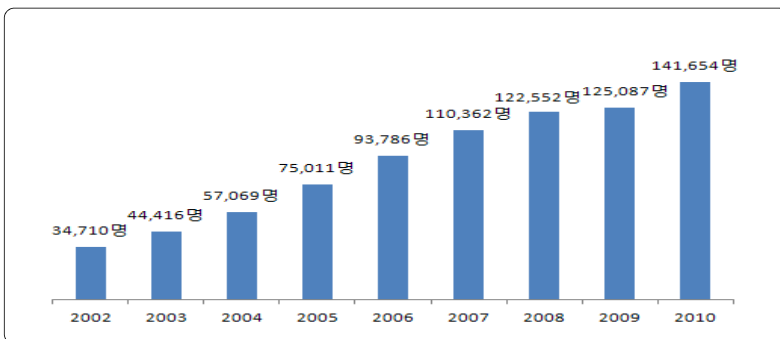
〈표 2-14〉 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 건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결혼이민자 (명)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국제결혼 총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한국남자+ 외국여자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자+ 외국남자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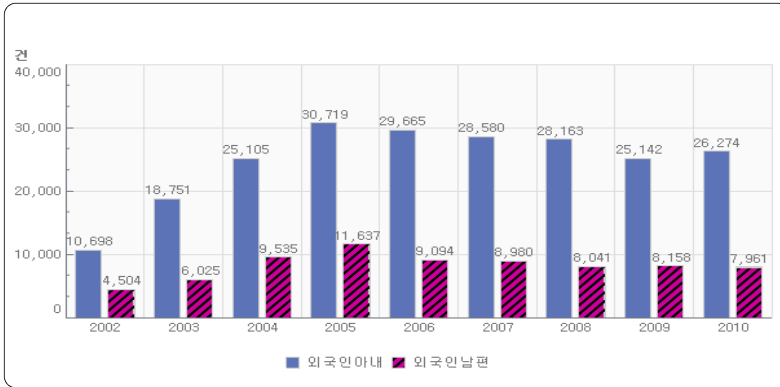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그림 2-21〕 결혼이민자 수 변화 추이



*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그림 2-22] 국제결혼 건수 변화 추이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7. 국외 분거가족의 증가

전반적으로 분거가족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국외 분거는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으로 인한 분거가 여전히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학업으로 인한 분거, 특히 자녀의 국외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분거, 이른바 '기러기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이상의 장기분거 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분거가족 추이를 보면 전체 분거가족은 2006년 21.2%, 2008년 16.5%, 2010년 15.1%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분거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국내 분거가족은 2006년 93.5%에서 2010년 90.6%로 줄어드는 반면 국외 분거가족은 2006년 8.3%, 2008년 11.4%, 2010년 11.8%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5〉 분거가족 가구주의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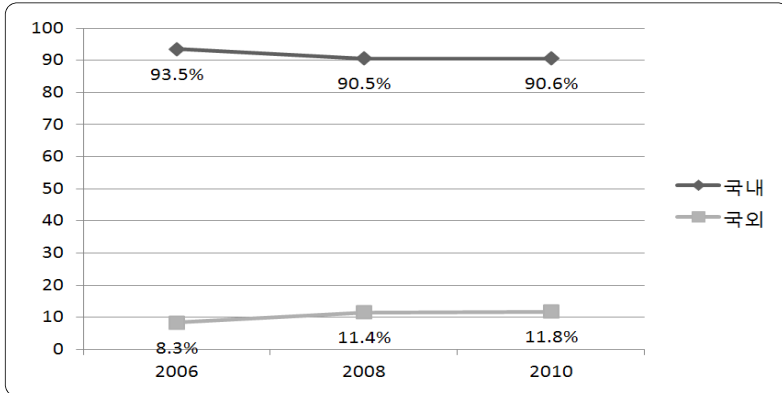
년도	분거가족 가구주	국내	국외	계
2006	21.2	93.5	8.3	101.8
2008	16.5	90.5	11.4	107.0
2010	15.1	90.6	11.8	105.7

* 주: 한 가구주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거이유」 합이 100%를 넘음.

분거가족 가구주 :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지역(해외 포함)에 살고 있는 가구주.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격년 자료.

[그림 2-23] 분거가족 가구주의 변화 추이



분거가족이 따로 사는 이유는 직장 및 학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족은 2006년 55.9%에서 2010년 56.3%로 소폭 증가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보이는 분거이유는 ‘학업’으로, 2006년에는 분거가족의 32.2%가, 2010년에는 38.5%가 학업으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분거가족의 분거이유 변화 추이

(단위: %)

년도	직장	학업	가족 간 불화	건강상 이유	자녀교 육지원 및 보육	군대	기타	계
2006	55.9	32.2	5.3	1.9	14.7	14.7	0.9	114.4
2008	55.9	36.3	5.3	1.6	10.4	10.4	0.8	113.4
2010	56.3	38.5	4.3	2.4	10.0	10.0	1.5	115.6

* 주: 한 가구주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거이유」 합이 100%를 넘음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격년 자료

한편, 「한국의 사회조사 2009」에 의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분거가족이 서로 떨어져 사는 이유는 주로 직장, 학업 때문이다. 국외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학업이 가장 많고, 배우자가 따로 사는 이유는 직장이 가장 많다. 특히, 국외 분거가족 중 71.2%에 이르는 가족이 학업 때문에 자녀를 유학 보내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7〉 2008년 분거가족의 분거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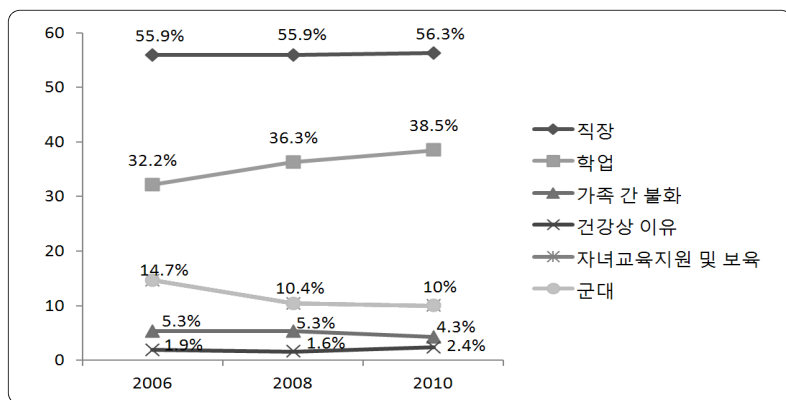
(단위: %)

	직장	학업	가족 간 불화	기타
전체	55.9	36.3	5.3	15.9
국내	58.6	32.9	5.8	16.5
국외	36.1	71.2	0.7	12.9
배우자	70.7	1.5	9.5	18.3
미혼자녀	48.4	42.2	4.1	13.9

* 주: 복수응답을 포함시킴

*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조사 2009」

[그림 2-24] 분거가족의 분거이유 변화 추이



분거가족의 분거기간을 각 년도 별로 살펴보면 ‘1~2년 미만’의 경우가 2006년 26.0%, 2008년 27.7%, 2010년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5년 이상’의 장기 분거인 경우가 2006년 20.8%, 2008년 21.1%, 2010년 24.7%로 나타났다. ‘6~12개월 미만’, ‘5년 이상’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증가추이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2008년에서 2010사이에 ‘5년 이상’ 분거하고 있는 가족의 비율이 3.6%의 증가하여 ‘1~2년 미만’의 분거 가족과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8〉 분거가족의 분거기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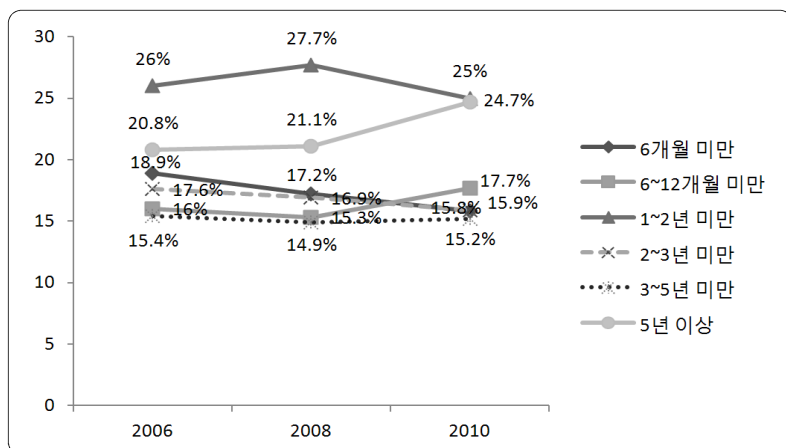
(단위: %)

년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계
2006	18.9	16.0	26.0	17.6	15.4	20.8	114.7
2008	17.2	15.3	27.7	16.9	14.9	21.1	113.1
2010	15.8	17.7	25.0	15.9	15.2	24.7	114.3

* 주: 한 가구주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거기간」 합이 100%를 넘음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격년 자료

[그림 2-25] 분거가족의 분거기간 변화 추이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가족구조는 확대가족과 핵가족이 공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김두섭 외, 2005).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핵가족이 사회적 규범으로 보편화된 이후 새로운 가족이 나타났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핵가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가족은 핵가족과 확대가족이라는 두 가지 가족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새로운 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더욱 복잡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장

한국 가족구조 변화의 요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족세대의 단순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분거가족 등 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요약된다. 특히 1세대 및 1인가구의 빠른 증가 추세는 한국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보다 더 세분화된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의 미시적이고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가치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 만혼현상, 첫 자녀 출산연령 지연,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집약되는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표 3-1>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05년 1.08명까지 감소하여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 등 2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합계출산율이 다소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2명 내외에서 변화하고 있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표 3-1〉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

(단위: 명)

	1970	1980	1990	2000	2010
합계 출산율	4.53	2.82	1.57	1.47	1.22

*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5,42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3-1]).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로 노인 1인가구, 노인 부부가구 등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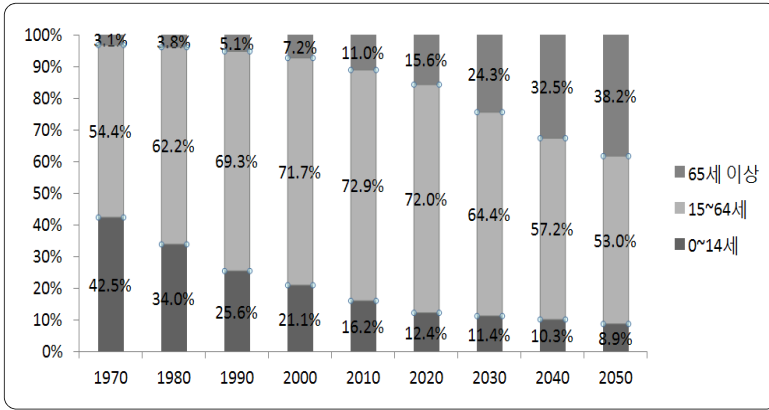
〈표 3-2〉 노인인구비율 변화 추이

(단위: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0~14세	42.5	34	25.6	21.1	16.2	12.4	11.4	10.3	8.9
15~64세	54.4	62.2	69.3	71.7	72.9	72	64.4	57.2	53
65세 이상	3.1	3.8	5.1	7.2	11.0	15.6	24.3	32.5	38.2

* 자료: 통계청

[그림 3-1] 노인인구비율 변화 추이



한편, 혼인율의 경우 인구 천명 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1980년 10.6건에서 2000년 7.0건으로, 그리고 2009년 6.2건까지 떨어진 이후 2010년에는 6.5건으로 다소 증가하였다(그림 3-2). 반면에 이혼율은 인구 천명 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이 1970년 0.4건에서 2000년 2.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3건을 기록하였다(그림 3-3). 평균 초혼연령은 1991년 남성 28.0, 여성 24.9에서 2010년 남성 31.8세, 여성 28.9세로 증가하였다(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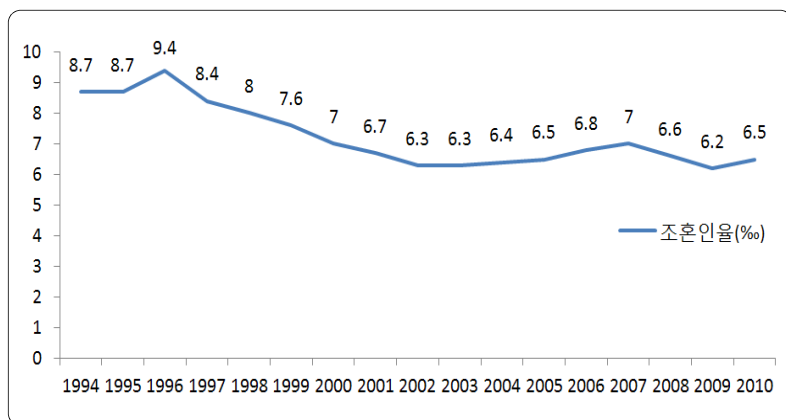
〈표 3-3〉 조혼인율 변화 추이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 혼인율	8.7	8.7	9.4	8.4	8.0	7.6	7.0	6.7	6.3	6.3	6.4	6.5	6.8	7.0	6.6	6.2	6.5

* 자료: 통계청

[그림 3-2] 조혼인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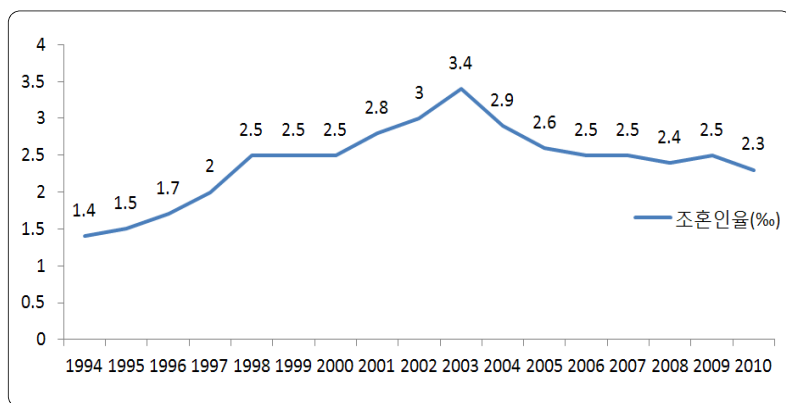
〈표 3-4〉 조이혼율 변화 추이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이혼율	1.4	1.5	1.7	2.0	2.5	2.5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 자료: 통계청

[그림 3-3] 조이혼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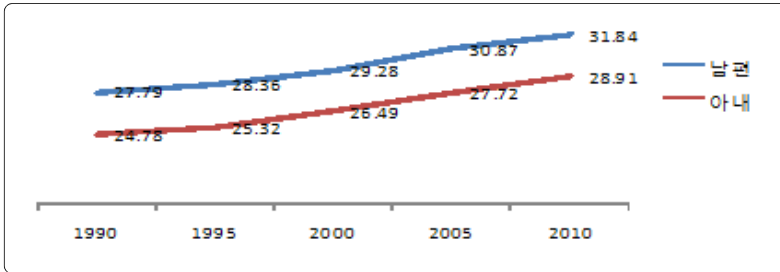
〈표 3-5〉 평균초혼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1990	1995	2000	2005	2010
남편	27.79	28.36	29.28	30.87	31.84
아내	24.78	25.32	26.49	27.72	28.91

[그림 3-4] 평균초혼연령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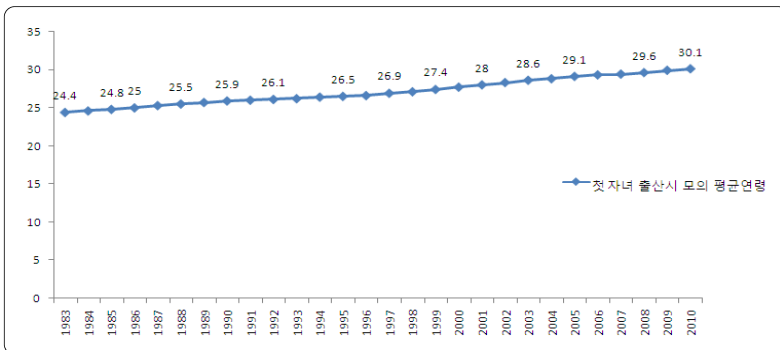
(단위: 세)



한편 첫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1996년 26.7세에서 2010년 30.1세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5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3-5] 첫 자녀 출산시 모의 평균연령 변화 추이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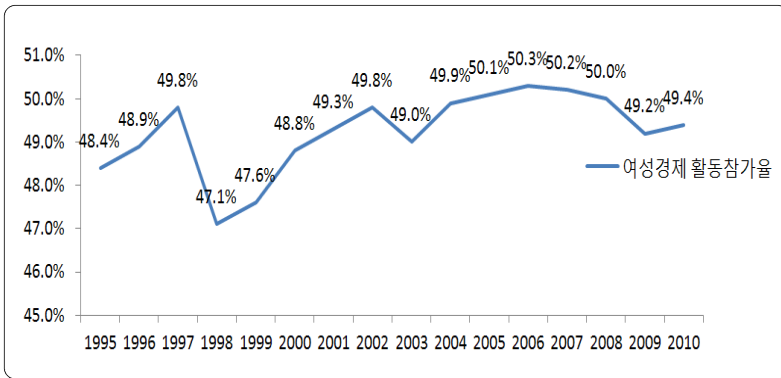
〈표 3-6〉 평균초혼연령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단위: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8.4	48.9	49.8	47.1	47.6	48.8	49.3	49.8	49.0	49.9	50.1	50.3	50.2	50.0	49.2	49.4

* 자료: 통계청

[그림 3-6] 평균초혼연령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이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가치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또한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데 기여하였다.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입장은 크게 비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가족 해체⁵⁾로 보는 가족쇠퇴론(혹은 가족해체론, 가족붕괴론, 가족위기론)과, 가족의 변화를 긍정적 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며 비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의 등장을 가족의 다양성 증가로 인식하는 가족진보론으로 대별된다(함

5) 가족의 해체란 가족 구성원이 이혼이나 출가 등의 이유로 흩어지면서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인희, 2000). 가족쇠퇴론자는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핵가족 제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가족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써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족진보론자는 경험적 실체로써 가족을 정의하여, 이전보다 축소된 가족의 재생산과 가족집단 형성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지지 기능을 가진 집단으로써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김두섭 외, 2005).

가족쇠퇴론자는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핵가족 제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가족은 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써 가족이 붕괴되면 사회도 위협을 받는다고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변화는 곧 가족해체를 의미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혜택을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의 확산 등과 같은 문화적·도덕적 의식의 약화로 인해 저출산, 이혼율 증가, 혼인을 감소 등의 인구학적 변화가 촉발되었고 그 결과 가족 붕괴와 이혼 증가 등 가족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아버지의 부재, 청소년들의 학업 실패, 빈곤, 범죄, 약물남용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다. 가족쇠퇴론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범위에 속한 가족들만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또는 상속에 관련된 법적 지위 등에 있어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가족진보론자들은 이전보다 축소된 가족의 재생산기능과 가족집단 형성 기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지지 기능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가족쇠퇴론자의 주장인 이상적인 핵가족 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즉, 가족제도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다양

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Gittins(1985)는 역사적으로 정형화된 “가족”(the family)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families)만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 “가족들”(families)은 가족의 가변성, 다양성,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가족”(the family)은 가족의 전형성, 보편성, 자연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는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가족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가부장제의 모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 증가에 주목한다. 즉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성과 연령에 의한 불평등과 역할 및 기능수행 의무의 가부장제적 가족에서 부부간 평등과 아동 및 개별구성원들의 개인적 권리가 존중되는 가족으로의 변화라고 규정하며, 이혼과 한부모 가족, 동거부부 및 혼외출산 비전형적 가족은 정상가족에서 이탈한 비정상가족이 아니라 자율성과 평등성을 기본가치로 하는 현대사회의 대안가족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거부하는 여성의 이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및 출산의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과부하 된 성별분업체계, 가정과 직장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정책 및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여성의 가족보호 역할에 대한 사회적 경시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혼이나 출산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경제구조의 다원화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족해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진보론자들은 국가 정책이 종래의 가부장제적 가족구조와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특

히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전통적 가족기능을 사회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가족은 계속해서 일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존의 가족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 한부모 가족, 독신 가구 등이 가지기 쉬운 취약점을 국가가 법이나 경제적·물질적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보완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쇠퇴론과 가족진보론의 입장 차이에 따른 논쟁이 이루어진 후 규범으로서의 가족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인정하고 있다(김두섭 외, 2005). 가족구조의 변화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미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이론가들 중 선호이론(preference hypothesis)⁶⁾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가치관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 프라이버시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소가족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가족규모가 작아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이론(family structure hypothesis)에 입각해서 가족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이론가들은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 결혼양상의 변화 등 인구학적 변화가 규모가 큰 가족을 형성하고 사는 것 보다는 작은 규모의 가족으로 독립하는 쪽으로 가족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

6) 선호이론: Catherine Hakim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적 기여와 관련해 여성의 선택을 예견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출산과 일이라는 양대 생활주기패턴에 따라 경험하는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며, 경제적 이론(economic hypothesis)에서는 대가족의 장점으로 인식되었던 「규모의 경제」가 갖는 효과가 감소한 것이 가족규모의 감소를 가져 왔다고 보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역사적 측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의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탈가족화,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러한 기술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환경의 변화, 의생명학의 발달과 이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가족과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있어서의 변화는 한국 가족의 변화를 촉발하였다(김혜영, 2008; Waite, 2009). 즉 그동안의 한국 가족구조 변화의 이면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효력 약화 및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른 자율적 선택권의 보편적 수용이라는 미시적 변화와 더불어 인구학적 변화, 기술변동, 노동환경의 변화, 세계화 등과 같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 환경적 체계에서의 변화는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 가족도 또한 변모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⁷⁾.

7) 사회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5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4장

외국의 가족구조 변화의 요인

유럽 국가와 더불어 미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출산율과 혼인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동거가족 및 1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통적인 가족구조의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각 국가가 가지는 개별성 또한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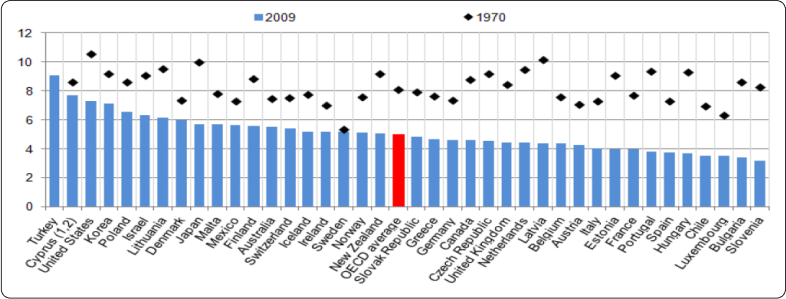
제1절 유럽의 가족구조 변화

지난 수 십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가족 구조는 결혼 및 출산율의 하락, 이혼율의 증가,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라는 전세계적인 추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OECD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폴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조혼인율

은 1970년과 비교해 모두 낮아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1970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는 조혼인율에서 상대적으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스페인은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면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이혼율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스페인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 OECD 국가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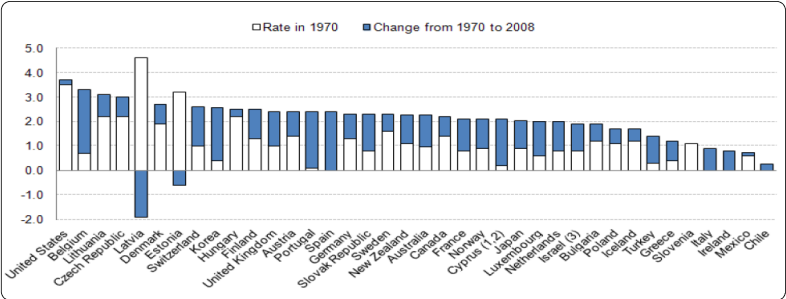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그림 4-2] OECD 국가 조이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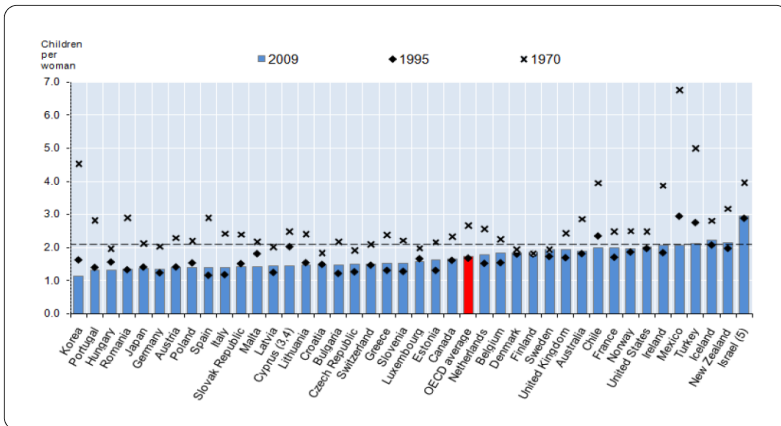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유럽의 출산율은 1930년대의 경제공황 시대에 이미 정체 또는 저하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인구 감소의 위기감을 맞았다. 그러나 194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은 반등하였고 전후에는 베이비붐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부터 또 다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전후의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은 하락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 대체수준인 2.1을 밑도는 국가가 속출하였다. 그 후 1980-90년대에는 출산율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다양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전광희, 2005). 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을 보면 프랑스가 1.99, 스웨덴이 1.9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스페인과 폴란드가 1.40, 독일이 1.36으로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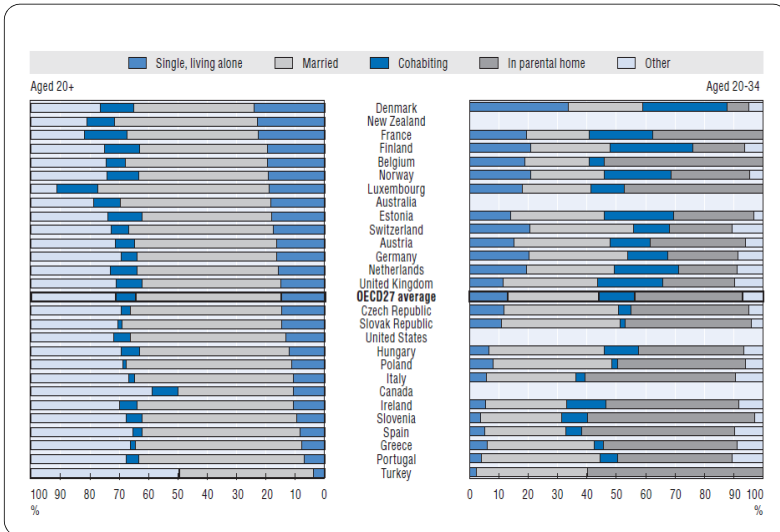
[그림 4-3] OECD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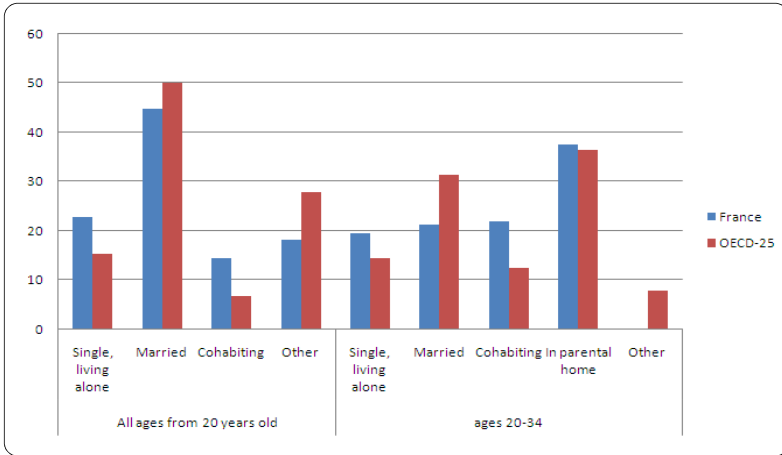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프랑스의 경우에 혼인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반면 출산율의 경우에는 1995년과 비교했을 때 2009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동거 및 미혼모의 출산 등의 혼외출산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여성이 가족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4]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커플 주거 형태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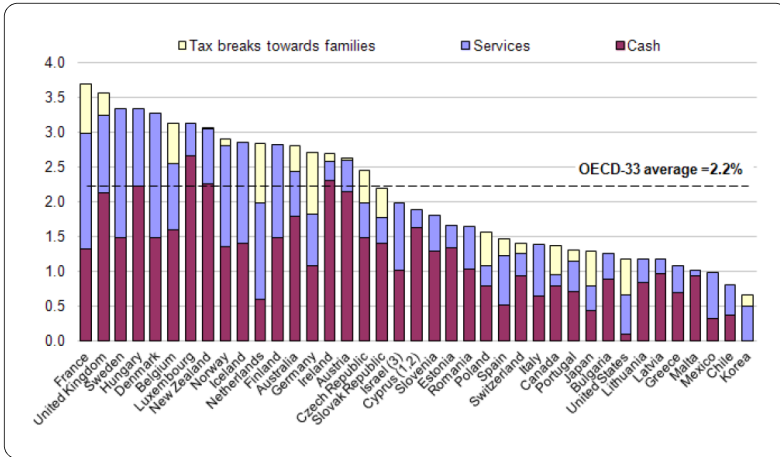
[그림 4-5] 최근 1년간의 파트너십 주거 형태



* 주: 2000년 기준: 에스토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스위스, 미국 ; 2001년 기준: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 2002년 기준: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 2006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 2007년 기준: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몰타, 터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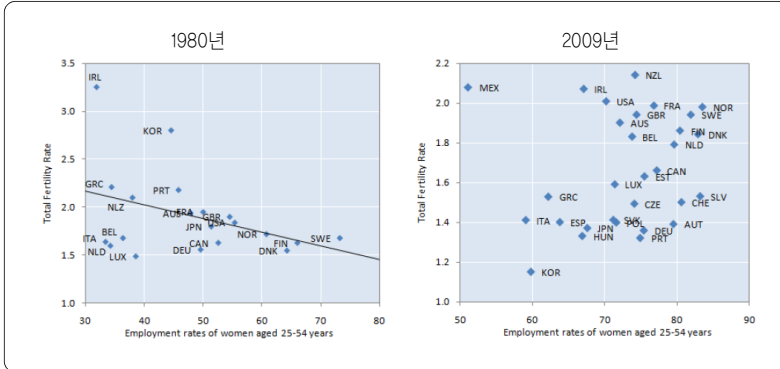
한편 [그림 4-6]에서와 같이 프랑스는 GDP 대비 가족지원에 지출되는 공공비용이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것은 특히 여성이 직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 스웨덴 등 사회보장혜택에 큰 국가군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 오히려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4-6] 2007년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 비용 현황



* 자료:OECD, Family Database

[그림 4-7] OECD 국가 여성 취업률과 합계출산율 상관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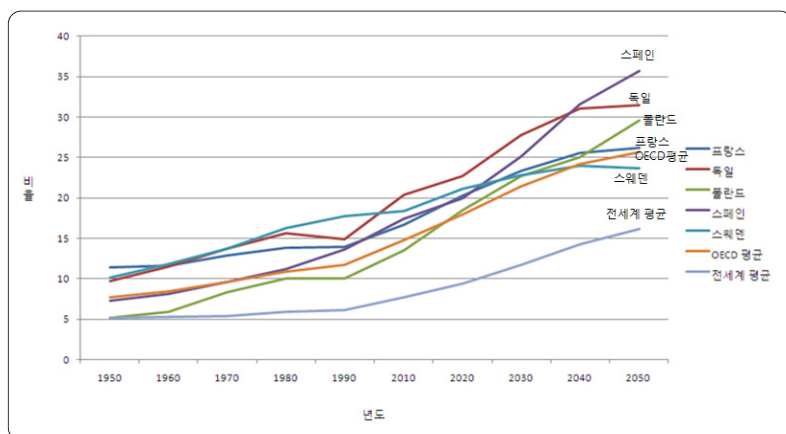


* 자료:OECD, Family Database

한편, 유럽 국가들의 고령화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그림 4-8])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 이르면 스페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35.7%가 노인층일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의 경우에도 31.5%에 달해 OECD 평균인 25.7%보다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낮은 출산율이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를 이끄는 요인이라 보여진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8]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변화 추이



* 자료:OECD, Family Database

1. 프랑스

프랑스의 조혼인율은 1970년 7.75에서 2010년 3.84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OECD 국가 평균을 계속해서 밑돌았다. 조이혼율의 경우에는 2008년 기준 2.8로 1970년의 0.8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 증가추이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60년 이후 1994년경까지

OECD 국가 평균을 밑돌던 출산율은 199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99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조혼인율은 감소하는데 반해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 사회에서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25-54세 프랑스 여성의 취업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중 80%가 풀타임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60%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모든 가족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과 각종 혜택이 프랑스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에서는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출산 후 일을 잠시 쉬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균일한 보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육아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동의 공공 보육시설 서비스 이용률은 OECD 국가 평균이 31%인 반면, 프랑스는 42%에 이르고 있다(2008년 기준). 또 연간 최대 1200억 유로(약 180조원)의 예산을 가족정책에 배당하고 있다(경향신문, 2011).

동거 보호를 위한 PACS 제도 또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PACS 제도 도입된 후 프랑스의 결혼 커플은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데 2010 경우 전체 결혼 건수는 249,000건, PACS 결합은 195,000건에 달했다. PACS 결합이 정식 결혼의 75%까지 이른 것이다. 특히 PACS 제도 하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해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긴 아이와 차별 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장려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BS뉴스, 2011. 02. 01).

프랑스 역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미 195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6.9%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6.2%가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관련하여, 2000년 36.2(OECD 국가 평균 27.2)인 노인부양비는 2050년에 65(OECD 국가 평균 62.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독일

독일의 조혼인율은 1970년 이래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을 약간 밑돌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7.4에 이르던 조혼인율은 2010년 4.66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조이혼율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한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이혼율은 1970년 1.3에서 1976년 2까지 증가하다 1978년 1까지 떨어지고 1981년 이후 다시 2대로 올라섰다. 1980년대 들어 2.1에서 2.3사이에서 머무르던 조이혼율은 1990년대 초반 1.7에서 1.9 수준으로 다소 떨어지다가 싶더니 1995년 이후 다시 2대로 높아졌다. 2003년과 2004년에 2.6으로 최고를 기록한 독일의 조이혼율은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2.3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과도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다.

독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치에 계속해서 머물

러 있다. 1960년도에 2.37을 기록한 이래 1985년경 1.37까지 감소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1.4대로 올라섰으나 1990년 초반에 1.2대로 다시 떨어졌다. 1990년대 후반이후 다시 1.3대로 조금 올라서 2009년 1.36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년 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83년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1.5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점이다.

독일 여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첫 아이의 출산 연령이 30살로 늦은 편이며 25세부터 49세 사이의 독일 여성 40% 이상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34%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한 낮은 출산율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가 있더라도 그 수가 적은 편이다. OECD 국가에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평균 44%가 한 명의 자녀를 가진 반면 독일은 52% 이상이 한 명의 자녀만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독일의 저출산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교육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 소득차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6%를 훨씬 넘는 25%이고, 여성이 자녀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성의 2배 이상이라는 OECD의 보고는 독일 여성이 가정과 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전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50년 이래로 독일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보인다. 1950년을 기준으로 인구의 9.7%를 차지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에 약 2배인 20.4%로 상승하였다. 고령 인구 증가 추이로 보아 2030년의 독일 노인인구 비율은 약 27.8%, 2050년에는 약 31.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인

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의 동반 상승도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 활동 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2000년 34.5에서 2050년 73.9까지 고공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각각 약 1.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3. 스웨덴

스웨덴의 조혼인율은 1970년대에 4.5에서 5.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7.0에서 8.1을 크게 밑돌았다. OECD 평균 조혼인율은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2000년 이후 상승세를 보여 2007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06년의 OECD 평균 조혼인율은 5.1, 스웨덴은 5.02를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5.41로 나타났다.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1970년에서 2003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조이혼율을 웃돌았다. 1970년에 1.6을 기록한 이후 1974년 3.3으로 가파르게 올라섰으나 2010년 2.5를 기록할 때까지 최저 2.1(1988년)에서 최고 2.6(1995년) 사이의 등락을 반복하였다. 반면, OECD 평균 수치는 1970년 1.1에서 지속적인 상승추이로 이어져 2005년 2.3을 나타내고 있다.

출산율은 1960년 2.2에서 1960년대 중후반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1984년 1.65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1990년 2.14까지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0년에는 1.50을 기록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2년부터는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94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있어서 스웨덴은 1950년 이후 꾸준히 OECD 국가 평균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었으나, 2011년에는 그 비율이 18.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계속 이어져 2030년에는 22.8%, 2050년에는 23.7%까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ECD 평균을 계속 상회하는 노인인구 비율은 2040년을 기점으로 하여 스웨덴 24.0, OECD 평균 24.2로 스웨덴이 OECD 평균 비율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부양비에 있어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34.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50년에는 48.7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27.2, 2050년 62.3인 OECD 평균 노인부양비와 비교했을 때에는 2000년에는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노인부양비가 높았으나 2050년이 되면 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스페인

스페인의 조혼인율은 2006년 기준 4.61로 OECD 국가 평균 5.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계속 낮아져 2010년에는 조혼인율이 3.58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조혼인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1970년 7.35건에서 1975년 7.64건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982년에는 조혼인율이 5.1까지 줄었고 다시 상승해 1989년 5.71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5년 기준의 스페인 조이혼율은 1.7로 OECD

평균인 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981년 기준의 조이혼율은 0.3건이었으며 2000년 0.9에 이르기까지 매년 비율이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2년 조이혼율은 1로 올라섰으며 이후 지속 상승하였다. 2005년 1.7에서 2006년 2.9로 상승한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1을 기록하였다.

스페인의 출산율은 1960년 2.86으로 1967년까지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1996년에는 1.16까지 하락하였다. 출산율은 1999년에 다시 1.19로 올라선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는 1981년 이후 계속해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71, 스페인은 1.46을 기록하였다. 스페인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나이는 약 30세로,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먼저 노동 시장에서 자리 잡기를 원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스페인 여성의 취업률에서도 증명되는데, 1995년에 32.5%이던 여성 취업률은 2009년에 들어 53.5%로 15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스페인은 가정생활과 일의 양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OECD 보고에 따르면 자녀를 둔 여성의 75%가 자녀를 출산 한 후 평균 8년이 지나서야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남성이 하루 평균 2시간 이하의 가사 노동을 하는 반면에 여성은 평균 5시간을 가사 노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에서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스페인에서 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조부모의 약 25%가 손자녀를 돌보는 등 직업을 가진 부모들은 육아를 위해 비공식적인 지원을 많이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또한 1950년 이후 내내 높아지고 있다. 1950년 기준 스페인의 노인인구 비율은 7.3%였으며 이후의 증가 추세는 OECD 국가 평균 수치와 비슷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노인인구 비율은 8%대로 올라섰으며 1966년에는 9%로 높아졌다. 이 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1년에는 17.6%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2030년에는 약 25.1%, 2050년에는 약 3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9년을 시작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한 스페인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1년 현재 OECD 평균인 15%에 비해 약 2.6% 높은 17.6%를 기록 중이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2050년에는 OECD 평균보다 약 10% 높은 35.7%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스페인의 노인부양비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부양비는 2000년 36.7이었으나 2050년에는 91.3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 예상되는 OECD 평균 노인부양비가 62.3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다고 하겠다.

5. 폴란드

1990년경까지 OECD 국가 평균 조혼인율을 상회하던 폴란드의 조혼인율은 그 이후 OECD 평균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조혼인율 5.1을 다시 넘어 폴란드의 조혼인율은 5.42에 이르렀으며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 2010년 기준 5.98을 기록하고 있다. 조이혼율의 경우에는 1970년 OECD 국

가 평균과 같은 1.1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에 1~1.4를 유지하던 폴란드의 조이혼율은 1991년 0.9로 하락해 1993년에 최저인 0.7을 기록하였다. 1995년 이후에 다시 1로 올라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2006년에 최고수치인 1.9을 보이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0년 폴란드의 조이혼율은 1.6 수준이다.

한편, 폴란드의 출산율은 1978년에서 1992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며 다소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1960년 이후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1960년 기준 2.98이던 출산율은 2003년에 최저치인 1.22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소폭 상승하면서 2009년에는 1.40을 기록하였다.

1950년 이후 폴란드의 65세 이상 인구는 OECD 국가 평균을 밑돌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1950년에 5.2%였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13.7%을 기록하였다. 2018년 폴란드의 노인인구 비율은 OECD 평균인 17.3%과 같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부터는 OECD 평균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2050년 예상 노인인구 비율은 29.6%이다. 2000년에 28.1이던 노인부양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2050년 8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평균 노인 부양비가 2000년에는 27.2, 2050년에는 62.3인 것을 감안하면 폴란드의 노인부양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및 그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1차 인구혁명을 경험하였고, 1960년부터 현재까지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특징인 2차 인구학적 혁

명에 직면해 있다(Giddens, 2010). 그 결과 확대가족은 거의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 재혼의 증가, 한부모가족의 증가로 전통적인 핵가족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민 및 국가 간 인구 이동, 세계화로 인해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규모의 축소,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 만혼현상, 첫 자녀 출산연령 지연, 자녀수 감소, 동거 및 이혼의 증가, 독신가구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 혼외 출산 및 여성 취업의 증가,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 등은 유럽 가족의 특징적 변화의 내용이다(정현숙, 2011). 동거의 경우 예전에는 동거로 시작해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동거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자녀들이 아버지랑 같은 사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유럽의 출산율은 1930년대의 경제공황 시대에 이미 정체 또는 저하의 경향이 나타났으나 194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은 반등하였고 전후에는 베이비붐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전후의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은 다시 하락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인구 대체수준인 2.1을 밑도는 국가가 속출하였다. 그 후 1980-90년대에는 출산율이 유럽 내에서도 지역별로 달라지는 다양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전광희, 2005).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급속한 고령화이다.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있는 노인의 경우 양로원 등의 기관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반적인 추세 속에서도 개별 국가들의 다양성이 두드러지는데 저혼인과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문제시 되는 국가는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과거에 비해 혼인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출산율 또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가족생활과 일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족복지혜택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스페인 조부모의 약 25%가 손자녀를 돌보는 등의 가족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혼인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거 및 미혼모 출산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족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과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여성이 가족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999년에 시행된 동거보호제도인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를 통해 동거 커플의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결혼한 커플에게 주어지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SBS뉴스, 2011. 02. 01).

제2절 미국의 가족구조 변화

한부모 출산, 동거집단의 해체, 재결합, 이혼, 그리고 재혼의 증가는 미국 가족의 특징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혼외 출산, 동거자들 사

이의 출산, 다(多) 파트너 출산(multiple partner fertility)⁸⁾ 및 범국가적 이민 가족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현상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Cherlin, 2010). 이처럼 미국의 가족은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이성부부 가구가 51.7%, 독신가구가 27.3%, 한부모가구가 9.2%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국가의 평균인 57.6%, 27.7%, 9.1%와 비교해볼 때, 이성부부가구 비율은 낮고, 독신가구와 한부모 가구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OECD, 2010a). 한편 한부모가구 중 모자가가가 77.5%로 OECD 국가의 평균인 84.5%보다 낮고, 부자가가가 22.5%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5.5%보다 높다.

2006년 미국의 조혼인율은 7.3건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a). 그러나 1970년부터의 조혼인율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과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평균 혼인 연령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2008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7.4세, 그리고 여성 25.6세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미국의 조이혼율은 3.6건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3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0a). 그러나 1970년부터의 조이혼율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상승하여 1981년 5.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혼율은 1980년대에 최고점에 이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 한 여성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서로 다른 자녀를 출산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인들은 교육수준에 따라 가족형성과 해체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정을 밟는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결혼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Goldstein & Kenney, 2001).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교육을 마치거나 직업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늦게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20대 후반에서 30대에 이르러서는 고학력 인구의 혼인율이 저학력 인구에 비해 더 높고, 40대에 이르게 되면 그 차이가 더 커진다. 또한 2000년에 들어 고학력 인구에서는 이혼율이 감소되는 반면 저학력 인구에서는 이혼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McLanahan, 2004).

미국의 출산율은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출산율은 2.09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보다 높아 인구대체율을 충족시킨다(OECD, 2010a).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이후 OECD 국가의 평균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미국의 출산율은 1987년을 기점으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출산율은 1976년 1.7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1989년 2.01을 기록한 이후 줄곧 2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출산율은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여, 주로 히스패닉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해 전체 출산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멕시코 출신의 히스패닉 여성들의 출산율은 2.89인 반면, 백인여성의 출산율은 1.86으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미국은 혼외 출산이 매년 늘어가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07년 혼외 출산은 전체 출산의 39.7%를 차지한다(한국일보, 2009. 05. 15). 이는 1980년의

18%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1950년 4%와 비교해보면 놀라울 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혼외출산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혼외 출산율의 증가는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커플이 늘고 있는 것과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여권 신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인해 독립적인 독신 여성들이 아버지 없이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다.

1970년에는 혼외 출산의 50%가 청소년의 출산으로 인한 것인 반면, 1999년도에 이르러서는 29%로 줄어들었다. 즉, 현재 혼외 출산 증가는 청소년 출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30대 미혼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는 출산한 20대 여성 중 45%가 미혼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20~24세 출산 여성 중에서는 60%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 전체 출산의 39.7%가 미혼 여성에 의한 것이지만, 모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즉, 한부모로 추정되는 많은 이들이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한 미혼 여성 중 최대 50%가 자녀의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Kennedy & Bumpass, 2008).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다(多) 파트너 출산(multiple partner fertility)”⁹⁾이 증가하고 있다. 다 파트너 출산 현상의 원인은 미국의 높은 결혼 해체율과 관련이 깊다. 미국에서는 결혼한 부부의 20% 이상이 결혼 후 5년 내에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고 있다. 또한 동거 부부의

9) 한 여성이 두 명 이상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즉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서로 다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50% 이상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관계를 정리한다 (Andersson & Philipov, 2002). 이는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캐나다의 결혼한 부부의 10%, 그리고 독일 부부의 12%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프랑스 동거커플의 29%, 그리고 스웨덴 동거커플의 37%가 5년 이내로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

혼외 출산을 하는 여성들은 결혼 후 출산을 하는 여성에 비해 두 번째 파트너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을 한 부부의 36%가 부부 중 한 명이나 둘 모두가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다. 반면에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59%가 이에 해당한다(Reichman, Teitler, Garfinkel, & McLanahan, 2001). 결혼하지 않은 부부의 출산 중 20%는 양쪽 부모 모두 이전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다. 이처럼 다 파트너 출산은 이미 미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회에서 동거가 확산되고 있다. 2010년 현재 미국에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은 12%를 차지하며 이는 10년 전보다 25% 증가한 것이다(OECD, 2010a). 과거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동거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는 모든 교육 계층에 있어 동거는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동거 가족은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가족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은 특징을 보인다. 1990년 조사에 의하면, 결혼 경험이 없는 미국 여성이 동거를 유지하는 기간은 평균 14개월로 독일 27개월, 캐나다 40개월, 그리고 프랑스 51개월에 비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Heuveline & Timberlake, 2004). 심지어는 아이가 있는 동거부부들도 동거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

동거가 유지되는 기간이 짧은 동거 커플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동거의 편리함, 애정 유지 등과 같은 장점은 취하고 결별 후 정리 과정 등과 같은 단점은 최소화한 ‘반쯤 동거’(stayover relationship)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는 주 3~4일 밤만 함께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집에서 머무는 것이다. 동거는 결별 시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반쯤 동거는 이러한 문제가 적다는 점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 연령대의 성인 중 많은 사람들은 삶의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은 졸업 후 어떤 곳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게 될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쯤 동거는 장기 계획이나 함께 살겠다는 약속 없이 편안하고도 편리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yler, 2011).

동거 혹은 결혼과 같은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부부로 부르지만 각기 다른 가정에 살고 있는 커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떨어져 살면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LAT(living apart together)라고 부른다(Cherlin, 2010). 1996년도와 1998년도 조사된 General Social Survey 따르면, 23세 이상의 여성 7%, 그리고 남성 6%가 그들이 파트너는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다고 답하였다.

Coates, Mahaffie, 그리고 Hines(1996)은 『2025, 미국과 지구촌의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시나리오들』이라는 책에서 미래 사회에는 가족형태나 구조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였다. 미래 사회에 예상되는 가족구조 관련 변화 중 하나는 파트너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동거(Cohabitation) 이외에도 미래에는 실험결혼(trial marriage)이나 브로커

를 통한 결혼(brokered marriage), 생애파트너(life partners)관계, 경제적 결합(economic unions)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험결혼은 일정한 기간 함께 살면서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고, 동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거를 공유하지만 소유는 각자 유지하는 형태이다. 관계정립을 계약으로 설명하는 브로커를 통한 결혼은 재정구조, 가사, 행동강령 및 조건을 계약에 제시하고, 이런 조건을 어기면 이들 결혼은 자동 해지되는데 재산소유, 이혼시의 재산 분배 등 각종 규칙이 사전계약서에서 다루어지는 결혼형태이다. 생애 파트너관계는 이성 혹은 동성부부가 정식으로 결혼신고를 하고 재산은 공동소유를 하지만 언제든지 이혼제안의 권리를 갖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혼은 변호사가 없이도 계약 파기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결합은 성인과 아동들이 필요에 의해 함께 동거하여 공동체를 결성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재정분담을 계약하는 유형이다. 처음부터 공동체 유지의 기간을 명시하지만, 상호분쟁이나 문제 발생으로 공동체를 해체할 때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른 이혼법이 아닌 자신들의 결별법에 따라 공정히 처리하는 결합형태이다(정현숙, 2011에서 재인용). Coates 등(1996)이 미국을 포함하여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이상과 같은 관계 맺음의 형식들은 모두 관계 맺는 방식에서 개인들의 선택이 더욱 강조되고 개별화된 결혼이 더욱 세분화되며, 두 사람 간의 계약으로서의 관계가 강조되는 유형들이라고 하겠다.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이민자가 많고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2000년 미국의 노인 인구는 12%였지만 출산율이 매우 높았던 1945~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고령층에 진입하게 됨에 따

2020년에는 16%, 2030년에는 19%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OECD, 2010a). 노인인구 증가는 노인단독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가 증가하는 등, 고령화는 미국 가족의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관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다세대에 걸친 수직적인 친족관계가 수평적 관계에 비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Cherlin, 2010). 종합해볼 때 미국의 가족구조는 현재 일반적인 가족주기를 따르지 않는 다양화된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의 지속적인 해체와 분화가 두드러진다. 또한 가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기 보다는 더 쉽게 결별이나 이혼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가족 구조를 선호해 가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다.

제3절 일본의 가족구조 변화

일본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 있다(Kumagai, 2010).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의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 65세 이상 인구는 23.7%로서 유소년인구는 세계 최저이고, 노인인구는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2010a).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일본의 출산율은 1.39로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제1차 베이비붐이 일어난 1947년에 4.54명, 제2차 베이비붐이 일어난 1970년에는 2.13명을 각각 기록했지만 2005년 최저인 1.26명으로 내려왔다. 이후 조금씩 올라가 2008년과 2009년에는 2년 연속 1.37명이었다([그림 4-1]). 1960

년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출산율은 단 한 번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치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 출산율이 가장 저조했던 2005년 이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상태로서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낮은 출산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조혼인율은 1970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1992년 부터는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¹⁰⁾(그림 4-2). 일본의 상대적으로 높은 혼인율과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저출산 및 인구 감소 현상은 낮은 혼인율이 원인이라하기 보다는 낮은 출산율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보다는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일본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본의 낮은 출산율은 일과 가족의 병행이 어렵고,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구조적 상황에서 기인한다(OECD, 2011).

먼저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일본의 직장은 근로시간 길기 때문에 부모들은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렵다. 또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정규적인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지만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잠시 일터를 떠나면 그 이후에는 정규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이 어려워 급여가 낮고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인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10) 2009년 일본의 조혼인율은 5.71건임.

실정이어서 재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 모두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 남성의 경우, 긴 업무시간으로 인해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59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38분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적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일본의 부모들은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이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 방안들을 수립하였지만 보육시설 제공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보육시설의 증가와 시설 밖에서의 자녀 보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다. 30년 동안 계속 일본 영유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고,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 현재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시설 이용률은 28%로써 여전히 OECD 평균(31%)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취업률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OECD, 2011).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가족규모도 축소되어 2010년 일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역대 최소인 2.46명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표준 가구로 여겨졌던 부부와 두 명의 자녀로 구성되는 4인 가족 형태의 가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 현재 전형적인 핵가족인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11. 07. 01). 반면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

율¹¹⁾은 31.2%로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미혼 인구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OECD, 2010a).

일본에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조선일보, 2011.06. 22). 50세를 기준으로 하여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 하는데,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16%, 여성의 7.3%가 생애미혼자였고, 이러한 비율은 현재 30대가 50대가 되는 20년 후가 되면, 남성의 30%, 여성의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애미혼자를 포함하여 미혼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일본인들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내각부가 2009년 10월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공동참여사회’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70%가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한든 말든 괜찮다”라고 응답하였고, 42.8%가 “결혼을 해도 반드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경향뉴스, 2009. 12. 06일자), 결혼과 출산을 과거 일본에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짙어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하나코상¹²⁾’ ‘썸썸족¹³⁾’ ‘딩크족¹⁴⁾’ ‘딩펫족¹⁵⁾’ 등의 신조

11) 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23.3%(403만 가구)임.

12) 도쿄나 도쿄 인근 대학을 졸업하고 일류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당장 회사를 그만 두어도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들 중 상당수가 도쿄에서만 매달 수십만 부 이상이 팔려 나간다는 명품지 ‘하나코’의 독자층이라 해서 ‘하나코상’이란 이름이 붙었다.

13) SASSY의 약자로, 미혼(Single)이면서 경제적 여유(Affluent)도 있고 자기 일에서 성공적인

어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의 노인인구 비율은 23.4%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OECD, 2010a).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0.8%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100세 이상의 초장수 노인도 2010년 현재 44,449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57%가 여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 100세 이상에서는 87%를 차지한다(주간한국, 2011. 6. 17).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 가구수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가구주가 전체 가구주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 가족에서는 노인이 결혼한 성인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러한 가족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Kumagai, 2010). 1960년에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이 전체 노인의 86.8%였고, 노인 부부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는 각각 7.0%, 3.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44.1%로 감소하고 대신 노인 부부가구가 36.7%로 증가하였으며, 노인 단독가구도 15.3%로써 여성노인 5명 중 1명이, 남성노인은 10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서양과 비교해볼 때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이며 한국의 노인¹⁴⁾보다

(Successful) 경력을 쌓아가는 한편 멋스럽고(Stylish) 젊은(Young) 사람들을 일컫는다.

14) DINK(Double Income, No Kids). 무자녀가족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부부를 뜻함. IMF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해 생겨났으며 돈을 모으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식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직업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다.

15) 덩크족과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의 합성어인 DinkPet족은 자녀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뜻한다.

더 높은 수치이다.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혼자 혹은 배우자와 사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율은 비산업화된 지역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 보다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볼 때 일본의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규모의 축소와 1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종합해볼 때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결혼을 택하지 않는 젊은 층의 증가와 그로 인한 저출산, 평균 초혼연령 및 첫출산 연령의 증가, 이혼율 증가와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고용기회 확대에 의한 맞벌이가족의 증가, 늘어나는 노인 단독가구, 그리고 1인가구와 동거커플의 증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가족 유형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실혼을 통한 출산이나 혼외 출산, 아버지가 없는 형태의 출산, 혹은 비혼자나 동성결합커플의 자녀 입양 등 결혼과 양육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핵가족 제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족쇠퇴론자들은 이러한 가족의 변화 즉 새로운 구조의 가족의 등장을 가족제도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회복하고 분명한 성역할 정립을 통해 가족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사회적 역할과 사회 유지를 위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비전통적 가족구조의 증가

16) 2008년 한국 노인 중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38.2%였다.

를 후기 산업 사회의 본질로 이해하여 오늘날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가족의 재구조화로의 전이 과정으로 보는 가족진보론자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새롭게 나타나는 동거, 혼외 출산 등의 현상들 역시 가족의 쇠퇴나 위기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진보론자의 관점에서 현재의 가족은 변화하는 것이지 쇠퇴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족구조에 대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족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면서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는 개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상이성은 각국의 사회적 혹은 가정 내 양성평등 수준이나, 동거와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 정도, 그리고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정책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가족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국가가 어떠한 가족구조를 지향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문화적 변화가 멈추지 않는 한 가족의 변화 또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진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면서 동거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노인단독가구, 1인가구 등이 가지기 쉬운 취약점을 국가가 법이나 경제적·물질적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보완해주는 가족정책이 요구된다.

미래 사회의 가족구조 변화 전망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가족이 생활하는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의 변화와 이들 맥락의 앞으로의 변화일 것이다(정현숙, 2011). 미래 사회의 변화가 가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는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가족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이러한 기술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환경의 변화, 의생명학의 발달과 이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 개인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가족과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계화의 진전은 현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된다(김혜영, 2008; Waite, 2009).

제1절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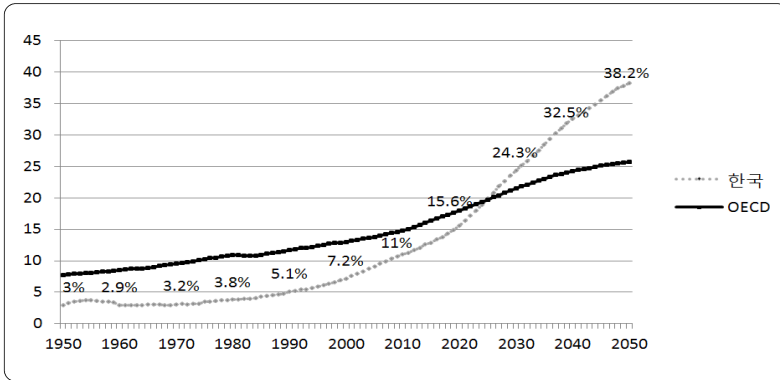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미래 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두고 분석해야 할 영역이다. 먼저 출산율의 경우,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2006) 장래 인구추계의 경우 201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2~1.36 사이에 머물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9).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평균가구원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혼 현상과 첫 자녀 출산연령의 증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혼인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동거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1인가구와 1세대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평균가구원수와 혈연가구는 감소하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나 혼외출산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균수명은 그 증가 속도는 둔화되나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경향에 평균수명 증가가 어우러져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2018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과거에는 30세 때 조부모가 한명이라도 살아있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미래에는 18세에 4명의 조부모 모두 살아있고 30세에도 적어도 한 명의 조부모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1인 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짐

에 따라 심각한 장애는 감소하지만, 가벼운 만성질환 노인들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NIA, 2007), 가벼운 만성질환을 가진 요보호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1] 한국과 OECD 국가의 노인 인구의 비율 변화 추이



인구의 고령화로 2016년부터 생산활동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활동가능인구 중에서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의 감소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생산인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핵심생산인구는 1,953만 8천명을 기록, 지난 2005년(1990만5000명)에 비해 36만7000명 줄었다.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한 것은 1949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핵심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율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조명덕, 2010).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로 인하여 출산율은 더욱 하락하고 그 결과 가족규모가 축소되며, 여성가구주 가족과 맞벌이가족, 그리고 처가거주가족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 예견된다.

한편 편중된 성비레로 인해 국내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남성이 증가하여 다문화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현재 성비(여아 100명 당 남아 수)는 106.4로써 정상성비(103~107)에 해당하나 결혼 연령층 인구의 성비는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결혼 적령기(남성 28~32세, 여성 26~30세) 남성 100명 당 여성의 수가 2009년 95명에서 2011년에는 88명으로 7명이 줄어들고, 2014년에는 8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신문 2010년 4월 5일자). 즉 2014년에 결혼하게 될 1982~1986년생 남성 184만 명 중에서 154만 명, 즉 83.7%만 결혼적령기 여성들 중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0만 명은 다른 연령대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면 국내 여성과는 결혼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혼기를 맞는 2028~2033년에는 6년 연속으로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가 120을 넘어서는 최악의 결혼대란이 우려된다.

여기에 아직도 여자의 경우 자신보다 나은 배경을 가진 배우자를 택하는 경향 즉 결혼경사현상(marriage gradient)이 남아 있어, 한국 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들이 주로 결혼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대란의 피해자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결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외국인 신부가 급증해 다문화 가족이 더욱 늘어나고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고 있고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국내 남성의 결혼에 장애로 작용하여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데 기여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가족구조 변화 전망

생산수단이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세계와 사회문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개인의 삶과 가족의 변화 또한 초래한다(강홍렬·장혜경·김혜영 외, 2006). 특히, 개인 PC와 인터넷의 보급 및 발달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지능화 사회의 출현은 인간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혁명은 모든 산업과 사회전반에 걸쳐 동시적이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주요 40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 조사에서 2009년 2위(2007년 기준), 2010년 3위(2008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국가정보화백서 요약본, 2010)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인정받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강국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은 사회·문화·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빠르게 겪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 역시 사회의 기초 단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미래 가족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의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가족과 가족생활에 대한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미래 가족

과거 20~30년 동안 급속하게 전파되어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가족생활과 구조, 가족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가족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함께하는 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가치 체계를 바꾸어 놓는다(OECD, 2008).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가치 체계는 직간접적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구성원들의 행위양식에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체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이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는 시대에 가족을 둘러싼 규범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행위규범과 가치가 창출될 것인지는 미래의 가족을 전망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미래 가족에 미치게 될 다차원적 영향에 대해 고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출현과 발달은 가족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보에 따라 가족이 수행해왔던 고유한 기능들이 점차 사회의 전문화된 기관으로 이완되거나 상업적 서비스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강홍렬·장혜정·김혜영 외, 2006).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생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일·가정·교육·레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가족의 본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OECD, 2008).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은 가족의 개념과 기능,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행위 양식 등 가족과 관련된 모든 면을 과거와는 다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가족을 강화시킬지 아니면 약화시킬지에 대한 주장은 학자들마다 엇갈린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영향은 다소 상충적일 뿐 아니라, 변화의 정도와 방향은 가족마다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강홍렬 등(2006)은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계층의 경우에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그 결과 가족의 응집력이 강화된다고 전망한다. 즉, 다양한 스타일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장 환경에 길들여진 개인들은 더 많은 욕구 충족을 기대하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심리·정서적 욕구를 가족 내에서 충족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은 가족원의 관계의 질과 만족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정서적 기능이 강화되고 가족의 결속이 공고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정서적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적 표현의 자율성과 소비주의적 성애가 강조되면서 친밀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가족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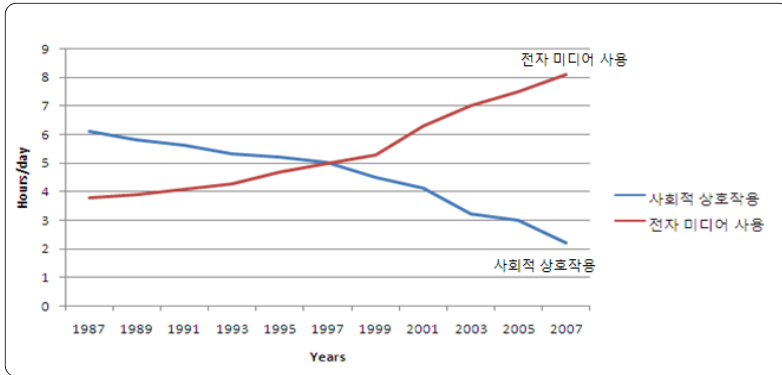
계가 모호해짐으로써 기존의 가족 구조와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가족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가족의 개별화를 촉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홍렬 외, 2006).

이와 같이 가족 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화와 가족의 분리의 경향은 더욱 짙어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개인화 혹은 가족의 분화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족 내의 결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족의 분화 또는 응집화가 발현되는 모습은 가족 별로 매우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가족의 재구성

가정 내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진화, 즉 TV, 모바일 기기,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블로그, SNS(Social Networking Site, 예: 페이스북 등)의 활용은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빈도와 내용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맺는 방식을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EU국가 중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전자 미디어 사용의 증가에 따라 면대면 상호작용의 일일 평균 시간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igman, 2009).

[그림 5-2] 영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전자 미디어 사용 시간 변화 추이



* 자료: Sigman, A. (2009). Well connected: The biological implication of social networking.

영국의 이러한 변화는 2010년 SNS 이용 증가율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우리나라의 가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가족 구성원은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거리 분거 가족의 경우,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가족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정서를 교류하며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별거나 이혼으로 인해 분리된 가족 구성원 사이(예, 이혼 후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의 소원함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매체의 활용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분리된 가족 간의 만남은 재혼 등으로 새로이 형성된 가족 내의 불화를 야기하여 재혼 가족의 가족 해체 즉 이혼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강화되는 관계가 있는 한

편 이로 인해 약화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가. 인터넷

인터넷은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온 가장 큰 원동력으로써 사회와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은 모든 영역에서 더 깊고 광범위하게 가족과 그 구성원의 생활상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터넷이 수많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냄과 동시에 재택근무 등과 같이 노동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인터넷 산업에 종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이용하며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등 가족의 소득 활동은 인터넷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보급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될 경우 일·가족의 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녀 양육기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그 결과 맞벌이 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족의 지출 활동이 보편화될 것이다. OECD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인터넷 사용자의 25% 이상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행태에 관한 Nielsen 글로벌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는 한국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9%가 구매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08). 가정 재정 또한 상당부분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OECD 국가 성인의 30% 이상은 인터넷 बैं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8).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बैं킹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34.6%가 넘는 수준이며(전자신

문, 2009), 스마트폰 बैं킹 사용자는 100만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전자신문, 2010). 한편, OECD 국가의 인터넷 유저 중 18%는 웹상에서 가족과의 공유를 위한 웹사이트를 포함한 그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OECD, 2008)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가족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앞으로 유무선 통신·통신 기능이 접목된 영상오디오 미디어·보이스 동반데이터의 3차원의 융합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향후 20여 년 간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전방위적인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SaaS (Software as a Service)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교육용 e-paper/e-reader,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디스플레이 등의 홈 기기(home appliance)에 초고속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접목됨으로써 가족생활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진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OECD, 2008).

나. 모바일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환경은 유선에서 모바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 무선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가 확산됨으로 인해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에 급격한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모바일 인터넷의 수요와 공급의 증가에 따라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데스크탑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의 비율이 동등해지고, 더 나아가

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이 유선 인터넷 사용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OECD, 2008). 이와 함께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 패턴은 유선에서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정보획득을 위한 단순 검색보다는 지리 정보를 찾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용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일상 속에 가장 보편화된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예이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을 꼽을 수 있는 모바일 기기는 개인이 늘 휴대하는 물건들 중 가장 자주 활용되며 물리적·정서적 측면에서 애착 수준이 높은 기계이다. 이로인해 개인은 외부의 세계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며, 그 결과 개인은 소외감을 덜 느끼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0년 3월 기준 한국의 휴대폰 보급률은 100.4%로 이미 ‘1인 1휴대폰 시대’에 진입했다(머니투데이, 2010). OECD의 ‘브로드밴드 통계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89.8%를 기록해 초고속 무선인터넷 보급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41.6%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서울신문, 2011). 또한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0년 말 2천 만 명(약 40%), 2013년에는 3천300만 명(약 66%)의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전자신문, 2010). 이처럼 모바일 환경이 빠르게 갖추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에 있어서의 모바일 기기의 중요성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갖가지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가족과 공유하는 일, 가족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일 등은 가족 간에 이벤트나 추억을 기록하는 주요 수단될 것이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와 동영상 기록 장치를 늘 휴대함으로써 가족은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족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다. 부가적으로 합리적 통신비 지출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으며, 먼대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거리 분거를 선택하는 가족이 늘어날 것을 보인다.

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가족의 응집(cohesion)

가족구조의 변화 특히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응집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킹과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네트워킹과 응집력이 가족구조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예컨대 휴대폰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시공간에 상관없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현대생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학대가 벌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화상서비스를 이용한 채팅도 가족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의 편의성은 가족 구성원에게 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의 자유를 부여한다. 이는 휴대폰이 유선의 통신 기기보다 가족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도모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OECD, 2008). 이와 같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수월해지고

결과적으로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화된 통신매체로 인해 개인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선호하게 만들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김혜영, 2007). 이에 더해 사이버 세계로의 과도한 몰입한 개인은 현실세계를 간과할 경향이 높고, 이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이 가족의 해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킹이 세대 간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종 디지털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여 많은 정보능력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와 그렇지 못한 나이든 세대의 정보격차는 세대 간 갈등을 낳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강홍렬 외, 2006).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가족 세대 간 격차의 차이는 무수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세대 간 차이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세대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젊은 층에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나 인터넷 메신저(스카이프 등) 이용이 자연스러운 규범(norm)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이든 층에게 있어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선택적 영역의 것이라는 점 또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세대 격차 가능성을 설명해준다. 반면에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첨단 기기 작동 법 등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세대간 결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을 수 있다.

라. 정보통신기술과 가정 내 양성평등

유비쿼터스를 실현한 홈 네트워킹 시대가 전개되면 가사노동의 부

답이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성역할의 의미 또한 상당히 모호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즉, 정보통신기술 기반 환경에서의 가사업무는 자동화되고 원격조정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한층 증대되며 소요 시간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가사 서비스 산업의 증가 및 다양화는 1인가구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능력만 있다면 가족원 스스로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사의 범주를 확대시키며(김성국, 2004), 이는 1인가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족이 가지던 고유기능과 서비스의 대체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가족원 간의 상호연대 및 의존성이 약화될 가능성 또한 증대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탈가족화를 예견하기도 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이끄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혈연적 유대에 근거한 강력한 기능적 결합으로서의 가족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가 하는 가사업무의 경계가 유연해지고 상호역할 공유의 경험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 여성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가사부담의 경감은 가족원의 관계 질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킴으로써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통합이 더욱 강화되고(강홍렬 외, 2006) 그 결과 가족해체를 막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되기도 한다.

마. 정보통신기술과 노년기 가족

‘가정 내의 병원’은 미래의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집중적인 정보통

신기술의 활용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헬스케어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쓰는 의료비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의 30.5%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1999년 17%에서 10여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이 같은 경향은 점점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앙일보, 2011). 이는 곧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의료복지비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 복지 수준과 편의성은 높이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헬스케어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데이터와 보험처리, 약의 처방과 구입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에 접목된 원격의료(Telemedicine) 시스템의 확대가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연령층에 따라, 그 양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은 특히 의사소통과 일상 관리·건강 관리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헬스케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될 것이다.

휴대기기를 통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나 이를 활용한 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치명적인 질병의 조기 진단에 효과적이며, 이러한 조기치료는 고령 사회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노인 의료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포도당 측정 데이터를 의료진에 전송하는 모바일 기기, 신체 기능을 휴대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청진기, 투약 시간을 알려주는 휴대기기 등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사례이다.

또한 노인들이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도 편안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홈 시스템, 즉 지능적 지원 시스템(intelligent support system)에 대한 욕구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는 ‘쉼터로서의 스마트한 집(Smart Sheltered Housing)’ 개념이 적용된다. 이는 문, 커튼, 난방, 조명기기는 물론 각종 의료장비를 포함한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원격으로 조정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환자를 위한 알람, 침입 등과 같은 가정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알람 시스템을 포함한다(OECD, 2008). 특히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원격으로 관리, 모니터링 하여 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케어(smart care)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노인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된다.

이미 OECD 국가들에서는 다양한 홈 케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프랑스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 복지, 건강 관련 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써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SWIFT(uSer oriented and Workflow Integrated Federation of service provider for the elderly)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영국의 보건 당국은 노인 돌봄 제공자들에게 화상 회의 등을 통해 각종 정보과 교육을 제공하는 The Action(Assisting Carers Telematic Interventions to meet Older person's Needs)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또 다른 EU 프로젝트인 DISCUS(Distance Information, Support and Communication for European Carers)에서도 돌봄 제공자들에게 인터넷 기반의 원격 환경에서 각종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제공한 바 있다(OECD, 2008). 한

편, 국내에서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원격으로 관리,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국민일보, 2011).

〈표 5-1〉 노인을 위한 European Sheltered Housing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예

- 중요한 날짜 및 약속 시간을 알려주는 오디오 리마인더
- 투약시간에 맞춰 약이 공급되는 의료용 디스펜서
- 스크린에서 화면을 눌러 문을 열고 잠그거나 난방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 집안 활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집안의 바닥에 설치된 프레스 패드 (Pressure Pads)
- 벨이 울리면 TV를 통해 방문자가 누구인지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도어 엔트리 시스템 (Door Entry System)
- 적외선 감지 장치를 통해 화장실 및 욕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노터치 시스템
- 낙상과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모니터링 하는 비디오 모니터링
- 부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도한 열의 방출을 탐지하는 열/연기 감지기
- 냉장고의 문이 열려있거나 작동의 중지 여부를 알려주는 냉장/냉동고 해동 알람
-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난방 조절 시스템
- 집을 비우기 전 집안의 모든 창문이 닫혔는지 등을 알려주는 중앙 잠금 시스템
- 적외선이나 무선 인터넷으로 집안 내 환경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집안 환경 조절 시스템

* 자료: OECD(2008). The future of the family to 2030

미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들이 그들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이다. 특히, 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들이 활발한데, 그 예로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약화를 보완하는 환경 및 장치, 기억의 감퇴를 보완하는 물리적 수단 및 케어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노인의 재가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동 인지 센서 등을 사용하는 미래 디지털 가족의 표상을 엿볼 수 있다(OECD, 2008).

〈표 5-2〉 미국 Aging in Place 프로젝트 현황

MIT Media Lab
가정과 의료 기관, 일터, 교육 기관의 연계.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이끄는 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Michigan University, Dept Electrical Eng. & Computer Sc.
인지적 감퇴를 보완하는 휴대 기기의 개발
Carnegie Mellon University with Universities of Pittsburgh and Michigan
노인을 위한 로봇 'nursebot' 개발
University of Rochester, Centre for Future Health
스마트 메디컬 홈 기반의 건강관리 툴 개발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Biomedical Engineering Dept
기능적 바이오센서를 사용하는 인지 장애 및 움직임 탐지 연구
University of Washington, Assisted Cognition Project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억 보조 장치 개발

* 자료: Dishman, E. (2004). Inventing wellness systems for aging in place. IEEE Computer, 37(5), 34-41

정보통신기술은 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사람들이 얼마나 긴 시간동안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더 나아가서 노동 수명의 연장과도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족에게 가져다 줄 영향 중 한 가지는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가족 결합이 다시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가족생활은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이 가족생활 영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에게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 갖추어진 집안 환경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직업이나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요보호 노인 부양이 수월해짐에 따라 노인이 시설에 수용되어 돌봄을 받게 되는 시점이 늦춰지고 그 결과 요보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건강한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은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 경제에 보탬이 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이 집안 살림과 손자녀 육아·보육에 도움을 주는 등 가족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OECD, 2008). 이는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성인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바. 정보통신기술과 가족 건강

원격의료 시스템의 구축은 비용이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계층 및 미도시 지역 거주자들에게 면대면 상황에서의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경을 넘는 의료적 협력이 가능해 국가 간에도 상호보완적인 의료 수준 향상과 비용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의사는 진료 목적의 여행을 줄일 수 있어 비용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효율적

인 진료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비디오 컨퍼런스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의료진은 협진으로 한국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시스템은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일례로 어린 아이의 낙상사고 발생 시 원격의료 시스템의 즉각적인 탐지로 사고 상황이 바로 발견될 뿐 아니라, 원격진료로 빠르게 수술 진단이 내려지고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원격 시스템을 이용한 건강 교육은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의료기관-보험사-보건 당국 사이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체계적 관리는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헬스케어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진화된 전자상거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원격의료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케어는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환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다른 가족 구성원 또한 돌봄 활동에 있어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환자 가족의 경우에도 원격 시스템으로 정서적 돌봄을 보다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년 후 세상 - 스마트 시티

건강이 부쩍 악화된 80대 부친을 모시고 살지 못해 K씨는 마음이 늘 무거웠다. 하지만 10여 년 전과 달리 독거노인이 화재, 가스 누출이나 돌발사태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안에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비상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사회복지사가 즉시 출동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부친의 당뇨병이 심해졌지만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는 매일 혈압과 혈당량이 체크돼 병원으로 자동 전송되고 담당 의사와 정기적인 화상진료를 할 수 있다. 재택 수진 뒤 의사가 내린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되고, 약국에선 사회복지사나 택배를 통해 약을 보내 준다. 부친의 건강 정보는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스마트 단말기에 전송돼 맞춤형 복지가 가능하다.

중앙SUNDAY 2011년 7월 23일자

사.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정과 일터의 융합

산업사회의 노동조직이 일터와 가정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에는 가정과 일터의 융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KT경영연구소, 2008).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과정 및 자동화된 생산관리체제로 인해 생산력이 제고됨과 동시에 노동의 형태를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점점 더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지식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OECD, 2008). 이는 여성의 취업률을 현재보다 높이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택근무의 활성화는 어린 아이를 돌보는 한

부모 가족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직업 활동도 보다 수월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직업으로 인해 가족과 원거리 생활을 해야 했던 경우에 재택근무는 가족의 주거지 결함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근무환경의 유연화에 따라 개인은 전통적인 근무 환경에서보다 많은 정신적 자유를 누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택근무의 보편화는 파트타임 노동자와 프리랜서, 다중 직업자, 1인 사업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외곽지역 거주로 주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매일 매일의 통근을 위한 교통비 또한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적 생활시간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 집과 직장 어디에서 일하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면서 자유분방한 사고와 새로운 일터개념이 정착되어 갈 것이고 결국 유연한 노동성이 확보될 것이다. 즉 일과 가정의 경계가 사라져 개인이 물리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이혼 등의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밤과 낮의 구분 없이 노동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강홍렬 외, 2006), 재택근무로 인해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일터와 가정의 융합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 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 외부와의 연결이 관건이 된다.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은 초고속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을 때 가능한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모바일 통신 환경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최

근에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자원도 재택근무를 위한 주요한 제반여건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여러 명의 재택근무자들이 홀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만나 실제로 한 근무처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모든 업무의 보고와 승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아바타를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로 외국 바이어를 설득하는 업무 처리도 상상할 수 있다(OECD, 2008). 실제로 가정 내에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기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이 날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이는 기업 입장에서든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무가 확대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 세상 - 스마트 시티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K씨의 20대 중반 아들이 미래형 신도시에서 서울 중심가로 출퇴근하는 것도 쉬워졌다. 일주일에 두 번만 출근하고 세 번은 집 근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화상회의 시스템에다 팀원 모두의 작업 문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시스템, 공동 여가공간이 잘 구축돼 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쉰다는 고정관념은 깨지고 점심시간 때 가장 붐볐던 음식점 풍경도 옛날 이야기다. 일에 대한 집중도와 효율성이 더 높아지면서 대면 문화를 고집하던 기업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다. 구글처럼 24시간 뷔페식당을 스마트워크 센터에 설치한 대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지하철 승객은 많이 줄어들었다. 웬만한 지방 출장은 화상회의로 대체돼 ‘국내 출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도 새로운 풍속도다.

중앙SUNDAY 2011년 7월 23일자

아.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은 미래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것으로 볼 때, 교육과 그것의 실질적인 성공은 가족 안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해 가족이 가지는 인식은 어린 아동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자녀 교육은 가족의 핵심 기능이며 가장 주요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동 기간의 확대로 과거와는 달리 어린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 세대 사이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사용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2007년을 기준으로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및 터키에서 인터넷 사용자 중 20% 이상이 온라인 학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온라인 학습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웹을 통한 검색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는 것이 현실이다(OECD, 2008).

우리나라 역시 지식·정보화 사회의 출현에 걸 맞추어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육정보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잘 정비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e-learning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e-learning 공급기업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e-learning 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1조 2,984억 원이던 e-learning 시장규모는 2010년 2조 2,458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을 기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만 3세 이상 국민의 49%가 e-learning을 이용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국적 문화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녀 교육 및 관리는 향후에도 많이 활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진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e-learning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기타 여건상 학교에 직접 갈 수 없는 경우, 교육 시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도 e-learning이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학습 외에도 식사 및 영양관리 등 자녀의 시간과 건강을 관리해주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KT경영연구소, 2008). 뿐만 아니라, 시간적·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장점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e-learning 성인 교육 또한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learning은 낮은 비용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족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가족을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의 파편화를 막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e-learning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IPTV와 같은 쌍방향적 영상 기기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e-learning 학습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e-book과 e-reader는 텍스트북을 대체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기기들은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교육 기관들 간의 실시간 협력 교육이나 가상현실에서의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e-learning 관련 매체와 기술들을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정도 전문 교육기관 못지않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녀를 정규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home-schooling 가족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10년 후 세상 - 스마트 시티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세계사 시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과서·참고서·노트를 책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학생은 보급형 개인 태블릿PC를 지급받았다. 디지털 교과서 덕분에 태블릿PC의 화면에 강의 교재를 불러 오면서 수업은 시작된다. 축구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가 화면에 등장해 영국은 단일 국가이지만 월드컵 때에는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로 나뉘어 각자 다른 국기를 달고 예선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역사 지도와 함께 설명해 줬단다. 참고자료로 제시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고선 영국에서 게르만족과 켈트족 간의 대립이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음을 알았다고 한다. 딸은 수업시간에 다 못 본 영화를 보기 위해 저녁 식사 후 스마트TV로 디지털 교과서를 불러온다. 모든 학습교재의 콘텐츠는 오래전에 디지털로 변환돼 학교와 집이라는 공간의 구분 없이,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공부할 수 있다. 또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접속하면 24시간 내내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앙SUNDAY 2011년 7월 23일자

차. 정보통신기술과 가족의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기술은 오늘날 가족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양식의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미래의 홈 엔터테인먼트 또한 계속해서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TV나 비디오를 보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가족 여가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듯이 앞으로도 가정 내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엔터테인먼트 기기들, 예를 들면 홈 씨어터, 온라인 게임, 3D TV, PC 등이 계속해서 가족의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트렌드가 주를 이룸에 따라 웹상에 저장된 미디어(stored media)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다(OECD, 2008). 이와 함께 움직임에 대한 센서를 이용한 게임, 홀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현실 등 더욱 많은 가족들이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특히 청소년 및 젊은 성인층은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타인과 교환하는 것을 SNS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데에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적 요소가 가미된 게임이나 스토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들과 결합되면서 가정 내의 에듀테인먼트도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가정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정보통신기술의 진화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가 활성화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많아지고 친밀감이 더욱 증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김미숙 외, 2006) 이는 가족의 결속력을 높임으로써 가족해체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표 5-3〉 정보통신기술과 가족 엔터테인먼트의 접목

- . 네트워킹과 진보된 디스플레이를 겸비한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 웹으로 접속해 즐기는 방송 및 라디오프로그램
- . 엔터테인먼트 도구로서의 모바일
- . 게임 콘솔
- . Electronic Toys
- . 자가 제작 콘텐츠
- . 가상 현실

* 자료: OECD(2008). 'The future of the family to 2030'

3절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과 가족구조 변화 전망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의약품 개발, 맞춤의학의 발달,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며(과학기술부, 2005) 수명 연장과 질병 극복에 많은 진전이 나타나 다수가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헤럴드 경제, 2010. 03. 31). 생명공학에서는 재조합 단백질, 유전자치료, 세포치료제 등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신약 개발과 치료법이 이루어지며, 인간 지놈(human genome) 프로젝트의 영향에 의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맞춤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빠르게 발달하는 의학 및 생명공학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가족의 형성과 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1.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과 결혼·출산

미래 사회에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신과 상호보완적인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과학기술부, 2005).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모아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매를 할 수도 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결혼 전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래에는 여기에 유전자 검사 또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출산이다(과학기술부, 2005). 이러한 변화는 유전자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유전자 변형을 통한 출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유전자 관리소를 만들고 아이의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태어날 아이의 유전자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아빠와 엄마의 유전 정보를 비교하여 삶의 질이나 건강과 관련된 유전자(예, 비만, 성장, 당뇨병, 암등과 관련된 유전자)중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즉, 아기)을 고르게 될 수 있다. 이는 “선택적 임신”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에 체외 수정을 통해 수정란을 만들고 이들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좋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은 폐기하고 정상 유전자를 가진 것만 골라내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조생식술이나 대리모로 인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부, 2005). 보조생식술은 불임치료의 방법으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보조생식술이 인공수정과 다른 부분은 난자에 인위적

인 조작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모 출산은 자궁에 의한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이 제3의 다른 여성의 자궁을 빌려 남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모 출산에 보조생식술이 이용되면서 다양한 부모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정자, 난자, 자궁의 제공자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누구를 부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유전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 그리고 유전적 어머니와 생물학적 어머니, 양육하는 어머니 등 한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부모 관계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의학 및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결혼과 출산의 분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출산의 방법이 다양해져서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비혼, 만혼, 독신이 증가하여 가족 개념이 재구성되고, 독신자, 동성애자, 가임연령을 넘어서 여성 등과 같이 다양한 개인들이 가족을 꾸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임인숙, 김수영, 최은정, 이동주, 2006),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정자은행을 통한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 및 친족 관계에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 예견된다. 또한 불임 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임 부부의 출산이 증가될 것이다. 그 결과 출산율이 높아지고 가족규모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입양가족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2.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과 장애인/환자를 돌보는 가족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은 거시적으로는 사회, 문화, 보건 복지체계에 큰 변화를, 미시적으로는 장애 및 질환을 가진 가족 구성원

개인과 이들을 돌보는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먼저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의약품 개발, 맞춤의학의 발달, 인간의 정신과 행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 개인과 가족,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부, 2005). 첫째, 인간 지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의 후속 연구로 인해 신규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지고, 유전자간의 네트워킹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하게 됨에 따라 의학과 제약업의 발달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유전자 조작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개발될 것이다. 또한 BT와 IT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기존 의학과 제약업, 의료서비스 분야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인간 지놈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인해 맞춤의학이 발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질병 치료는 주로 “표준형” 인간에 맞춰져 있었고, 질병에 대한 해석도 이러한 표준형에 맞춰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래에는 한 인간의 지놈에 들어 있는 유전 정보를 완전히 밝히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 지놈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의학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신약들의 개발을 의미한다.

셋째, 지금까지의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는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서술적·관찰적 설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의 상당 부분이 유전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일란성 쌍둥이 등을 대상으로 한 행동유전학(behavioral genetics)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즉, 동성연애, 반사회성, 폭력성, 우울증, 알콜 중독증, 심지어 범죄성 등에 있어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에는 지능 정보의 해독, 유전자간 네트워크의 이해, 유전과 환경의 상호관계(gene-environment correlation)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gene-environment interaction)을 연구하는 심리사회유전학(psychosocial genetics), 동물과 인간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비교유전체학 등의 분야에서의 연구의 진전으로 인해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뇌과학(neuroscience) 분야 연구의 진전이 더해지고 다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질환과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해서 개인의 질환과 문제행동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전자치료법 및 세포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재조합 단백질 기술의 확대와 발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부, 2005). 그 결과 첫째, 유전자 치료로 인해 난치, 불치로 알려진 질환을 치료하고, 곧 만성질환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물질인 DNA나 RNA를 세포에 전달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유전자의 고장으로 인해 특정 단백질을 생산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 그 단백질을 수시로 주입하는 것보다는 아예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정상 유전자를 환자에 전달하여 치료하자는 것이다. 유전자 치료는 현재 난치, 불치로 알려진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점차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세포치료 기술과 접목되어 많은 신제품이 나와 불치병이나 심각한 만성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포치료제로 인해 많은 종류의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세포치료제란 세포를 인체에 주입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기술과 제품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배아 줄기세포는 거의 모든 형태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질환에 치료제로 거론되고 있다. 대상 질환은 파킨슨 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이 특정 세포가 죽거나 소실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들이다.

셋째, 재조합 단백질 기술의 확대와 발달로 인해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질병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공학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된 분야는 각종 질병 치료에 유용한 인간의 단백질을 대장균과 같은 생물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돼지의 췌장, 인간의 뇌, 혈액, 소변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제품들이 대장균이나 동물세포에서 생산되어 이전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고 기술의 진보로 미래에는 보다 많은 안전한 치료제들이 보급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이로 인해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각종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던 환자들이 치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특히 유전학 및 뇌과학)과 생명공학 분야 발달로 다양한 문제와 질병에 다양한 맞춤 치료가 제공되면서 특별한 문제와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고통과 불편함에서 해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삶도 변화될 것이라 보이며, 특히 고가의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환자, 혹은 장기적인 보호를 요하

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줄어들어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학 기술의 발달로 심각한 미숙아와 장애아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장애인 가족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Waite, 2009).

한편, 신경심리학 정신심리학의 발달로 인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환자의 완치율도 10~20%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테일리안, 2009. 10. 13). 칩을 심는 기술이나 두뇌자극기술로 인해 이전에는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친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거나, 투병 중 알게 된 환자들끼리 새로운 가족을 이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정신장애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를 대신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미래에는 기술력이 집약된 장비로 인해 아동 스스로 일반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해 질 것이라 보인다. 그 결과 장애아를 돌보는 가족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3.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과 노년기 가족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장애 또한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줄

어플 것인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다(National Institute on Aging, 2007). 어떤 연구자들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질병도 줄어들고 그 결과 장애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질병도 늘어나고 따라서 오히려 장애가 증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의학의 발전으로 심각한 장애는 감소하지만, 가벼운 만성질환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이 공존한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에서,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네덜란드와 미국은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호주, 캐나다와 프랑스는 인구 고령화와 상관없이 일정한 장애 수준을 보였으며, 일본과 스웨덴, 벨기에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마다 인구 고령화와 심각한 장애발생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만성질환 유병률, 특히 노년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치료가 어려운 일부 만성질환(치매, 파킨슨씨병, 심혈관질환 등)은 퇴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덧붙여 생명공학 발전에 힘입어 장기 이식 등 일종의 회춘 수술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수준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능상태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사회에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2070년이 되면 60세는 제2의 청춘이 되며, 결혼과 가족 개념이 바뀌어 두 번 이상의 결혼이 보편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헤럴드 경제, 2010. 03. 31).

한편,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독거노인에 대한 원격의료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발전함에 따라, 가정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며(OECD, 2008), 집과 병원 등 각종시설을 연계 및 통합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으로 인해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진료를 통한 서비스 의뢰 및 연결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가능해질 것이다(과학기술부, 2005). 이러한 방식은 만성질환 환자나 독거노인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도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IT와 센서 기술을 이용하면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노인의 상태를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동아일보, 2010. 09. 02). 이처럼 질환이나 일상생활의 제한을 가진 노인의 경우 기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고,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짐에 따라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4절 노동시장과 가족구조 변화 전망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고용의 불안정성, 실업률 증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혼인율과 출산율이 떨어져서 미혼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맞벌이 가족,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 만혼의 증가 및 가구당 자녀수 감소/ 또는 만혼과 비혼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특히 대규모 실업, 그 중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취업준비자 수(학생 제외) 즉 '준 실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도 고용유발이 되지 않는 불완전한 경제구조가 정착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주로 해외 투자를 활발히 하고, 특히 제조업은 중국 등 해외로 기지를 옮기면서 국내 산업에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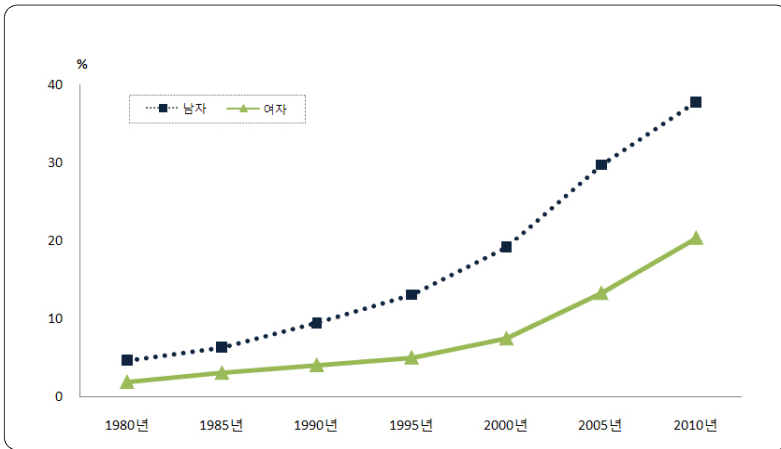
이러한 노동환경과 경제구조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이 결혼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 결과 미혼과 만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30대 인구의 미혼율은 9.1%였으나, 2010년 30대 인구의 미혼율은 29.2%로 1995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2010년 30대 남성 미혼율은 38%에 가깝다. 이는 2005년과 비교했을 때는 8.1% 증가한 것이다. 미혼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에 들어서다. 2000년 30대 인구 미혼율은 13.4%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21.6%로 올라서더니 5년 만에 다시 7.6%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미혼율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표 5-4〉 연도별 30대 인구 미혼율 변화 추이

(단위 : %)

성 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계	3.3	4.7	6.8	9.1	13.4	21.6	29.2
남 자	4.7	6.4	9.5	13.1	19.2	29.8	37.9
여 자	1.9	3.0	4.1	5.0	7.5	13.3	20.4

[그림 5-3] 연도별 30대 인구 미혼율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각년도

평균초혼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평균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이 31.8세, 여성은 28.9세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10c). 이는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남성은 2.5세, 여성은 2.4세가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만연과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불황의 만성화로 적령기에 결혼하느냐의 여부가 능력의 지표가 되었다(LG경제연구원, 2006). 만혼의 주요 원인은 결혼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두섭 외, 2005). 즉, 청년 실업의 증가로 인해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 낳기를 유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불안정성과 혼인율 간의 관계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혼인율을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은 임금이 적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남성의 경우 연봉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 혼인율이 9.3%인 것에 반해, 400만엔은 29.4%, 600만엔 이상은 37.6%에 달하는 등 연봉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조선일보, 2011. 06. 22). 이로 인해 일본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소득과 자녀의 수가 상관이 있다는 점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은 가정의 소득, 나아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김혜영, 2008). 즉,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기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부들의 최근 출산 수준이 가장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2008). 자녀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자녀 교육 비용의 증가는 가족의 구성과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실업, 고용불안정성의 심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맞벌이 가족의 증가

남성 혼자의 임금으로 가족의 부양을 담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여성도 함께 경제적 부양자 역할을 하는 맞벌이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는 35.5%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통계청, 2010b). 2009년 기준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월소득이 42.6%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비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현실에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임금의 성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장시간 근무나 근무시간 이외의 노동은 임금이 더 높은 남성이 주로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전략적 역할 분배는 계속될 것이라 예견된다(Zuo, 2003; 김두섭 외, 2005 재인용).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은 여전히 자녀 양육과 가사의 책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일과 가족의 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져 결혼을 연기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역시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전통적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문제없이 소화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비해 강력한 부양 능력을 가질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전후휴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여성의 육아휴직은 2011년 처음으로 4만명을 넘는

상황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2011년 1분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73명으로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2010). 이는 기업의 분위기가 이러한 제도를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권고 사직 등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09. 03. 04).

3.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화와 연상녀·연하남 부부의 증가

노동 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임금과 대우는 낮기 때문에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 가족은 빈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한부모 가족의 빈곤화는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분리 및 임금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는 다시 자녀의 교육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 가구주가 이끄는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시장과 임금구조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고 이혼 후 양육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전문직 여성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상녀연하남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상연하 부부는 10년 전에 비해 약 1만 쌍 가까이 늘었다. 2000년 10.7%에 불과했던 연상연하 부부는 2005년 12.1%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14.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c).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 결혼 적령기인 사람들의 경우,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남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가 희석되면서 연하 남성과 연상 여성의 결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약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2010. 03. 26). 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가족 구성의 형태적 측면에서도 연상녀연하 마 부부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의 임금이 더 높은 가정도 늘어날 것이고, 여성이 취업을 하고 남성이 가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남녀 성역할의 역전이 일어나는 남성전업주부 가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노인부양가족의 감소와 조손가족의 증가

전통적으로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는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노동유연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성인의 경제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들이 경제구조나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실직을 할 경우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노부모들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김두섭 외, 2005).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를 경제적으로 돌보는 가족이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의 노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부양 능력은 줄어들어 3세대 이상의 가족 형태는 감소하는 반면, 노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대리부모 역할 수행의 가능성은 늘어나서 조손가족은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5. 다문화 가족의 증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 인력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어가면서 3D 업종에서 일할 외국의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내 이주노

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비율 증대로 다문화 가정이 2008년 14.4만 세대에서 2030년 53.8만 세대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박종현, 2010).

6. 가정과 일터의 융합

산업사회의 노동조직이 일터와 가정의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에는 가정과 일터의 융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과정 및 생산관리체계는 생산력 제고와 함께 노동의 형태를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로 변모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여성의 취업률을 현재보다 높이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케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맞벌이 가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 예견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일상적 생활시간 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 집과 직장 어디에서 일하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면서 자유분방한 사고와 새로운 일터 개념이 정착되어 갈 것이고 결국 유연한 노동성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늘어나 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율의 감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는 노동시간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가정의 일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재택근무의 활성화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직업 활동도 보다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직장으로 인해 분거가족이 되어

야 했던 경우에 재택근무는 가족의 주거지 결합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5절 가족 가치관과 가족구조 변화 전망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되며 개인의 삶은 이러한 선택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마주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유형과 탄탄함의 정도는 개인의 삶과 나아가 공동체의 존재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은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체계이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가치관이란 개인이 가족과 관련된 삶의 방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주체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신념체계로써 잠재적인 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 사회·국가민족 등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족 가치관은 행동지향적으로 발현되어 집단적·현재적 형태의 가족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유계숙·유영주, 2002; 정창우, 2007, 재인용). 한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 중에 특히 결혼가치관, 자녀·출산관련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가치관 및 성역할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가족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결혼가치관의 변화

인간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롭게 창조된 가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킨다(김혜선·박혜인·옥선화, 2002). 결혼관이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김경신·이선미, 1998)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 사고관의 영향으로 가족생활에서 혈통을 중시한 바, 전통적으로 조기에 결혼하였으며 출산은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왔다(Kwon, 1997; 이삼식, 2005, 재인용). 급속한 도시화·사회화·산업화 과정에서도 가족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결혼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김혜선·신수아, 2002).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의 의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서구에 비하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자녀와 가족 중심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상당히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있으며 일정 연령이 되면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손승영, 2001; 손승영, 2005, 재인용). 이에 더해, 최근의 결혼이나 출산문화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두고 가족 규범이나 가치의 약화로 해석하려는 의도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은기수(2005)는 비교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가족가치가 아직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치관에 관한 단편적인 설문항목으로 한국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족가치가 약화되었다거나 저출산이나 결혼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

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5-54세의 비혼일인가구를 조사한 김혜영 등(2007)의 연구에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자들이 이혼자들이나 사별자들에 비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동조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종래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은 분명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은 가족 형성의 지연이 미혼남녀의 가치관 변화 및 결혼 규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혜영, 2008; 유삼현, 2007).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이 25세-35세 미혼 여성 9,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절반(49%)에 불과했다(여성부, 2003). 또한 미혼 남녀의 결혼가치관을 분석한 김승권(2004)의 연구에서도 미혼 남녀의 29.1%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남성(19.4%)에 비해 여성(41.6%)이 두 배 이상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44세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결혼을 “만드시 해야 한다”는 숙명적인 태도의 비중이 남성 23.4%, 여성 16.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하는 편이 좋다”라는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태도의 비중은 남녀 모두 46%에 머물렀다.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진미정과 정혜은(2010)의 연구에서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98년 33.6%에서 2008년 23.6%로 약 10% 감소하여 강력한 사회적 규범으로써의 결혼의 당위

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결혼을 둘러싼 여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과거의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보다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김경신·이선미, 1998; 이삼식·정윤선·김희경 외, 2005).

Cherlin(2010)에 의하면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두 번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변화되어 왔다. 첫 번째는 Burgess와 Locke(1945)가 분류한 것으로 법, 제도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결합이 강조되는 제도적 결혼(institutional marriage)에서 동료애, 우정,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는 동반자적 결혼(companionate marriage)으로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1960년대 이후 동거, 맞벌이, 이혼 및 혼외출산이 증가하면서 개별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결혼은 부부관계에서 역할이 유연해지고, 두 사람 간 협상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자아감의 발달이 중요한 만족의 척도가 되는 결합을 의미한다(정현숙, 2011)

한편 1980년대 이후 혼인관련 연구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결혼가치관의 변화를 정리한 박민자(2004)는 첫째,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개인들에게도 빠르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 결혼이 선택되고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르고 있고, 셋째, 개인의 욕구나 가치가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애정은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박민자는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혼인에 대한 가치는 제도적 결혼에

서 우애적 혼인의 의미로 변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는 결혼의 의미를 개인의 성장, 자아실현 등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 즉, 관계를 통한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출산 자녀 중 1/2이상이 혼외 출산 자녀로서 동거가 아동양육을 위한 표준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다. 특히 동거가 보편화된 스웨덴의 경우, 자녀의 55% 이상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가지고 있고, 함께 사는 부부의 75%가 동거부부로서 동거가 실험결혼이라기 보다는 정상결혼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동거가 많은 것은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부부(couple)는 결혼한 부부와 합의에 의해 함께 사는 부부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서로 결혼생활과 같은 관계를 가지며 같은 집에서 산다면 합의에 의한 결합으로 파트너로 이해되어야 한다.”(UN/ECE, 1998, p. 71, 정현숙, 2011에서 재인용)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혼율의 감소와 동거의 증가에 대하여 정현숙(2011)은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생의 과정으로서의 선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결혼제도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앞으로 결혼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이 강조되고 파트너와 관계 맺는 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 전망되며, 그 결과 동거 혹은 LAT(Living Apart together) 등 결혼의 대안적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Goode(2010)는 가족이란 사람들 간의 특별한 관계(family as a special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people)라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Giddens

(2010)는 미래에는 결혼했느냐(are you married?) 보다 파트너가 있느냐 없느냐(coupling과 uncoupling)가, 나아가 “그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how good is your relationship?)”가 개인의 삶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때 좋은 관계란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로서 그 핵심은 정서적 소통(emotional 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Giddens와 Goode 모두 관계, 순수한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수하고 특별한 관계에서는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이러한 기대가 돈과 재화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게 하며, 개인의 애정과 동료애의 욕구를 포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미래에도 상호지원적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정현숙, 2011).

미래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동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함에 따라, 더불어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결혼여부보다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이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 결과 혼인율은 지금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속적으로 정서적 소통과 친밀감을 공유할 수 있는 순수하고 특별한 관계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그 결과 동거관계이든 결혼관계이든 관계 맺음의 방식은 다양해질 것이나 결혼 관계 내지는 결혼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2. 자녀 및 출산 가치관의 변화

출산 혹은 자녀와 관련된 가치관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녀를 재산적인 가치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유지되던 다산현상은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다(유영주, 1988; 이삼식, 2005, 재인용). 이 같은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어, 아이를 낳는 것을 사회적 책무로 여기기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장혜경 외,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5세~49세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1991년 90.3%에서 1997년 73.7%, 2000년 58.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의 비율은 1991년 8.5%에서 2000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04; 손승영, 2005, 재인용). 즉, 10년 사이에 기혼 여성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자녀 중심적 가치관이 부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앞으로는 가족의 형성 및 해체에 있어 가족관계의 심리적이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출산의 선택 역시 과거보다도 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 선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Giddens, 2010).

종합해볼 때 결혼 및 자녀·출산의 변화 실태는 한국 사회의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당위의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나 배우자 및 자녀의 정서적 가치 등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진미정·정혜은, 2010).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혹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노후에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려는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 가족형성, 그리고 자녀출산은 개인의 행복추구적 과업으로써 그 의미가 “마땅히 해야 하는”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원하면 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 특히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구에 의한 선택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래 사회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개인의 가치관과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기존에 통용되는 결혼 적령기 개념에서 다소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험결혼(trial marriage)이나 브로커를 통한 결혼(brokered marriage), 생애파트너(life partners)관계, 경제적 결합(economic unions) 등 동거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음의 방식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출산에 있어서도 부부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와 여성의 직업의식 강화에 따라 소자녀 혹은 무자녀에 대한 선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절 세계화의 진전과 가족구조 변화 전망

세계화(globalization)는 전지구적 차원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제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인들 간의 상호작용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과 그 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사람들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인터넷, 미디어, 대중문화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교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가족을 둘러싼 삶의 영역이 재정의되고 있다.

미래 사회에는 세계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가구의 탈가족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탈가족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인구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래 사회로 갈수록 근무지의 세계화, 혹은 학업을 이유로 외국에서 머물게 될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국외에 거주하는 국외 분거가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한국의 분거가족의 형태가 국내 분거는 줄어드는 반면 국외 분거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결혼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이에 있으며 특히 결혼이민자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는 한국 가족의 변화 중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및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앞으

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박중현, 2010).

한편, 세계화가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데에 상응하여 치르게 될 대가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세계화의 경쟁체제에서 앞서가기 위해 정부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집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지원혜택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산층은 약화되고 계급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빈곤의 위험에 처하는 가족이 늘어나면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다.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세계화를 통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전 지구적인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은 모든 국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라는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가족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발전적 방향의 사회통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가족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가족은 사회재생산의 기초단위이자 사회화의 핵심기제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는 기본단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의 변동과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가족과 관련하여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양한 변화가 하나의 변동요인이나 한 분야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다양한 측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가족 이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다면적 관점과 새로운 시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체계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서로 다른 측면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절 국가적 맥락, 그리고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가족정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족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면서도 각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상이성은 각국의 사회적 혹은 가정 내 양성평등 수준이나, 동거와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 정도, 그리고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정책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일한 가족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 혹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 예로 모성 취업에 대해 수용적이고 아동의 조기사회화가 중요시 되는 프랑스나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취업모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육정책의 강화가 국가적 문화 및 규범과 잘 들어맞아 출산율의 증가라는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영아의 조기사회화가 전통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정책의 효과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에서 성공한 가족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미래 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가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 사회적 분위기, 태도 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가족이 가지는 수요 및 요구사항들은 정부 혹은 정책 책임자가 인식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면 그것은 정작 가족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정책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통합적이어야 하며,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가족들에게 적용되기에 충분할 만큼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맥락이 중앙 내지 지방 정부 차원의 가족정책에 반영되고 고려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수립의 과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Alliance for the Family 산하 Local Alliance for Family를 통하여 가족정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역주체들(고용자, 기업, 보육서비스 제공자 등)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주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다룬다. 프랑스 또한 중앙정부와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7년간의 계약을 통해 지역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OECD, 2008).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여 자칫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책무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각 주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2절 가족의 자원 및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정책 수립

지금까지의 가족정책은 대부분 가족이 당면한 문제(예, 아동빈곤, 이혼, 맞벌이 부부의 부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일방적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이 (그리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강점을 활용하여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가족 구조가 더욱 다양화 되어 하나의 정책을 통해 모든 가족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가족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가족정책은 가족이 그들의 목표를 스스로 이루는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가족문제가 가족 자체의 책임으로 치부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정책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정책을 강조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족을 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전문가로, 그리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정책이 진정으로 가족을 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에 있어 가족은 정책전문가들의 동반 입안자가 되어야 한다. 즉, 정책입안자, 정책 조연을 위한 전문가,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족정책입안 과정에 있어 가족을 개입시키고 그들과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며,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가족정책이 가족 전문가와 가족 사이의 간

격을 좁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을 구상하는데 있어 가족과 그들의 경험을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은 가족정책이 대면하게 될 과제들(예, 불안정한 직업, 가족 내 가치갈등, 직장에서의 차별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OECD, 2008). 이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지역적 맥락과 상황에 알맞은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가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가족 정책을 수립할 때, 기존의 가족정책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많은 국가들은 가족에 대하여 분산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분야마다 고유의 지식이 있고 선호하는 개입방법이 있기 때문에, 분야 간 경쟁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가족은 그 사이에 끼어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OECD, 2008) 가족들에게 단순히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아동 빈곤율을 줄이거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여러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들을 조화, 일치시키며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전문분야 간의 협력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족 정책은 가족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전문적 지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원스톱 쇼팽”인데, 이것은 지역별로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곳에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 및 전문 서비스(예, 상담, 교육 등)를 모두 모아놓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언제든지 한 번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통합 및 조화 또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공되고 있는 혜택이 특정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거나 그 가족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 장애를 가진 가족의 서비스 센터 접근 문제)이다. 따라서 가족을 정책 파트너로서 인지하여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제4절 가족 내 성평등 구현을 위한 가족정책 도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취업모 지원 및 보육 시설 지원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족정책은 여성이나 아동이 그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는 ‘성평등’의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방

향으로, 정책에서부터 명시적으로 취업모를 주로 다루고, 직장과 가사일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또한 그 대상이 대부분 여성으로 한정되면서 육아, 더 나아가 가사일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보여준다. 게다가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할당된 휴직 가능 기간의 격차가 너무 커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이후로는 직장에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생각하였을 때, 가족정책이 앞으로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성평등 보너스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성평등 보너스를 도입하여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을 가진 부부에 대하여 최대한의 보너스를 지급한다(OECD, 2008).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발전 된다면, 취업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가정 내 역할분담에 있어 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5절 가족이 중심이 되는 관점 도입

가족정책이란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규칙 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족정책은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은 가족 정책에 둘러싸여 있

고, 정책에 의한 영향을 가족이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족정책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이 되려면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관점을 적용하여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업수당의 예를 들면, 만약 한 가족의 가장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시간제 직업을 얻게 되어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 수당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만약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을 통해 벌 수 있는 수입이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적거나 적절한 생활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 결국 그 가정의 삶의 질은 실업 전보다 더 낮아지고 심지어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살고 있던 집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직업 아니면 집을 선택해야 하는 이러한 정책은 결코 가족중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가족 중심적인 방향으로 조율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필요와 요구가 정책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가족이 정책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가장 적절한 가족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미래의 가족정책이 가족이 중심이 되는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정책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족정책분류체계의 활용을 통해 정책이 어느 정도로 가족중심적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중심적인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나아가 정책입안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분류체계 하에서 가족 정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가족이 조금이나마 인식이 되고 고려된 ‘가족에 민감한’ 정책, 가족에 대한 정책

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한 ‘가족 지원적’ 정책, 그리고 가족의 안녕(well-being)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중심을 가족에 두는 ‘가족 중심적’ 정책 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족정책에서 가족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의 영향, 연관성, 그리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예측하는 것으로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도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이 가족에게 가지고 올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소이며, 단순히 담론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정책입안 과정에서의 가정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절 보편적 가족정책 도입

가족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의 상당수가 그 대상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가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은 취약한 가족들을 찾아내어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가족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점점 더 비구조화 되어가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기에, 각각의 유형의 가족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루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므로, 앞으로는 모든 가족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

편적인 가족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족이 중심이 되는 가족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족을 지원하며, 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실현 가능하다.

제7절 자산조사(means test) 가족정책을 대신하는 추정적 정책 도입

자산조사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가족들이 스스로 그들이 취약하며, 따라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족 정책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필요를 증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며, 수치심을 안겨 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적극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가족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 자산조사 정책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정적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추정적 정책이란 가족의 요구와 필요성이 드러나고 인식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또는 현재의 가족이 특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에 중점을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가족정책이 더 광범위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게 한다.

제8절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

날로 새로워지는 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걸 맞는 미래 지향적 가족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에 입각하여 가족 및 가구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관한 통계자료 구축조차 미흡한 상태이다. 그 결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적 가족 데이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9절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미래 한국 사회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가족이 등장할 것이라 전망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가족형태는 기존의 가족이 제공하고 있던 재생산을 둘러싼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삼식, 정경희 외 2010). 즉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약화, 가족 안정성의 감소, 일가족양립문제의 심화, 안정적 소득원으로서의 가족기능 약화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기능인 재생산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출산과 양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은 사회제도로써 가족만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다(강홍렬 외, 2006). 이 기능은 미래

가족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축소되더라도 다른 제도로 이행할 수 없는 기능이다(이삼식, 정경희 외 2010). 따라서 어떤 ‘가족’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분석하여 재생산 기능을 수행할 가족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하는 가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http://laborstat.moel.go.kr/>
- 강홍렬·장혜경·김혜영·김영란 외(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 - 가족기능변화와 미래가족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경향신문(2011. 01. 21). 『프랑스,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정부의 튼실한 가족정책 결실』
- 오세홍(2005). 『미래사회 전망과 한국의 과학기술 - 미래변화모습』, 한국산업기술재단
- 국민일보(2011. 7. 14). 의료계, 스마트케어로 바뀐 원격진료 추진에 반발.
-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두섭(2008). 『출산수준과 사회경제적 차별 출산력의 최근 변화』, 제1회 저출산대책포럼 발표 논문.
- 김미숙·장화경·홍미(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 -미래 가족의 정서적 기능 변화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김성국(2004).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1-34.
- 김은지·김수정·민현주·정수연(2010). 『저출산 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세(2010). “다문화가족의 의의와 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37: 1-19.

- 김혜선·박혜인·옥선화(2002). 『가족관계학』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혜선·신수아(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연구-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국가정학회』, 40(3), 41-53.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2007). “정보사회와 가족의 구조변동”, 『사회변동과 여성주체의 도전』 서울: 굿인포메이션.
- 김혜영(2008a).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55-94.
- 김혜영(2008b).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
- 데일리안(2009. 10. 13). 『여성은 더 똑똑해지고 가정은 갈수록 분화된다』
- 동아일보(2009. 03. 04). 『육아휴직? 육아해직! 신청자수 ‘쏟아질 상승곡선』
- 동아일보(2010. 09. 02). 『따뜻한 과학기술 시대를 열자』
- 매일경제(2010. 03. 26). 『‘연상녀-연하남’ 커플비중 역대 최고』
- 머니투데이(2010. 5. 11). 『‘1인 1휴대폰’ 시대 열렸다』
- 미국 통계청. <http://www.census.gov/>
- 박민자(2004).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종현(2010). “미래사회 변화전망과 IT 산업의 기여방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5(2): 152-162.
- 박홍식(2009). “국제화 시대에 있어 한국가정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4: 219-233.
- 변화순·최윤정(2004). 『가족정책 방향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서울신문(2011. 7. 27). 『韓 초고속 무선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 세계일보(2010. 1. 14). 『유엔 전자정부 평가... 한국, 첫 세계 1위』
- 손승영(2005a).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동덕 여성연구』, 10: 5-25.

- 손승영(2005b).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양명숙(1996). “예비 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 대전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연합뉴스(2008. 1. 28). <AsiaNet> 8억 7500만여 소비자, 온라인으로 쇼핑.
- 유삼현(2007).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 윤홍식(2004).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월간 복지동향.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2005(4): 25-35.
- 이삼식(2005).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38.
- 이삼식·정경희 외(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송(2003). “여성의 개인주의 확대와 가족변화: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5(3): 111-134.
- 이현옥·김양희·이경희(1994). “결혼비용 지출 실태 및 의식조사”, 『가족문화논집』, 8: 183-202.
- 인천일보(2011. 7. 8). 고령화사회의 과제.
- 임인숙·김수영·최은정·이동주(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 미래 가족의 재생산 기능과 변화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장혜경 외(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 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 전광희(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 『사회과학연구』, 16: 211-236.
- 전자신문(2009. 7. 29).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거래 34.6%』
- 전자신문(2010. 8. 23). 『내달 중순 스마트폰 뱅킹 100만 시대 열린다』

- 전자신문(2010. 12. 6). 『지금 코리아는 초스피드 ‘스마트화’』
- 정창우(2007). “가족 가치관의 혼란과 새 윤리 정립을 위한 도덕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24: 87-116.
- 정현숙(2011). “가족의 혁명적 변화와 대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55-70.
- 조명덕(2010). “저출산 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 주간한국(2011. 7. 27). 『다양한 결혼, 가족을 바꾼다』
- 중앙일보(2011. 3. 8). 『의료비 30% ... 노인이 쓴다』
- 중앙SUNDAY(2011. 7. 23). 『IT와 ET융합·교통·의료·치안 등 모든 일 자동 통제』
-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 『2010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최연선(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6(3): 161-170.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통계청(2010a).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0b).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2010c). 『2010 혼인통계 결과』
- 통계청(2010d).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 통계청(2011). 『201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
- 한국경제 매거진(2011. 6. 29). 『노동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자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우리나라의 가구변동과 그 전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한국일보(2009. 05. 15). 『미국 신생아의 40%가 '혼외 출산'... 결혼 기피현상 늘어』
- 한국정보통신진흥원(2010). 『2010 국가정보화백서 요약본』
- 함인희(2000). “국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12(3):

헤럴드 경제(2010. 03. 31). <제3의 인생> 평균수명 100세 코 앞에...“22세기를 즐긴다.”

SBS뉴스(2011. 02. 01). 『프랑스 출산율이 늘어난 비결』

KT경영연구소(2008). 『디지털 시대의 한국 가족과 가족생활』

Andersson, G., & Philipov, D. (2002). Life-table representations of family dynamics in Sweden, Hungary, and 14 others FFS countries: A project of descriptions of demographic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7, 67-145.

Cherlin, A. J. (2010). Demographic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Research in the 2000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403-419.

Comscore. <http://www.comscore.com/>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2007). Research note: Household patterns. European Commission.

Giddens, A. (2010).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16th ed.)(pp.27-33). Boston: Allyn&Bacon Pub.

Gittins, D. (1985). *The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Basingstoke: Macmillan.

Goldstein, J. R., & Kenney, C. T.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506-519.

Goode, W. J. (2009).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the family.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16th ed.)(pp.15-27). Boston: Allyn&Bacon Pub.

Heuveline, P., & Timberlake, J. M. (2004). The role of cohabitation in family form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1214-1230.

Kennedy, S., & Bumpass, L. (2008). Cohabitation and children's living arrangements: New estimates from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Research*, 19, 1663-1692.

Kumagai, F. (2010). Forty years of family change in Japan: A society experiencing

- population aging and declining fertili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81-610.
- McLanahan, S. (2004). Diverging destinies: How children are faring under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Demography*, 41, 607-627.
- National Institute on Aging (2007). Why Population Aging Matters: A Global Perspective.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 OECD(2008). 「The future of the family to 2030」.
- OECD(2009). 「2009 OECD Factbook」.
- OECD(2010a). 「Doing better for families」.
- OECD(2010b). 「2010 OECD Factbook」.
- Reichman, N. E., Teitler, J. O., Garfinkel, I., & McLanahan, S. S. (2001). Fragile families: Sample and desig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3, 303-326.
- Sigman, A. (2009). Well connected: The biological implication of social networking. *Biologist*, 56(1), 14-20.
- Tyler B. J. (2011). We're not living together Stayover relationships among college-educated emerging adul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4), 536-557.
- Waite, L. J. (2009). The changing family and aging popula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 341-346.
- www.un.org/esa/socdev/family/Publications/mtdesilva.pdf/ (2011. 08. 05). Demographic and social trends affecting families in the south and central Asian region.
- Therborn Göran(2001), "On the Politics and Policy of Social Quality," in Beck, W et al, eds.,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e*, Kluwer Law International.



제 12 편

소득불평등 Shadow

연구책임자: 석재은(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구고령화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반한다. 그 중의 하나는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경제의 세계화 및 자동화 기술발전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의 감소,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으로 후기산업 사회로 올수록 소득분배 악화, 양극화가 중요한 국가적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인구인 근로연령층이 감소하고 비생산인구인 노령층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생산자원의 총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자원이 개인 및 가구단위로 분배되는 양상에 있어서도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생산인구인 노령층의 경우 임금 및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근로소득이 현격히 감소하게 되므로 생산참여에 따라 1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소득 분배에 있어 노령층의 증가는 소득 분배 구조를 상당히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노령층의 경우 시장에

서 분배되는 근로소득이 현격히 감소하는 대신 그 자리를 공적이전 소득,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 등 다른 소득원들이 얼마나 적절히 잘 대체해주는가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즉, 비생산인구인 노령층의 소득이 근로소득 이외에 여타 소득원에 의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확보되는가는 전체적인 소득분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구고령화는 노인부부가구, 노인단독가구 등의 급속한 비중 증가로 가족구조도 변화시키게 됨으로써 가구소득으로 소득분배구조를 파악하는 상황에서 가구구조의 변화는 노령층의 직접적인 소득 감소와 함께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등 비근로 빈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요인이 소득분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화에 따른 어떤 요인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구고령화와 소득분배구조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명재(2001, 2005), 임병인·전승훈(2005), 원종학·성명재(2007), 성명재·박기백(2009)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성명재(2001)는 최근 노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노인인구 증가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 비중 증가가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임병인·전

승훈(2005)은 연령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소득 불평등도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불평등도 악화에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명재·박기백(2009)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1982년에서 2008년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평균소득과 인구비중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변이제공계수(SCV)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1982년부터 1994년 간에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0에 가깝지만,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구구조와 소득분포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각각 14.9%와 85.1%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에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성명재·박기백(2009)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다음의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노인가가 1인 가구에 다수 포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고령화 요인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분석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시계열 확보를 위하여 전체가계조사자료 대신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고령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이 제외되어 고령화 요인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 분석에 역시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인구구조와 소득이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하였지만, 만약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연령코호트별로 평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소 다른 결과 도출 가능성이 있다. 넷째, 연령별 인구의 구성만을 기준으로 하

고 다른 인구구조 변화 요인, 예컨대 인구전망치를 가구구조 변화 혹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에 대한 감안 없이 단순 연장하여 추정하고 있다. 다섯째, 소득을 시장소득으로만 분석하여, 연금제도 등 이전소득 성장에 따른 고령화 요인의 소득분배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는 현재 활용가능한 자료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극복가능한 문제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국의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한국노동패널 wave 2-wave12(1999~2009년) 11개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선택하였다. 성명재·박기백(2009)의 연구에서 1994년 이전에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는 도시가계조사자료보다 짧지만, 1인가구와 도시 및 농어촌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코자 하였다. 분석자료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노동패널자료 전체가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1개년간의 연도별 횡단면 비교의 의미를 가지므로 연령효과 및 동년배(cohort)효과가 개재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동일 집단이므로 연령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연령코호트별 소득의 추이 및 소득원 구성의 추이를 분석하여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코호트별로 차이를 보이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8년 기준 50~59세 자료만 선별하여 각세별로 소득액 및 소득원 구성이 연차별로(1999~2009)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관찰하여 분석하였는데, 11

년간 소득자료가 모두 있는 자료만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 가구가중치 적용은 필요 없고 해당 집단의 연령증가에 따른 순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분배단계에 따라 1차 시장소득, 2차 시장소득+이전소득(=총소득), 3차 시장소득+이전소득-조세 및 사회보험료부담(=가처분소득)의 개념에서 소득분배구조를 살펴봄으로써 공적연금제도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정책이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소득원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으로 정의하였다.

넷째,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비교를 위하여 Luxembourg Income Study(LIS) WAVE VI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득기준은 각국의 화폐기준이며,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이며, 근로연령층은 25~64세, 노령층은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제1절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연구

인구고령화와 소득분배구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명재(2001, 2005), 임병인·전승훈(2005), 원종학·성명재(2007), 성명재·박기백(2009)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성명재(2001)는 최근 노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여 노인인구 증가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 비중 증가가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인 지니계수를 상승시킨다는 것을 밝혀내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간의 가중치 합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단순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각 연령집단 간 상대소득 격차의 변동에 의한 효과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구분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성명재(2005)는 가구소득분포가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경

험적 사실을 토대로 소득이행규칙을 도출한 후 이로부터 가상패널을 구축하고 고령화요소를 감안하여 상대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전체 하에 미래 시점에서의 횡단면 자료와 패널 자료를 가상적으로 생성하여 생애소득분포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임병인·전승훈(2005)은 노동패널 1차부터 6차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별 집단의 소득 불평등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연령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소득 불평등도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득불평등도 악화의 고착화에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연도별 소득평균과 지니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이용하여 연령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60~65세 미만의 연령집단의 소득불평등도는 1998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연령집단은 1998년에 비해 1999년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70세 이상 집단에서도 1998년부터 악화되다가 2002년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5분위 배율은 지니계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0~65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5분위 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5분위 배율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니계수 증가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 2002년 5분위 배율은 2001년에 비해 커졌으나, 그에 비해 해당연도의 지니계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다. 이는 해당연령의 중간소득층이 전년도보다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는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약 10%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지니계수 역시 전체 불평등도에 30~40%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은 전체소득불평등도에 50%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연령집단의 소득이 고연령집단의 소득보다 높거나 반대의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원종학·성명재(2007)은 연령계층간 시장소득의 분포변화를 계산하고 있는데, 최근 상대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연령집단 간 지니계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2000년부터 2006년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 효과 중 약 2/3 정도는 고령화 효과에 의해 초래된 부분이 크며, 나머지 1/3 정도는 인구외적 요인 또는 경제적 요인(생산성 격차, 실업률 변화, 임금 격차 확대, 비정규직 비중 확대 등의 변화)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명재·박기백(2009)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1982년에서 2008년의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평균소득과 인구비중이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변이제곱계수(SCV)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시계열 자료 확보를 위해 2인 이상 도시가계조사자료 활용하였다. 정부에 의한 재분배 이전의 '시장소득'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연령별 평

균소득과 인구비중이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변이제공계수(SCV)를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주요한 분석내용으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를 전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효과는 1982~1993년 사이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94년 이후 효과가 가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반기(1982~1994년)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SCV 변화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소득 변화에 의한 SCV 변화는 항상 음의 값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절대값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82~1994년 동안 소득분포 구조 자체가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시켜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후반기(1995~2008년)는 고령화로 대변되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SCV 변화가 양의 값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절대값도 커지고 2008년에는 누적효과가 0.031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소득격차가 큰 고령연령층의 표본가중치가 비교적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반기에는 소득분포 변화에 의해서도 상대소득격차 또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SCV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7~1998년 경제위기 기간에는 소득분포구조의 일시적, 대폭적 악화현상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듬해부터는 본래의 추세선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에는 소득효과에 의한 SCV의 변화폭은 크게 둔화되면서 효과는 0.08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고령화 효과의 SCV 변화효과가 대체로 10%였으나 2000년대 이후 그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거의 30%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번째로 향후 소득분포 효과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안정화된다는 가상적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가계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하므로 인구분포의 변화를 가구구조의 변화로 변환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래의 연령대별 인구 및 가구분포 구조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2인 이상 도시가구에 한정하였다. 추정에는 연령별 추계인구 전망치, 가구수 전망, 가구당 평균가구원수, 연령대별 가구주비율(가구주율) 등이 사용되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분배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년을 기준으로 2018년에는 SCV가 2008년 대비 7.5% 증가하며, 2028년, 2038년, 2048년에는 각각 14.9%, 21.8%, 26.4%로 상승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CV는 계속 상승하지만 상승폭은 각각 7.5%p, 7.4%p, 6.9%p, 4.6%p로 체감한다.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령가구 비율이 상승하지만 고령가구 비율의 증가율은 체감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 정리하면, 1982~1994년 기간에는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0에 가깝다. 반면 1994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구구조와 소득분포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은 각각 14.9%와 85.1%로 추정되었다. 모의실험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SCV는 2018년의 경우 2008년 대비 7.5%, 2050년에는 27.5%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2절 소득불평등도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여유진 외(2005)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와 가구소비실태조사 및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빈곤 및 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분해 방법을 통하여 빈곤 및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 국가들의 빈곤동향과 빈곤지수를 분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위가처분소득 50% 기준으로 측정한 상대빈곤율은 1996년 8.7%, 2000년 13.0%, 2003년 15.5%로 상승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중위가처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도 2001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04년 현재는 1998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로 분배수를 이용한 불평등 추이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 1996년에 비해 2003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배율은 1996년 4.29배, 2000년 6.01배, 2003년에는 6.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8.72%, 2000년 6.94%, 2003년 6.1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1996년 0.278에서 2000년 0.331, 2003년 0.34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는 1996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0.47, 0.51, 0.51로 변화하였고, 사업소득은 0.77, 0.81, 0.82, 재산소득 0.91, 0.87, 0.94로 집중도가 높아진 반면, 이전소득은 0.92, 0.89, 0.85으로 집중도가 낮아졌고, 또한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0.64, 0.55, 0.51로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다. 총합적으로 가처분소득의 지니

계수는 0.28, 0.33, 0.34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연령별 엔트로피분해(GE(0)) 결과는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97.5%에서 2000년 96.7%, 2003년 95.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약간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는데, 1996년의 경우 29세 이하의 집단내 불평등이 0.1100인 반면 60세 이상은 0.3225로 29세 이하에 비해 2.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비교에서 지니계수의 경우 지난 1970~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지거나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민주의 국가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에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나 10분위배율의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들,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조합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불평등도 악화되었으며, 원인으로는 1990년대 정점에 달했던 유럽 대륙 국가들의 고실업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의 불평등도가 매우 높았다.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분배수준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유사한 기간 동안 가장 불평등이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1996년의 지니계수는 대만, 독일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2003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0.327과 0.337로 크게 높아졌다.

신동균·장지연(2010)은 양극화는 소득불평등과 상이한 독자적 개념을 가진다는 인식하에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으로 알려진 조세와 공적 소득이전제도가 양극화 해소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 재분배정책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정도에 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도는 훨씬 작는데 비하여 북유럽국가나 서유럽국가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지니계수 감소와 양극화지수 감소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로 작동하였다. 둘째, 소득이전정책은 조세정책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군 간에 차이점은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소득이전정책과 조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공적소득이전을 소득 최하위계층에 집중시키는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함의를 발견하였다.

제1절 분석자료

1. 한국노동패널 2~12차(1999~2009)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노동패널 2~12차(1999~2009)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KLIPS) 사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비교적 관점에서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는 대표성은 더 높지만 2006년 이후에야 1인 가구, 농어촌지역 포함한 자료 생산하고 있어 고령화효과를 관찰하기에는 관찰기간이 짧다. 동일 패널도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한국복지패널도 패널 5차년에 불과하여 고령화 영향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노동패널은 전국적 대표성도 갖추고 있으며,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98년부터 12년간 패널자료로 구축되어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각종 패널자료 중 동일인구집단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1998년도 소득 자료

값에 문제가 발견되어 1999~2009년 11개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 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노동패널자료 전체가구자료 활용하였다. 패널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1개년간의 연도별 횡단면 비교의 의미를 가지므로 연령효과 및 동년배(cohort)효과가 개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동일 집단이므로 연령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1998년 기준 50~59세 자료만 선별하여 각 연령세별로 소득액 및 소득원 구성이 연차별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관찰하는 분석은 노동패널자료 중 이들 집단의 11개년 간 소득 조사 자료가 모두 있는 자료만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 가구가중치 적용이 필요 없고, 해당 집단의 연령증가에 따른 순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소득은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그리고 총소득으로 구분하였고,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사적연금급여 소득이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그리고 기타소득의 합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총소득을 의미한다.

2. Luxembourg Income Study(LIS) WAVE VI

국제비교를 위해 Luxembourg Income Study(LIS) WAVE VI를 사용하였다. 분석단위는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연령층은 25~64세, 노령층은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소득기준은 각국의 화폐기준이며,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원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소득의 구성은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폴란드, 프랑스의 국가는 순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노령급여, 실업급여,

사적연금, 공적연금, 질병급여, 아동관련 급여, 가족휴가급여의 합으로 정의하였고, 나머지 국가의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 자영업소득, 노령 급여, 실업급여, 사적연금, 공적연금, 질병급여, 아동관련급여, 가족휴가급여의 합에서 소득세, 피고용인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순)시장소득은 순임금소득, 자영업소득, 사적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급여의 합으로 정의하였으며,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였다. 스위스는 개인 소득자료가 누락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2절 분석방법

1. 빈곤율(headcount Ratio)

빈곤율(headcount ratio)은 빈곤선 이하의 소득 혹은 지출을 가진 사람 또는 가구를 전체 인구 또는 가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빈곤은 신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절대적 빈곤과 사회의 기본 생활수준에 미달하게 되는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선 설정은 국가 간 연구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빈곤의 기준은 상대적 빈곤을 사용하였으며,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정의한다. 구체적인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균등화된 소득을 가진 개인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였다¹⁷⁾.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중위소득의 50%로 설정하고, 50% 이하를 빈곤

가구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가중치(가구원수)를 부여해 주어 가구단위를 인구단위로 환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빈곤(인구)율을 도출하였다.

2. 불평등지수

지니계수 분해 방법은 불평등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인구특성과 소득구성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인구에 따른 지니계수 분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집단간 지니계수(G_B)는 각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평균 소득으로 할당하여 계산한다. 집단내 지니계수(G_w) 역시 특정 집단내의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나열하여 지니계수를 도출한다. 이에 따라 각 집단의 마지막은 동일한 집단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 혹은 가구가 된다. 그러나 어떤 집단의 최고소득자(가구)의 소득이 차상위집단의 최저소득자의 소득에 비해서 클 수 있다.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G_o) 이다. 각 집단내에서 소득불평등이 없다면 집단내 지니계수(G_w)는 0이 된다. 또한 각 집단간의 소득불평등이 없다면 집단간 지니계수(G_B) 또한 0이 된다. 만약 어떤 집단의 최고소득자(가구)의 소득이 차상위 집단의 최저소득자(가구)의 소득보다 작다면 G_o 역시 0이 된다. 즉 G_o 가 작다는 것은 어느 집단의 최고소득자의 소득이 차상위 집단의 최저소득자의 소득보다 작은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집단간 소득의 차이가 확실한 것을 의미한다.

17) $Y^* = Y_i / \sqrt{s_i}$ (Y^* 은 균등화 소득, Y_i = i의 가구소득, s_i =i의 가구원수)

3. 소득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가구주의 연령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소득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방법은 어느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간의 차이와 동일한 집단의 시간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임병인·전승훈, 2005). 즉, 어느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집단의 특성 등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패널회귀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 및 확률 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판단해야 하는데, 데이터에서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오차항(u_i)에 대한 추론(inference)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표집을 모집단에서 무작위(random)로 추출된 표본이라면 오차항(u_i)은 확률표본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동패널은 전체 도시 노동자가구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이다. 따라서 노동패널 등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은 확률효과모형 사용이 직관적으로 타당하다(민인식, 2009). 또한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우스만 검증을 실시하여, 오차항의 확률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측치가 작으면 확률효과가 있다는 영가설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의 고령화와 소득분배 영향

제1절 연도별·연령집단별 소득변화 추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연령에 따른 시장소득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전체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946만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5.85%씩 증가하여 2004년 1,482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1,90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 평균 시장소득은 1,769만원이었다. 이를 연령집단별로 나눠보면 2009년 기준 40세에서 44세 이하 집단의 시장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의 시장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9년 1,058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1,856만원, 2009년 2,260만원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7.1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시장소득은 1999년에 비해 약 113.7%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집단의 1999년 가구 평균 시장소득은 70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1,075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에는 57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64세 이하 집단

의 시장소득은 연평균 1.77% 감소하였고, 1999년에 비해 2009년은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세에서 74세 이하 그리고 75세 이상 집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3.37%와 7.36%였고, 1999년 대비 2009년의 시장소득은 각 44.0%와 1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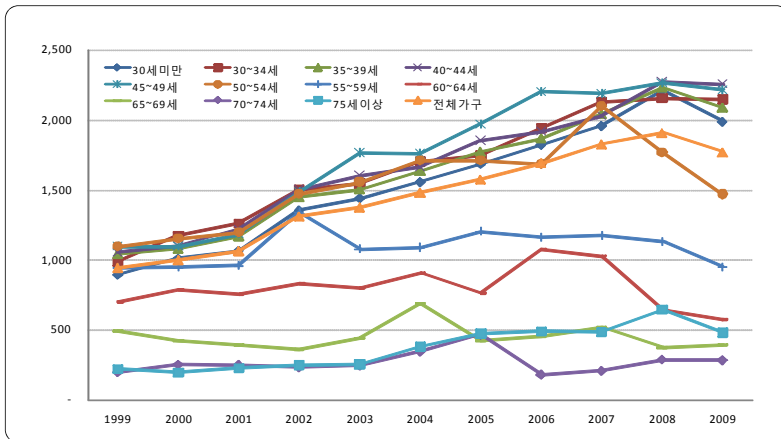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소득수준은 40~44세를 정점으로 하여 역 U자 커브를 보이는데, 중고령기에 접어들면서 55~59세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60~64세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며, 65세 이상에서도 큰 폭의 꺾임이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령집단의 시장소득수준은 전체평균 시장소득의 약 16~27%에 불과하며, 최고시장소득 연령집단인 40~44세 집단 대비 13~21%에 불과하다. 노령집단의 전체집단 대비 시장소득은 1999년 대비 2~3% 포인트 개선되었으나, 큰 변동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1〉 연도별·연령집단별 평균 시장소득

(단위 : 만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전기기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30세 미만	895	1,012	1,067	1,356	1,440	1,558	1,687	1,823	1,960	2,210	1,989	122.1	7.53
30~34세	989	1,176	1,264	1,503	1,547	1,705	1,749	1,941	2,129	2,156	2,147	117.1	7.30
35~39세	1,044	1,079	1,169	1,450	1,506	1,638	1,773	1,871	2,041	2,232	2,088	99.8	6.50
40~44세	1,058	1,104	1,221	1,506	1,606	1,667	1,856	1,921	2,034	2,277	2,260	113.7	7.15
45~49세	1,100	1,099	1,187	1,485	1,767	1,760	1,970	2,203	2,190	2,265	2,215	101.4	6.58
50~54세	1,098	1,154	1,197	1,473	1,557	1,711	1,711	1,686	2,100	1,767	1,471	33.9	2.69
55~59세	945	949	961	1,340	1,079	1,089	1,204	1,162	1,174	1,131	951	0.5	0.05
60~64세	703	788	759	831	802	905	764	1,075	1,028	645	578	-17.8	-1.77
65~69세	493	428	392	362	441	690	425	455	518	375	393	-20.4	-2.05
70~74세	198	253	250	233	246	345	467	178	207	288	285	44.0	3.37
75세이상	221	198	227	251	256	382	475	493	486	646	483	118.4	7.36
전체가구	946	1,002	1,064	1,312	1,377	1,482	1,577	1,692	1,827	1,909	1,769	86.9	5.85

[그림 4-1] 연도별 연령집단별 평균 시장소득



다음으로 가처분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전체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999만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1% 증가하여 2005년 1,705만원이었고, 2008년 2,10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1,983만원으로 나타났다. 45~49세 집단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는 10년간 연평균 7.88%씩 증가하였으며, 65~69세 집단은 연평균 3.71%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70~74세 집단의 연평균 증가율은 7.12%로 1999년 411만원에서 2005년 884만원 2009년 817만원으로 증가하였다. 75세 이상 집단의 연평균 증가율은 8.1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 가처분소득이 평균 394만원이었으며, 2004년에는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겨 1,098만원이었고,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 865만원이었다. 75세 이상 집단의 2009년 가처분소득은 1999년에 비해 약 1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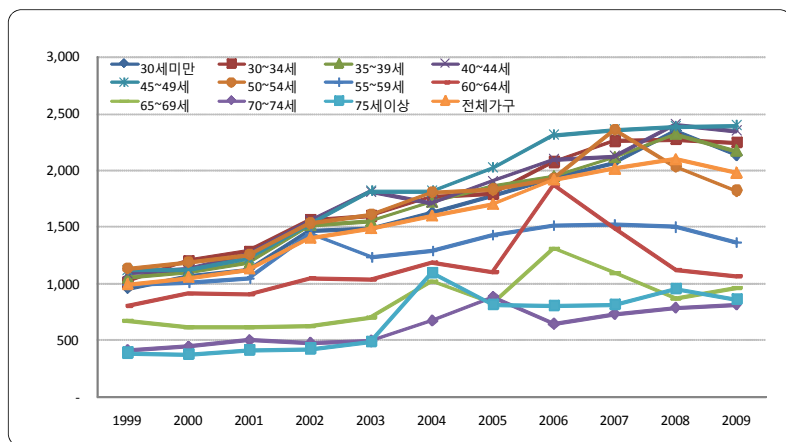
65세 이상 집단 가처분소득은 전체평균 가처분소득의 약 41~49% 수준이며, 최고가처분소득 연령집단인 40세 이상 44세 이하 집단 대비 34~40% 수준이다. 시장소득에 비해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험지출이 감안된 가처분소득에서는 노령집단과 전체집단 간 격차가 22~25% 포인트 감소하였다. 노령집단의 전체집단 대비 가처분소득은 1999년 대비 약간 개선되었는데, 전지노령집단에서의 개선 폭은 1.5% 포인트에 지나지 않았으나 후기고령집단의 경우에는 무려 8.3% 포인트나 개선되었다.

〈표 4-2〉 연도별 연령집단별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

(단위 : 만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전기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30세 미만	961	1,074	1,133	1,474	1,490	1,630	1,781	1,941	2,074	2,352	2,139	122.6	8.33
30~34세	1,023	1,207	1,294	1,566	1,604	1,769	1,794	2,077	2,262	2,276	2,250	119.9	8.20
35~39세	1,060	1,103	1,193	1,522	1,553	1,722	1,867	1,950	2,117	2,323	2,175	105.1	7.45
40~44세	1,092	1,130	1,258	1,554	1,813	1,716	1,908	2,096	2,130	2,409	2,356	115.6	7.99
45~49세	1,122	1,123	1,223	1,521	1,816	1,814	2,024	2,310	2,355	2,386	2,395	113.4	7.88
50~54세	1,139	1,191	1,259	1,535	1,613	1,807	1,833	1,926	2,358	2,032	1,822	60.0	4.81
55~59세	990	1,009	1,046	1,443	1,235	1,290	1,430	1,515	1,523	1,502	1,365	37.8	3.27
60~64세	807	915	911	1,054	1,042	1,192	1,105	1,873	1,493	1,122	1,069	32.5	2.86
65~69세	672	619	620	628	707	1,018	821	1,311	1,093	867	968	43.9	3.71
70~74세	411	446	503	479	494	675	884	645	737	788	817	98.9	7.12
75세 이상	394	382	420	432	491	1,098	821	810	820	958	865	119.3	8.17
전체가구	999	1,057	1,132	1,408	1,489	1,600	1,705	1,920	2,017	2,104	1,983	98.5	7.10

[그림 4-2] 연도별 연령집단별 평균 가처분소득



연령에 따른 1999년 이후 총소득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1999년 평균 총소득은 999만원이었으며 2003년 1,4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2,112만원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1,983만원으로 나타났다. 55세 미만 집단의 총소득 변화율은 10년 동안 연평균 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5~59세 집단은 3.25, 60~64세 2.85%, 65~69세 3.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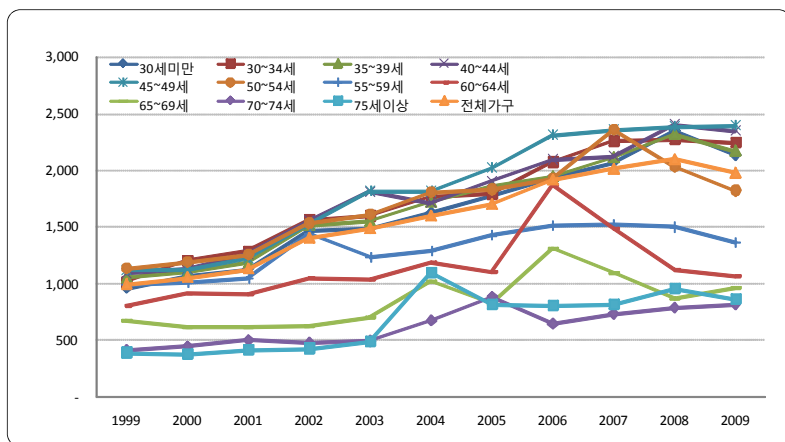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집단 전체소득은 전체평균 소득의 약 36~4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 49.2%이었고, 2002년 36.4%로 가장 낮았으며 2004년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44.5% 수준으로 1999년 대비 4.7% 포인트 악화되었다. 2009년 기준 전체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인 45~49세에 비해 65세~69세 40.3%, 70세~74세 34.1%, 75세 이상 36.0% 정도로 나타났다.

〈표 4-3〉 연도별·연령집단별 총소득

(단위 : 만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전기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30세 미만	961	1,074	1,133	1,474	1,490	1,636	1,788	1,949	2,083	2,363	2,140	122.7	8.34
30~34세	1,023	1,207	1,294	1,566	1,604	1,775	1,801	2,085	2,270	2,285	2,251	120.0	8.20
35~39세	1,060	1,103	1,193	1,522	1,553	1,727	1,874	1,958	2,125	2,332	2,175	105.1	7.45
40~44세	1,092	1,130	1,258	1,554	1,813	1,721	1,915	2,104	2,138	2,418	2,356	115.6	7.99
45~49세	1,122	1,123	1,223	1,521	1,816	1,820	2,031	2,319	2,364	2,396	2,395	113.5	7.88
50~54세	1,139	1,191	1,259	1,535	1,613	1,812	1,839	1,933	2,365	2,038	1,821	59.9	4.81
55~59세	990	1,009	1,046	1,443	1,235	1,292	1,433	1,519	1,527	1,506	1,364	37.7	3.25
60~64세	807	915	911	1,054	1,042	1,194	1,107	1,876	1,496	1,125	1,068	32.4	2.85
65~69세	672	619	620	628	707	1,019	822	1,312	1,094	868	967	43.8	3.70
70~74세	411	446	503	479	494	676	885	647	737	789	817	98.9	7.12
75세이상	394	382	420	432	491	1,100	823	812	823	961	864	119.1	8.16
전체가구	999	1,057	1,132	1,408	1,489	1,605	1,711	1,926	2,025	2,112	1,983	98.5	7.10

[그림 4-3] 연도별·연령집단별 총소득



제2절 연령집단별 소득원 구성 추이

2009년 기준 총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98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근로소득이 1,62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소득 116만원, 사적이전 소득 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소득원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60세 미만 집단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64세 집단에서도 총소득 1,068만원 중 근로소득이 448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비율은 근로연령층에 비해 낮았다. 65~69세 집단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연 29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70~74세에서는 사적이전 271만원, 공적이전 261만원 순으로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았다. 75세 이상 집단에서는 근로소득이 34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 228만원, 공적이전 15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령집단별 소득원 구성 추이

(단위 : 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총소득액	961	1,074	1,133	1,474	1,490	1,636	1,788	1,949	2,083	2,363	2,140
근로소득	852	976	1,021	1,310	1,411	1,508	1,641	1,762	1,872	2,137	1,924
자산소득	32	25	23	28	10	31	30	24	46	46	40
공적이전	5	9	3	2	4	2	4	5	8	15	16
사적이전	59	41	54	100	45	67	80	76	94	128	112
기타소득	1	12	9	16	1	9	17	46	23	10	23

(단위 : 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34세											
총소득액	1,023	1,207	1,294	1,566	1,604	1,775	1,801	2,085	2,270	2,285	2,251
근로소득	935	1,050	1,236	1,428	1,449	1,624	1,694	1,805	1,888	2,059	2,080
자산소득	31	113	16	51	75	55	41	77	157	64	41
공적이전	4	3	1	12	10	13	12	21	22	20	27
사적이전	16	24	14	46	39	52	40	101	75	49	38
기타소득	14	4	14	5	7	6	-	22	45	60	38
35~39세											
총소득액	1,060	1,103	1,193	1,522	1,553	1,727	1,874	1,958	2,125	2,332	2,175
근로소득	914	1,030	1,096	1,365	1,390	1,552	1,603	1,724	1,900	2,074	1,972
자산소득	50	17	37	61	82	50	115	103	119	145	87
공적이전	3	7	6	15	12	12	17	23	27	22	30
사적이전	9	10	15	28	20	51	84	39	55	49	44
기타소득	3	6	3	29	15	26	1	26	1	28	14
40~44세											
총소득액	1,092	1,130	1,258	1,554	1,813	1,721	1,915	2,104	2,138	2,418	2,356
근로소득	947	1,006	1,135	1,356	1,467	1,589	1,679	1,747	1,842	2,058	1,998
자산소득	59	39	56	131	104	69	161	157	169	168	249
공적이전	9	7	7	11	8	12	18	27	33	35	35
사적이전	19	12	19	17	118	18	30	56	61	101	53
기타소득	6	7	11	19	81	24	11	100	11	5	8
45~49세											
총소득액	1,122	1,123	1,223	1,521	1,816	1,820	2,031	2,319	2,364	2,396	2,395
근로소득	918	1,010	1,105	1,378	1,537	1,649	1,775	1,904	2,002	2,037	1,963
자산소득	87	50	60	81	155	94	173	194	160	171	165
공적이전	11	15	20	19	31	32	39	47	66	56	94
사적이전	9	6	11	13	12	13	23	35	58	46	67
기타소득	3	3	5	4	7	14	-	34	50	29	19

(단위 : 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54세											
총소득액	1,139	1,191	1,259	1,535	1,613	1,812	1,839	1,933	2,365	2,038	1,821
근로소득	924	1,026	1,045	1,313	1,421	1,474	1,513	1,495	1,506	1,476	1,304
자산소득	89	68	106	134	111	205	153	140	497	188	135
공적이전	20	23	31	41	39	65	75	113	140	172	242
사적이전	14	13	11	17	15	23	50	85	78	84	98
기타소득	7	-	20	4	1	13	3	49	47	14	10
55~59세											
총소득액	990	1,009	1,046	1,443	1,235	1,292	1,433	1,519	1,527	1,506	1,364
근로소득	785	786	834	890	903	892	907	882	895	813	722
자산소득	66	108	91	437	170	143	277	258	255	279	226
공적이전	15	34	46	68	101	109	138	173	189	210	238
사적이전	27	25	24	31	46	43	89	129	153	154	155
기타소득	3	1	14	5	8	51	2	55	11	10	21
60~64세											
총소득액	807	915	911	1,054	1,042	1,194	1,107	1,876	1,496	1,125	1,068
근로소득	602	628	598	641	621	624	533	560	522	505	448
자산소득	77	67	92	187	147	267	228	503	501	140	127
공적이전	47	75	97	158	147	166	161	207	230	256	280
사적이전	53	50	53	66	89	108	180	210	233	209	199
기타소득	3	2	2	1	3	16	2	384	5	14	11
65~69세											
총소득액	672	619	620	628	707	1,019	822	1,312	1,094	868	967
근로소득	335	333	281	249	273	271	249	259	236	262	204
자산소득	143	84	104	111	166	417	174	193	278	113	151
공적이전	61	75	86	121	135	165	188	203	232	242	294
사적이전	117	114	120	134	131	163	210	253	259	250	274
기타소득	2	1	21	10	0	1	-	400	86	1	6

(단위 : 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0~74세											
총소득액	411	446	503	479	494	676	885	647	737	789	817
근로소득	148	159	171	164	186	152	139	108	102	138	182
자산소득	48	90	52	67	59	191	327	70	96	150	103
공적이전	62	70	113	101	110	148	168	196	224	210	261
사적이전	146	116	139	142	138	181	251	266	288	270	271
기타소득	4	7	1	4	-	1	0	7	19	21	-
75세이상											
총소득액	394	382	420	432	491	1,100	823	812	823	961	864
근로소득	165	124	147	193	190	283	259	266	362	349	343
자산소득	56	74	78	58	66	99	216	204	124	297	139
공적이전	33	24	39	33	63	71	72	78	91	106	154
사적이전	141	159	153	146	172	151	276	242	240	209	228
기타소득	-	-	-	2	-	495	-	0	6	-	-
전체가구											
총소득액	999	1,057	1,132	1,408	1,489	1,605	1,711	1,926	2,025	2,112	1,983
근로소득	827	902	976	1,173	1,248	1,350	1,421	1,510	1,601	1,744	1,626
자산소득	63	60	58	120	99	109	133	142	187	129	116
공적이전	16	21	26	37	39	45	51	63	71	76	95
사적이전	32	29	32	47	55	54	78	92	100	107	100
기타소득	5	5	10	12	17	23	5	79	26	20	18

연령집단별 소득의 구성 비율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구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이후 전체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산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5~59세 집단의 1999년 근로소득의 비율이 79.3%로 나타났지만 2004년 처음으로 7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52.9%로 나타났다. 60~64세 집단에서도 1999년 근로소득의

비율이 74.6%로 나타났지만 2006년에는 29.8%이었고, 2009년에는 조금 증가하여 4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65~69세 집단의 2009년 비율은 공적이전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사적이전 28.3%, 근로소득 21.1% 순으로 나타났다. 70~74세 집단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공적이전, 근로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노령에 가까워지면서 근로소득 비중이 감소하여, 65~69세, 70~74세 집단에서는 근로소득 비중이 21~22%로 낮아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각각 30%대로 높아졌다.

〈표 4-5〉 연령집단별 소득원 구성 비율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근로소득	88.7	90.9	90.2	88.8	94.7	92.2	91.7	90.4	89.8	90.5	89.9
자산소득	3.3	2.3	2.0	1.9	0.7	1.9	1.7	1.2	2.2	1.9	1.9
공적이전	0.5	0.8	0.3	0.1	0.2	0.1	0.2	0.2	0.4	0.6	0.7
사적이전	6.2	3.8	4.7	6.8	3.1	4.1	4.5	3.9	4.5	5.4	5.2
기타소득	0.1	1.1	0.8	1.1	0.0	0.6	1.0	2.3	1.1	0.4	1.1
30~34세											
근로소득	91.4	87.1	95.5	91.2	90.4	91.5	94.1	86.6	83.2	90.1	92.4
자산소득	3.0	9.4	1.3	3.3	4.7	3.1	2.3	3.7	6.9	2.8	1.8
공적이전	0.4	0.3	0.1	0.8	0.6	0.7	0.7	1.0	0.9	0.9	1.2
사적이전	1.6	2.0	1.1	2.9	2.5	2.9	2.2	4.9	3.3	2.1	1.7
기타소득	1.3	0.3	1.1	0.3	0.4	0.3	-	1.0	2.0	2.6	1.7
35~39세											
근로소득	86.2	93.4	91.9	89.7	89.5	89.9	85.5	88.1	89.4	88.9	90.6
자산소득	4.7	1.5	3.1	4.0	5.3	2.9	6.1	5.3	5.6	6.2	4.0
공적이전	0.3	0.6	0.5	1.0	0.8	0.7	0.9	1.2	1.3	0.9	1.4
사적이전	0.9	0.9	1.3	1.8	1.3	2.9	4.5	2.0	2.6	2.1	2.0
기타소득	0.3	0.6	0.2	1.9	1.0	1.5	0.0	1.3	0.1	1.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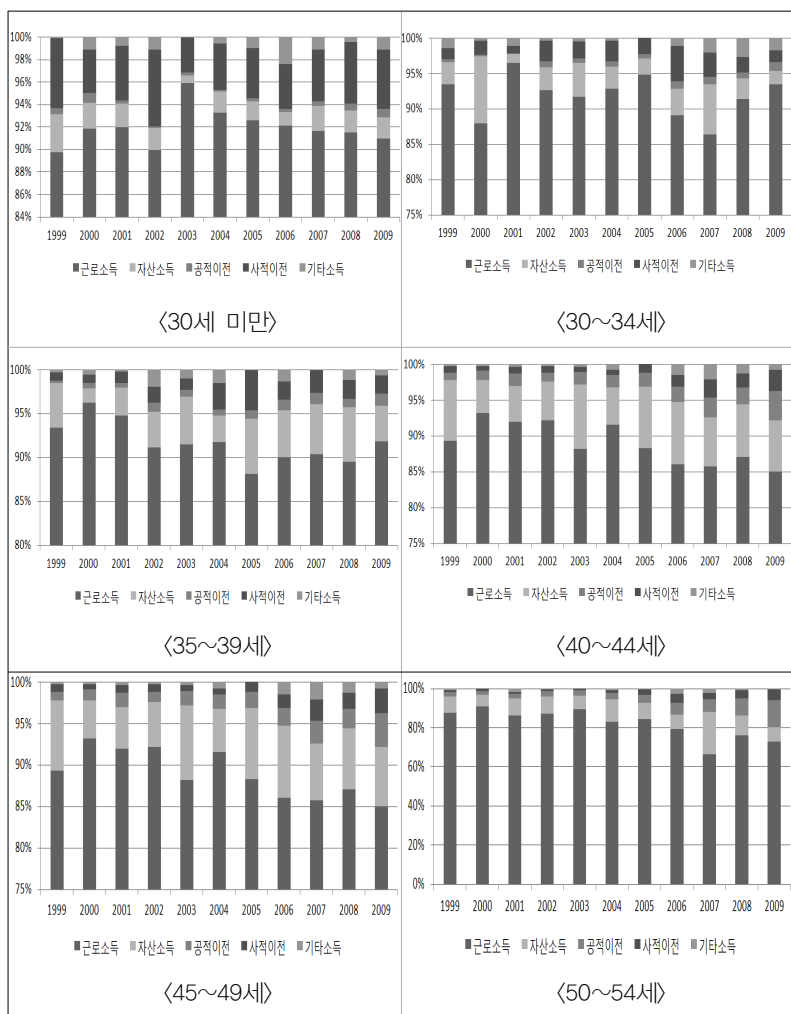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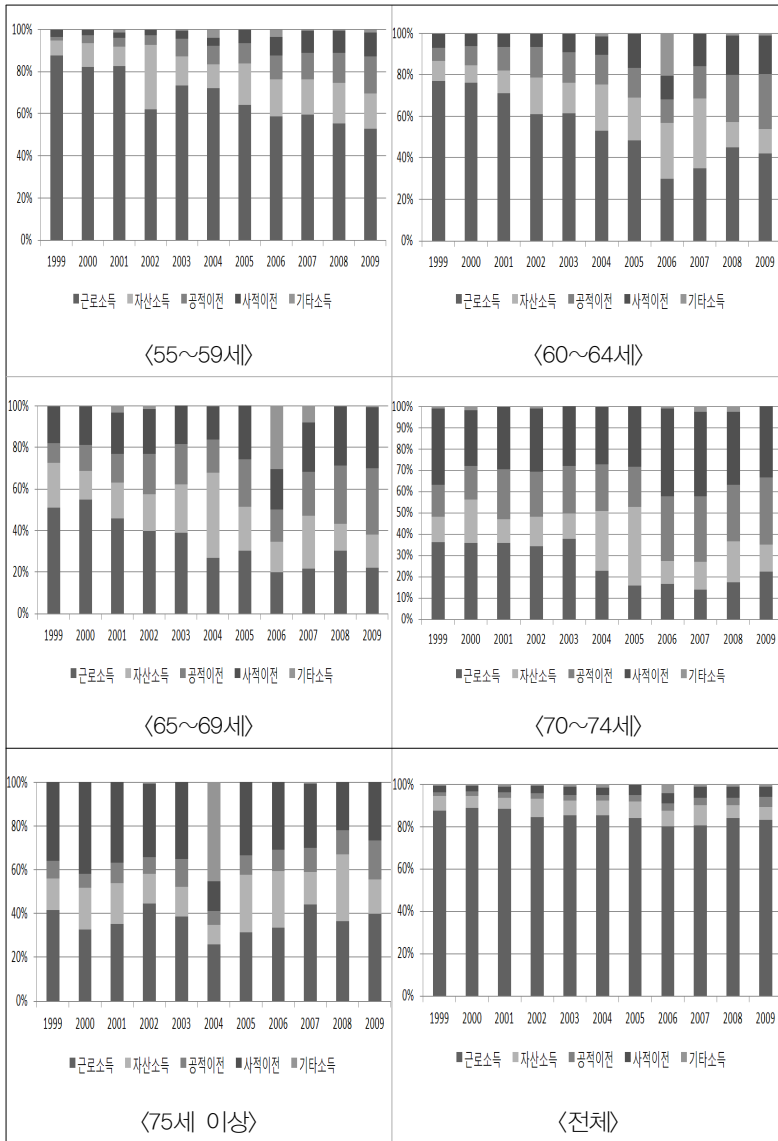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0~44세											
근로소득	86.7	89.0	90.2	87.3	80.9	92.3	87.7	83.1	86.2	85.1	84.8
자산소득	5.4	3.4	4.5	8.4	5.7	4.0	8.4	7.5	7.9	6.9	10.6
공적이전	0.8	0.6	0.6	0.7	0.4	0.7	1.0	1.3	1.5	1.5	1.5
사적이전	1.8	1.1	1.5	1.1	6.5	1.0	1.6	2.7	2.8	4.2	2.2
기타소득	0.6	0.7	0.8	1.2	4.5	1.4	0.6	4.7	0.5	0.2	0.3
45~49세											
근로소득	81.8	89.9	90.4	90.6	84.6	90.6	87.4	82.1	84.7	85.0	82.0
자산소득	7.7	4.5	4.9	5.3	8.6	5.2	8.5	8.4	6.8	7.1	6.9
공적이전	0.9	1.3	1.7	1.2	1.7	1.8	1.9	2.0	2.8	2.3	3.9
사적이전	0.8	0.6	0.9	0.9	0.7	0.7	1.1	1.5	2.5	1.9	2.8
기타소득	0.3	0.3	0.4	0.3	0.4	0.8	-	1.5	2.1	1.2	0.8
50~54세											
근로소득	81.1	86.2	83.0	85.5	88.1	81.3	82.2	77.3	63.7	72.4	71.6
자산소득	7.8	5.7	8.4	8.8	6.9	11.3	8.3	7.2	21.0	9.3	7.4
공적이전	1.8	2.0	2.5	2.7	2.4	3.6	4.1	5.8	5.9	8.5	13.3
사적이전	1.2	1.1	0.8	1.1	0.9	1.3	2.7	4.4	3.3	4.1	5.4
기타소득	0.6	-	1.6	0.3	0.1	0.7	0.1	2.5	2.0	0.7	0.6
55~59세											
근로소득	79.3	77.9	79.7	61.7	73.1	69.0	63.3	58.1	58.6	54.0	52.9
자산소득	6.7	10.7	8.7	30.3	13.8	11.1	19.3	17.0	16.7	18.5	16.6
공적이전	1.5	3.4	4.4	4.7	8.2	8.5	9.7	11.4	12.4	14.0	17.5
사적이전	2.7	2.5	2.3	2.1	3.7	3.3	6.2	8.5	10.0	10.2	11.3
기타소득	0.3	0.1	1.4	0.3	0.7	4.0	0.1	3.6	0.7	0.7	1.5
60~64세											
근로소득	74.6	68.7	65.6	60.8	59.6	52.2	48.2	29.8	34.9	44.8	41.9
자산소득	9.5	7.3	10.1	17.7	14.1	22.3	20.6	26.8	33.5	12.4	11.9
공적이전	5.9	8.2	10.6	14.9	14.1	13.9	14.5	11.0	15.4	22.8	26.2
사적이전	6.5	5.4	5.8	6.2	8.6	9.0	16.3	11.2	15.6	18.6	18.7
기타소득	0.4	0.2	0.3	0.1	0.3	1.3	0.2	20.5	0.3	1.3	1.0
65~69세											
근로소득	49.8	53.8	45.4	39.6	38.6	26.6	30.3	19.7	21.5	30.2	21.1
자산소득	21.2	13.6	16.7	17.6	23.4	40.9	21.2	14.7	25.4	13.0	15.6
공적이전	9.0	12.2	13.9	19.3	19.1	16.2	22.8	15.5	21.2	27.9	30.4
사적이전	17.3	18.5	19.4	21.4	18.5	16.0	25.5	19.3	23.7	28.7	28.3
기타소득	0.2	0.2	3.4	1.6	0.0	0.1	-	30.5	7.8	0.1	0.7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70~74세											
근로소득	36.1	35.7	34.1	34.2	37.7	22.4	15.7	16.7	13.9	17.5	22.3
자산소득	11.7	20.1	10.4	13.9	12.0	28.2	37.0	10.8	13.0	19.0	12.6
공적이전	15.2	15.8	22.5	21.0	22.4	21.9	18.9	30.3	30.3	26.7	31.9
사적이전	35.6	26.1	27.6	29.6	27.9	26.8	28.3	41.1	39.1	34.2	33.2
기타소득	1.1	1.5	0.2	0.9	-	0.1	0.0	1.1	2.6	2.6	-
75세이상											
근로소득	41.9	32.5	35.0	44.6	38.6	25.7	31.5	32.8	44.0	36.3	39.7
자산소득	14.2	19.4	18.6	13.4	13.4	9.0	26.2	25.1	15.0	30.9	16.1
공적이전	8.2	6.4	9.4	7.7	12.9	6.5	8.7	9.6	11.1	11.0	17.8
사적이전	35.7	41.7	36.4	33.9	35.0	13.8	33.6	29.8	29.2	21.7	26.3
기타소득	-	-	-	0.4	-	45.0	-	0.0	0.7	-	-
전체가구											
근로소득	82.8	85.4	86.2	83.4	83.9	84.1	83.0	78.4	79.1	82.6	82.0
자산소득	6.4	5.7	5.1	8.5	6.7	6.8	7.8	7.3	9.2	6.1	5.9
공적이전	1.6	2.0	2.3	2.6	2.6	2.8	3.0	3.3	3.5	3.6	4.8
사적이전	3.2	2.7	2.8	3.3	3.7	3.4	4.5	4.8	4.9	5.1	5.1
기타소득	0.5	0.4	0.9	0.8	1.1	1.4	0.3	4.1	1.3	0.9	0.9

[그림 4-4] 연령집단별 소득원 구성 비율 추이





제3절 중고령집단의 연령별 평균소득 및 소득원 구성의 변화 추이

1998년 기준 50~59세 집단의 소득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 50세 이후 점차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는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3%였으나, 59세는 동비율이 2.7%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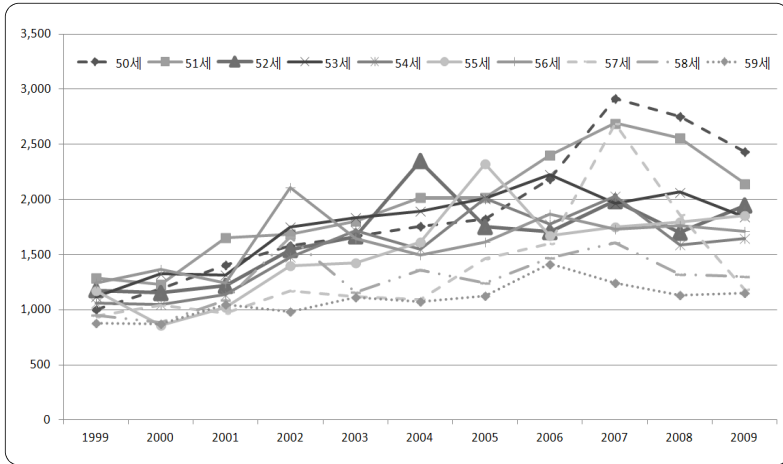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1998년 기준 50세였던 사람의 1999년 연평균 소득액은 1,00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10년간 연평균 9.26% 증가하여 2005년 1,824만원, 2009년 2,433만원으로 증가하였다. 1998년 기준 55세이었던 사람의 소득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 1,168만원 2003년 1,424만원, 2007년 1,748만원, 2009년 1,853만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4.73%씩 증가하였다.

〈표 4-6〉 1998년 50~59세 집단의 1999~2009년간 소득액 변화 추이

(단위: 만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전기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50세	1,004	1,189	1,406	1,582	1,668	1,756	1,824	2,185	2,913	2,755	2,433	142.41	9.26
51세	1,289	1,229	1,650	1,683	1,803	2,019	2,017	2,404	2,691	2,558	2,144	66.36	5.22
52세	1,175	1,153	1,217	1,545	1,665	2,348	1,753	1,707	1,987	1,699	1,944	65.40	5.16
53세	1,116	1,324	1,315	1,750	1,837	1,895	2,012	2,223	1,964	2,066	1,842	65.05	5.14
54세	1,063	1,046	1,135	1,478	1,717	1,548	2,007	1,778	2,029	1,590	1,645	54.82	4.47
55세	1,168	856	1,021	1,399	1,424	1,611	2,325	1,673	1,748	1,798	1,853	58.68	4.73
56세	1,241	1,365	1,244	2,108	1,644	1,495	1,616	1,865	1,732	1,765	1,713	38.00	3.27
57세	940	1,042	968	1,168	1,118	1,090	1,462	1,598	2,689	1,863	1,184	25.97	2.34
58세	952	884	1,084	1,660	1,157	1,361	1,241	1,472	1,605	1,323	1,301	36.69	3.18
59세	880	870	1,046	981	1,113	1,075	1,125	1,415	1,240	1,131	1,153	30.96	2.73

[그림 4-5] 1998년 50~59세 집단의 1999~2009년간 소득액 변화 추이



소득원별 구성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기준 50세 이 었던 사람의 2009년 총소득액은 2,43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근로 소득은 1,981만원 자산소득 255만원, 사적이전소득 105만원 순으로 나 타났다. 51세 집단 역시 2009년에 근로소득이 전체소득 2,144만원 중 1,537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358만원으로 2번째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52세와 53세 모두 2009년 공적이전 소 득액이 자산소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55세, 56세 집단에서 는 다시 공적이전소득보다 자산소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1998년 50~59세 집단의 1999~2009년간 소득원 구성 변화 추이

(단위: 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세											
총소득액	1,004	1,189	1,406	1,582	1,668	1,756	1,824	2,185	2,913	2,755	2,433
근로소득	923	1,029	1,114	1,356	1,507	1,550	1,627	1,851	2,027	2,220	1,981
자산소득	27	86	215	200	122	157	145	137	670	304	255
공적이전	9	7	10	10	12	12	33	50	46	54	87
사적이전	5	5	14	11	4	13	20	57	47	85	105
기타소득	40	62	54	5	23	24	-	90	124	91	5
51세											
총소득액	1,289	1,229	1,650	1,683	1,803	2,019	2,017	2,404	2,691	2,558	2,144
근로소득	1,092	1,076	1,318	1,501	1,572	1,753	1,745	1,722	1,913	1,588	1,537
자산소득	167	92	64	100	90	68	110	161	165	102	100
공적이전	0	33	47	78	86	112	106	211	249	308	358
사적이전	15	3	2	1	13	18	29	79	78	68	71
기타소득	16	25	219	4	42	69	27	232	286	492	79
52세											
총소득액	1,175	1,153	1,217	1,545	1,665	2,348	1,753	1,707	1,987	1,699	1,944
근로소득	978	1,081	1,070	1,327	1,466	1,525	1,509	1,426	1,473	1,277	1,459
자산소득	111	21	97	148	67	614	77	25	248	102	93
공적이전	50	44	47	52	65	84	102	128	130	161	285
사적이전	15	5	1	2	16	39	28	28	44	70	73
기타소득	21	3	2	15	50	86	36	99	92	90	34
53세											
총소득액	1,116	1,324	1,315	1,750	1,837	1,895	2,012	2,223	1,964	2,066	1,842
근로소득	839	1,026	946	1,453	1,570	1,563	1,656	1,618	1,389	1,251	1,032
자산소득	117	209	189	224	143	169	191	198	247	472	241
공적이전	40	38	41	45	61	117	114	158	196	245	405
사적이전	19	34	17	18	11	8	51	103	92	91	103
기타소득	102	15	122	9	52	39	-	146	41	7	62
54세											
총소득액	1,063	1,046	1,135	1,478	1,717	1,548	2,007	1,778	2,029	1,590	1,645
근로소득	856	946	1,031	1,150	1,408	1,347	1,415	1,375	1,404	1,150	1,198
자산소득	44	76	59	175	182	75	172	147	125	88	103
공적이전	1	3	13	10	8	75	98	122	202	217	229
사적이전	25	18	16	48	34	33	97	118	105	124	113
기타소득	136	3	17	95	84	18	225	16	192	11	2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5세											
총소득액	1,168	856	1,021	1,399	1,424	1,611	2,325	1,673	1,748	1,798	1,853
근로소득	920	773	879	997	1,074	1,209	1,247	1,140	1,178	1,211	1,085
자산소득	95	18	56	299	200	258	908	243	243	304	462
공적이전	2	8	35	56	88	105	117	155	196	180	222
사적이전	19	19	19	26	30	23	51	54	61	73	83
기타소득	133	39	31	22	32	16	2	81	70	30	2
56세											
총소득액	1,241	1,365	1,244	2,108	1,644	1,495	1,616	1,865	1,732	1,765	1,713
근로소득	917	1,014	1,021	1,266	1,184	1,201	1,272	1,222	1,265	1,132	1,132
자산소득	48	107	101	736	350	150	159	303	172	114	218
공적이전	16	28	29	52	83	88	113	131	167	199	194
사적이전	11	8	6	18	20	36	60	98	105	123	163
기타소득	250	208	87	36	6	18	14	110	24	197	6
57세											
총소득액	940	1,042	968	1,168	1,118	1,090	1,462	1,598	2,689	1,863	1,184
근로소득	781	814	791	1,007	866	924	1,038	1,044	990	927	694
자산소득	26	81	29	69	60	34	22	159	1,289	460	85
공적이전	3	25	25	52	93	56	88	152	160	272	255
사적이전	84	19	38	39	69	49	147	210	165	201	147
기타소득	46	103	84	1	30	27	167	33	84	4	2
58세											
총소득액	952	884	1,084	1,660	1,157	1,361	1,241	1,472	1,605	1,323	1,301
근로소득	775	780	837	832	901	885	942	953	944	821	803
자산소득	55	31	41	709	78	66	75	99	286	129	123
공적이전	15	35	75	79	121	141	174	199	201	208	211
사적이전	22	21	18	15	42	28	47	106	156	162	159
기타소득	85	17	114	25	15	242	3	115	18	3	4
59세											
총소득액	880	870	1,046	981	1,113	1,075	1,125	1,415	1,240	1,131	1,153
근로소득	655	667	868	742	825	727	696	753	768	669	568
자산소득	58	101	98	120	107	118	196	306	149	93	142
공적이전	19	55	62	95	136	142	151	186	189	214	282
사적이전	26	21	19	24	28	27	80	104	110	130	153
기타소득	123	26	—	—	17	61	2	67	23	26	8

1998년 기준 50~59세 이하집단의 지난 10년간 소득원의 구성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1998년에 50세이었던 사람의 근로소득 비율은 1999년 이후 70%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2007년에 69.6%로 떨어졌으며 이후 다시 증가해 전체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율이 80% 내외를 유지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자산소득의 비율이 10%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8년 기준 53세 이었던 집단의 근로소득비율은 2007년 70.7%로 나타났으며, 2008년 60.6%, 2009년 56.0%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자산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54세 집단의 2009년 구성비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2.8%로 53세와 55세 이상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7세 이었던 집단의 2009년 소득 중 58.6%가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이전 21.6%, 사적이전 12.4%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소득원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아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코호트별 제도효과를 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소득원 구성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4~6%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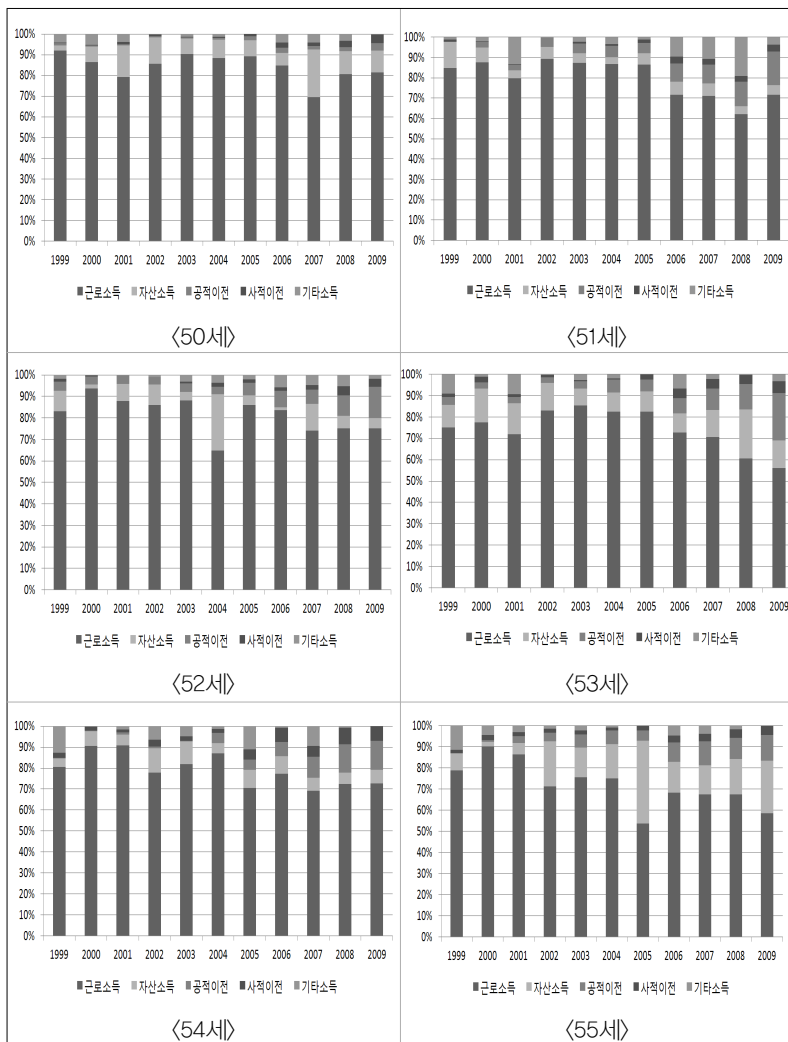
〈표 4-8〉 1998년 50~59세 집단의 1999~2009년간 소득원 구성
비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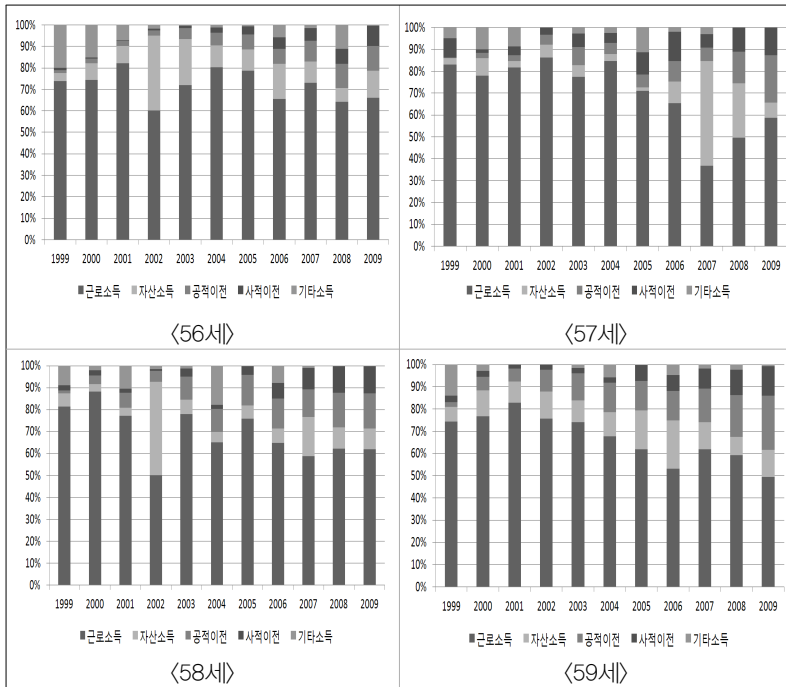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0세											
근로소득	91.9	86.5	79.2	85.7	90.3	88.3	89.2	84.7	69.6	80.6	81.4
자산소득	2.7	7.3	15.3	12.7	7.3	8.9	7.9	6.3	23.0	11.0	10.5
공적이전	0.9	0.6	0.7	0.6	0.7	0.7	1.8	2.3	1.6	1.9	3.6
사적이전	0.5	0.4	1.0	0.7	0.2	0.7	1.1	2.6	1.6	3.1	4.3
기타소득	4.0	5.2	3.9	0.3	1.4	1.3	-	4.1	4.2	3.3	0.2
51세											
근로소득	84.7	87.6	79.9	89.1	87.2	86.8	86.5	71.6	71.1	62.1	71.7
자산소득	12.9	7.5	3.9	5.9	5.0	3.4	5.4	6.7	6.1	4.0	4.7
공적이전	0.0	2.7	2.8	4.6	4.8	5.5	5.2	8.8	9.2	12.0	16.7
사적이전	1.2	0.3	0.1	0.0	0.7	0.9	1.5	3.3	2.9	2.7	3.3
기타소득	1.2	2.0	13.3	0.2	2.3	3.4	1.3	9.7	10.6	19.2	3.7
52세											
근로소득	83.2	93.7	88.0	85.9	88.0	65.0	86.1	83.5	74.1	75.1	75.1
자산소득	9.5	1.8	8.0	9.6	4.0	26.1	4.4	1.5	12.5	6.0	4.8
공적이전	4.3	3.8	3.8	3.4	3.9	3.6	5.8	7.5	6.6	9.5	14.7
사적이전	1.2	0.4	0.1	0.1	1.0	1.7	1.6	1.6	2.2	4.1	3.8
기타소득	1.8	0.3	0.2	1.0	3.0	3.7	2.1	5.8	4.6	5.3	1.7
53세											
근로소득	75.2	77.6	72.0	83.1	85.5	82.4	82.3	72.8	70.7	60.6	56.0
자산소득	10.5	15.8	14.4	12.8	7.8	8.9	9.5	8.9	12.6	22.9	13.1
공적이전	3.5	2.9	3.1	2.6	3.3	6.2	5.6	7.1	10.0	11.9	22.0
사적이전	1.7	2.6	1.3	1.0	0.6	0.4	2.5	4.6	4.7	4.4	5.6
기타소득	9.1	1.2	9.3	0.5	2.8	2.0	-	6.6	2.1	0.3	3.3
54세											
근로소득	80.6	90.5	90.8	77.8	82.0	87.0	70.5	77.4	69.2	72.3	72.8
자산소득	4.1	7.2	5.2	11.8	10.6	4.9	8.6	8.3	6.2	5.5	6.3
공적이전	0.1	0.3	1.1	0.7	0.5	4.8	4.9	6.8	10.0	13.6	13.9
사적이전	2.4	1.7	1.4	3.3	2.0	2.1	4.8	6.6	5.2	7.8	6.9
기타소득	12.8	0.3	1.5	6.4	4.9	1.2	11.2	0.9	9.5	0.7	0.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55세											
근로소득	78.7	90.2	86.2	71.2	75.4	75.1	53.6	68.2	67.4	67.4	58.5
자산소득	8.1	2.1	5.5	21.4	14.1	16.0	39.0	14.5	13.9	16.9	24.9
공적이전	0.2	0.9	3.4	4.0	6.2	6.5	5.0	9.3	11.2	10.0	12.0
사적이전	1.6	2.2	1.8	1.8	2.1	1.4	2.2	3.2	3.5	4.1	4.5
기타소득	11.4	4.6	3.1	1.6	2.2	1.0	0.1	4.8	4.0	1.7	0.1
56세											
근로소득	73.9	74.3	82.0	60.0	72.0	80.4	78.7	65.5	73.0	64.1	66.1
자산소득	3.8	7.8	8.1	34.9	21.3	10.1	9.8	16.3	9.9	6.5	12.7
공적이전	1.3	2.1	2.3	2.5	5.1	5.9	7.0	7.0	9.6	11.3	11.3
사적이전	0.9	0.6	0.5	0.8	1.2	2.4	3.7	5.3	6.0	7.0	9.5
기타소득	20.1	15.2	7.0	1.7	0.4	1.2	0.8	5.9	1.4	11.1	0.4
57세											
근로소득	83.1	78.1	81.8	86.2	77.5	84.8	71.0	65.3	36.8	49.8	58.6
자산소득	2.7	7.8	3.0	5.9	5.4	3.1	1.5	9.9	47.9	24.7	7.2
공적이전	0.3	2.4	2.6	4.4	8.3	5.1	6.0	9.5	6.0	14.6	21.6
사적이전	9.0	1.8	3.9	3.3	6.2	4.5	10.0	13.2	6.2	10.8	12.4
기타소득	4.8	9.9	8.7	0.1	2.7	2.5	11.4	2.0	3.1	0.2	0.2
58세											
근로소득	81.5	88.3	77.2	50.1	77.9	65.0	75.9	64.7	58.8	62.0	61.8
자산소득	5.8	3.5	3.7	42.7	6.7	4.8	6.1	6.7	17.9	9.8	9.5
공적이전	1.5	3.9	6.9	4.8	10.5	10.4	14.0	13.5	12.5	15.7	16.2
사적이전	2.3	2.4	1.7	0.9	3.7	2.0	3.8	7.2	9.7	12.2	12.2
기타소득	8.9	2.0	10.5	1.5	1.3	17.8	0.3	7.8	1.1	0.2	0.3
59세											
근로소득	74.4	76.6	82.9	75.6	74.1	67.6	61.9	53.2	62.0	59.2	49.3
자산소득	6.6	11.6	9.4	12.3	9.6	11.0	17.4	21.6	12.0	8.2	12.4
공적이전	2.1	6.3	5.9	9.7	12.2	13.2	13.4	13.2	15.2	18.9	24.4
사적이전	2.9	2.4	1.8	2.4	2.5	2.5	7.1	7.3	8.9	11.5	13.2
기타소득	14.0	3.0	-	-	1.5	5.7	0.2	4.7	1.9	2.3	0.7

[그림 4-6] 1998년 50~59세 집단의 1999~2009년간 소득원 구성
비율 변화 추이





제4절 연령집단별 빈곤율 추이

시장소득기준 전체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은 23.11%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 26.11%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4%이상을 상회하였으며, 2009년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27.4%이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빈곤율은 65~69세 83.1%, 70~74세 87.1%, 75세 이상 78.0%로 나타났다.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추이를 보면, 45세 미만집단과 70세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45~69세 집단에서는 빈곤율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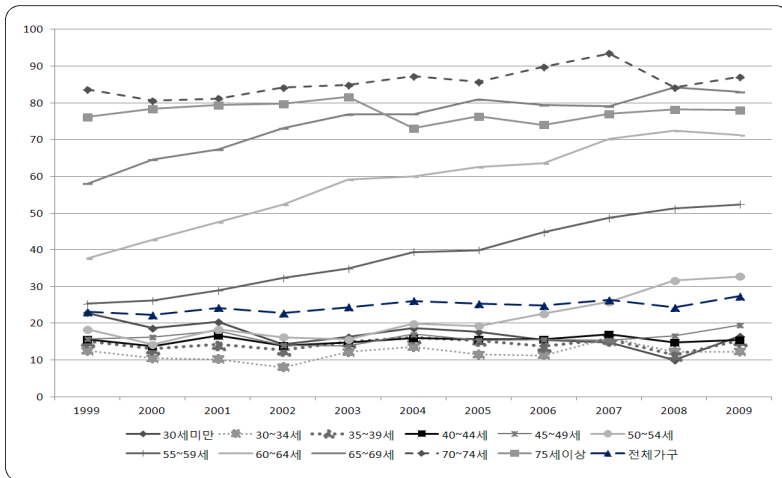
고령집단의 지난 10여 년간 시장소득에 대한 빈곤율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9〉 연령집단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22.87	18.72	20.40	14.25	16.32	18.73	17.66	15.52	14.69	9.93	16.51
30~34세	12.60	10.53	10.22	8.03	12.15	13.53	11.51	11.24	15.92	12.27	12.28
35~39세	15.07	13.09	14.25	12.73	14.95	16.10	15.35	13.74	15.55	11.36	15.20
40~44세	15.63	13.77	16.60	13.93	14.74	15.97	15.56	15.55	16.98	14.71	15.47
45~49세	15.77	16.21	17.92	13.97	13.78	17.01	15.39	15.54	15.37	16.58	19.44
50~54세	18.34	14.28	18.40	16.19	15.64	19.89	19.26	22.60	25.88	31.69	32.75
55~59세	25.30	26.25	28.93	32.32	34.92	39.40	39.93	44.79	48.76	51.21	52.38
60~64세	37.66	42.67	47.56	52.29	59.10	60.02	62.46	63.57	70.27	72.38	71.20
65~69세	57.99	64.51	67.24	73.13	76.90	76.93	80.97	79.36	79.02	84.22	83.06
70~74세	83.68	80.57	81.19	84.14	84.94	87.26	85.74	89.80	93.50	84.26	87.14
75세이상	76.19	78.37	79.37	79.78	81.59	73.08	76.39	74.03	77.05	78.18	78.02
전체가구	23.11	22.26	24.22	22.83	24.40	26.11	25.32	24.88	26.31	24.35	27.39

[그림 4-7] 연령집단별 시장소득기준 빈곤율 추이



다음으로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50세 미만의 빈곤율이 15% 내외인데 반해, 65세 이상 빈곤율은 65~69세 57.9%, 70~74세 65.9%, 75세 이상 68.8%로 나타났다. 60~69세 이하의 빈곤율이 50% 대로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 노인집단의 빈곤율은 60%를 상회하였다. 노인인구 집단의 가처분소득 기준 연도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65~69세 이하인 집단의 1999년 빈곤율은 43.68%이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63.90%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57.88%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인구집단은 1999년 이후 70% 이상의 빈곤율을 보이다가 2005년 63%로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06~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 소폭 하락하여 68.79%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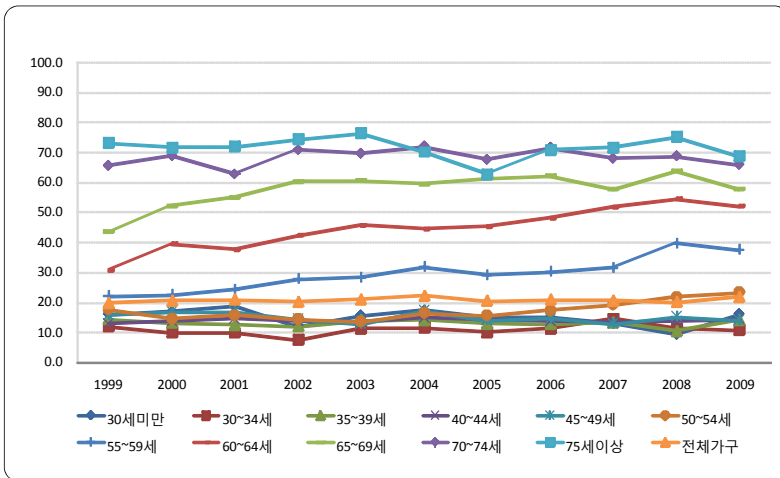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추이를 보면, 49세 이하집단과 70세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50~69세 집단에서는 빈곤율이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집단이 지난 10여 년 간 가처분소득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10〉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16.07	17.06	18.55	11.95	15.56	17.51	15.06	15.03	13.15	9.23	16.00
30~34세	11.84	9.88	9.79	7.56	11.40	11.59	10.17	11.31	14.57	11.34	10.73
35~39세	14.31	13.21	12.61	11.90	13.90	14.23	13.01	12.67	13.33	10.53	14.25
40~44세	12.90	13.78	14.59	13.80	13.29	14.89	14.10	13.79	13.56	13.78	14.41
45~49세	15.79	16.73	16.74	14.32	12.78	17.27	13.88	14.49	12.81	15.23	13.93
50~54세	17.59	14.52	15.83	14.30	13.66	16.32	15.58	17.47	19.17	21.80	23.34
55~59세	21.99	22.54	24.25	27.83	28.39	31.78	29.24	30.19	31.61	39.79	37.43
60~64세	30.85	39.55	37.66	42.45	45.82	44.65	45.42	48.18	51.95	54.64	52.10
65~69세	43.68	52.42	55.25	60.47	60.63	59.70	61.53	62.24	57.81	63.90	57.88
70~74세	65.66	68.90	62.97	71.09	69.80	72.01	67.69	71.59	68.21	68.68	65.89
75세이상	73.18	71.80	71.97	74.39	76.48	70.27	62.93	71.03	71.82	75.21	68.79
전체가구	19.86	20.60	20.82	20.16	20.98	22.26	20.44	20.78	20.60	20.06	21.92

[그림 4-8]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 추이



총소득 기준 연령집단별 빈곤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19.86%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22.25%, 2008년 20.02%, 2009년 21.96%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집단의 총소득 기준 빈곤율 추이 또한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빈곤율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50세 미만 집단의 빈곤율이 2009년 기준 15% 미만인 것에 비해 70세 이상 집단의 빈곤율은 2009년 기준 65%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은 1999년 이후 2005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에 75.21%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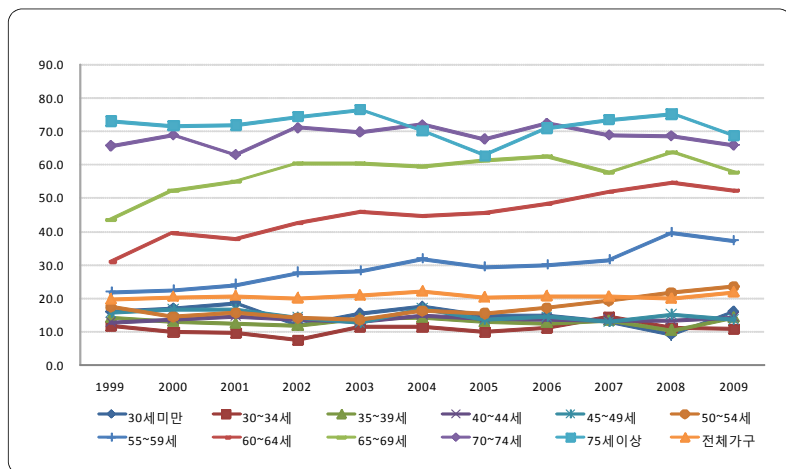
1999년 이후 총소득의 전체적인 빈곤추이를 살펴보면 50세 이하 집단에서는 15%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65세 이상 집단의 빈곤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특히 55~69세 집단의 빈곤율이 매우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연령집단별 총소득기준 빈곤율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16.07	17.06	18.55	11.95	15.56	17.51	14.85	14.85	13.15	9.23	16.00
30~34세	11.84	9.88	9.79	7.56	11.40	11.59	10.02	11.31	14.57	11.34	11.02
35~39세	14.31	13.21	12.61	11.90	13.90	14.23	13.01	12.67	13.33	10.53	14.25
40~44세	12.90	13.78	14.59	13.80	13.29	14.89	14.10	13.88	13.56	13.46	14.41
45~49세	15.79	16.73	16.74	14.32	12.78	17.13	13.63	14.49	12.94	15.23	13.82
50~54세	17.59	14.52	15.83	14.30	13.66	16.32	15.58	17.32	19.35	21.80	23.54
55~59세	21.99	22.54	24.25	27.83	28.39	31.96	29.42	30.19	31.61	39.79	37.43
60~64세	30.85	39.55	37.66	42.45	45.82	44.65	45.71	48.18	51.95	54.64	52.10
65~69세	43.68	52.42	55.25	60.47	60.63	59.60	61.53	62.59	57.81	63.90	57.88
70~74세	65.66	68.90	62.97	71.09	69.80	72.01	67.69	72.41	68.95	68.68	65.89
75세이상	73.18	71.80	71.97	74.39	76.48	70.27	62.93	71.03	73.51	75.21	68.79
전체가구	19.86	20.60	20.82	20.16	20.98	22.25	20.39	20.77	20.65	20.02	21.96

[그림 4-9] 연령집단별 총소득기준 빈곤율 추이



제5절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추이(1):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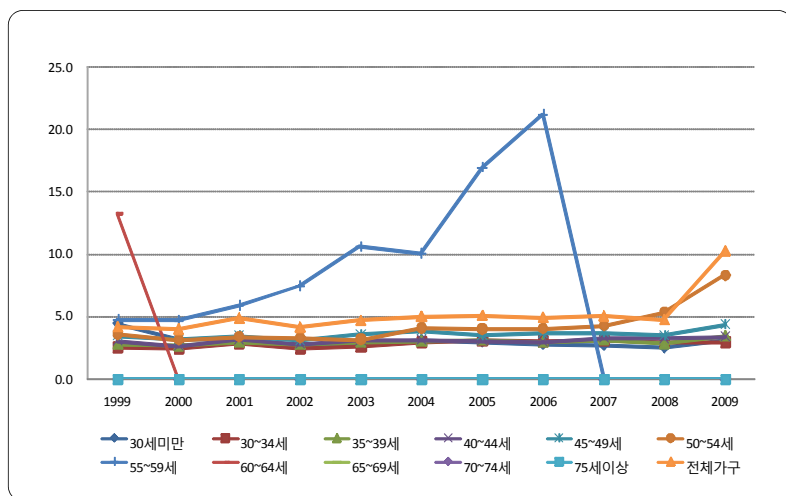
연령집단별 시장소득의 5분위 배율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전체 가구의 5분위 배율은 4.19배이었고, 2004년에 처음으로 5배를 넘어섰으며, 2009년에는 1분위와 5분위 시장소득의 격차가 10.26배로 나타났다. 50~54세 이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3.61배이었고 2004년 처음으로 소득격차가 4배를 넘어섰고, 2008년에는 5배, 그리고 2009년에 8.3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59세 이하 집단의 2006년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1.21로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50~54세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이 8.33배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45~49세 집단 순이었다.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하위 5분위 집단의 시장소득이 0원인 관계로 5분위 배율을 구하지 못했다.

〈표 4-12〉 연령집단별 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4.47	3.18	3.25	2.69	2.92	3.14	3.01	2.83	2.75	2.56	3.11
30~34세	2.58	2.50	2.92	2.54	2.69	2.99	3.13	3.05	3.14	2.99	2.97
35~39세	2.81	2.70	3.00	2.80	3.00	3.08	3.13	2.99	3.18	2.87	3.49
40~44세	3.08	2.68	3.20	2.85	3.11	3.13	3.08	2.97	3.30	3.26	3.37
45~49세	3.47	3.19	3.47	3.10	3.58	3.91	3.51	3.67	3.74	3.51	4.40
50~54세	3.61	3.16	3.39	3.30	3.20	4.10	4.02	4.06	4.31	5.36	8.33
55~59세	4.79	4.71	5.90	7.47	10.61	10.07	16.97	21.21	0.00	0.00	0.00
60~64세	13.27	-	-	-	-	-	-	-	-	-	-
65~69세	-	-	-	-	-	-	-	-	-	-	-
70~74세	-	-	-	-	-	-	-	-	-	-	-
75세이상	-	-	-	-	-	-	-	-	-	-	-
전체가구	4.19	4.01	4.90	4.17	4.71	5.04	5.10	4.95	5.07	4.77	10.26

[그림 4-10] 연령집단별 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 추이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전체가구의 5분위 배율은 3.50배로 나타났으며, 2003년 3.85배로 증가하여 1분위와 5분위의 가처분소득차이가 더 커졌으며, 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2009년 다시 5분위 배율은 4.12배로 나타나 소득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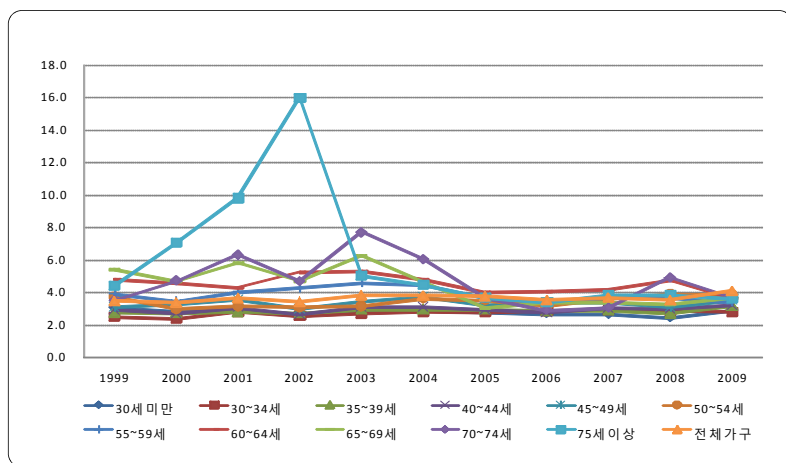
연령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65~69세 집단의 1999년 5분위 배율은 5.40배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2003년에 6.26으로 5분위 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감소하여 2009년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은 3.68배이었다.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최근으로 오면서 5분위배율이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60세 미만 집단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5분위배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5분위 배율은 50~54세 집단이 3.89배로 가장 높았으며, 65~69세, 70~74세 집단이 각 3.68배 그리고 60~64세, 75세 이상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30~34세 이하 집단의 5분위 배율이 2.81배로 소득격차가 가장 작았다.

〈표 4-13〉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기준 5분위 배율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3.06	2.82	2.99	2.57	2.87	2.88	2.80	2.70	2.66	2.46	2.89
30~34세	2.52	2.40	2.84	2.56	2.72	2.80	2.80	2.88	2.93	2.88	2.81
35~39세	2.76	2.72	2.79	2.71	2.93	2.96	2.96	2.87	2.88	2.70	3.17
40~44세	2.93	2.72	3.07	2.64	3.08	3.11	2.93	2.77	3.03	2.96	3.22
45~49세	3.13	3.30	3.56	3.01	3.49	3.75	3.21	3.38	3.42	3.10	3.54
50~54세	3.73	2.98	3.16	3.07	3.17	3.64	3.53	3.16	3.63	3.93	3.89
55~59세	3.92	3.46	4.04	4.29	4.59	4.50	3.67	3.49	3.68	3.71	3.42
60~64세	4.79	4.56	4.32	5.23	5.29	4.78	4.04	4.07	4.21	4.72	3.64
65~69세	5.40	4.66	5.79	4.67	6.26	4.64	3.05	3.40	3.40	3.27	3.68
70~74세	3.50	4.72	6.32	4.69	7.71	6.06	3.68	2.91	3.08	4.92	3.68
75세이상	4.44	7.07	9.83	16.00	5.05	4.48	3.71	3.42	3.87	3.86	3.64
전체가구	3.50	3.40	3.68	3.46	3.85	3.82	3.79	3.54	3.70	3.55	4.12

[그림 4-11]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기준 5분위 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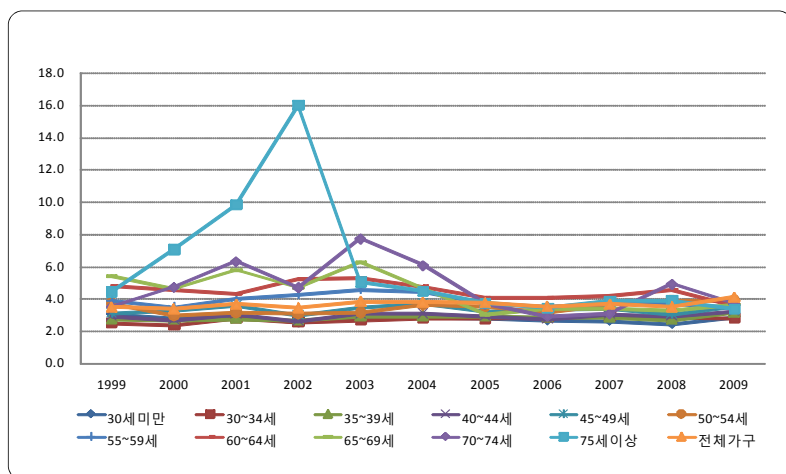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령집단별 5분위 배율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1999년 5분위 배율은 3.50배로 나타났으며, 2001년에 3.68배로 증가하였고, 2002년에 3.46배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2003년과 2004년에 각 3.85배와 3.81배로 소득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8년에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2009년 4.13배로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격차는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5분위배율이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55세미만 집단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5분위배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총소득의 5분위 배율을 살펴보았을 때, 50~54세 집단이 3.89배로 격차가 가장 컸으며, 70~74세 3.71배, 65~69세가 3.68배순으로 나타났다. 30대 미만 집단의 5분위 배율이 2.90배로 가장 낮았다. 30~34세 집단의 5분위 배율은 2.80배로 나타났다.

〈표 4-14〉 연령집단별 총소득기준 5분위 배율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3.06	2.82	2.99	2.57	2.87	2.87	2.79	2.70	2.65	2.46	2.90
30~34세	2.52	2.40	2.84	2.56	2.72	2.80	2.79	2.86	2.93	2.88	2.80
35~39세	2.76	2.72	2.79	2.71	2.93	2.94	2.95	2.87	2.89	2.71	3.16
40~44세	2.93	2.72	3.07	2.64	3.08	3.10	2.93	2.76	3.04	2.94	3.23
45~49세	3.13	3.30	3.56	3.01	3.49	3.71	3.22	3.38	3.40	3.09	3.54
50~54세	3.73	2.98	3.16	3.07	3.17	3.62	3.52	3.16	3.62	3.89	3.89
55~59세	3.92	3.46	4.04	4.29	4.59	4.47	3.69	3.50	3.69	3.72	3.44
60~64세	4.79	4.56	4.32	5.23	5.29	4.77	4.08	4.08	4.21	4.57	3.62
65~69세	5.40	4.66	5.79	4.67	6.26	4.64	3.06	3.40	3.40	3.27	3.68
70~74세	3.50	4.72	6.32	4.69	7.71	6.06	3.68	2.91	3.08	4.92	3.71
75세이상	4.44	7.07	9.83	16.00	5.05	4.48	3.73	3.43	3.87	3.89	3.39
전체가구	3.50	3.40	3.68	3.46	3.85	3.81	3.78	3.54	3.70	3.53	4.13

[그림 4-12] 연령집단별 총소득기준 5분위 배율 추이



제6절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 추이(2):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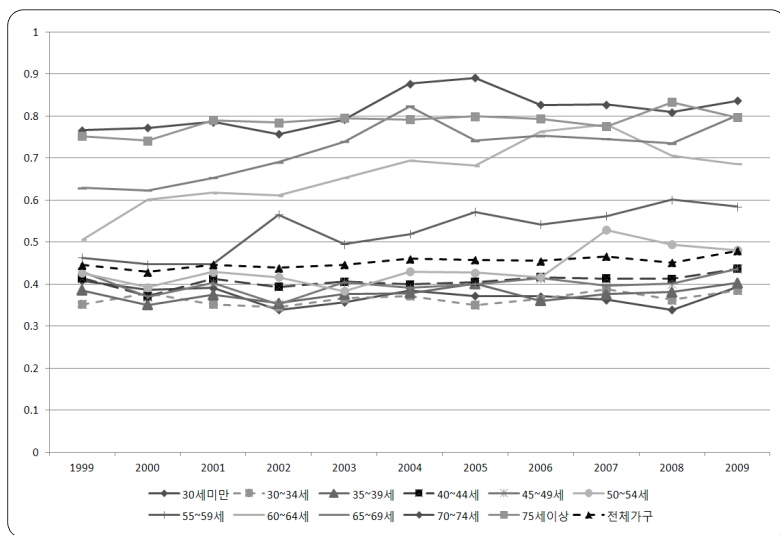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령집단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추이는 다음과 같다. 2009년 기준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479로 나타났으며, 30세에서 34세 이하 집단의 지니계수가 0.385로 소득불평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평등도가 증가하였는데, 60세 이상 집단의 지니계수가 0.6 이상으로 매우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74세 집단의 지니계수는 0.8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높았다.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70~74세 집단의 연도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9년 0.766, 2001년 0.786, 2003년 0.792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 처음으로 0.8을 넘어섰고, 2005년 0.891로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는 0.836으로 나타났다.

〈표 4-15〉 연령집단별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0.408	0.386	0.391	0.339	0.357	0.385	0.372	0.371	0.363	0.339	0.393
30~34세	0.352	0.378	0.352	0.345	0.366	0.372	0.350	0.364	0.388	0.363	0.385
35~39세	0.385	0.350	0.374	0.354	0.376	0.378	0.401	0.360	0.376	0.381	0.402
40~44세	0.414	0.371	0.412	0.393	0.406	0.399	0.405	0.416	0.413	0.412	0.436
45~49세	0.429	0.369	0.403	0.352	0.405	0.391	0.399	0.414	0.396	0.401	0.436
50~54세	0.426	0.392	0.429	0.416	0.383	0.430	0.427	0.416	0.529	0.494	0.481
55~59세	0.463	0.447	0.447	0.565	0.495	0.519	0.572	0.542	0.562	0.601	0.584
60~64세	0.506	0.601	0.617	0.611	0.653	0.694	0.682	0.763	0.779	0.706	0.686
65~69세	0.629	0.623	0.653	0.690	0.739	0.823	0.741	0.753	0.745	0.735	0.801
70~74세	0.766	0.772	0.786	0.757	0.792	0.877	0.891	0.826	0.827	0.809	0.836
75세이상	0.752	0.741	0.790	0.784	0.795	0.792	0.799	0.793	0.775	0.833	0.797
전체가구	0.445	0.429	0.446	0.439	0.446	0.460	0.458	0.455	0.466	0.451	0.479

[그림 4-13] 연령집단별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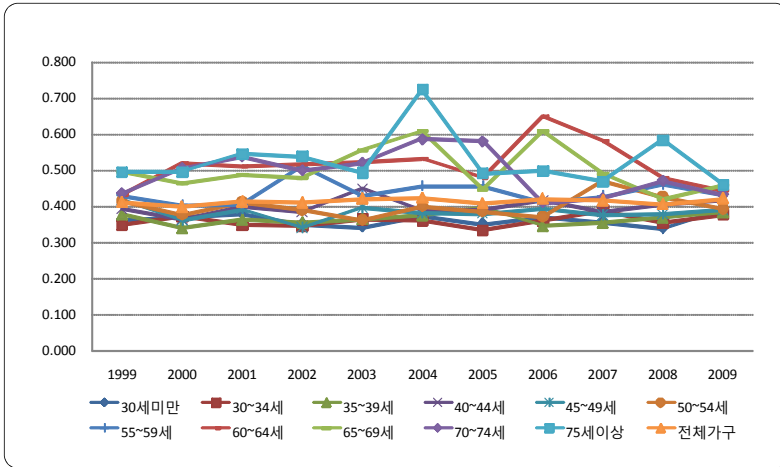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412이었으며, 2001년 0.414, 2004년 0.424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0.408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 0.422로 나타나 1999년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가처분소득의 연령 집단별 지니계수 차이는 시장소득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60세 이상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0~34세 집단의 지니계수가 0.37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집단은 0.461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았다.

〈표 4-16〉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0.363	0.371	0.380	0.351	0.344	0.373	0.351	0.372	0.357	0.340	0.391
30~34세	0.348	0.373	0.349	0.346	0.365	0.362	0.335	0.362	0.389	0.355	0.378
35~39세	0.379	0.342	0.365	0.356	0.366	0.377	0.396	0.347	0.356	0.369	0.385
40~44세	0.394	0.365	0.401	0.385	0.449	0.389	0.390	0.417	0.386	0.405	0.416
45~49세	0.418	0.363	0.393	0.342	0.397	0.383	0.381	0.394	0.378	0.379	0.392
50~54세	0.415	0.376	0.411	0.391	0.363	0.400	0.386	0.371	0.471	0.426	0.394
55~59세	0.431	0.405	0.406	0.513	0.431	0.456	0.457	0.415	0.430	0.462	0.435
60~64세	0.434	0.524	0.513	0.519	0.525	0.534	0.481	0.651	0.583	0.482	0.446
65~69세	0.498	0.466	0.490	0.481	0.557	0.610	0.447	0.611	0.493	0.422	0.460
70~74세	0.436	0.508	0.538	0.501	0.522	0.588	0.582	0.410	0.424	0.472	0.433
75세이상	0.495	0.496	0.546	0.540	0.494	0.725	0.492	0.499	0.470	0.584	0.461
전체가구	0.412	0.399	0.414	0.411	0.422	0.424	0.408	0.422	0.417	0.406	0.422

[그림 4-14] 연령집단별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이



연령집단에 따른 총소득의 지니계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구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는 1999년 0.412, 2004년 0.424, 2007년 0.416으로 등락을 반복하였고, 2009년 0.42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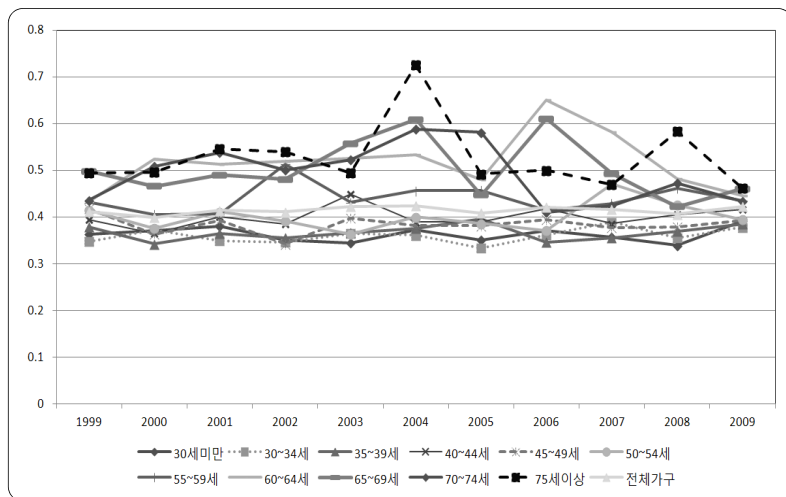
2009년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의 지니계수가 55세 미만의 지니계수보다 높았으며, 75세 이상 집단이 0.461, 65~69세 이하 0.460, 60~64세 이하 0.446 순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집단의 지니계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 0.495로 나타났으며, 2004년 0.725로 불평등도가 매우 높았으며, 2006년 0.500, 2008년에는 0.583으로 1999년에 비해 소득평등도가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7〉 연령집단별 총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0세미만	0.363	0.371	0.380	0.351	0.344	0.373	0.351	0.371	0.357	0.339	0.391
30~34세	0.348	0.373	0.349	0.346	0.365	0.361	0.334	0.362	0.389	0.355	0.378
35~39세	0.379	0.342	0.365	0.356	0.366	0.376	0.396	0.346	0.356	0.369	0.385
40~44세	0.394	0.365	0.401	0.385	0.449	0.389	0.390	0.417	0.386	0.405	0.416
45~49세	0.418	0.363	0.393	0.342	0.397	0.382	0.381	0.394	0.377	0.379	0.392
50~54세	0.415	0.376	0.411	0.391	0.363	0.400	0.386	0.371	0.471	0.426	0.394
55~59세	0.431	0.405	0.406	0.513	0.431	0.456	0.457	0.414	0.429	0.462	0.435
60~64세	0.434	0.524	0.513	0.519	0.525	0.534	0.480	0.651	0.582	0.482	0.446
65~69세	0.498	0.466	0.490	0.481	0.557	0.609	0.447	0.610	0.493	0.422	0.460
70~74세	0.436	0.508	0.538	0.501	0.522	0.588	0.581	0.410	0.424	0.473	0.433
75세이상	0.495	0.496	0.546	0.540	0.494	0.725	0.492	0.500	0.470	0.583	0.461
전체가구	0.412	0.399	0.414	0.411	0.422	0.424	0.408	0.421	0.416	0.406	0.423

[그림 4-15] 연령집단별 총소득기준 지니계수 추이



제7절 소득불평등도 요인 분해: 지니계수 분해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집단내 요인, 집단간 요인, 그리고 나머지 요인의 불평등도 기여도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기준 13.4%를 기여하고 있으며,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는 28.3%이며, 나머지 요인이 58.3%의 소득불평등도를 설명한다.

11년간 추이를 보면,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도 증가해왔지만,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게 증가해왔다. 연령집단내 지니계수는 1999년 0.050에서 2009년 0.064로 0.014% 포인트 지니계수 증가를 보인데 반해, 연령집단간 지니계수는 1999년 0.092에서 2009년 0.135로 0.043% 포인트 지니계수 증가를 보였다. 전체소득불평등을 기여도도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는 1999년 11.2%에서 2009년 13.4%로 2.2% 포인트 증가한데 비해,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의 전체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는 1999년 20.6%에서 2009년 28.3%로 7.7%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4-18〉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시장소득

	전체 지니계수	집단내 지니계수		집단간 지니계수		나머지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1999	0.445	0.050	0.112	0.092	0.206	0.303	0.682
2000	0.429	0.046	0.108	0.089	0.208	0.293	0.683
2001	0.446	0.049	0.109	0.106	0.238	0.291	0.653
2002	0.439	0.047	0.107	0.104	0.238	0.287	0.655
2003	0.446	0.049	0.109	0.104	0.233	0.294	0.658
2004	0.460	0.051	0.110	0.085	0.185	0.324	0.705
2005	0.458	0.052	0.113	0.099	0.217	0.307	0.670
2006	0.455	0.054	0.118	0.094	0.207	0.307	0.675
2007	0.466	0.056	0.121	0.090	0.192	0.320	0.687
2008	0.451	0.057	0.127	0.132	0.292	0.262	0.581
2009	0.479	0.064	0.134	0.135	0.283	0.279	0.583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기준 14.1%를 기여하고 있으며,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는 20.9%이며, 나머지 요인이 65.0%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 기여도가 8% 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이전소득의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특정연령 집단, 특히 노령집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1년간 추이를 보면,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도 증가해왔지만,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해왔다. 연령집단내 지니계수는

1999년 0.047에서 2009년 0.059로 0.012% 포인트 지니계수 증가를 보인데 반해, 연령집단간 지니계수는 1999년 0.067에서 2009년 0.088로 0.021% 포인트 지니계수 증가를 보였다. 전체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도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는 1999년 11.4%에서 2009년 14.1%로 2.7% 포인트 증가한데 비해,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의 전체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는 1999년 16.2%에서 2009년 20.9%로 4.7%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4-19〉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분해 결과: 가처분 소득

	전체 지니계수	집단내 지니계수		집단간 지니계수		나머지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지니계수	상대적 기여도
1999	0.412	0.047	0.114	0.067	0.162	0.298	0.724
2000	0.399	0.044	0.111	0.064	0.160	0.291	0.729
2001	0.414	0.046	0.112	0.076	0.184	0.291	0.705
2002	0.411	0.045	0.110	0.077	0.188	0.289	0.702
2003	0.422	0.048	0.113	0.089	0.210	0.285	0.676
2004	0.424	0.048	0.112	0.053	0.125	0.323	0.763
2005	0.408	0.048	0.117	0.068	0.166	0.292	0.717
2006	0.422	0.051	0.120	0.041	0.097	0.330	0.783
2007	0.417	0.052	0.125	0.050	0.120	0.315	0.755
2008	0.406	0.054	0.133	0.095	0.235	0.257	0.632
2009	0.422	0.059	0.141	0.088	0.209	0.275	0.650

제8절 소득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소득불평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경제성장률, 일인당 국민 소득 등 거시경제 지표를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하지만 가구주의 연령, 가구 평균 소득과 같은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와 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임병인 외(2005)의 연구 외에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 된다는 점에서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보다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명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임병인 외(2005)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모형설명력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타당한 연구 설계라고 판단 할 수 있다.

11개 연령집단의 11년간 집단별 가구주 평균연령, 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종속변수로 연도별 집단별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총관측수는 121개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평균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졌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균소득과 가처분 소득 불평등도는 부적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패널회귀분석결과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시장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장 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평균소득, 평균연령은 시장소득불평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모형 설명력은 0.589, 시장소득은 0.885로

평균소득과 평균연령은 소득불평등도를 매우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소득불평등도 결정요인

변수명	가처분 소득 불평등도		시장소득 불평등도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0.250068	0.03328 ***	0.100917	0.03400 **
평균소득	-0.000023	9.84e-06	-0.000052	9.85e-06 ***
평균연령	0.003208	0.00046 ***	0.008552	.00046 ***
wald X^2	50.48***		503.72***	
R ²	0.589		0.885	

국가비교를 통해 본 고령화와 소득분배 영향

제1절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빈곤율의 국가간 비교

LIS wave VI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별로, 복지레짐별로 노령계층 개인이 누리는 최종적인 가처분소득이 근로계층 개인이 활용 가능한 최종적 가처분소득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분석하였다. 근로계층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노령계층 1인당 가처분소득은 국가평균 60.9%이며, 복지레짐별로는 사민주의 63.0%, 보수적조합주의 67.8%, 자유주의 53.8%, 남유럽 63.2%, 동유럽 75.0%, 개도국 43.2%로 나타났다(표 참조). 한국은 동비율이 24.7%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며, 평균의 40.6%에 불과했다. 그만큼 한국은 노령계층에 대한 상대적 자원배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1〉 중요국가 노령계층의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

	노령층(A)			
	남성(MA)	여성(FA)	계	FA/MA
사민주의				
벨기에	544,442	376,941	458,379	69.23
덴마크	119,258	96,328	106,164	80.77
핀란드	13,071	10,103	11,294	77.29
룩셈부르크	37,918	20,683	28,596	54.55
네덜란드	25,685	13,710	18,892	53.38
노르웨이	169,652	123,031	142,666	72.52
스웨덴	134,260	96,809	113,263	72.11
사민주의 평균				68.55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20,697	13,745	16,747	66.41
프랑스	102,488	61,545	80,072	60.05
독일	20,123	12,019	15,496	59.73
조합주의 평균				62.06
자유주의				
호주	14,185	11,174	12,583	78.78
캐나다	24,035	15,924	19,509	66.25
아일랜드	17,193	11,042	14,332	64.23
영국	10,477	5,580	7,720	53.26
미국	24,697	13,680	18,499	55.39
자유주의평균				63.58
남유럽				
그리스	9,552	6,213	7,864	65.04
이탈리아	13,714	9,011	11,284	65.71
스페인	10,511	6,943	8,768	66.05
남유럽 평균				65.60
동유럽				
체코	105,342	90,577	96,522	85.98
헝가리	873,282	733,330	792,010	83.97
폴란드	15,779	8,874	12,647	56.24
동유럽 평균				75.40
개도국				
한국	6,696,680	3,314,318	5,150,247	49.49
멕시코	40,798	20,700	33,816	50.74
개도국 평균				50.12
평균				65.53

〈표 5-2〉 중요국가 근로연령층의 성별에 따른 평균 소득

	근로연령층(B)				A/B
	남성(MB)	여성(FB)	계	FB/MB	
사민주의					
벨기에	1,267,969	698,852	987,655	55.12	46.41
덴마크	204,795	163,990	184,694	80.07	84.65
핀란드	20,296	16,797	18,505	82.76	57.52
룩셈부르크	53,986	31,376	44,442	58.12	64.34
네덜란드	38,644	20,553	30,664	53.18	61.61
노르웨이	256,260	256,260	222,746	100.00	64.05
스웨덴	205,327	158,115	182,085	77.01	62.20
사민주의 평균				72.32	62.97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22,796	14,825	19,120	65.03	87.59
프랑스	133,779	90,038	113,243	67.30	58.24
독일	34,245	19,188	26,939	56.03	57.52
조합주의 평균				62.79	67.78
자유주의					
호주	34,270	23,088	28,831	67.37	43.64
캐나다	36,092	23,014	29,624	63.77	65.85
아일랜드	29,940	18,781	24,726	62.73	57.96
영국	21,766	11,917	16,729	54.75	46.15
미국	40,154	26,011	33,536	64.78	55.16
자유주의평균				62.68	53.75
남유럽					
그리스	15,285	10,784	13,503	70.56	58.24
이탈리아	18,971	13,885	16,931	73.19	66.65
스페인	15,411	10,995	13,580	71.34	64.57
남유럽 평균				71.70	63.15
동유럽					
체코	181,538	119,946	152,076	66.07	63.47
헝가리	1,100,078	877,690	983,566	79.78	80.52
폴란드	16,828	14,294	15,626	84.94	80.93
동유럽 평균				76.93	74.97
개도국					
한국	27,464,923	11,976,891	20,872,777	43.61	24.67
멕시코	65,787	38,728	54,811	58.87	61.70
개도국 평균				51.24	43.19
평균				67.67	60.86

제2절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지니계수의 국가간 비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요국가의 지니계수 분포는 다음과 같다. 6개 분류에 따른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개도국이 0.478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주의와 조합주의가 0.438, 사민주의 0.384, 남유럽 0.352, 동유럽 0.329 순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의 국가군의 지니계수는 벨기에가 0.335로 가장 불평등도가 낮았으며, 덴마크 0.356, 핀란드 0.370, 스웨덴 0.376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덜란드가 0.433으로 사민주의국가 중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구분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가 노령층보다 낮았고, 근로연령층에서는 여성의 소득 불평등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합주의 국가의 지니계수 평균은 0.438로 나타났으며 독일의 지니계수가 0.568로 가장 높았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노령층의 불평등도가 근로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노령층에서는 조합주의 국가 남성의 지니계수 평균이 0.561로 여성 0.51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국가의 지니계수는 0.438로 나타났으며, 근로연령층 및 노령층 모두 여성의 지니계수가 높았으며, 근로연령층에 비해 노령계층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452로 나타나 비교국가 중 멕시코, 독일 다음으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았다. 특히 노령층의 지니계수가 0.638로 높았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니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지니계수의 국가간 비교: 시장소득

	시장소득						
	근로연령층			노령층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사민주의							
벨기에	0.292	0.298	0.310	0.577	0.542	0.563	0.335
덴마크	0.254	0.249	0.260	0.470	0.488	0.490	0.356
핀란드	0.275	0.283	0.288	0.609	0.587	0.605	0.370
룩셈부르크	0.342	0.399	0.381	0.609	0.576	0.611	0.401
네덜란드	0.325	0.372	0.374	0.626	0.603	0.616	0.433
노르웨이	0.285	0.322	0.321	0.575	0.565	0.578	0.419
스웨덴	0.279	0.301	0.299	0.559	0.602	0.587	0.376
사민주의 평균	0.293	0.317	0.319	0.575	0.566	0.578	0.384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0.294	0.339	0.330	0.519	0.488	0.509	0.351
프랑스	0.342	0.353	0.358	0.575	0.546	0.588	0.395
독일	0.348	0.433	0.407	0.590	0.515	0.568	0.568
조합주의 평균	0.328	0.375	0.365	0.561	0.516	0.555	0.438
자유주의							
호주	0.282	0.339	0.318	0.464	0.528	0.499	0.363
캐나다	0.377	0.403	0.401	0.477	0.511	0.508	0.458
아일랜드	0.330	0.355	0.354	0.515	0.495	0.523	0.395
영국	0.362	0.380	0.389	0.506	0.514	0.527	0.438
미국	0.422	0.406	0.424	0.525	0.532	0.538	0.538
자유주의 평균	0.355	0.376	0.377	0.497	0.516	0.519	0.438
남유럽							
그리스	0.335	0.361	0.351	0.550	0.594	0.590	0.371
이탈리아	0.322	0.317	0.327	0.544	0.413	0.508	0.337
스페인	0.306	0.360	0.336	0.448	0.480	0.465	0.348
남유럽 평균	0.321	0.346	0.338	0.514	0.496	0.521	0.352
동유럽							
체코	0.294	0.296	0.310	0.450	0.372	0.438	0.319
헝가리	0.594	0.309	0.316	0.435	0.435	0.439	0.325
폴란드	0.337	0.322	0.333	0.538	0.470	0.521	0.344
동유럽 평균	0.408	0.309	0.320	0.474	0.426	0.466	0.329
개도국							
한국	0.333	0.466	0.426	0.612	0.646	0.638	0.452
멕시코	0.472	0.518	0.494	0.579	0.586	0.578	0.504
개도국 평균	0.402	0.492	0.460	0.596	0.616	0.608	0.478
평균	0.339	0.356	0.352	0.537	0.526	0.543	0.400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주요국가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다. 6개 군의 지니계수는 개도국이 0.495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주의 0.445, 조합주의 0.387, 사민주의 0.371, 남유럽 0.354, 동유럽 0.318 순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의 국가 중에는 네덜란드가 0.422로 가장 높았다.

사민주의 국가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근로연령층이 노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합주의 국가 중에는 독일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적으로 근로연령층의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노령층보다 높았다. 여성의 지니계수 또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아일랜드의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았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노령층의 지니계수가 근로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노령층에서는 남성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노령층의 지니계수는 0.638로 노령층 전체평균 0.334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았다. 또한 여성의 지니계수가 근로연령층과 노령층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 여성집단의 지니계수가 0.646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근로계층과 노령계층 지니계수의 국가간 비교: 가처분소득기준

	가처분소득						
	근로연령층			노령층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사민주의							
벨기에	0.329	0.383	0.370	0.224	0.265	0.258	0.399
덴마크	0.238	0.221	0.238	0.273	0.189	0.234	0.353
핀란드	0.272	0.261	0.272	0.255	0.201	0.233	0.350
룩셈부르크	0.338	0.414	0.385	0.272	0.445	0.379	0.405
네덜란드	0.315	0.365	0.365	0.379	0.304	0.365	0.422
노르웨이	0.260	0.265	0.274	0.225	0.209	0.235	0.332
스웨덴	0.267	0.267	0.277	0.218	0.201	0.231	0.339
사민주의 평균	0.288	0.311	0.312	0.264	0.259	0.277	0.371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0.292	0.332	0.327	0.274	0.323	0.319	0.341
프랑스	0.333	0.345	0.350	0.317	0.391	0.376	0.384
독일	0.350	0.430	0.409	0.306	0.340	0.346	0.437
조합주의 평균	0.325	0.369	0.362	0.299	0.351	0.347	0.387
자유주의							
호주	0.303	0.344	0.336	0.300	0.211	0.263	0.374
캐나다	0.368	0.404	0.398	0.297	0.282	0.310	0.423
아일랜드	0.342	0.360	0.364	0.364	0.359	0.350	0.534
영국	0.365	0.411	0.408	0.349	0.341	0.380	0.438
미국	0.420	0.407	0.423	0.400	0.371	0.410	0.454
자유주의 평균	0.360	0.385	0.386	0.342	0.313	0.342	0.445
남유럽							
그리스	0.391	0.354	0.349	0.357	0.340	0.374	0.381
이탈리아	0.307	0.315	0.318	0.289	0.252	0.288	0.330
스페인	0.308	0.356	0.336	0.289	0.254	0.299	0.353
남유럽 평균	0.335	0.342	0.334	0.312	0.282	0.320	0.354
동유럽							
체코	0.294	0.285	0.308	0.124	0.108	0.120	0.302
헝가리	0.324	0.321	0.327	0.201	0.181	0.195	0.308
폴란드	0.337	0.322	0.333	0.538	0.470	0.521	0.344
동유럽 평균	0.318	0.309	0.323	0.288	0.253	0.279	0.318
개도국							
한국	0.333	0.466	0.426	0.612	0.646	0.638	0.452
멕시코	0.472	0.552	0.510	0.525	0.586	0.552	0.539
개도국 평균	0.403	0.509	0.468	0.569	0.616	0.595	0.495
평균	0.329	0.356	0.352	0.321	0.316	0.334	0.391

제3절 OECD 국가 평균에 따른 불평등 평가

지니계수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국가는 불평등, 낮은 국가는 평등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구기준의 소득불평등 평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사민주의 복지레짐 국가들은 대부분 근로계층의 경우 시장소득의 경우에도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룩셈부르크는 남녀 모두 불평등한 것으로, 네덜란드는 여성 근로연령층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령층은 시장소득의 경우 덴마크를 제외한 경우 모든 사민주의 국가들에서도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소득이 감안된 가처분소득의 경우 시장소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노령계층의 경우 룩셈부르크 여성과 네덜란드 남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소득배분이 비교적 평등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에서는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모두 근로연령계층, 노령계층 모두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연령층 남성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노령층은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기준 모두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OECD 국가 평균에 따른 불평등 평가: 시장소득

	시장소득						
	근로연령층			노령층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사민주의							
벨기에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덴마크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핀란드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룩셈부르크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네덜란드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노르웨이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스웨덴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프랑스	불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독일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자유주의							
호주	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캐나다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아일랜드	평등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영국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미국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남유럽							
그리스	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이탈리아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스페인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동유럽							
체코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헝가리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폴란드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개도국							
한국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멕시코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시민주의 복지레짐에서는 전체적으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층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남성과 여성 가처분소득의 배분이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주의 복지레짐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가처분소득의 배분이 평등하였고, 독일이 불평등하였다. 독일은 근로연령층 및 노령층 대부분의 집단에서 가처분소득의 배분이 불평등하였다.

자유주의 복지레짐에서의 가처분소득 배분은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불평등하였고, 아일랜드, 영국, 미국은 근로연령층 및 노령층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가처분소득의 배분이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 복지레짐 중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노령층은 대체적으로 평등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배분은 근로연령층 및 노령층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지니계수에 비춰보았을 때 불평등하였다.

〈표 5-6〉 OECD 국가 평균에 따른 불평등 평가: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						
	근로연령층			노령층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사민주의							
벨기에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덴마크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핀란드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룩셈부르크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네덜란드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노르웨이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스웨덴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조합주의							
오스트리아	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프랑스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독일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자유주의							
호주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캐나다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아일랜드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영국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미국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남유럽							
그리스	불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이탈리아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스페인	평등	불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동유럽							
체코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헝가리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평등
폴란드	불평등	평등	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평등
개도국							
한국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멕시코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불평등

한국 사회에서 인구고령화는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1인가구 및 농어촌가구를 포함하는 분석자료를 사용하고, 11년간의 비교적 긴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분석결과의 대표성은 보다 확보되었다고 생각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는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성명재 외 연구(2001, 2005, 2009), 임병인 외(2005)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된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불평등의 완화 효과도 관찰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잘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제도 등 공적이전의 역할이 소득불평등 개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주기별 소득수준은 40~44세를 정점으로 하여 역 U자 커브를 보이는데, 중고령기에 접어들면서 세 번 정도의 큰 꺾임이 발생한다. 55~59세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60~64세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며, 65세 이상에서도 큰 폭의 꺾임이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령집단의 시장소득수준은 전체평균 시장소득의 약 16~27%에 불과하다. 가처분소득의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집단 가처분소득은 전체평균 가처분소득의 약 41~49% 수준이다. 시장소득에 비해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과 조세 및 사회보험지출이 감안된 가처분소득에서는 노령집단과 전체집단 간 격차가 22~25% 포인트 감소하였다. 노령집단의 전체집단 대비 가처분소득은 1999년 대비 약간 개선되었는데, 전기노령집단에서의 개선폭은 1.5% 포인트에 지나지 않았으나 후기고령집단의 경우에는 8.3% 포인트나 개선되었다.

둘째, 노령집단의 소득원 구성을 보면 60~64세 집단은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고, 65~69세 전기고령인구는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으며, 후기고령인구는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령집단도 연령층별로 소득원 구성의 차이를 보였다. 65~69세 전기노령집단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보다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소득불평등 완화에 일정 정도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1998년 기준 50~59세의 소득을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 50세 이후에는 점차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는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9.3%였으나, 59세는 동비율이 2.7%로 감소하였다. 2009년을 기준으로 소득원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아지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코호트별 제도효과를 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만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소득원 구성을 보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4~6% 수준에서 12% 수준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50세 미만의 빈곤율이 15% 내외인데 반해, 65세 이상 빈곤율은 65~69세 57.8%, 70~74세 65.8%, 75세 이상 68.8%로 나타났다. 60~69세의 빈곤율이 50% 대로 나타난 반면, 70세 이상 노인집단의 빈곤율은 60%를 상회하였다. 노인집단의 연도별 빈곤율 추이를 보면, 1999년 이후 점차 빈곤율이 증가하여 2008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2009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빈곤율이 낮아졌다. 이는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다섯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로 5분위배율을 분석한 결과, 1999년 전체가구의 5분위 배율은 3.50배로 나타났으며, 2002년 3.85배로 증가하여 1분위와 5분위의 가처분소득차이가 더 커졌으며, 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2009년 다시 5분위 배율은 4.12배로 나타나 소득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 집단의 1999년 5분위 배율은 5.40배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2003년에 6.26으로 5분위 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9년 가처분소득의 5분위 배율은 3.68배였다.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최근으로 오면서 5분위배율이 대체로 개선되었으나, 60세미만 집단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5분위배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소득불평등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1999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412이었는데, 2004년 0.424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0.408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 0.422로 나타나 1999년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집단에서 지니계수가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후기고령집단의 지니계수가 더 높게 나타나 고령집단에서 더욱 소득불평등한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지니계수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집단내 요인, 집단간 요인, 그리고 나머지 요인의 불평등도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기준 13.4%를 기여하고 있으며,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는 28.3%이며, 나머지 요인이 58.3%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한다. 11년간 추이를 보면,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도 증가해왔지만,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게 증가해왔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2009년 기준 14.1%를 기여하고 있으며,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는 20.9%이며, 나머지 요인이 65.0%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 기여도가 8% 포인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전소득의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효과가 노령집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1년간 추이를 보면,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도 증가해왔지만,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해왔

다. 연령집단내 지니계수는 1999년 0.047에서 2009년 0.059로 0.012% 포인트 지니계수 증가를 보인데 반해, 연령집단간 지니계수는 1999년 0.067에서 2009년 0.088로 0.021 포인트 지니계수 증가를 보였다. 즉 연령집단간 소득불평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덟째, 소득불평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1개 연령집단의 11년간 집단별 가구주 평균연령, 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종속변수로 연도별 집단별 지니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총관측수는 121개이며 모형설명력은 0.589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패널회귀분석결과, 평균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졌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균소득과 가처분 소득불평등도는 부적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인구고령화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노령계층내 소득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까지는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등 소득이전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추이를 보면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분배가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연령계층 대비 노령계층에 대한 자원배분 수준의 국가간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령계층에 대한 자원배분이 매우 낮다. 따라서 한국도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인회, 임세희(2007).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 악화의 요인 분해 : 개인 근로소득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5-27.
- 남상섭(2009).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27(2): 59-86
- 성명재(2001). 『소득분배 변화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2005).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 성명재, 박기백(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신동균, 장지연(2010).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6(4): 357-384.
- 민인식(2009).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 학회.
- 손병돈(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1445-1461.
- 원종학, 성명재(2007).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이동영(2008).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장애인·비장애인 가구 간 비교연구: FGT지수를 활용한 요인분해 및 차이검정”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의철, 김진욱(2007).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3): 57-77.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병인, 전승훈(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